

공존이익을 창출하자

'민족이익'과 '국가이익'과의 상충성에서 야기될 수 있는 모순과 갈등이 다민족국가 아닌 이른바 단일민족국가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럴 경우, 그것이 가지는 갈등성과 마찰성의 정도는 다민족국가에서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고 폭력적일 수 있다.

조정남

한국민족연구원 원장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족이익'과 '국가이익' 간에 일어나는 상충 현상은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다민족국가들에서는 종종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야기 시켜 왔다. 특히 냉전기에 작동하던 강력한 국가 통제력이 사라진 오늘날과 같은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더 더욱 이들 두 가지 이익간에 나타나는 갈등은 핵심적인 정치적 현안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이익'과 '국가이익' 간의 갈등은 바로 '1국가 다민족 체제'가 가지는 국가이익 배분의 우선 순위를 두고 벌어질 수밖에 없는 원초적이며 일상적인 갈등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족이익'과 '국가이익'과의 상충성에서 야기될 수 있는 모순과 갈등이 다민족국가 아닌 이른바 단일민족국가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럴 경우, 그것이 가지는 갈등성과 마찰성의 정도는 다민족국가에서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고 폭력적일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단일민족국가에서의 이러한 갈등은 강제적인 국토 분단과 이에 따른 민족분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일민족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분리된 동일 민족집단 내에서 각자가 처한 정치적, 이념적 상위성의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갈등의 내용과 형식이 다민족국가에서의 민족들 간의 갈등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해결책 또한 다 민족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대한 대처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싸고 온 세상의 이목이 다시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의 정도는 어느 수준이며,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또한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놓고, 남쪽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주변 당사국들의 의견 또한 분분하다. 한반도가 처한 특수 상황과 주변여건 그리고 북한 핵 정책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측과, 이와는 달리 외교적인 노력을 중시하면서도 이에 더해 군사적인 대응까지를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만이 북한이 만들어 내고 있는 핵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주의적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들은 또 북한에 대한 대처에서 '민족이익'이 우선시 되는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사람들과, 이와는 달리,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 체제, 내지는 국가이익을 우선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여기에 이르면, 북한 핵을 비롯한 포괄적인 남북문제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쟁점은 바로 '민족이익'과 '국가이익'과의 마찰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민족이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정치체제나 통치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서로가 민족애에 의한 유대를 확대 해가면서 남북한의 한민족 집단의 평화적인 공존 환경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라고 본다. 남북 쌍방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장애를 뛰어넘는 민족애에 바탕을 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시킴은 물론,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이 처해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극복은 물론 이에 대한 투쟁에서도 남한은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협력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견지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족적인 가치를 여타의 그 어느 가치보다도 상위에 위치시킨다. 민족은 개별적인 정치체나 국가체제의 존재 가치에 우선하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또 영속적이고 절대가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민족주의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이익의 추구는 분단 상황에서의 남북한의 개별적인 체제이익의 범위를 상회하는 거역할 수 없는 한 민족 공동체의 시대적 소명이라는 것이다.

국가이익의 우선론은 전혀 입장을 달리한다. 여

기서는 우선 한반도에서의 유일 합법적이고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집단은 자기들이라고 하는 주장에서 모든 논의를 출발시킨다. 자기들의 국가나 자기들의 정체가 한민족의 민족사적인 정통집단이며, 상대방은 사이비 적이며, 적대집단, 심지어는 괴뢰집단으로까지 내몰면서 그 존재성마저 부정한다. 때문에 이 입장에서는 남북 양쪽에 존재하고 있는 서로 다른 정치집단 중 하나

의 집단은 살아남아야 할 집단으로, 또 하나의 집단은 파괴나 붕괴되어야 할 집단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

자기들의 정체가 자기들의 국가만이 정당하고 또 민족사적인 정통성의 유일한 계승자이기에 자국의 국가이익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고립이나 궁극적으로

는 상대방의 체제붕괴를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입장에 서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문제의 해법 또한 분명하다. 북한에 대한 철저한 봉쇄나 군사적인 응징 이상의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다. 민족간의 공존이 아니라, 두 체제간 경쟁에서의 승리가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남북문제 해결의 두 가지 입장은 남북 양쪽에 혼재 돼 있으면서 서로 팽팽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혼재상태는 핵문제가 전면적으로 표출되면서 북한이 보다 '민족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선회를 분명히 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북측은 이른바 주체의 노선에 따라 통일문제는 물론 이에 부수적으로 연관되는 핵을 비롯한 모든 문제가 비정치적이고, 비이념적인 기준 즉 민족적인

**인민도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구인시키기 위해서
인실적으로 '나의 나의 이름'의
확인과 함께, '다른 것끼리의
평화적인 공존'
여기에서의 '공존'이란
민족의 공존'이지 '체제의 공존',
'이데올로기의 공존'
그 모두를 말한다.**

기준으로 풀어야 하며, 그러한 노력만이 분단 체제의 해결과 한민족공동체 발전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크게 강조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측에서의 이들 두 입장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대립적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민족이익에 대한 가치가 국가나 체제이익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변하는가 하면, 보수적 입장에서는 한민족의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는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승리하고 이에 반대되는 공산독재체제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국가 내지는 체제이익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반도 문제해결의 중심적 담론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민족이익 주창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한민족 민족이익의 구조는 무엇인가. 그것은 식민지적잔재의 청산과 새로운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의 민족독립의 달성이 중심적인 내용이다. 즉 이는 분단민족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한민족 민족주의의 고양이라기보다는, 외세와 외국의 개입으로부터 벗어나 민족적 독립을 구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세로부터의 민족분리를 그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한반도 문제해결의 원칙으로 민족이익을 우선 시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제한적이고 일면적인 민족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가이익론의 논리구조 또한 대단히 이 중적인 요소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국가이익론자들이 말하는 '국가'라는 것을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정 정치체제를 지칭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이들은 너무나 자주 국가와 정치체제와를 동일시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국가경계와 민족경계마저 구별치 않으려 한다.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국가이익은 종종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 또는 그것을 민족이익과도 구별시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경계구분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

들 세계에서는 자주 국가이익에 대한 아전인수적인 해석과, 이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이 빈발하면서 여기에서 오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치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남북관계 발전의 가장 중심적 담론으로 자리잡고 있는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이 가지는 애매성과 의도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담론 그 모두가 자국체제 중심의 민족통합 논리거나, 하나같이 상대방을 자기들에게 흡수 내지는 통합시키려는 흡수론이나 정복론적 합의를 배제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나 민족공조를 중심으로 한 민족이익론은 잘못하면 한민족의 민족적 정통성의 유일한 승계자가 북한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한민족의 민족이익 구현은 북한체제로의 민족통일이야 한다는 전통적인 북한의 민족관과 연계되기 쉽다. 국가이익론 또한 그것이 가지는 상대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깊이 연관되어, 그들과의 경쟁성을 질게 내포하고 있음 또한 외면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이라는 담론이 하나같이 따분히 자기들이 속해있는 정치체제에 대한 방어나 상대체제에 대한 공격성을 배제치 않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이들 담론이 가지는 파당성과 현계성을 읽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문제의 해결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담론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나는 여기서 남북 양 체제간의 '공존이익'이 이러한 요청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공존'이란 '민족의 공존'이자 '체제의 공존', '이데올로기의 공존' 그 모두를 말한다. 즉 남북관계의 평화적이고 발전적인 전개는 이들 양 체제가 서로가 서로에게 적으로써가 아니라, 우호적인 동반자로서의 자리 매김을 해야 하며, 이러한 공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어떤 남북문제나 남북간의 협상이나 거래 그 모두가 쌍방 서로에게 이익을 되돌릴 수 있는 이른바 'win win'적인 내용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 서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적으

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되며, 그러한 상황이 마련된 연후라야, 남북간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류 협력과 평화정착이라는 남북 문제의 발전적 해결의 시대적인 과업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 문제로 불거진 새로운 국제사회에서의 긴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또한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처가 그들을 고립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북한체제에 대한 고립을 가속화시키거나, 직접적인 타격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일 때, 이에 대한 북한 측의 대응은 제한적 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의 동원을 더욱 재촉할 뿐이며, 이는 인근 국가는 물론,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재앙을 결과시킬 수 있는 극단적인 수단일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남북 양 체제간의 '공존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그것이 가지는 현실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 공존이익의 개발과 이익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 공존적이며, 또 평화적인 수단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특정체제만의 이익 제고를 위한 기만적인 전략은 물론, 유아독존적으로 자기편만의 정의와 자기들만의 가치가 일방적으로 강조되는 편협한 이기주의적 발상도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타자에 대한 인정과 이 같은 타자와의 공존에 대한 확실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투명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남북한간의 궁극적인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너와 나의 다름'의 확인과 함께, '다른 것끼리의 평화적인 공존'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엄존 하는 서로 다른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가 상대와의 차이를 명백히 하고, 상대 또한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게 인정해 주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바로 이

같은 논리에서 현 단계 남북문제 해결의 중심적 사고는 바로 자기와 다른 타자를 공존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드리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체제내용, 이데올로기적 색깔, 그들의 리더십까지도 존중하는 공존환경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우리는 너무 빨리 특정 현안에 대한 결말을 기대하는 성급함의 유혹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뿐 만 아니라, 자기의 입장과 맞지 않은 이견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사태의 진정한 해결이나, 발전을 위해서도 진정 바람직한 태도라고는 할 수 없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의 불행한 역사적 배경에서 성립하여 존재해 오고 있는 분단체제의 변화나 그것의 극복 또한 상당한 과도기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에서 보면 이 순간 남북문제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우리의 정책노선은 남과 북 그 모두가 다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존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같은 정책노선이 한민족의 민족이익을 극대화하며, 이러한 민족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한민족의 궁극적인 바람인 민족통일의 대업을 우리들의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반쪽 짜리 민족이익이 아닌 민족간의 통합과 민족간의 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한 민족이익을 우리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한반도에서의 분단의 해소라고 하는 것이 지리적이고 군사적인 분단의 해소에 그치지 않고, 보다 대승적인 참다운 민족통합, 민족통일의 대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일수 있다. 참되고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생존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 역설적인 논리가 바로 한반도 문제 내지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면할 수 없는 외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중동의 민족현황과 민족문제

중동지역에서는 아랍민족이 전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는 이슬람 수니파가 대다수이며, 인종적 전통은 셈-햄 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다양하고 숫자적으로도 상당수인 여러 소수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종교, 언어, 인종의 측면에서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크고 작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용찬 /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영국 주제)

중동지역(Middle East)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개 그룹으로 대별되는 국가군에 속한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첫째, 아라비아 반도의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을 포함한다. 둘째, 이른바 ‘핵심’ 중동지역으로 지칭되는 ‘비옥한 초생달 지역’(Fertile Crescent Region)의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중동지역에 속한다. 셋째,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가 이 지역에 포괄된다. 넷째, 비아랍국가들로 터키와 이란이 또한 중동지역에 속한 국가로 분류된다. 다섯째, 코모로, 지부티, 모리타니, 소말리아, 수단 등의 사하라 남부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 국가들은 아랍국가연맹(the League of Arab States)에 속한 국가들이다.”

중동지역에서는 아랍민족이 전체 인구의 다수

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는 이슬람 수니파가 대다수이며, 인종적 전통은 셈-햄 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다양하고 숫자적으로도 상당수인 여러 소수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종교, 언어, 인종의 측면에서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크고 작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슬람 소수파인 시아파가 존재하고, 기독교와 유대교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소수 종교들도 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각 소수민족과 부족들의 언어들이 아랍어와 공존, 대립하고 있다. 인종적인 측면에서는 인종 전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한 민족들이 중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국가들 내의 대표적인 소수민족들은 쿠르드족과 팔레스타인인이며, 초 국경적인

1) Deborah J. Gerner,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Middle East*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2000), pp. 1-2

중동지역의 민족현황

아라비아 반도	
바레인	바레인인 63%, 아시아인 19%, 아랍인 10%, 이란인 8%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인 90%, 아프리카-아시아인 10%
아랍에미리트	에미리트인 19%, 아랍인과 이란인 23%, 남아시아인 50%
예멘	아랍인
오만	아랍인, 발루치인, 남아시아인
카타르	아랍인 40%, 파키스탄인 18%, 인도인 18%, 이란인 10%
쿠웨이트	쿠웨이트인 45%, 아랍인 35%, 남아시아인 9%, 이란인 4%
'핵심' 중동지역	
레바논	아랍인 95%, 아르메니아인 4%
시리아	아랍인 90.3%, 쿠르드족, 아르메니아인 그리고 기타 9.7%
요르단	아랍인 98%, 시르카시아인 1%, 아르메니아인 1%
이스라엘	유대인 80.1%(유럽미국태생 32.1%, 이스라엘 태생 20.8%, 아프리카 태생 14.6%, 아시아 태생 12.6%), 비유대인 19.9%(대부분 아랍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팔레스타인인 99.4%, 유대인 0.6%), West Bank (팔레스타인인 83%, 유대인 17%)
북아프리카	
리비아	아랍-베르베르인 97%
모로코	아랍-베르베르인 99.1%, 유대인 0.2%
알제리	아랍-베르베르인 99%
튀니지	아랍인 98%, 유럽인 1%
비아랍국가	
이란	페르시아인 51%, 아제리인 24%, 길라키와인 마잔다라인 8%, 쿠르드족 7%, 아랍인 3%, 투족 2%, 발록족 2%, 투르크멘 2%
터키	터키인 80%, 쿠르드족 20%
사하라 남부	
모리타니	모리타니흑인 40%, 모리타니인 30%, 흑인 30%
소말리아	소말리아인 85%, 반투인 과 비소말리아인 15%
수단	흑인 52%, 아랍인 39%, 베아인 6%
지부티	소말리아인 60%, 아파르인 35%
코모로	안타로테, 카프레, 마코아 등 소수 종족

출처: 미국 CIA FACTBOOK 2002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fields/2075.html>)
 검색일: 2003년 1월 28일)

민족집단들로는 베르베르족과 아르메니아인, 시르카시아인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적은 수로 존재하지만 국가 내에서 민족문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민족들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중동지역의 전체적인 민족현황을 살펴보고, 주력민족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쿠르드족과 같은 소수민족 문제의 형성 원인과 최근 사태의 진행과정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주력민족과 협력관계에 있거나 동화되어 별다른 분류나 갈등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하고 있는 소수민족들 또한 다루고자 한다.

중동지역에서는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하거나

갈등을 빚으면서 생활해오고 있다. 주력민족은 이슬람을 믿으며 아랍어를 구사하는 아랍민족들로 개별민족국가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각국 내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주력민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여기서는 동질성이 아주 강한 국가들을 제외하고 소수민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민족현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중동지역에서 주요 소수민족의 특징과 최근 현황 및 갈등과 분류에 대해서는 이 글의 다음 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요르단의 시르카시아인은 전체 인구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언어는 아랍어를 사용하며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히 융화되어 별다른 민족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다. 전체적인 권리와 의무에서도 동등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지에는 이란계통 무슬림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시아파로서 종교적인 차이로 수니파와 상호 결혼 등에서의 기피정도 등의 사소한 문제들이 존재할 뿐이지 정치, 경제적으로 갈등이나 분규 없이 생활하고 있다. 알제리에는 전체인구의 약 22%를 차지하는 베르베르족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사막지역과 산악고지대에 살고 있으며 자신들의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을 뿐, 종교적으로는 아랍민족과 동일하고, 상당수가 아랍민족과 동일한 사회정치적 환경을 공유하고 있다. 알제리의 아랍민족과 베르베르인은 식민지 시절에도 프랑스에 공동으로 저항하는 등 공존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바레인, 시리아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국가 내에 존재하고 있다. 바레인의 경우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종교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이란 계가 소수민족으로 생활해왔다. 이러한 종교차이는 바레인이 외부국가의 개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을 야기해왔지만, 커다란 내부적인 민족분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시리아도 주변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민족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수민족들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고 있어서 별다른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 않다.

모로코의 경우 전체 인구의 33%정도가 베르베르인이다. 모로코의 베르베르인은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면서 생활해왔다. 그럼에도 이들 베르베르인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여 아랍인들과 종교적 동질성을 가짐으로써 협력관계를 유지

중동지역의 국가들 내의 대표적인 소수 민족들로는 쿠르드족과 팔레스타인인이며, 초 국경적인 민족집단들로는 베르베르족과 아르메니아인, 시르카시아인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적은 수로 존재하지만 국가 내에서 민족문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민족들도 존재한다.

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의 기원은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공동으로 저항했던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모로코 내에서 아랍인들과 베르베르인들의 협력관계는 모로코 왕정이 베르베르인들을 각종 공안기관에 기용하는 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앞쪽의 도표에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수단과 모리타니아에는 잔지야 족이 존재한다. 수단에서 잔지야 족은 흑인의 구성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주력민족인 아랍민족과 달리 남부지역에 집단거주하고 있으며 낮은 경제, 사회적 지위에 처해있으면서 아랍민족과는 특별히 공유하는 것이 없이 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수단에서 영국의 식민지 기간 동안 시행된 분리정책에 영향을 받아 더욱 증폭되어 국가 내의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반면 모리타니아의 잔지야 족은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아랍어도 사용하면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²⁾

중동지역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때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남 아시아인들이다. 이들 남 아시아인들은 전체 인구 대비 아랍에미리트 50%, 카타르 36%, 바레인 19%로

2) 이원삼, "아랍 소수민족 종파 분포도 연구", 『한국중동학논총』 제18호, 116-123쪽.

각 개별국가에서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지에도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거주지역이 주로 아라비아반도 국가인 점을 고려해보면 이 지역 석유산업의 성장과 함께 노동력의 필요가 대두하면서 저임금 노동력인 남아시아인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으며, 국내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던 인도와 파키스탄인들이 대거 이주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 남아시아인들에 대한 연구는 중동 지역 연구에서 등한시 되어왔기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이들의 조직화와 주력민족과의 관계 설정 등에 영향을 받아 연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지역의 민족문제의 소수민족

팔레스타인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의 시작과 경과에 대한 부분은 이미 '민족연구' 이 전호들에서 상당히 다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근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이스라엘의 대응을 언급하고 팔레스타인인에 관한 문제에서 주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자 한다.

미국과 영국의 지원 하에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서의 이주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건국은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랍계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크나큰 재앙이 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분규의 원인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건국을 1940년대에 영국과 미국, 유대인들의 단순한 외교적인 방

법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대인들은 이미 1930년 초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18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후 히틀러의 유대인에 대한 말살 정책에 영향을 받아 경제적인 상황이 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를 단행했다. 1932년과 1936년 사이에 20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해 들어왔으며, 당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게 되었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시기에는 65만의 유대인이 거주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확실한 주력민족으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도 80만에 달하는 러시아 지역 거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왔다.³⁾

이러한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국 이후에 집중된 측면이 강하지만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접촉은 유지되어왔으며, 이스라엘의 건국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고용과 같은 경제적 조건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감수해야만 했다. 건국 이후 이스라엘 이주민들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아랍국가와의 전쟁이 중요하게 역할을 해왔다.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의 독특한 형태인 시온주의의 강화를 결과함으로써 유대민족국가의 강화와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정책을 정당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온주의는 세계 각국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의 이질감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아랍국가와의 전쟁은 이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스라엘은 자국 내의 팔레스타인인과 비유대인들에 대한 지배와 분리 전략(divide-and-rule)을

3) Calvin Goldschneider, *Cultures in Conflict: The Arab-Israel Conflict* (Westport: Greenwood, 2002), pp. 7-12.

4) 베두인들은 유목민족으로서 오트만제국과 영국의 지배, 이스라엘 정부 아래에서도 자신들의 전통과 부족적인 조직을 유지해왔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이었고, 이스라엘 정부도 이들에게 교육과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면서 동화시키려고 노력해왔다. 이주의 제한에 대한 다소간의 불만은 있었지만 1960년대 이후 점차 정착민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변화시켰다. Jacob M. Landau, *The Arab Minority in Israel, 1967-1991: Political Aspec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56-57.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비유대인을 민족별로 4개의 범주로 나누어 정책을 전개하면서 아랍민족 정체성의 약화와 시민권의 차별화를 추구했다. 즉 아랍인(Arabs), 베두인(Beduin)⁴⁾, 드루즈인(Druze), 시르카시아인(Circassians)의 4개 민족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민족집단은 아랍인들로 사실상 이들이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위해 투쟁해 온 것이다.⁵⁾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드루즈 이나 시르카시아 인들과 달리 아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강력하게 저항해왔기 때문에 동화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줄기찬 저항은 이스라엘에 대해 정당성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이외에 주변 아랍국가들의 지원과 자신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1993년 미국의 중재에 의해 이루어진 팔레스타인 자치 확대에 관한 원칙 선언은 기존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였다. 이후 1995년 자치 확대 협정의 체결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순탄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후 몇 가지 진전을 보인 측면이 있으나 팔레스타인의 궁극적인 독립에 대한 부분과 예루살렘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들이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담보를 계속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0년 9월부터 재개된 팔레스타인인들의 독립요구 저항운동과 이스라엘의 강경한 샤론 정권의 수립이 맞물리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팔레스타인 인으로 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민족집단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와 서안(West Bank)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 인들이지만 이스라엘의 지배를 피해 주변국가에 난민신분으로 이

주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생활과 지위도 현재 중동지역에서 점차 중요한 이주민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레바논에는 이스라엘 건국 후 팔레스타인인들의 난민 캠프가 건설되어졌고 다수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영향력 없이 생활해 오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간의 오랜 갈등으로 이들은 복귀의 미래를 상상할 희망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상실되어가고 있고, 여러 상황적인 차이로 인해 내부적인 균열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이 곳에는 1950년대 이전에 팔레스타인인 난민 캠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969년 레바논 정부와 PLO사이의 협정을 통해 팔레스타인인들이 고용될 수 있는 권리와 캠프 안에서의 지역위원회 설립, 무장투쟁의 참여 보장 등이 허용되어졌다.

당시 난민으로 규정된 팔레스타인인들은 '난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을 희망했다. 그 이유는 우선 난민으로서 생활상의 보장을 받는 측면과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합법적인 지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2년 이후 레바논 정부의 결정으로 외국인의 취업 직종이 제한되게 되면서 팔레스타인인들도 같은 제제를 받게 되어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직종에도 시리아 인들과 비아랍계 외국인들이 선호되면서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이 악화되었다. 캠프의 확장 제한과 감시, 이동의 자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공격과 멸시 등이 상황을 악화시켰고 정치적, 문화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권리도 거부되었다.

5) Lisa Hajar, "Making Identity Policy: Israel's Interventions among the Druze," *Middle East Report*, July-September 1996, p. 2.

6) 이러한 권리의 핵심적 요구 사항은 고용의 권리와 주거지역 캠프의 재건설, 팔레스타인인 문화조직 건설 등이 포함되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94년 레바논에 있는 팔레스타인인 조직들은 정부에 시민의 권리(civil rights)⁶⁾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레바논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실 속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상당수가 1990년대 초반부터 레바논으로의 귀화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레바논으로 귀화한 팔레스타인인은 6만 명을 상회하는 숫자였다. 이러한 귀화자의 증가는 팔레스타인인 내부의 분열을 가져왔다. 레바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의 적개심이 증대되고, 배신의 징표로 국적취득이 인식되어졌다.⁷⁾

팔레스타인인 문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분리와 독립, 자치를 위한 투쟁과 이스라엘의 탄압의 문제로 단순히 국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난민의 지위로 살고 있는-특히 중동지역에서-팔레스타인인들의 지위와 생활문제까지 포함되어져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서유럽국가에서 난민으로 생활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의 지위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중동지역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랍국가에서 난민으로 생활하는 팔레스타인인의 경우 기본적인 생존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에 이들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쿠르드족

팔레스타인 지역 분쟁과 함께 중동지역에서 대표적인 민족문제 중의 하나가 쿠르드족 문제이다. 현재 쿠르드족은 터키에 1,000만 명, 이라크 북부 지역에 300만 명, 이란에 500만 명, 시리아와 구소련 지역 아르메니아에도 쿠르드족들이 거주

한다. 또한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에 난민의 자격으로 체류하는 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23년 로잔조약에 의해 쿠르드족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역인 쿠르디스탄 지역이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5개국으로 분할되면서 각 국가내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시 2천만이 넘는 쿠르드인들이 각국의 소수민족으로 편입되었으며, 이들은 민족정체성을 위협받게 되었고 주력민족의 동화 대상이 되었다. 이후 이들은 생존권과 자치의 요구를 지속해오고 있으나 외부의 지원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터키나 이란 등지에서는 민족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저항하는 쿠르드족의 대응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라크 지역 쿠르드족들은 1991년 걸프전 이후 반 후세인 세력의 가능성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되어 세계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쿠르드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⁸⁾

이라크 북부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은 3백 7십만 정도이고 이라크 남부에도 백만에서 2백만 사이의 쿠르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수니 무슬림들이다. 이들은 다른 국가의 쿠르드족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문화적 탄압과 인종청소(ethnic cleansing) 등을 당해왔다. 1988년 자행된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은 쿠르드족의 저항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것으로 잔혹한 만행들이 저질러졌다. 당시 1,200개 마을이 공격받았고 18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그러나 1991년 4월 쿠르드족의 저항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688에 의한 11개국의 군사작전을 통해 이라크 북부에 쿠르드족의 안전지대가 수립되었다. 이 지역은 기존 쿠르드 거주 지역의 약 절반에 가까운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후 이라

7) Julie Petest, "From Refugees to Minority: Palestinians in Post-War Lebanon," *Middle East Report*, July-September 1996, pp. 27-30.

8) 이희수, "중동의 소수민족의 현황과 과제", 『한국중동학논총』제18호, 96쪽.

크 정부도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통제권을 철수하고 자치를 사실상 인정했다. 1992년 5월 선거를 통해 쿠르드 지역 의회와 정부를 수립했다. 현재 이 지역은 이라크 난민들의 귀환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1991년 이래로 수천 명의 이라크인 난민들이 돌아 온 것과 함께 미국과 유럽국가로 망명했던 이라크 인들도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다.⁹⁾ 터키에서의 쿠르드족 민족주의는 네 단계의 중요한 변화를 겪어왔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사이에는 몇 차례의 봉기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Shaikh Said와 Dersim 등의 저항이 있었다. 1940년대와 1950년대는 저항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든 시기였다. 세 번째 단계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쿠르드족민족주의자들의 활동에 의해 저항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많은 정치조직들이 결성되고 참여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이들 조직들이 점차 급진화 되었다.

1980년 터키에서의 쿠데타 이후 쿠르드족 민족운동의 주도권은 PKK(쿠르드 노동자당)에 의해 장악되었다. PKK에 의해 주도된 저항운동은 계속적인 무장투쟁의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99년 지도자 오잘란의 체포 이후 이들의 저항운동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¹⁰⁾

PKK는 1984년의 무장투쟁을 기점으로 쿠르드족들에게 점차 지지를 확보해갔다. 이 조직은 과거와 달리 조직적인 구조와 쿠르드족을 터키

팔레스타인 난민문제와 쿠르드족 난민 문제는 이미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하기 시작했으며 이들 소수민족이 자치 혹은 독립의 길을 가기 위해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차원의 해결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내외에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유럽지역 쿠르드족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급진적인 조직과 활동이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원인 중의 하나는 터키의 쿠데타에 의한 권위주의 정부의 수립이었다. 당시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과 같은 소수민족의 정체성이 표출되는 것에 대해 극단적인 봉쇄정책을 전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강한 반발을 사게 되었던 것이다.¹¹⁾

1984년부터 1999년까지의 지속적인 무장투쟁의 결과 3만여 명의 쿠르드족이 죽고 38만 명이 자신의 거주지를 옮겨야 했으며 3백만 명의 쿠르드족이 터키 서부와 유럽의 서부로 이주했다. 결과적으로 PKK의 활동은 쿠르드족의 자각의식과 민족주의를 강화시켰지만 많은 쿠르드족의 이주

9) Carole A. O'Leary, "The Kurds of Iraq: recent history, future prospects," *Middle East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 No. 4, pp. 17-19.

10) PKK의 전략적 목표는 시기적으로 변화해왔다. 통일된 쿠르드족의 독립에서 1980년대에는 터키 내에서의 자치의 요구로 전환한 것이다. 이것은 1980년대 후반 민주적인 수단에 의해 터키 내에서 쿠르드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장투쟁의 중단을 선언한 것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Konrad Hirschler, "Defining the Nation: Kurdish Historiography in Turkey in the 1990s," *Middle Eastern Studies*, Vol. 37, No. 3, pp. 160-161.

11) 실제로 터키 정부는 1980년부터 1983년 사이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정책 이외에도 1991년 터키어 이외의 모든 언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함으로써 쿠르드족의 정체성 형성 운동에 대한 강경한 제한 정책을 구사했다. Martin van Bruinessen, "Kurds, Turks and the Alevi Revival in Turkey," *Middle East Report*, July-September 1996, p. 7.

12) 실제로 이러한 터키인들의 반쿠르드, 터키 민족주의의 인식은 선거에서 민족주의행동당(MHP)이라는 보수적인 민족주의정당에 대한 투표로 나타났다. 1999년 선거에서 MHP는 1995년 선거와 달리 중앙 아나톨리아 지역 등에서 많은 득표를 얻었다. M. Hakan Yavuz, "The Politics of Fear: The Rise of the Nationalist Action Party (MHP) in Turkey," *MIDDLE EAST JOURNAL*, Vol. 56, No. 2, Spring 2002, pp. 215-216.

13) Mustafa Saatci, "Nation-states and ethnic boundaries: modern Turkish identity and Turkish-Kurdish conflict," *Nations and Nationalism* 8 (4), 2002, pp. 559-560.

14) Konrad Hirschler, *op. cit.*, pp. 146-147.

를 촉진함으로써 난민의 지위나 무국적자의 지위로 전락되게 되는 쿠르드족이 양산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전쟁의 결과로 인한 사회 심리적 폐해 또한 심각한 것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이 중고를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무장투쟁은 또한 터키인의 민족주의¹²⁾를 자극해 쿠르드족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시켰다.¹³⁾

20세기 이전 시기와 달리 쿠르드족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는 종교적인 특징에 의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오다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계급적인 요소들이 중심적인 정체성의 내용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는 자신들의 민족성이 민족정체성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다.¹⁴⁾ 최근 들어 쿠르드족 내에서는 이라크 북부 자신들의 자치지역에 쿠르드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부 이라크의 쿠르드족 자치지구는 서방국가의 지원을 통해 건설된 것으로 미국이나 유럽국가의 지원을 통한 독립국가의 건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터키와 이란 등 쿠르드족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독립국가의 건설이 단기간 내에 달성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타 소수민족

1) 아르메니아인

터키 내 아르메니아인들의 자치요구는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터키

정부의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강제이주와 학살에 대한 대응으로 이들은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터키 외교관에 대한 테러를 계속해 왔으며 자치를 요구해왔다. 1915년 4월 ‘아르메니아 대학살의 날’로 알려진 사건은 터키시민이었던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와 연합하여 반 터키전선을 형성하자 터키정부가 아르메니아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났으며, 이후 아르메니아인들의 터키에 대한 반감의 중요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당시 아르메니아인들은 상당수가 구 소련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전체 인수도 20만 정도로 적은 수이고 터키 내에서 이미 언어, 종교, 문화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생활수준도 터키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어서 조직적인 분리, 독립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중동지역에서 중심적인 민족문제로 부각되고 있지 않으며 최근에는 별다른 충돌도 없는 상태이다.¹⁵⁾

최근 중동지역의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했으며, 소수가 구 소련에서 분리 독립한 아르메니아공화국으로 귀환했다. 이들은 주로 젊고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여서 중동지역 아르메니아인 공동체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2) 베르베르인

베르베르인들은 주로 북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며 자신들의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영유하고 있다. 베르베르인들은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

12) 실제로 이러한 터키인들의 반쿠르드, 터키 민족주의의 인식은 선거에서 민족주의행동당(MHP)이라는 보수적인 민족주의정당에 대한 투표로 나타났다. 1999년 선거에서 MHP는 1995년 선거와 달리 중앙 아나톨리아 지역 등에서 많은 득표를 얻었다. M. Hakan Yavuz, "The Politics of Fear: The Rise of the Nationalist Action Party (MHP) in Turkey," *MIDDLE EAST JOURNAL*, Vol. 56, No. 2, Spring 2002, pp. 215-216.

13) Mustafa Saatchi, "Nation-states and ethnic boundaries: modern Turkish identity and Turkish-Kurdish conflict," *Nations and Nationalism* 8 (4), 2002, pp. 559-560.

14) Konrad Hirschler, *op. cit.*, pp. 146-147.

15) 이희수, 위의 글, 95-96쪽.

아 등지에 거주하는데 모로코와 알제리에서는 주로 산악지역과 사막지역에 거주하면서 독자적인 거주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각각 22%, 33%로 다른 국가의 소수 민족에 비해 적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커다란 민족 분류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또한 모리타니아의 베르베르인들도 17세기 이후 아랍화되어 아랍어를 받아들이는 등 아랍민족과 융합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아랍민족과 베르베르인의 융합으로 Al-bidan이라 불리는 하나의 민족그룹이 탄생했다. Al-bidan은 아랍인과 아랍화된 베르베르인을 일컫는 표현으로, 이들이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¹⁶⁾

아랍민족과 베르베르인간의 갈등을 잠재우게 한 데는 이슬람 종교가 커다란 역할을 했다. 베르베르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언어, 문화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주력민족인 아랍민족에 협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식민지라는 역사적 경험이다. 베르베르인들이 거주하는 국가들은 과거 프랑스 등의 식민지였고 이에 대한 저항운동을 아랍민족과 함께 전개함으로써 독립 이후 아랍민족과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 드루즈인

드루즈인들은 이슬람교의 소수분파의 사람들로 시리아와 이스라엘 등지에 집단적으로 살고 있다. 이스라엘의 드루즈인들은 이스라엘 건국 초기 '비 무슬림 아랍인'이나 '소수민족 중의 소수민족' 정도로 취급되었다.

1962년 이스라엘은 이들을 '비 아랍인'들로 재규정하고 소수민족으로 인정했다. 유대인들은 드루즈인들을 '선호되는 마이너리티' (favored

minority)로 규정하면서 아랍계 팔레스타인인들과 달리 동화정책을 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골란고원 지역의 시리아인들-이들은 대부분이 드루즈 인들이다-에 대한 정책은 실패했다. 즉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드루즈인들을 친 이스라엘 소수민족으로 만드는 정책의 일환으로 아랍인들에 대한 정책과는 상이한 정책을 전개했다.

드루즈인들 중에서 제한적인 수가 1930년대 후반에 유대인과 협력했던 것이 이스라엘에서 '좋은 아랍인' (good Arabs)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상당수의 드루즈 인들은 1936년과 1939년 사이의 아랍의 봉기와 1948년과 1949년 반 이스라엘 전쟁에도 참여하는 등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이스라엘은 친 드루즈인 정책을 통해 드루즈 인들을 다른 아랍계와 분리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개된 것이 교육과 군대징집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1976년에 단행된 것으로 이후 드루즈 인들은 다른 아랍인들이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누리는 대신에 이스라엘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다는 것은 비유대인으로서 유일하게 드루즈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이다.

한편 골란고원에 거주하는 드루즈인들은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 드루즈인들과 마찬가지로 친 이스라엘 적인 드루즈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자신들을 시리아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강하게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동화 및 통합 정책

16) 이원삼, 위의 글, 124쪽.

17) Lisa Hajjar, *op. cit.*, pp. 2-5.

에 저항해왔다.¹⁷⁾

결론

중동지역은 전 세계에서 동유럽과 함께 다양한 민족문제와 심각한 민족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이다. 언어와 종교, 인종적인 차이는 개별 민족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는 민족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의 각종 테러와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외부 서방국가의 개입은 더욱 복잡한 정황을 연출하고 있다.

현재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민족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인과 쿠르드족에 관한 것이다. 이들 소수민족은 아직까지도 주력민족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분리, 독립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분리, 독립 이외에 주변국과 유럽에 있는 팔레스타인인 난민문제의 해결이라는 커다란 난제가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쿠르드족들은 서방의 지원을 통해 이라크 북부 지방에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터키와 이란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대가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또한 쿠르드족 문제는 그 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라크 정권의 항배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중동지역에서 가장 폭발력을 가진 민족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팔레스타인 난민문제와 쿠르드족 난민 문제는 이미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하기 시작했으며 이들 소수민족이 자치 혹은 독립의 길을 가기 위해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차원의 해결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팔레스타인 인이나 쿠르드 족과 같은 소수민족 중에서도 비교적 많은 인구와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민족들에 대한 연구는 그나마 어느 정도 이루어진 반면 다른 소수민족문제들에 대한 연구는 개괄적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아라비아 반도의 아시아인들-특히 남아시아인들-의 정착과 이들에 대한 정책에 관한 연구는 중동지역 민족문제 연구의 새로운 과제 중의 하나로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적은 수로 존재하면서 화와 순응의 과정을 통해 주력민족에 어느 정도 협력하고 있는 소수민족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 ● ●
신간안내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기제를 통해 규명한 현대의 정치현상

현대 정치의 이념구조

조정남 저 / 교양사회 / 값 15,000원

주요목차

- 현대의 정치이념
- 소련의 정치이념
- 중국의 정치이념
- 개도국의 정치이념

중동의 민족과 종교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제국은 모두 스스로를 이슬람국이라고 위치시키고 있으며, 이슬람제국회의기구(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에 가맹하고 있다. 즉 OIC에 가맹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약 50개국에 넘고, UN가맹국의 1/3가까이 접하고 있으나, 그 반수 정도가 중동에 집중돼 있다.

立山良司 / 일본, 防衛大學 교수

아랍의 국가들

중동은 크게 나눠 아랍 세계와 비아랍 세계로 대별된다. 일반적으로 중동이라 불리는 지역에는 24개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20개국은 지역기구인 아랍연맹에 가맹, 스스로를 '아랍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랍제국이다. 또 이스라엘 점령 아래 있는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독립국가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1988년에 팔레스타인국가의 독립을 선언, 아랍제국은 그 독립을 승인했다. 이 때문에 아랍연맹의 가맹국은 팔레스타인과, 93년 9월에 가맹한 고모로를 추가하여 22개국으로 말한다.

팔레스타인국가는 아랍제국 이외의 나라들에게도 승인되고 있으나, 일본이나 구미제국의 대부분은 독립국가로서의 실태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아랍인의 아이덴티티 문제나 아랍민족주의, 특히 아랍제국들 사이에서 아랍연맹이 행하고 있는 역할 등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간단히 살핀다. '아랍'이란 아라비아어를 모국어로, 아랍의 역사나 문화를 공유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식이다. 본래의 아랍의식에는 '아랍민족주의' 등의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 근 현대의 정치적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랍이라는 의식이 민족국가 등 근대나 현대의 정치적인 문맥 가운데 사용되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이후, 유럽에서의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랍제국은 지역기구로서의 아랍연맹을 조직하고 있는 이외에, 허부 지역적 기구로서 걸프만협력회의(GCC ; Gulf Cooperation Council) 및 아랍 마그레브연합(AMU ; Arab Maghreb Union)을 결성하고 있다. GCC는 사우

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페르샤만 연안의 왕제 내지는 수장제의 아랍 6개국에 의해 1981년에 결성된 것으로, 이란-이라크전쟁, 페르샤만 전쟁에 직면한 결과, 안전보장문제가 가장 중요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별국가들 간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적인 안전보장체제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한편 AMU는 북 아프리카의 모리타리아, 모로코, 알제리아, 튀니시아, 리비아 등 5개국에 의해 1989년에 결성됐다. 이 5개국은 EU와의 관련성이 강해, 공동으로 통일적인 EU와의 경제관계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정치체제의 차이로 반드시 통일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아랍 국가들

비아랍은 터키, 이란, 아프카니스탄, 이스라엘 등 4개국이다. 이 가운데 터키는 소아시아반도의 아시아 측과 발칸반도의 유럽 측 쌍방에까지 걸쳐있다. 국민들의 89%는 터키인이나, 그 기원은 분명치 않다. 몽골에서 중앙아시아에 걸친 유목 생활을 주로 하며, 터키어(투루크어)를 주요언어로 하고 있던 민족이, 9세기 이후 이슬람화돼, 현재의 이란에서 소아시아반도까지 차차 확대했다.

그들은 몇 왕조를 건설하기도 했으나, 그 가운데 13세기말에 아나트리아 고원을 거점으로 건설한 터키민족의 왕조가 오스만 왕조였다. 현재의 터키공화국은 이 오스만제국을 계승하고 있으나, 터키공화국 자체는 오스만제국의 다민족성을 부정, '1민족1국가'라고 하는 민족국가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쿠르드인 등 소수민족을 국내에 포용, 특히 이슬람부흥의 움직임이 강화됨에 따라, 더욱 '터키인'으로서의 아이

덴티티의 문제가 부상되고 있다.

이란의 인구는 터키와 더불어 비아랍 대국이다. 페르샤 문명의 발상지이며, 이슬람 세계에서는 최대의 시아파 국가다. 1979년 이란에서의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슬람 법학자에 의한 정치지도원리 '베라 야라 파키론'에 근거한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취하고 있다.

민족적으로는 인도 유럽어 족에 속하는 페르샤어를 모어로 하는 페르샤인(이란인)이 중심이었으나, 쿠르드인이나 터키어 계의 알제리어를 모어로 하는 아제르바이잔인 등 소수민족도 많아, 이들의 동향은 더러는 이란정치의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왔다.

이란의 동쪽에 위치하는 아프카니스탄은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일어난 동시다발테러사건과 그 후 미국에 의한 공격으로 일약 뉴스의 초점이 되었다. 민족 구성도 파슈툰인(모어는 인도 유럽 어족의 파슈투어)을 중심으로, 다리어(페르샤어)를 일상어로 하는 타지크인 등 아주 복잡하고, 종교적으로도 이슬람의 순나파가 중심이나, 시아파 주민도 인구의 약 20%를 점하고 있다. 탈리반 정권이 붕괴한 2001년 말에서 '탈리반 후'의 새로운 국가건설이나 부흥의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1979년의 소련군 침공 이래, 이어진 내전과, 탈리반에 의한 강압적인 지배의 상흔이 너무 커, 국민통합으로 향한 길은 험난하다.

팔레스타인문제나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초점의 하나이기도 한 이스라엘은 19세기말에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에 의해 시작된 시오니즘운동의 결과, 1948년에 독립한 국가다. '유대인'이라고 할 때, 반드시 같은 인종에 속하고 있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유대교도'와 기본적으로 같은 말이며, 같은 종교 커뮤니티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역시 근대 유럽의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민족'으로서의 의식을 확립했다.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은 약 480만 명이며, 이는 세계의 유대인 (약 1천200만 명)의 1/3에 해당한다.

그들은 아라비아어와 같은 셈 계 언어인 히브라이어를 일상어로 하고 있으나, 현대 히브라이어도 또 유대민족의식의 고양에 의해서 부활된 것이기도 하다.

세 개의 유일신교

중동에서는 고대로부터 많은 종교가 생겨났다.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다신교가 번성, 이란에서는 배화교(拜火敎)라고도 불리는 조로아스타교가 생겨났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종교 형태를 크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세 가지 유일신교다. 성립순으로 보면, 유대, 그리스도, 이슬람 교 등이 그것이다.

구약성서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일족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현재의 시리아를 거쳐, 팔레스타인으로 이주 '유일 신'과 계약했다. 기원전 2000년경으로 추정된다.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부른 그들은 그 후 이집트에 거주, 모세에 이끌려 출 이집트를 행했으며, 다시 팔레스타인에 이주 유대인의 왕국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과 그후의 바빌론과 예언자 시대를 거쳐, 유대교는 현재와 같은 일신교로서의 성전이나 계율을 발전시켜왔다.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종교로 여겨지는 소위 민족종교다. 유대교의 신의 이름은 '야하우에(에호바)'이나,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십계의 계율로부터, 통상은 '아두나이(나의 주)

중동이라 불리는 지역에는 24개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20개국은 지역기구인 아랍연맹에 가맹, 스스로를 '아랍 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랍제국이다. 또 팔레스타인독립국가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1988년에 팔레스타인국가의 독립을 선언, 아랍제국은 그 독립을 승인했다. 이 때문에 아랍연맹의 가맹국은 팔레스타인과, 93년9월에 가맹한 고모로를 추가하여 22개국으로 말한다.

나 '에로힘'(신이라고 하는 이름의 일반명사)으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구약성서라는 명칭은 신약성서에 대한 기독교에서의 호칭이며, 유대교에서는 '구약성서'라고는 부르지 않으며, '토라(법률)' '예언자' '제서'라는 세 가지로 나눠 부르거나, 혹은 3부분의 히브라이어 명칭의 첫 문자를 취해 '다나후'로 부르고 있다.

현재의 유대교는 주로, 종래의 계율을 유지하여 그것을 수호하려는 정통파와, 일정의 계율의 변경을 인정하는 보수파 및 개혁파의 3파로 나눠져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정통파가 대부분이며, 미국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보수파와 개혁파가 주류가 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독립과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격화에 따라 중동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의 대다수는 이스라엘로 이민했으나, 지금도 소수의 유대인들이 모로코나 튀니시아, 시리아, 이란 등에 살고 있기도 하다.

기독교는 물론 유대교의 라비(법률학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유대교의 개혁운동은 계승, 예수를 '구세주' '신의 아들'로 파악, 새로운 종교로서 발전한다.

그 발전과정에서 기독교는 다양한 종파로 분열했다. 현재의 중동 기독교 사회에서는 동방정교회(그리스정교회 등) 및 칼케돈공회의 (451년)에 정교회의 측으로부터 이단으로 취급된 단성론(모노피지트)의 동방교회(아르메니아, 코프트, 에치오피아, 시리아의 각 정교회)가 중심이 되고 있다.

반대로 로마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는 소수이나, 동방 제 교회 가운데 후일 로마 카톨릭에

귀속한 유니아트교회 (마론파나 아르메니아, 시리아 등의 각 카톨릭)도 각지에 산재하고 있다. 이밖에 칼케톤 공회의 이전에 분열한 네스토리우스파(景敎)교도도 이라크이나 이란에 살고 있으나 그 수는 적다.

중동지역에 어느 정도의 기독교도들이 살고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팔레스타인의 동 아랍이나 이집트 등에서는 인구의 5-10%가 기독교도로 보여진다. 또 레바논은 마론 파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정교나 로마 카톨릭, 동방교회 등 기독교 각파가 각각 커뮤니티를 형성, 과거는 기독교도가 인구

중동 개황

	수도	면적 (천km ²)	인구 (천명)	1인당 GNI	정치	종교	언어
아프카니스탄	카불	652	25,868	a	이슬람국	이슬람 99%	파슈투어
이란이슬람 공화국	테헤란	1,648	62,977	1,810	이슬람공화국	이슬람-시아파 95%	페르시아어
이라크 공화국	바그다드	438	22,797	b	공화제	이슬람 순나파다수	아라비아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리야드	2,150	20,198	6,900	절대군주제	이슬람 85%	아라비아어
쿠웨이트	쿠웨이트	18	1,924	d	입헌군주제	이슬람 84%	아라비아어
바레인	마나마	0.69	666	c	입헌군주제	이슬람 태반	아라비아어
카타르	도하	11	565	d	군주제	이슬람	아라비아어
아랍에미리트(UAE)	아브다비	84	2,815	d	수장제 연방	이슬람	아라비아어
오만 수단	마스카트	310	2,348	c	군주제	이슬람	아라비아어
예멘공화국	사누아	528	17,048	360	공화제	이슬람	아라비아어
시리아아랍공화국	다마스쿠스	185	15,711	970	공화제	이슬람 85%	아라비아, 쿠르드어
레바논공화국	베이루트	10	4,271	3,700	공화제	이슬람	아라비아, 프랑스어
요르단 하시미티 왕국	안만	98	4,740	1,630	입헌군주제	이슬람 93%	아라비아, 영어
이스라엘	예루살렘	21	6,105	16,310	공화제	유대교79%, 이슬람17%	헤브라이어, 아라비아어
터키공화국	앙카라	775	64,385	2,900	공화제	이슬람99%	터키, 쿠르드어
이집트 아랍공화국	카이로	1,001	62,655	1,380	공화제	이슬람75%	아라비아어
수단공화국	할즘	2,506	28,993	330	공화제	이슬람75%, 기독교10%	아라비아어
사회주의인민리비아	트리폴리	1,760	5,419	c	일당독재	이슬람(순나파)	아라비아어
튀니지공화국	투니스	164	9,457	2,090	공화제	이슬람(순나파 다수)	아라비아, 프랑스어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알제	2,382	29,950		공화제	이슬람99%	아라비아, 프랑스어
모로코 왕국	라바트	447	28,238		입헌군주제	이슬람99%	아라비아, 프랑스어
모리타니아 이슬람공화국	누아쿠조트	1,026	2,598		공화제	이슬람	아라비아, 프랑스어
소말리아민주공화국	모가디슈	638	9,388		공화제	이슬람98%	소말리어, 아라비아어
지부티공화국	지부티	23	648		공화제	이슬람94%	아라비아, 프랑스어
코모로 이슬람연방공화국	모로니	2	544		군사정권	이슬람86%, 기독교14%	프랑스, 아라비아어

주) 1, a-\$755이하, b-\$756-2995, c-\$2996-9265, d-\$9266
2, 인구, 1인당GNI-World Bank Atlas 2001

의 반수 이상을 점하고, 정치적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그 후 이슬람 교도의 인구가 증가한 결과, 인구구성과 정치권력의 분배와의 사이에 불균형이 생겨, 그것이 1970년대 이후의 레바논 내전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유대, 그리스도의 두 가지의 유일신교의 흐름을 거쳐, 7세기 아라비아반도에서 무하마드에 의해 창시된 이슬람교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현재의 중동제국은 어느 곳이나 이슬람교도가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중동제국에서의 공통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 사회규범을 만들어 내는 기초가 되고 있다. 또 중동에서는 현재도 개인의 생활에서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면에서 종교가 커다란 역할을 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이슬람은 정치와 종교간의 관계를 불가분하게 하고, 이슬람의 가치관에 근거한 사회나 정치를 구축하는 것이 개개의 이슬람들의 의무라고 여겨진다.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등 이슬람의 원리를 정치체제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국가에서도, 또 터키와 같이 세속적인 국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현실 정치나 사회, 경제에서 이슬람을 어떻게 위치 지울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정권이 '진정 이슬람적인가'라는 물음과도 연계돼, 다음에 말하는 비 개방적인 정치체도나 일반민중들 사이에서의 불공정감의 고양과 부딪치면서, 중동제국에서의 이슬람부흥주의의 대두의 배경이 된다. 그러나 이슬람 부흥주의의 태도는 다양하며, 조직이나, 목표, 운동의 진행상태는 결코 획일적이지는 않다. 이슬람 부흥주의를 다른 문명과 적대하는 것이라고 단순화한 인식태도는 오히려 현실을 오해하게 만든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제국은 모두 스스로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는, 하나의 국내에서의 다수파와 소수파의 대립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구면에서 소수인 점령지(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국내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수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이스라엘의 '유대인국가'의 상태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 그것이 점령지문제에서의 정치적 타협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이슬람국이라고 위치시키고 있으며, 이슬람제국 회의기구(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에 가맹하고 있다. 즉 OIC에 가맹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약 50개국에 넘고, UN가맹국의 1/3가까이 점하고 있으나, 그 반수 정도가 중동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이슬람 종파이기는 하나, 동족집단으로 아랍 가운데 상당한 독자성을 가지고, 그 독자성에 더해 다수파 이슬람로부터 더러는 이단시되어 온 것이 돌즈파와 아라비파다. 시아파로부터 더욱 분열한 돌즈파는 현재 레바논과 시리아, 특히 이스라엘 북부 3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 아라비파도 역시 시아파의 분파이나, 시리아, 터키 및 레바논에 살고 있다. 바샤 아자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시리아정권은 소수파인 아라비파 정권이다.

중동의 소수민족

중동의 국경은 거의 인위적으로 나뉘진 것이며, 그것도 유럽열강이 자의적으로 선을 그은 경

우가 많다. 때문에 개개 나라 가운데는 상당수의 소수민족이나 종파집단이 살고 있는 곳이 많고, 또 하나의 민족이나 종파집단이 복수의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것도 또 중동 제국의 국내정치나 대외관계를 보다 한층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다.

중동의 소수민족 가운데 걸프 전쟁 직후에 가장 세계의 주목을 받은 곳이 사담 후세인 정권의 압제를 피해보려고 이라크 북부에서 터키나 이란으로 피난한 쿠르드인들이다. 쿠르드 인은 언어적으로는 이란 계의 쿠르드어를 모어로 하고 있으나, 종교적으로는 순나파가 다수로, 약1/3이 시아파로 볼 수 있다. 10세기에는 독자의 왕조를 수립했으며, 십자군에 의해 지배되어 있던 예루살렘을 이슬람교도의 손에 탈환한 사라프 아딘도 쿠르드 인들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오스만제국의 지배지역이 영국 등에 의해 분할되어 국경선이 그어지자, 쿠르드인 거주지역은 현재와 같이 이라크와 터키, 이란의 3개국으로 분단되었고, 일부는 시리아에도 살고 있다. 걸프전 후, 미국 등은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인 지대에서의 이라크 군의 군사행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 UN결의에 근거 경제제재의 결과 사담 후세인 정권이 약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의 쿠르드인은 중앙정부의 반대를 무시하고 독자의 자치기구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상당수의 쿠르드 인을 포용하고 있는 터키와 이란은 이라크의 쿠르드 인이 자치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아프리카의 아랍세계에서의 소수민족으로서 벨벨인이 알려지고 있다. 벨벨인이라 함어계의 벨벨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들의 총칭으로, 현재 주로 모로코와 알제리에 살고 있다. 7세기 이후는 북 아프리카가 이슬람 세계의 일부로 편입되는 가운데, 벨벨인도 아랍화, 이슬람화되어 왔

다. 그러나 독자의 언어나 문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아랍 화에 대항하는 형태로 자기들의 언어나 문화를 지키려 하는 독자성을 주장하고 있다.

수단도 소수민족의 존재가 장기간에 걸쳐 내전의 원인이 되어왔다. 19세기의 영국과 프랑스에 의한 아프리카의 분할과 식민지화가 전개되는 가운데, 북부 아랍지역에 남부 블랙 아프리카 지역을 추가하여 하나의 국가로서 만들어 진 것이 현재의 수단이다. 그 때문에 기독교나 토착종교를 주체로 하는 남부 블랙 아프리카 인들은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 북부의 이슬람교도 아랍인 지배로부터의 분리 독립운동을 반복해 왔다. 이 남부 수단을 둘러싼 내전은 북부에 의한 이슬람의 규율준수가 진전됨에 따라, 근년 한층 격렬해 가고 있다.

아랍제국 가운데는 알메니아, 그리스, 투르크멘, 앗시리아 등의 소수민족이 존재하고 있다. 비아랍의 터키나 이란, 아프카니스탄도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에서의 민족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소수민족의 존재는 정치적 불안정의 요인이 되어, 차별이나 박해, 격렬한 폭력적인 대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는, 국내에서의 다수파와 소수파의 대립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구면에서 소수인 점령지(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국내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수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이스라엘의 '유대인국가'의 상태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 그것이 점령지문제에서의 정치적 타협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이상한 동학을 만들어 내고 있다.

〈출전:立山良司 편, 『中東』(自由國民社) 2002〉

중동분쟁 100년

19세기 후반, 오스만 터키제국 지배하의 팔레스타인을 무대로 민족분쟁이 발생, 유대민족주의와 아랍팔레스타인민족주의의 두 내셔널리즘이 역사에 등장했다. 유대교의 구세주 사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유럽에 유랑하는 분산민족인 유대인이 외부 세계에 동화하지 못하고, 차별·박해·추방·굴욕의 역사를 이어오는 가운데 근·현대 에 들어와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정치운동을 만들어내고 발전시켜 온 유럽에 기원을 둔 19세기형 내셔널리즘이다.

森戸幸次 / 일본, 静岡産業大學 교수

중동분쟁의 주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가지 내셔널리즘의 상극

19세기 유럽은 민족을 토대로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내셔널리즘의 시대'를 맞아, 분산민족 유대인의 동화는 러시아에서의 학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각지에서 반 유대주의를 일으켰다. 유대인이 외부세계에의 융화가 어렵게 되면서, 유럽의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대사회 전체가 민족공동체의 특질을 몸에 지녀 정상적인 경제·사회구조·민족의식·영토를 갖춘 고향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획득하는 길"이 모색됐다.

한편 후자의 팔레스타인아랍민족주의는 아랍의 고향(팔레스타인)·민족종교(이슬람교)·모국어(아라비아어)를 공유하는 아랍공동체의식(Arabism)을 중심으로 공통의 가치체계를 추진, 이를 위협하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 단결하여 자기방위를 하는 구심력을 발휘한다. 아랍인

이 살고 있는 영토(팔레스타인)는 아랍민족주의의 이름 아래 연대하여, 어떤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그에 저항하여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민족자결의 길로 나갔다. 이것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화된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민족해방운동의 원동력이 된 20세기형 내셔널리즘 운동으로 연결된다. 이 두 내셔널리즘 운동에 있어,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은 민족자결에 근거하여 스스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유대민족주의는 발포어 선언(1917), 아랍민족주의는 맥마혼 사건(1915~1916)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울 약속을 영국으로부터 부여받고, 그 토지를 영유할 권리를 획득했다.

전자는 예언자 아브라함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약속의 땅'에 3~2천 년 전에 건국했다는 선조의 땅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했고, 후자는 수세기에 걸친 '토지소유권'을 근거로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영국의 약속은 동부 중동과 아프리카 전선에서의 불리한 전황을 의식

한 영국제국주의가 연출한 '기만적인 외교'였고, 진정한 목적은 프랑스 등 구주 열강과의 사이에 전후에 중동분할을 획책하려는 의도를 가진 제국주의의 야망이었다.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을 무대로 유대민족주의와 팔레스타인아랍민족주의가 격돌하는 민족분쟁의 막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유대민족주의의 역사적 비극은 그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이미 자유로울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토지는 오스만 터키제국의 일부로, 아랍민족운동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 운동은 유대민족주의운동과는 거의 동시에 발전한 것으로, 양자는 충돌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독일계 유대인은 말하고 있다.

유대민족주의 -이스라엘 건국에의 도정

이 두 내셔널리즘은 백년분쟁 중에, 기원-형성-발전의 과정을 거쳐왔으나, 20세기 중엽에 유대민족의 비원을 먼저 구체화한 것은 유대민족주의(시오니즘) 운동이었다. 이스라엘 건국까지의 고난의 도정을 개괄해 보면, 1880년대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시오니즘의 맹아, 형성기에 해당하며, 이스라엘 국가건설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볼 수 있다. 19세기는 '근대 내셔널리즘의 세기'(E. H. Carr)로 불려, 민족의식의 고양, 민족자결의 기치 아래 민족 국가들이 급증, 유럽에서는 근대 중기(1815~1871)에 14개 국,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24개 국을 헤아렸다. 각 국의 내셔널리즘의 담당자도 군주 주권에서 국민 중간층으로 옮겨져, 일반 대중이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대두했다. 공업·기술이 발달 그리고 인구의 증대와 더불어 노동자가 성장함으로써 각 국의 국민경제 또한 단일경제 체계화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하여 유럽이 민족을 토대로 한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를 맞이하자, 이방인인 유대인에

대한 배척운동이 분출하였다. 특히 19세기 말 러시아에서는 "1황제 1교회 1국민"이라는 슬로건이 주창돼, 비 러시아적인 유대인 등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동화를 거부하는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같은 민족주의에의 경향을 강화시켜, 그들의 역사적인 고향에 안주할 땅을 찾는 시오니즘 운동이 동유럽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대두했다. 이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폴란드 태생의 이론적 지도자 레온 스피겔(1821~1891), 헝가리 태생의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데오돌 헤르츨(1860~1904) 등이었다.

이 시기에 국민국가를 형성한 유럽의 내셔널리즘은 해외로 팽창하면서 미국·중동·아시아 각지를 차례로 침략하여 식민지를 건설, 영국이 "세계는 우리들의 농원,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호언했듯이 세계는 '제국주의 시대'를 맞았다. 이 새로운 국제정치 구조의 기초를 배경으로 태어난 시오니즘 운동은 유럽의 내셔널리즘의 발전에 연동하면서 생성, 발전해 갔다.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오스만 터키제국에 유럽 열강이 진출, 팔레스타인도 영국과 프랑스에 의한 영토쟁탈의 대상지가 됐고, 여기에 시오니즘 운동도 합세했다. 이 민족운동의 논리에서 보면, 서구에서 동화를 거부한 분산민족 유대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반유대주의의 또 하나의 측면으로 비치게 된다.

그러나 한편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인의 눈으로 보면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는 유럽 열강에 의한 제국주의 정책의 굴레에서의 침략 행위에 연동한 움직임이다.

1896년 빈에서 팔레스타인에 민족 향토건설을 역설한 헤르츨의 『유대인 국가론』이 출판되었고, 이듬해 시오니즘 운동의 계기가 된 제1회 시오니스트 회의에서 「바젤 강령」이 채택되었으며,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시오니스트 세계 조직

‘시오니스트 기구’가 발족되어 이 기구의 팔레스타인 지부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모체가 된 ‘유대 기구’가 창설되었다. 1901년에는 팔레스타인의 토지구입 자금을 모으는 ‘유대국민기금’이 설립됐고, 1909년에는 최초의 식민지 키브츠 ‘도카니아’가 건설되었으며, 1920년에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노조 ‘히스타들토’가 발족한 데 이어 준군사조직인 ‘하카나’가 결성되었다.

이렇게 하여 시오니즘 운동은 정치·군사·경제면에서 착착 독자 조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한편, 강대국의 지지와 협력을 얻기 위해 국제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 1902년에 헤르츨은 오스만터키의 술탄에게 팔레스타인에의 이민과 입식을 받아들일 것을 조건으로 터키의 부채 청산을 위한 재정원조를 제안하기도 했고, 유대인의 입식 확대가 유럽 열강의 세력확대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등, 유럽 제국에 의한 팔레스타인 쟁탈전에 뛰어들었다.

이 시기 팔레스타인에서의 유대인 인구는 1880년에 약 2만 4천 명으로 팔레스타인 주민(48만 명)의 5%에 지나지 않았으나, 제1회 아리아(이민) 시대(1882~1903)와 제2회 아리아 시대(1904~1914)를 거치면서 1914년에는 약 6만 명(팔레스타인 인구의 11%)으로 증가했으나, 토지 소유율은 여전히 2% (1918년)에 그치고 있었다. 그후 제1차 세계대전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시오니즘 운동이 유대 국가의 기반을 확립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세계 최강국임을 자처하던 영국이었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시오니즘 운동에 팔레스타인에의 민족향토 건설의 사명을 부여했고, 전후에는 국제연맹에서 팔레스타인 위임통치권을 부여받았다. 위임통치 아래서 ‘시오니스트 기구’가 정식으로 유대 행정기구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돼 영국은 유대 이민에 편의를 제공

‘내셔널리즘의 시대’를 맞아, 분산 민족 유대인의 동화는 각지에서 반 유대주의를 일으키며 유대인이 의부세계에의 응해가 어렵게 되면서, 유럽의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대사회 전체가 민족공동체의 특질을 몸에 지녀 정상적인 경제·사회구조·민족의식·영토를 갖춘 고향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획득하는 길”이 모색됐다.

하고 입식을 장려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같은 조직적인 대량 이민과 입식활동이 전개된 결과,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인구는 위임통치 전반 15년 사이에 인구의 11%(1922), 17.7%(1931), 28%(1936), 32.15%(1,676,000명 중 539,000명, 1943)로서서히 증가하기 시작, 국가의 기초가 되는 인적기반을 확립했다. 영국의 위임 통치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을 다수파로 하여, 유대국가를 탄생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역할을 했다.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이민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그곳의 아랍인은, 유대인이 언젠가는 팔레스타인의 주인이 돼 아랍인이 추방되는 것이 아닌지, 즉 유대국 건설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가중시켜 갔다.

시오니즘 운동은 영국의 무력을 빌어 1920년, 1921년, 1929년, 1933년, 1936년에 계속적으로 발발한 아랍 주민에 의한 수많은 저항운동과 주민봉기를 진압했을 뿐 아니라, 미국에 사는 유대인에게서 거액의 헌금을 받아 유대인 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 구축에 성공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약 6백만 명의 유대인이 나치의 손에 학살돼 ‘유대인 문제’의 해결이 초미의 국제적인 문제가 되자, 미국의 트루만 정권은 위임 통치국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국제연합의 장으로 옮기도록 요청, 이스라엘 건국에 길을 연 1947년 1월의 유엔총회 181호 결의를 이끌어내는 데 뒷받침이 됐다.

이 결의는 팔레스타인 2만 6,300km²의 영토를 둘로 분할하여, 52%를 유대국가(유대인 498,000명, 아랍인 497,000명), 48%를 아랍국가(아랍인 725,000명, 유대인 1만 명)로 나눴으나, 유대 측이 1947년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의 31%, 토지소유는 겨우 7%를 소유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아랍 측이 이의 수용에 강력히 반발, 1948년 5월 건국을 선언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전쟁(이스라엘 독립전쟁)을 벌였다.

유대국가는 이 전쟁에 승리, 팔레스타인 전체의 77% 면적으로 영토를 더욱 확대했다. 나머지 23% 가운데 요르단강 서안 지구(5,700km²)와 가자지구(36만km²)는 각각 요르단과 이집트 통치를 거쳐, 1967년 전쟁에서의 아랍의 패배에 따라 이스라엘의 점령 아래 둠으로써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은 정치적인 지도에서 완전히 소멸되기에 이른다. 이후, 이스라엘과 아랍제국 사이에는 3회에 걸쳐(1982년의 레바논전쟁을 포함하면 4회)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전쟁을 경험했으나,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의 아랍인이 고향에서 추방돼, 토지와 가옥을 잃고 주변 아랍 각 지역으로 유랑하는 이른바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가 발생했다. 이스라엘 독립전쟁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 약 72만 명이 12개 도시, 416개의 촌락에서 쫓겨난 ‘난민’이 되었으며, 그로부터 반세기 후인 오늘날에는 그들 난민들의 자손이 3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 되고 있다.

또 서안/가자가 점령된 67년 전쟁에서는 주민 30만 명의 새로운 난민(Displaced Person)이 발생, 그들의 자손도 현재 60만 명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안/가자 국가’ 건설의 길

67년 전쟁에서 동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서안/가자지구가 이스라엘의 점령 아래 들어가자, 팔레스타인은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고, 이 해 채택된 UN 안보결의 242호에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단순한 난민 문제로 취급되기에 이르렀다. “팔레스타인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존재해 왔으나, 1948년에 소멸, 지금은 팔레스타인의 존재만이 남아 있다”(다안 국방장관, 1973). “지중해와 동방의 아랍 사막 사이에는 유대국가와 요르단국가밖에 존재하지 않고, 여기에 새로 또 하나의 아랍국가를 만들 여지는 없다. 팔레스타인인은 요르단 안에 나라를 가지면 좋을 것이다”(골다 메이어 수상).

67년 전쟁 후의 이스라엘은 ‘전쟁 이전으로의 원상 회복, 팔레스타인국가 수립, 동 예루살렘 지위 변경을 거부하는 원칙’을 국시로 정했다. 이에 대해, 아랍 각지의 이산 팔레스타인인은 그들의 고향의 해방을 아랍 제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민족투쟁을 통해 완전하게 해방하여 고향으로 귀환할 민족적인 권리를 되찾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팔레스타인 게릴라 최대 조직인 파다하를 지지 기반으로 팔레스타인 건국 운동의 조직화에 성공한 것이, 팔레스타인 해방과 조국에의 귀환을 목적으로 결성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 알 아라파트다. 그는 이슬람교도로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후 17세 때 팔레스타인 전쟁에 참가했고, 전쟁을 피해 가족과 함께 가자로 피난한 뒤에는 카이로에 이주하는 등, 고향을 상실한 디아스포라 팔레스타인인의 유랑생활을 철저히 경험했다. PLO는 아랍 주변에 흩어졌던 팔레스타인 난민을 결집,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팔

레스타인 게릴라로 키워, 파다하 등 각 게릴라 조직이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혁명운동의 조직화에 성공했다. 아라파트는 팔레스타인 전 영역 해방, 이스라엘 파괴를 목표로 대 이스라엘 게릴라 투쟁을 전개했으나, 1970년대 중반이 되자, '해방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수립한다는 현실주의 노선으로 전환했는데, 이 새로운 아라파트 노선은 1974년의 제7회 아랍국 수뇌회의에서 PLO가 팔레스타인인 유일의 정통 대표로 인정됨과 동시에, 장래 서안 가자가 해방될 경우, 이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요르단이 아니라 PLO가 행사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 인근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 이 두 개의 국가가 공존한다고 하는 생각을 팔레스타인인과 아랍 세계가 처음으로 용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라파트는 이스라엘 국가를 해체하여 팔레스타인의 전 영토 해방을 겨냥한 무장투쟁 노선에서 전환, 팔레스타인 전 영토의 23%에 상당하는 서안/가자에 한정된 나라 만들기에 겨냥하는 부분 해방, 미니 국가 실현에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아라파트의 2국 공존 구상이 PLO의 기본방침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1987년 12월 서안/가자에서 발발한 팔레스타인 주민에 의한 반 이스라엘 점령 저항운동의 성과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팔레스타인 국가’-인티파타의 유래

팔레스타인의 민중봉기는 1987년 12월, 가자지의 난민캠프에 사는 4명의 청년이 이스라엘의 군용 트럭에 깔려 죽은 사건을 계기로 확대, 순식간에 이스라엘 점령하의 요르단강 서안/가자지를 석권, 장기화하는 이스라엘군의 주둔에 저항하는 ‘인티파타’로 발전한다. 이 민중운동은 국제사회에 대해, 장기점령 지배의 가혹한 실태

이스라엘 독립전쟁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 약 72만 명이 12도시, 416의 촌락에서 쫓겨난 ‘난민’이 되었으며, 그로부터 반세기 후인 오늘날에는 그들 난민들의 자손이 3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또 서안 가자가 점령된 67년 전쟁에서는 주민 30만 명의 새로운 난민(Displaced Person)이 발생, 그들의 자손도 현재 60만 명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를 호소,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독립을 회구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인티파타가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 준 영향은 큰 것이었다. 1년 후인 1988년 11월 PLO는 팔레스타인인의 국회에 해당하는 제19회 팔레스타인민족평의회(PNC)를 개최, 팔레스타인 전 국토의 해방을 겨냥한 종래의 운동 목표를 크게 전환시켜, 팔레스타인 가운데 77%를 점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처음을 받아들이고, 이 ‘유대 국가’ 바로 옆에 나머지 23%를 차지하는 서안/가자지 지구를 영토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출현을 목적으로 하는 ‘2국가 공존방식’의 실현에 착수했다. 인티파타라는 민중봉기에 편승해 자신을 얻은 팔레스타인 운동은 서안/가자 주민에 뿌리내린 현실적인 국가 만들기에 착수,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세계적인 지지와 승인이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대 팔레스타인 정책의 전환을 이뤄, 다음 12월부터 그 동안 ‘테러조직’으로 평화 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없었던 PLO와 역사적인 대화를 개시했다.

중동평화 프로세스'의 시대

그러나 인티파타 운동이 장기화함에 따라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경제 구조로부터 탈피할 수 없는 주민 사이에는 이 운동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 눈에 띄게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 특히 1990~1991년의 걸프전은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 왔다. 쿠웨이트를 침략, 병합한 이라크를 지지한 PLO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만 산유국에 돈벌이간 팔레스타인인이 대거 추방됨에 따라 재정이 파탄되는 등 조직 존망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위협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PLO는 1991년부터 1992년에 걸쳐 이스라엘과의 전격적인 평화담판을 벌인 결과 1993년 9월, 유대국가의 생존권 승인과 그 대가로 서안/가자에 5년간의 잠정자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잠정해결'을 위한 오슬로합의('팔레스타인 잠정 자치정부의 설치에 관한 원칙선언')를 수락했다. 1994년 5월부터 5년간에 걸친 잠정자치가 시작되었고 아라파트가 같은 해 7월에 가자에 귀환하면서 이스라엘의 요구에 응해 인티파타의 종결을 선언, 팔레스타인 분쟁은 오슬로합의에 근거하여 본격적인 '중동평화 프로세스' 시대를 맞는다.

결국, 인티파타는 이스라엘 지배구조를 해체한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불완전 연소로 끝났다. 서안/가자 주민의 노동력은 이스라엘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으며, 이 의존 체질은 점령 지배가 계속되는 한 변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 앞에, 이스라엘에 생사여탈권을 장악 당하고 있는 주민이 항복한 꼴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서안/가자의 점령이 종결되어야 비로소 이스라엘 지배로부터의 민족해방

과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팔레스타인 사회에 심은 것은 틀림없고,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군에 투석하는 젊은이들의 항의 행동은 점령 종결의 프로세스를 일찍 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인티파타의 재점화 '팔레스타인 독립전쟁'

서안/가자잠정자치가 시작되자 '중동평화 프로세스'도 단계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를 확대하는 교섭으로 초점이 옮겨져, 난산 끝에 1995년 카이로협정, 1998년 와이리버 합의 등을 거쳐, 자치의 영역은 유대인 입식지를 서안의 40%인 가자지구로 제한했다. 즉 5년간의 자치라는 '잠정해결'로 팔레스타인 측이 받아들인 토지는 서안 전체의 40%(2,280km²), 가자지구(363km²)가 되었다.

이는 팔레스타인 전역(26,300km²)의 9.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90.4%는 이스라엘 측에 남겨져 있다. 문제는 팔레스타인 측이 '최종해결'에서 팔레스타인 측이 서안/가자 국가의 영토라고 상정하는 23%를 정말로 획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1999년 5월, 5년간의 잠정자치 종료 기한을 맞았으나, 자치교섭의 난항으로 '최종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2000년 9월까지 연장된 잠정자치시한을 눈앞에 두고, 7월에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라크 수상과 아라파트 의장, 클린턴 대통령이 토의를 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국가'는 비무장화하고, 영역은 가자지구에 더하여 서안 전체의 90%를 넘지 않으며, 150개 소, 15만 명을 헤아리는 유대인 입식자들은 재편돼, 입식지 불력을 형성하여 이스라엘 주권 아래 두는 등, '팔레스타인 국가'의 주권을 대폭 제한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또 신 국가의 수도로 상정된 동 예루살렘은 유대교 이외에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성지로서 팔레

스타인 측 한 곳에만 양보할 수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또 4~5백만 명으로 알려진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도 어렵게 보였다. 그러나 결국 이 회담도 아라파트 의장이 팔레스타인 분쟁의 '최종 해결'을 위해 피할 수 없는 두 개의 '원칙'(이슬람교도의 성지를 포함한 동 예루살렘의 주권확보와 난민의 귀환과 보상을 정한 1948년의 UN 총회 결의 194호 이행)을 고집함으로써 15일간에 걸친 교섭은 결국 결렬됐다.

이에 따라, 9월 28일 평화협상 반대파인 아리엘 샤론 전 국방장관이 평화교섭에서 바라크 수상 의 양보 움직임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동 예루살렘의 이슬람교 성지에 무장 호위병을 거느리고 들어가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를 도발행위로 본 팔레스타인 민중이 이에 강력히 반발, 일제히 봉기했다. 서안/가자지역 주민과 팔레스타인에 사는 난민과 이스라엘에 사는 아랍인도 이에 합세하여 팔레스타인의 반란은 아랍과 이슬람 세계로 파급되어 3개월 뒤에도 수습되지 않고, 잠정자치 개시와 동시에 종식이 선언된 미완의 인티파타가 재 발발, 오슬로합의 이전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인티파타는 오슬로합의에 근거한 '자치통치'를 내용으로 한 '잠정해결'을 뛰어넘어 서안/가자의 독립을 요구하는 팔레스타인 민중이 분쟁의 '최종 해결'로 향해 새롭게 개시한 투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987~1994년의 최초의 인티파타를 지도한 지도자들은 팔레스타인인은 최초의 인티파타에서, 1988년에 서안/가자 자구를 영역으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의도를 선언했으나, 이번의 새로운 인티파타는 영토에의 주권을 실제로 행사하기 위해 민중이 일제히 봉기를 일으킨 '팔레스타인 독립전쟁'으로 위치지우고 있다.

'팔레스타인 2국가 공존'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일 것이며 이 길을 이스라엘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제사회는 1990~1991년의 걸프전 위기, 냉전기의 쿠르드 난민이나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보인 포스트 냉전하의 내전형 국내분쟁에 '인도적으로 개입'하여, 공평한 평화 메커니즘을 다시 만들어내게 할지도 모른다.

백년분쟁의 양방 : 내전형 지역분쟁의 애길 모델로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요구하는 팔레스타인민족주의의 장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반세기 전 이스라엘 건국에 성공한 유대민족주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 팔레스타인민족주의는 인티파타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대해 민족해방의 최종 목표로서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귀환권·국가주권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정하고, 구체적으로는 (1) 서안/가자 23% 점령 종결, 독립 달성(1967년 전쟁 라인으로의 이스라엘 철수) (2) 난민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약속한 UN 안보리 242호 결의 및 UN 총회 194호 결의의 이행 등을 호소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교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아라파트에 동 예루살렘의 '공동관리'와 교환 조건으로 난민 귀환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했으나, 이것은 건국과 난민 귀환을 위해 결성된 PLO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도리어 지역의 불안정화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아라파트는 2000년 9월, 18년 전 레바논 베이루

트 교외의 한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가 친이스라엘 계 기독교도 민병대에 의해 다수 살해된 것을 추도하는 연설에서 "1982년의 학살사건은 팔레스타인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한 결코 안전은 확보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고향에 돌아가려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성지 예루살렘, 기독교도나 이슬람교도의 성지도 포기하지 않는다. 난민이 귀향하여 그들의 집을 다시 찾을 권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난민문제는 토지·존엄·신념의 문제다. 따라서 귀환권은 합법적이고 신성한 권리이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UN 결의에 의거한 요구다. 팔레스타인은 공평한 평화를 달성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2국가공존'의 수용-미국의 역사적 전환

이러한 팔레스타인의 주장에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오슬로합의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평화의 중개역을 맡아온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퇴임 전인 2001년 1월 7일, 뉴욕의 재미 유대인 조직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의 '2국가 공존 구상'을 받아들이는 역사적인 평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당신들 유대민족 건국의 꿈은 실현됐다. 1세기 전, 당신들이 팔레스타인에 돌아왔을 때, 그곳이 비어 있는 땅이 아님을 알았다. 당신들이 발견한 토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토지이기도 하며, 또 두 민족이 같이 사는 토지인 것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을 두 개의 국가로 나눠 두 개의 민족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냉엄한 현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설에서 분명해진 '2국가 공존 구상'의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자.

1) 팔레스타인 국가

국경선 및 안전 보장. 요르단강 동쪽부터 '그린 라인' 서쪽까지로, 가자지구 및 서안의 94~96%를 영토로 동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주권 국가로 한다. '국가'는 치안부대를 보유하나, 중화기 소지는 할 수 없다(사실상의 비무장 국가). 요르단 계곡에 이스라엘 군이 국제 부대의 지휘 아래 3년을 한도로 주둔한다. 국제부대는 국경선을 감시한다. 영공은 팔레스타인의 주권 아래 둔다. 서안 각지에는 이스라엘군의 긴급 무기고를 설치한다. (영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부터 완전 철수, 서안의 94~96%까지 철수하나, 서안 입식지의 80%를 자국령에 병합하는 대신 이스라엘령의 일부를 서안과 가자 지구를 연결하는 팔레스타인 안전 통로 등의 형태로 제공한다. 입식지간의 연결을 유지한다.

2)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분할하여 동은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서는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다. 미국은 서와 동에 각각 대사관을 설치한다. 과거의 이슬람교 성지 '알 하람 알 굿지 알 샤리프'는 팔레스타인의 주권 아래, 유대교의 성지 '서쪽 벽'(동쪽의 벽)은 이스라엘의 주권 아래 둔다.

3) 난민

팔레스타인에 있어 난민의 귀환권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무척 곤란한 문제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가 귀환을 희망하는 난민의 집약지가 되기를 제안, 이스라엘령으로의 귀환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이스라엘에의 귀환은 인도적인 범위 내로 국한시킨다.

4) 분쟁의 종결

어떤 합의도 팔레스타인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것으로, 쌍방은 모든 요구를 포기한다.

이상의 '클린턴 구상'은 팔레스타인 백년분쟁을 '최종해결'하고, 중동세계에 영속적이고 공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2국가 공존' 이외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인정한 획기적인 제안이며, 오슬로합의에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 구조 '팔레스타인 최종지위에 관한 원칙 선언'으로 발전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으로 적어도 팔레스타인과 미국간에는 '2국가 공존' 구상을 공통의 토대로 교섭 조건이 정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라파트로서는 난민 귀환권을 포기한 '굴복의 평화'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배반이며, 어떻게 해서든 명예로운 '합의의 평화'를 쟁취하고 싶었다.

한편 팔레스타인민족주의가 인티파타의 분위기를 타고 서안/가자 독립의 길로 뛰어든다면, 전력을 다해 이를 저지할 이스라엘과의 무력대결을 초래, 팔레스타인 정세는 파국을 피할 수 없다.

아라파트로서는 인티파타를 통해서 민족적 요구의 달성 수준을 강화시키고, 이스라엘 측의 군사 옵션을 봉쇄하기 위해서도 '정치적 우산'으로서 평화 통로 몇 개는 남기고 싶을 것이나, 파국의 회오리에 내몰린다면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사태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서안/가자의 주민이 어디까지나 '굴복의 평화'를 거부, 팔레스타인인이 추구하는 '평화의 배당'에 민족의 이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공평한 '합의에 의한 평화'를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더 많은 팔레스타인 젊은이의 피를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

지금부터 팔레스타인 정세가 진흙탕의 내전으

로 내달린다면, PLO로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아에서 지배자들의 철수를 쟁취하고 1960년대에 독립을 달성한 민족해방전선(FLN)과 동일한 '팔레스타인 혁명'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부시 신 정권 아래서도 클린턴의 '팔레스타인 국가 공존' 구상을 토대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21세기의 중동 신질서를 구축할 외교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의 문제는 미국이 이 평화구상을 받아들일도록 이스라엘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다.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가'에 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있으나 '동 예루살렘'의 포기에는 80% 이상이 반대하는 등 '팔레스타인 공존'을 받아들이는 국민 여론이 지배적인 것은 아니다.

과거 백년분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이스라엘 국민은 임전 태세하의 '전쟁사회'에서 생활, '평화사회'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드문 국민이다.

만약 이스라엘 국가가, 이 나라가 없는 상태보다도 중동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변 아랍제국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인식된다면, 중동지역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2국가 공존'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이 길을 이스라엘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제사회는 1990~1991년의 걸프전 위기, 냉전기의 쿠르드 난민이나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보인 포스트 냉전하의 내전형 국내분쟁에 '인도적으로 개입'하여, 자기들 마음대로의 '최종 해결'을 불가능하게 한 것 같이, 공평한 평화 메커니즘을 다시 만들어내게 할지도 모른다.

〈출전:『中東百年紛爭』(일본, 平凡社, 2001)〉

중동-아랍세계의 민족주의와 종교

이슬람부흥운동 전개에서, '역사의 다시 씌'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사 네서널리즘의 일종으로서, 네서널리즘의 초석으로 위치 지워져 온 이슬람의 신도공동체의 역사를, 민족주의 사관의 범위에서가 아니라, 이슬람 사관 가운데서 바뀌어 말하는 것이, 아랍민족주의에 빼앗긴 '역사'를 탈환키 위한 제1보로 보여진다.

酒井啓子 /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원

아랍민족주의 기관

아랍민족주의의 위치

아랍민족주의의 정의와 위치에 대해서는 사회의식, 사상, 정치운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지적될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의 요소는 어떤 형태로든 서로 관련돼 있으면서도, 각각의 별도의 전개 과정을 거쳐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의식으로서의 '우라바'(uruba), 즉 '아랍 성'이라는 일종의 막연한 자기인식이, 이슬람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이슬람 이후는 어떤 의미에서 '무슬림이라는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식과 불가분한 형태로 표명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특히 오스만제국 말기 서구 열강들의 진출에 대한 위기감의 반영으로서, 진출하는 외래세력, 및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공동체 방위의 책무를 행하지 않은 통치자들에 대한 저항, 반란이나, 주로

기독교 교도 아랍 지식인들을 주체로 한 아랍 문에 부흥운동이 19세기에 발생하고 있었으나, 명확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정치적 조직화는 구축되지 않았다. 특히 저항의 양태로는 '이슬람 공동체의 구제'라고 하는 형태를 취할 경우가 많았고, 아프카니(Jamal al-Din al Afghani)나 아푸두흐(Muhammad 'Abduh)등의 이슬람개혁운동의 형태를 취해 전개돼 왔다.

한편 사상으로서의 아랍민족주의는 위의 '사회 의식'으로서의 아랍 성의 표출을 답습하면서, 이것을 이론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슬람 개혁주의 속에 내포되어 있던 '아랍의식'을, 처음 강조한 것은 위키비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보다 명확하게 이데올로기로서 확립된 것은 서구 내서널리즘을 적극적으로 연구 이것을 수용한 후스리(Sati al Husri) 등의 이론가에 의해서였다.

그런데, 저항운동으로서의 아랍민족주의는 사상, 이론으로서의 아랍민족주의와, 미분화의 사회

의식의 저항운동으로서의 표현간의 사이를, 동요하며 움직여 가는 것으로 위치 지워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저항운동의 계기로서 '아랍의식'이 대중 행동을 환기하는, 그 동원력의 크기는 당연히 정치 무대에서의 이용가치로 인식된다. 그 측면이 여실히 나타난 것이, 반식민지독립운동과 팔레스타인문제에서의 연대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무대에서의 전개에 있어서의 아랍민족주의는, 첫째로 식민지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영향력의 불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정통성으로서 이용되기도 하고, 또는 서로 경합하는 저항세력들에 대한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통성으로서도 이용되기도 하나, 종국적으로는 국가권력을 장악한 후 국가 통치수단으로서 이용되기까지 한다. 1956년부터 1967년까지 소위 아랍민족주의의 최 전성기는 특히 대중수준의 의식으로서의 아랍성과, 사상으로서의 아랍민족주의, 그리고 정치운동 등이 가장 유효하게 연관하여 국제정치 무대에서 커다란 하나의 파위가 되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입장은 특히 아랍민족주의의 퇴조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 같이, 1967년을 정점으로 하는 아랍민족주의의 고조는 그 후 후퇴의 길을 걷게 되나, 그것은 정치운동으로서의 쇠퇴해 가는 과정과, 사상으로서 쇠퇴해 가는 과정, 또는 사회의식으로서 그것과를 구별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운동으로서의 퇴조는 말할 것도 없이 1967년 이후의 정치적 패배 - 국제적,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의 군사, 정치적 패배이며, 국내적으로는 개발전략의 실패에 의한 경제적 혼미에서 시작, 그것을 만회하려고도 하지 않은 장기독재 정권의 태만, 등의 '실천'적 측면에서의 실패에 있다.

또 사상적으로도, 나세르주의나 바스주의가 체

사상으로서의 아랍민족주의는 위의 '사회의식'으로서의 아랍성의 표출을 답습하면서, 이것을 이론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슬람 개혁주의 속에 내포되어 있던 '아랍의식'을, 처음 강조한 것은 위키비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보다 명확하게 이데올로기로서 확립된 것은 서구 내셔널리즘을 적극적으로 연구 이것을 수용한 후스리(Sati al Husri) 등의 이론가에 의해서였다.

제이데올로기가 된 이후, 커다란 사상적 발전은 보이지 않는다.

그 원인으로서는 1, 내셔널리즘 정당이 집권당이 된 결과, 집권당에 의해 사상이 독점돼, 다른 사상적 발전이 허용되지 않았다. 2, 아랍민족주의가 정권탈취를 일차적 목표로 설정된 시점에서 군사력과 협동을 우선시킨 결과, 운동에서의 사상성이 저하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식으로서의 아랍의식은 위에서와 같은 정치적 사상적 혼미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속에 연면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아랍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현재는 이슬람운동 가운데 가장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어떤 종류의 아랍민족주의자가 이슬람주의로 전향해 가고, 혹은 이슬람운동 가운데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회의식'으로서의 아랍의식을, 새롭게 정치운동인 이슬람주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주목적은 과거 이데올로기로서 최전선에 있던 이들 아랍민족주의자가, 현재에 이르러

이슬람에 그 지위를 양보-운동 면에서도 사상 면에서도-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 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하고 복잡한 문제 군을 포함한 이 의문에 대해 간단히 그 회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먼저 대표적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아랍민족주의자의 주장에서의, 이슬람이 어떻게 인식, 대응되어 왔는가를 개괄한다. 그리고 또 종교와 네셔날리즘의 상반성, 친화성의 논의에 기초로 하면서, 이슬람과 아랍민족주의와의 관계를 분석하려 한다.

아랍민족주의 연구동향

아랍민족주의를 정치운동으로서 파악할 경우, 특히 사회의식으로서의 아랍성이 분출한 것 같은 정치운동의 경우, 그 기원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곤란하다.

아랍민족주의 연구에서의 고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저서들의 대부분은, 먼저 사상으로서의 아랍민족주의를 파악, 그 기원을 레바논 중심의 기독교도 아랍지식인의 문예부흥운동에서 찾아왔다. 이에 대해서 근래 들어서는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의 아랍민족주의 연구가 일어나고 있다.

먼저 대체로 그들은 아랍민족주의 연구사를 3단계로 나눠, 1930-40년대를 제1기, 1950-60년대를 제2기, 1970년대 이후를 제3기로 한다. 제1기는 기브(Hamilton A. R. Gibb), 즈라이크(Qustantin Zurayq)의 초기 논문들과 아랍통일운동에 관한 쓴 저널리시틱한 성격을 가진 논설들이 대표적이다.

제2기가 되면, 제1기에 비교하여 아카데미한 연구가 주류가 되나, 전간기 이후의 아랍민족주의의 형성과정을 대상으로, 그 기원을 추구하는 작업이 행해진다. 이 시기의 연구를 흔히 '초기의

말'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으나, 그 특징은 이데올로기 중심의 연구와 아랍민족주의의 기원을 서구 근대로 하고, 그것이 중동에 파급해 왔다고 하는 관점이 주류라는 점과 아랍민족주의는 언어 및 역사의 공유라고 하는 요소를 가장 강하게 가지는 네셔날리즘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아랍민족주의를 과거의 아랍문화의 영광을 재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주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제3기는, '후기의 말'로 이름 붙여져 있으나, 제2기의 사상연구 중심성에 대해 반성하면서, 사회를 대상으로 한 아랍민족주의 연구가 확대돼, 사회경제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강조되었다. 특히 아랍민족주의의 수용자인 엘리트, 지식층들이 얼마나 육성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춰 교육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나, 정치문화에 주목 한, 특히 사회학, 사회인류학적 접근이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또 제2기에서의 연구가 오스만주의로부터 직접 아랍리즘으로 이행을 전제로 한 것에 대해, 1920년대를 그 과도기로 분석하는 관점이 제시됐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아랍민족주의의 전개에 준 영향 등을 언급한 논문이 나타난 것도 이 시기다. 결론적으로 제3기의 연구동향은 '네셔널리스트의 경험사로, 네셔널리스트의 의미의 변천사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3기의 '이데올로기 이탈, 사회에의 관심'을 핵심으로 하는 아랍민족주의 연구는 사상으로서의 아랍민족주의가 연구에 대한 관심을 잃고, 아랍의식의 존재를 둘러싼 '사회의식' 연구에 아카데미즘의 관심이 옮겨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사상에서 사회에로'의 논리는, 본질주의적 논의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데올로기가 가진 사회적 중요성 - 그것은 오히려 이데올로기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라고 하

기보다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언설로서의 변질이 어떤 사회적 배경아래 행해졌는가하는 점에서 - 을 경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해서 필자의 여기서의 관심은 텍스트로서 다시 사상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즉 아랍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 전개가, 정치운동에서 어떤 형태로 읽혀지며,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또 현재도 여전히 아랍민족주의자를 자칭하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반성', 혹은 '자기변호'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에 보다 높은 관심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슬람'에 재해석되는 경향에 있는 억압된 아랍민족주의가, 네셔널리스트, 혹은 비이슬람과 좌파 세속주의 이데올로그들 사이에 어떻게 반성되고,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그것은 네셔널리즘 분석에서 보다 중요한 점이나, 과거의 제 사회의식의 재해석의 양태 - 과거의 제 사회의식의 발생 과정을 역사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아닌 - 관점에 근거한 시각이다.

아랍민족 세속주의, 이슬람 인식

원초적 아랍민족주의의 맹아기

여기서는 근대 네셔널리즘과 종교와의 관계를 일반적 구조를, 아랍-이슬람 세계에서 여러 이데올로그들의 사상과 정치운동주체가 남긴 언명들에서 찾아보려 한다. 아랍민족주의의 뿌리를 개괄하면, 이를 1, 이슬람개혁운동 가운데 생겨난 사상으로서의 '아랍민족 우위사상' 2, 주로 레바논의 기독교도 지식인들의 서구와의 직접 접촉에 의해 도입된 서구 계몽사상 3, 아랍지역의 명망가 층, 지역지배자들에 의한 정치적 권리 획득운동 (제국 내에서의 정당한 권리요구에서 시작,

서서히 분리에로 발전해 가는 자립화 운동) 4, 간접적으로 서구형 근대교육을 받으면서, 오스만 제국 내에서의 승진기회를 민족성 때문에 갖지 못했다고 인식한 군인, 문민들의 분리자치 요구 운동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이들 가운데 1, 2는 '사상'이나, 3, 4는 정치운동으로서 나타난 현상으로, 반드시 명확한 아랍민족주의의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 2의 사상이 자각적으로 3, 4의 운동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이며, 이것은 후에 아랍민족주의의 발전과정에서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이슬람 개혁운동과 아랍민족주의

먼저 아랍민족주의가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논의의 중심이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19세기 후반 이슬람개혁운동의 흐름 가운데 일종의 프로드(유사) 네셔널리즘적 요소를 찾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카와키비(Abd al-Rahman al-Kawakibi)에 이르러 비교적 확실한 아랍민족주의의 시각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개혁운동에서 지적되는 프로드 네셔널리즘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반식민지 운동, 공동체 방위투쟁으로서의 요소인 것이나, 그것이 드러낸 '공동체'는 이슬람공동체였던 아랍민족주의에 근거한 공동체 방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후의 전개과정에서, 이슬람 공동체 유지를 위한 귀중한 요소로서 아라비아 어, 및 아랍인의 지도적인 역할 등의 측면이, 개혁운동이 진전됨에 따라 강조돼 갔다. 에스포시토(Esposto)는 이 시기 이슬람이 아랍민족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역할로 첫째, 이슬람이 독립운동에 이데올로기나 심볼, 리더십이나 모스크를 중심으로 한 통신 네트워크를 부여한 것, 둘째 이슬람 모더니스트들

이 이데올로기적 전환을 함으로써, 대중의 충성 네트워크의 결집 점을 판-이스람적 공동체로부터 국민국가로 전환시킬 때에 그 변화가 용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 케디(Keddi)의 논의에서는 아프카니(Jamal al-Din al-Afghani)의 논조는 그의 반식민지주의 저항운동으로서의 성격 뿐 아니라, 과거의 영광 찬미, 언어의 일체성이라고 하는 내셔널리즘 특유의 유대의 원천을 상징하고, 그 처방이라고 하는 점에서, 특히 프로드 내셔널리즘으로서의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한때 파라오주의까지도 고대문명의 위대한 기억을 환기키 위해 거론되면서, 그 수년 후에는 내셔널리즘을 이슬람이 뛰어넘어야 할 부족주의의 일종으로 비판적으로 인식한다고 하는 움직임도 또한 아프카니 사상의 미분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지식인들에 의한 문예부흥 운동

한편 레바논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지식인들의 사상조류에서 아랍민족주의의 기원을 찾는 입장으로는, 부스타니(Butrus al-Bustani), 아디브 이스하(Adib Ishaq) 등이 대표적 사상가로 알려져 있다. 이들 기독교도들은 19세기 중반 본격화된 구미의 기독교 포교활동과 병행하여 진행된, 서구식 교육시설이나 인쇄소의 설립 등의 수혜자들이었으며, 이들은 서구의 르네상스를 모델로 하여, 합리주의, 자유주의 사상, 과학적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 19세기 후반에 번역이나 사전편찬, 출판활동 등의 문예부흥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종교, 종파간 대립을 비판하고, 종교적 차이를 초월한 시리아-아랍의 통일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종교를 이데올로기적 가치와 순수한 신학적 가치로 나뉘, 그 이데올로기적 역할로 이슬람이 가진 의미의 크기를 인식하고 있

었다. 이것은 후의 기독교도 아랍민족주의자가, 이슬람을 적극적으로 아랍민족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해 가는 흐름과 연계돼 있다.

명망가들의 아랍 분리운동

한편, 시리아, 레바논의 정치상황으로서 다같이 주목된 것은 명망가 층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에 대한 재향세력들의 자립화경향이다.

오스만 정부로부터 파견돼 그 중앙집권화 정책을 담당한 '위리'(wali)에 대하여, 지방명망가들이 취임하는 것이 많았던 무다사리프(mutasarif)나 오스만 의회 의원들은 오스만제국으로부터 아랍의 자립화, 분리운동을 추진하는 중요한 주체가 됐다.

다마스카스의 슈쿠리 아사리, 레바논 산악의 나스브 알스란 등의 명망가 출신자들은 오스만 분권화 당에, 또 바스라의 다리브 나키브(Talib al-Naqib)는 문학그룹에 참가하는 등, 아랍의 오스만제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정치조직의 핵이 되고 있다. 특히 초기 아랍민족주의 운동의 하나의 커다란 출발점이 된 1913년 파리에서의 제1차 아랍대회에서도 사림 아리 사림(Salim Ali Salim)등 명망가 출신들은 재외에 이주한 지식인, 출판업자, 문학관계자와 함께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분리독립 지향하는 무슬림들

그러나 명망가들을 포함한 아랍 무슬림의 민족주의 운동에의 진출 배경에는 19세기 후반 오스만제국에서의 근대적 개혁이 진전, 제국 내에서도 서구형 근대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던 점도 지적될 수 있다.

기독교도 지식인이 구미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서구근대의 문화를 섭취했던 것에 대해, 아랍 무슬림의 경우는 오스만제국에서의 근대교

육의 수용자 사이에 - 근대화된 오스만제국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한 것이기는 하나 - 서구 근대 지식, 사상이 유입되게 됐다.

특히 주시되었던 것은, 제국 내 아랍영역에 설립된 근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문민교육도 행해지면서 군인양성을 위한 교육에 역점이 두어졌기 때문에, 이스탄불에 부임한 무슬림 지식인들 중에는 군인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반대로, 근대교육에 근거한 승진 시스템이 제 민족에게 '개방' 되고 있다고 하는 '형식' 과, 민족간의 의식과의 거리를 부각시켰다. 오스만 관료, 군의 중심부로의 승진을 지향하고 있던 사람들은 실제 하는 민족적 장벽을 절감, 그 결과 그들 사이에 오스만 제국굴레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찾아 나서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불만을 가진 군인들이 결성한 것이 이라크 齣約協會며, 아랍의 반란(1916)을 지지했던 탈주, 항복 군들이었다.

일반적으로는, 아랍 반란에 아랍민족주의로서의 성질을 찾는 것에는 커다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명망가 층의 정치행동을, 명확한 사상체계로 지지하지 않은 채, 봉건 세력들이나 신흥 지식인 층, 군인 층이 서로 혼재한 상태로 분리, 자치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위치지운다면, 그 혼재가 집약되는 형태로 발생한 것이 아랍의 반란 - 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시리아-아랍왕국 건설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은 일종의 종교적 명망가라고 위치 지울 수 있는 메카의 샤리프를 주체로 군인, 신흥지식인들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샤리프라고 하는 존재의 '의례'성, 종교적 요소가 가지는 종교적 고귀성, 그 종교적 지위로부터 나타나는 부족집단에 대한 카리스마성 등이, 네셔널리즘 창조를 위해 처음으로 '기용'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사상적

기독교도들은 19세기 중반 본격화된 구미의 기독교 포교활동과 병행하여 진행된, 서구식 교육시설이나 인쇄소의 설립 등의 수혜자들이었으며, 이들은 서구의 르네상스를 모델로 하여, 합리주의, 자유주의 사상, 과학적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 19세기 후반에 번역이나 사전편찬, 출판활동 등의 문예부흥운동을 시작했다.

발전과 병행을 계속하면서도, 늘 그것과의 모순과 괴리를 가지고 전개된 '정치운동'으로서의 아랍민족주의 정치운동이, 정치적 지도자의 카리스마 성과 그것을 핵으로 하는 충성 관계에 의존한 운동형태를 취해 온 하나의 원형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민족해방과 戰間期 아랍민족주의

이렇듯 아랍의 반란을 지탱해온 군인정치세력에 '네셔널리즘' 성을 찾으려는 연구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아랍의 반란은 반식민지주의, 민족해방운동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건설을 위한 시도, 국민주의 성립에의 제1보로서 분석대상이 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아랍반란을 주도한 하심가와 그것에 가세한 무슬림 세속 군인세력을, '아랍해방'으로서의 민족주의자=네셔널리스트가 아니라, 반란 후, 국가건설의 주체로서 움직이게 된 국민주의자 = 네셔널리스트로서 위치 지우고 있다. 네이션에서의 충성의 응집력을 '타자로부터의 해방', '독립'으로 향하는 것으로 시작된 '반란'이라는 것은, 그 반란 지도자

가 국가의 담당자가 됨으로써, 역점은 국가건설에 옮겨갔다.

그 대표적 예가 샤디우 후스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반란' 전에는 오스만의 관료로서 제국정부에서 일했고, 시리아, 아랍왕국의 붕괴 후에는 파이잘 이라크 국왕에 의해 신생 이라크왕국의 교육관료로 국가에 봉사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는 그 교육정책을 통해서 아랍민족주의는 적어도 '국가건설의 담당자'로서의 아랍민족주의이며, 사회의식/반식민지주의의 사상은 아니었다. 후스리에 국한되지 않고, 전간기 아랍민족주의의 대부분이 기존국가에서의 네이션 빌딩을 위한 논리로서 전개됐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맹아적 아랍민족주의가, 외적에 대한 저항을 위한 '민족주의'이었던 것에 비해, 이 시대의 그것은 '국민주의'로서의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1930년대 이후의 아랍민족주의는 그때까지의 외부의 적에 대한 '소박한 반란'이 아니라, 대내적으로 어떻게 응집력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이론의 정교화에 역점이 두어졌다. 제1차대전 후 '제국체제'의 형태로 국가를 부여된 것에, 필연적으로 아랍민족주의는 그 '제국가'의 어디까지를 아랍이라고 인정할가의 자기 규정작업을 행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그 모델로서 언어를 핵심으로 한 독일형 네셔널리즘에 강하게 연결되게 되었다. 다음에서 전간기의 주요한 아랍민족주의자의 사상적 특질을 개괄해 보자.

먼저, 민족의식에서의 종교적 요소를 중시하지 않은 파로서, 에드먼드 라바쯔(Edmond Rabbath)와 아부두라 아라이리(Abd Allah al-Aalayli)를 들 수 있다. 라바쯔는 언어나 관습, 역사 등의 인공적인 산물로서 민족주의를 규정하면서, '혈연관계에 근거한 일체성이 국민통합을 보장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여겨서 인종적 요소를 중시한다. 거

기서부터 바비론 문명, 앓

시리아 문명으로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 '셈 인종' 자체가 '아랍'이며, 따라서 아랍의 기원은 어떤 종교보다도 선행한다 봤다. 그리고 "종교는 네셔널리즘 유대를 확립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은 아니 것"이나, 그러나 "그것은 집단의식을 환기, 강화하는데 있어, 네이션 형성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며, 또 "이슬람이 아랍에 항복한 것"라는, 그때까지의 논의를 계승하고 있다.

특히 민족의식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는 '언어'적 측면에 있어서도, 아라비아어에 의해 유지된 불변하고 보편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라크라는 공통의 언어, 이익, 혈연, 지리적 환경을 아랍민족주의의 요소로서 들고 있으나, 종교는 거기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민족주의는 종교적 상상력을 가진 것으로 변질해 가, 그것 자신이 종교화된다'고 파악한다.

이에 대해 크스단틴 스라이크는 '종교란 과거로부터 계승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네셔널리즘 발상을 지탱하기 위한 코뮤날한 감정으로서의 종교'의 의미를 강조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전제로서 코뮤날한 감정인 종교의식이 민족의식을 능가할 수 없으며, 민족주의의 우위성 자체가 근대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후스리도 또, 이러한 '종교가 민족적 연대를 강화한다'라는 발상을 핵심으로 하는 네셔널리즘론을 전개한다. 그는 민족종교가 민족주의를 지탱한다고 하는 단순한 상황과는 달리, 세계종교의 경우 그것이 가끔 반 네셔널리즘적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그러나 거기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네셔널리즘의 핵심에 있는 언어, 종교의 연결이며, 이븐 할둔(Ibn Khaldun)형의(아사비야(asabiya -사회적 연대)와 종교의 관계)원용이었다. 하임(Haim)은 랏바쯔나 아라이리 등 세속주

의의 강한 아랍민족주의에 비교하여, 후스리가 아랍민족주의와 이슬람의 친화성을 강조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티비(Tibi)는 후스리가 본질적으로는 '종교는 신과 개인 사이의 문제였으나, 조국은 전체가 관계되는 문제'라는 형태로 서구근대의 신앙을 전제로 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중시, 이슬람을 아랍의 민족 문화의 일부로 보는 후스리의 견해 또한 다른 민족주의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상과 같이 각각의 아랍민족주의자는 무엇을 아랍이라고 규정하는가를 중심으로 아랍민족주의의 개념정리를 진전시키고 있으나, 거기에는 그때까지의 중심적 국가건설 이론이었던 이슬람과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에 역점이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슬람이 가진 대중에 대한 응집력을 아랍민족주의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로서 흡수하는 노력이 행해졌다고 하는 점이다. 이 '聖法에서 文化에로'라고 하는 관점이, 이후의 아랍민족주의에 대한 이슬람 인식의 핵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이슬람의 동원력'에 대한 요소에 더해, 국가건설 기 녘셔날리즘의 특징으로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정치 전략의 측면에서 유효성을 문제로 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제1차대전 전의 아랍민족주의와 아랍정치운동이 반드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나, 전간기에는 아랍에서 펼쳐진 전략적인 상황 때문에, 아랍민족주의 사상의 사상적 전개가 영향받을 요소가 강해져, 정치적 실천을 위한 전략적 상황으로서 아랍의 통일이 필요시되는 계기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거론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팔레스타인 문제 발생에 의해, 그것은 '아랍

전체로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며, 그 때문에, 지금까지 아랍으로 보지 않았던 이집트를 아랍에 포함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기한 '무엇이 아랍을 규정하는가'라는 질문 - 즉 사상으로서의 아랍민족주의의 내용-은 이러한 경위로 정치적 이해, 전략에 대응한 것으로 위치지워지게 됐다.

그러나 전간기에는 아직 '체제'에 대한 비판세력으로서의 '아랍민족주의'는 결정화되지 않았고, '아랍국가 건설논리'의 영역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대중감정을 내포한 팔레스타인 문제는 소박한 범 아랍 연대의식 - 여기에는 예루살렘에서의 반 시온니스트 이슬람전체회의개최 등과 같은 예루살렘의 무후티(mufti)인 핫지 아민 알 후세이니(Hajj Amin al-Husayni)의 역할 등, 또 다시 판 이슬람과의 사회의식의 혼재가 보인다 - 의 상징으로서만 파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상의 핵심 또한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대중감정의 고양과 국가건설 지향, 특히 간접적으로 계속되고 있던 '외적의 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가운데 '아랍민족주의'가 전개되는 것은, 전후 혁명운동으로서의 아랍민족주의의 등장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혁명정권의 아랍민족주의

아랍민족주의가 아랍 현대정치사에서 중심적인 기동력이 된 것은 1950-60년대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등 주요한 아랍제국에서, 민족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전간기, 직-간접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문제를 연결 고리한 아랍제국들 간의 통일, 연대에 대한 회구가 민중 수준에서 높아져 감에 따라, 주로 군을 기반으로 새로운 아랍민족주의가 고양되어 갔다. 이 녘셔날리즘은 전간기의 체제이데올로기

로서 아랍' 국민주의'에 대해서, 반체제/혁명의 논리='아랍민족주의'로서 발생, 일정한 정치세력들과 보조를 같이 함으로써 정권을 장악한 결과, 다시 '체제의-단지 혁명체제의-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집트에서는 1952년 혁명에 의해 나세르이라는 카리스마 성을 겸비한 지도자가 등장, '아랍통일'을 주장함과 동시에 실제로 그것을 실현할 능력을 내외에 나타냈고, 또 아랍민족주의에 의한 반식민지주의/반제국주의를 주장, 실현할 능력을 과시했다. 그래서 시리아, 이라크에서는 각각 1963년, 1968년에 바스 당이 정권을 장악, 당 이데올로기를 국가 레벨에서 실천할 지위를 얻었다.

이러한 사상과 정치운동과의 보기 좋은 합치는 실제로 커다란 괴리가 있음을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나세르의 경우는 그 자신이 아랍의 맹주로서 통일사상을 체현 한다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정교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에 비해 바스 당의 경우는 아브라크, 알수즈이, 비탈 등의 당 창설에 관한 이데올로그들의 텍스트가 확실하게 남아있었고, 이것이 당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집권당이나 지배세력도 아랍민족주의를 그 이데올로기적 정통성의 원천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최초의 당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흐라크의 이슬람관은 기본적으로는 후스리 등의 인식을 계승, '아랍인들에 의해 이슬람은 우주관이며, 인생관이며, 특히 아랍인들의 개성의 일체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아랍의 언어, 즉 아라비아어로 말해왔다'고, 이슬람을 아랍민족주의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위치 지운다. 더욱 '그의 기본적인 성격과 미덕, 성숙도에서 아랍이 뽑

혔다'고 아랍의 민족적 우월성을 강조, '이슬람은 아랍의 운동이며, 아랍이즘의 쇄신과 완전화를 의미한 것', '이슬람의 메시지는 아랍민족의 식의 웅변적인 표현'으로 이슬람과 아랍의 불가분성을 한층 강조한다. 아흐라크의 논의에 의하면, '아랍사회에서 기초적인 원동력은, 이슬람 출현기에는 종교였으나, 현대는 민족주의로 대신했다'고 보고, '아랍의 민족적 감정과 이슬람과의 연결은 다른 민족주의의 종교와의 연결과는 성격적으로 다르며', '이슬람의 힘은 현재 아랍민족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에서 부흥하여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네셔날리즘이 유일한 이슬람의 옹호자'라고 위치 지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흐라크의 종교, 민족주의 관이 기본적으로는 서구근대주의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은, 그의 '민족주의, 내지는 세속관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그는 국가의 세속화를 일상의 정치적 변잡함에서 종교를 해방하는 것이라고 인식. '민족주의 및 정신적 문화와 세속화의 사이에 모순이 있는 듯한 인상을 받을지 모르나, 정신문화와 세속화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아흐라크의 당 창립시의 사상은 각 지역에 설립된 지역 지도부가 1950년대에는 범아랍적 존재이던 민족지도부를 초월, 각국에서 자립적인 움직임을 취하게 된 것과 함께, 변질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할 것도 없이 1960년대 이후의 시리아에서의 민족지도부와 지역지도부의 대립 및 시리아와 이라크의 바스 당 지역 지도부간의 대립은 바스 당의 이데올로기/혁명정당으로서가 아니라 국가를 담당할 집권당으로서, 그 성격을 변질시켜 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당 이데올로기는 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정치성을 부여받아, 정권에 있어 가장 이용키 쉬운 형태로 '재해석'되어 갔다. 각각의 정권은 아랍민족주의의 담당자로서,

형식적 '아랍통일=영역국가의 부정=국경을 초월한 침략이나, 타민족에 대한 공격 등의 행동을 정당화 할 논리로서 '아랍민족주의'를 이용했으며, 또 국가운영의 실패나 국내개발의 좌절 원인을 아랍 전체를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에 전가하기 위한 논리로서 이용해 왔다.

이렇듯 아랍민족주의가 정치 무대에서 해방, 혁명의 논리로서도 사회건설을 위한 논리로서도 기능을 잃어 가는 가운데, 이슬람주의가 대두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대두하는 이슬람이 아랍민족주의를 비판, 문제시한 것은, 이러한 아랍민족주의가 정치에 의해 변질/왜소화되었다고 하는 점에서인가, 혹은 아랍민족주의 자신이 일관하여 가져온 사상적 성질에서인 것인가. 이 점을 다음에서 검토해 보자.

아랍민족주의자의 '반성'

정권-국가에 의한 이슬람의 이용

아랍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슬람을 기준으로 한 '(유럽주의로서의 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본) 전근대적인' 사회에서의 탈피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것을 민족 '문화'의 일부로서, 내셔널리즘의 이슬람에 대한 우위를 전제로 한 형태로 인식해 왔다. 1950-60년대에는 아랍민족주의사상이 체제 이데올로기로 위치 지워지게 됐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의 아랍세계에서의 정치적 현실은 대 이스라엘전쟁에서의 패배, '혁명'정당이 일단 집권당이 된 상황에서 만연하는 독재, 정치 부패, 네포티즘, 경제적 정체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에서, 아랍민족주의 정권의 '실패'를 장식케 됐다.

이러한 패배하는 아랍민족주의를 눈앞에 두고, 또 대두하는 이슬람주의를 비롯한 비판세력에 대해, 아랍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어떤 사상적 전

아랍민족주의가 이슬람부흥에 대해, 대립보다는 균질성을 보여주려 하고 있는 최대의 요인은, 이 '범' 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랍민족주의가 달성할 수 없었던 구미제국주의에의 저항, 강요된 분단국가 구조의 초월, 이들 좌익 내셔널리즘 사상가는 이슬람운동에 의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개를 도모하려 했던 것인가. 첫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정치주체로서의 아랍민족주의에 의한 동원력 확보를 위한 이슬람의 이용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랍민족주의 정당의 대부분이 - 집권당이건 야당시대이건 - 공산당을 공통의 적으로 한 이슬람세력과 같이 투쟁하거나 혹은 이들의 정치활동을 대폭적으로 용인하는 수법을 취해 왔다.

동원력으로서의 이슬람 이용이라는 방향성이 인민주의적 발상과 합해져서 행해지는 예로서는 리비아 카다피의 '제3의 길'을 들 수 있다. 그는 스스로 내걸고 있는 아랍사회주의를 '이슬람이라고 하는 진정한 종교와 성전으로부터 가져온 사회주의'라고 위치 지우고, 그 인민주의, 문화혁명적 레토릭에는 중국의 모택동 노선을 상기시키는 측면마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권력에 의한 이슬람의 이용은 이데올로기적 정치화도 이뤄지지 않은채, 기회주의적, 감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좋은 예가 걸프 전 후의 이라크의 바스당 집권이다. 앞서 살핀 것과 마찬가지로, 이라크에서의 바스주의는, 일종의 철저한 탈 이슬람을 목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는

전쟁수행을 위한 국내동원, 및 국제적 고립을 회피하기 위한 기독교 서구 대 이슬람 세계라고 하는 레토릭을 구사, 그 심볼 조작에 이슬람이 사용되게 되었다.

아랍민족주의를 보완하는 이슬람

위의 예는 정권에 의한 정책레벨의 아랍민족주의에 대한 이슬람의 '재평가' 이나, 이러한 경향은 반드시 정책 결정자에 의한 레토릭 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패배하는 아랍민족주의와 일어나는 이슬람이라는 구도에 직면한 아랍민족주의 지식인도 또, 그 대부분이 이슬람의 신도 공동체가 가진 사회적 응집력의 강렬함에 먼저 주목한다. 즉 '반 식민주의', '자립적 국가건설'을 담당하지 않았던 네셔날리즘에 대해서, 이것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인식이 현저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고전적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1960-70년대에 넓어진 인민주의 코뮌날리즘 게릴라 활동 등의 특질에 대표되는 새로운 좌익운동의 흐름이 아랍사회에서는 이슬람의 신도공동체에서 코뮌날리즘을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 전형적인 예가 시반(Sivan)이 인용하는 앤월 아부들 마리크(Anwar Abdal Malik)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1979년의 단계에서 "현재 중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슬람조류라고 불리는 것은, 오리엔탈한 토양에서 생긴 오리엔탈한 아랍민족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적 이슬람은 식민지 시대와 같이 서구에 의해 계속 행해지고 있는 학살에 대한 주요한 방위기능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좌파들로부터의 '인식'은 어떤 의미에서 아랍민족주의자에 의한 이슬람주의의 '민족주의' 구조 속에서의 이해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

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아랍민족주의의 정치측면에서의 실패로부터 만회의 가능성을, 이슬람의에서 찾으려 한 것이, 이들 아랍민족주의 사상가들의 견해다.

최근의 아랍민족주의자의 이슬람주의 접근에 있어서는, 아랍민족주의가 얼마나 이슬람적 측면을 강하게 가지고, 1930-40년대에 쌍방이 공동관계였던가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티비(Tibi)는 그러한 공동노력 - 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랍민족주의에 의한 이슬람부흥을 포함한 시도 - 의 하나인 아랍 통일 센터에서의 '이슬람과 아랍민족주의' 회의의 분위기를, '범 아랍민족주의자들은 세속주의를 버렸으나, 아라비즘을 버리지 않았다'고 적절히 기술, '아랍민족주의자는 네오 판다멘탈리스트로 전향했으나, 이들은 이슬람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키 위해 '이슬람의 아랍 중심성'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랍민족주의가 이슬람부흥에 대해, 대립보다는 균질성을 보여주려 하고 있는 최대의 요인은, 이 '범'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랍민족주의가 달성할 수 없었던 구미제국주의에의 저항, 강요된 분단국가 구조의 초월, 이들 좌익 네셔날리즘 사상가는 이슬람운동에 의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랍민족주의의 이슬람주의로의 선회

좌파 아랍민족주의자 가운데는, 이슬람의 대두 현상을 네셔날리즘 구조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더러는 거기서 탈피하여 이슬람주의어로 선회해 간 예도 있다. 시반(Sivan)이 내세우고 있는 샤피쿠(Munir Shafiq)는 그 전형적인 것이며, 새비크는 1994년에 베이루트에서 실시된 '제1차 아랍민족주의 이슬람 대회'에 출석하여, 양 파의 접근을 위한 제일보를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한편으로 시반(Sivan)은 이들 전향 이슬람 파가,

1950년대에 전개된 '이슬람통일의 전제로서의 아랍통일', 혹은 '아랍과 이슬람의 공투'라고 하는 레토릭에는 의미를 부여치 않고, 아랍이즘을 서구로부터의 수입품으로, 이것을 거부하는 자세를 취하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같은 시반이 들고 있는 전향 예로서는 아딜 프사인(Adil Husayn)이, 사회의 구성기반에 이슬람 - 특히 스피즘을 재발견하여 이슬람주의으로 전향한 경우가 있다. 아딜 프사인의 경우는, 체제이데올로기화 된 아랍민족주의를 비판하여 코뮌란한 것을 찾은 결과, 스피즘에 도달했다고 하는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아파 이슬람 사상가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으나, 이라크의 시아파에서 보다 특징적인 것은 좌파공산주의 사상에서 이슬람으로 전향한 사례, 혹은 공산당의 지지기반이 이슬람 세력에 빼앗긴 사례다. 이것은 바스 당 정권 성립 때 - 주로 소련의 지시에 의해서였다고 보여지고 있으나, 이라크 공산당이 바스 당과 연립을 행할 것을 결정, 그 결과 바스 당에 반대하는 대중기반을 잃고, 이슬람세력이 공산당에 대신하여 그들 대중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가능했다. 환언하면 아랍민족주의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담당해온 공산주의세력의 야당으로서의 기능 상실을, 이슬람세력이 보완하는 형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위의 '아랍민족주의 정권의 현실 면에서의 문제 처리 능력 부재'에 좌절된, 아랍민족주의자들에 의한 '이슬람주의에의 기대' 하는 구조는, 아랍민족주의에서 뿐 아니라, 좌의 사상전반에서 보이는 경향이었다.

결 어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이 아랍민족주의자/좌파 지식인들에 의한 운동의 '반성'이, 이슬람 측이

문제시 해온 아랍민족주의비판에 대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슬람주의의 대두에 기대를 거는 아랍민족주의자는, 이슬람운동 가운데 현 정권=체제파 아랍민족주의자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서의 유효성을 보고 있으나, 이슬람주의자가 제기하고 있는 '異議'와, 이들의 아랍민족주의 지식인들이 체제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異議'란, 과연 같은 것인가. <과거의 무슬림 동포들이 담당했던 것과 같이, 이슬람주의와 민족주의적 요소를, 반영, 반제투쟁을 축으로 결합시킨 것도, 어떤 종류의 기만에 의해 지금의 민족주의자가 행해온 것과 같은 동심원적 결합(국가민족주의를 최소원형, 이슬람연대를 최대원형으로 그 중간에 아랍민족주의를 위치시키는 동심원)도 이미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순니 세계 내의 이슬람주의 반 체제파 운동이, 이슬람에서 그 투쟁의 힘을 찾아내면 낼수록, 사상적으로 아랍민족주의를 부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정치 현실의 국면에서는 아랍민족주의 지식인도 이슬람주의도 공통적으로 문제시하고 있는 여러 측면이 있으나, 사상적, 이념적으로는 이슬람주의가 아랍민족주의와 배반할 수 없는 특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주의가 아랍민족주의를 부정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주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아랍민족주의가 이슬람을 문화의 하나로 왜소화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슬람 이념 수준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 위에서 든 아랍민족주의의 어느 것에도 공통되어 있는 것은 완전한 세속주의이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로서의 이슬람을 아랍민족주의의 한가지 요소로서 취급한다고 하는 자세였다. 즉 특히 이것 자체가 제1장에서 나타난 '신도공동체를 재료로 한 내셔널리즘 "창조"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후라의 논의에서 대표되는 '아랍에 특

히 이슬람이 개시되었다'고 하는 이론 전개는, 이슬람의 초 민족성/세계종교성 - 을 부정하는 상태까지는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의 경시, 이슬람을 아랍의 '민족종교' 시하는 관점에도 연계되어 간다. 이후락은 이슬람 세계에서의 비 아랍성을, '아랍이즘에 대한 인종주의 적 질투'로서 '반 아랍'으로 위치 지우고 있다.

2. 둘째로, 아랍민족주의가 가지는 '인종성' = 부족성(부족집단의 최대단위로서의 가움(qawm)의 문제 - 즉, 이슬람이 뛰어 넘어 통합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것을 아랍민족주의가 그 핵심내용으로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들 수 있다. 아랍민족주의가 그 근원에, 이슬람이 자히리야(jahiliya)기의 것으로 부정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아랍민족주의가 바비론, 앗시리아 등의 자히리아기의 셈계 민족들을 '아랍'으로 보고, 그 문명을 칭찬하는 경향 - 많은 아랍민족주의자는 이 자히리아기를 포함, 그 민족적 '탁월성'에 더해 아랍에 이슬람의 계시가 내린다는 논리 전개로 그 모순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 에서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고대문명의 '아랍'으로서의 칭찬이 어느 정권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랍민족주의를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기존의 국가구조 내에서의 권위주의적 지배 강화나 강압적인 국민 통합을 위한 심볼 조작에 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슬람의 민족주의에 대한 반발을 조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아랍민족주의자에 의한 이슬람의 '汎' 성에의 동경과, 이슬람주의가 인식하는 '범' 성 간의 엇갈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아랍민족주의자는 서구 열강의 강요한 영역국가를 초월한 '범' 성을 실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를 주장하나, 이슬람주의는 '부족주의의 연장으로서의 네셔날적인 요소

'를 초월한 '범' 성으로서의 이슬람을 내건다. 거기서 초월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부족 = 민족' 성이며, '국민' 성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국가를 전제로 성립하고 있는 영역국가란 오히려 친화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3. 셋째 문제는, 이슬람을 '아랍'이 독점하는 형태로 아랍민족주의와 이슬람의 '융합' = 네셔날리즘으로서의 '재생'을 도모해 온 것에 의해, 에스노-네셔날 한 차이와 종교적인 차이와의 자의적인 '동일시'가 발행했다고 하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그것에 의해 시아파 아랍에 대해 '이민족' 시라고 하는 시각이 생겨났다.

에드먼드 라바스는 '이라크에서의 페르시아나 인도적 요소와 같이'라고 예를 들면서, 타민족의 침략, 침입이 있더라도 '아랍 셈 인종은 토지에 뿌리를 내린 것에 더해, 또 끝없는 사막에서 새로운 '아랍'의 피가 유입하여 쇠신되기 때문에, 늘 지배적인 인종으로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서 시작, '아랍-셈'론은 1930년대 후반의 아랍민족주의에 주류였던 것에 그치지 않고, 바스주의에서도 연면하게 지속되고 있다. 티비(Tibi)가 지적하는 "아랍 성"의 순니 아랍이라고 하는 에스노-종교적 개념에의 연결'은 이러한 경향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상은 아랍민족주의가 그의 사상적 전개 과정에서 근원적으로 포함한 이슬람과의 상반성으로서의 위치부여다. 한편 아랍민족주의의 '사상'적 문제가 아니라 아랍민족주의 '정권'의 실천 레벨에서 생긴 문제의 존재도 경시할 수 없다. 그것은 먼저, 4. 신도공동체에 대한 사회경제 정책의 문제와, 5.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정권으로서의 대외, 대내적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두 가지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다.

4. 사회경제정책의 실천을 둘러싼, 아랍민족주의 정권과 신도공동체가 충돌할 가장 많은 경우

는, 신도공동체가 가진 사회적 자립성을 국가가 박탈하는 형태로, 사회경제정책이 실시될 경우다. 이것은 하나는, 신도공동체에서의 우라 만 등의 종교적 권위를 박탈하는 것에 의해, 국민의 충성을 세속권력으로 일체화한다고 하는 방향과, 또 하나는 신도공동체가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의례, 관습을 '문화'로서 받아드리지 않고 부정한다고 하는 방향의, 두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이슬람의 폭이 협소해 졌다'고 하는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슬람의 추상적 교의 자체보다 무슬림 제국의 정치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민중 이슬람의 중요성을 떨치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아랍민족주의에 본질적인 것이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앙집권화를 재빨리 '독재'의 형태로 주형 되어 가는 아랍민족주의 정권의 태도에 대한 반발로 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적 다원주의, 다 문화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독재정권이 '대표되지 않은' 에스노-네셔널 한 사회집단과 충돌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이슬람 세력과 아랍민족주의 정권의 대립은 '국가'와 '사회' 간의 대립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

5, 더욱 팔레스타인 문제나 유럽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운동 등, 운동실천과정에서의 실패를 둘러싼 충돌도 또, 다른 사회, 정치집단이 국가, 정권과 충돌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의 문제다. 이슬람주의의 대두원인을 여기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국가정책의 실패를 비판할 야당세력이 많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이슬람세력이 가장 유효하고 명확한 비판자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점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공산당 등 좌파세력의 쇠퇴라고 하는 시대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아랍민족주의 지식인들에 의한 이슬람에의 '기

정치 현실로는 아랍민족주의의 지식인도 이슬람주의도 공통적으로 문제시하고 있는 여러 측면이 있으나, 사상적, 이념적으로는 이슬람주의가 아랍민족주의와 배반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주의가 아랍민족주의를 부정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다.

대'와, 아랍민족주의의 '반성'이라는 점에서의 논의를 되돌아보면, 상술한 운동 실천상의 문제에 대한 쌍방의 문제의식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으나, 사상의 근원적 문제로부터 생긴 점에 있어서는, 아랍민족주의 지식인 측에서 이것을 자기 비판하는 시각은 보이지 않는다.

그에 더해, 이슬람부흥운동 전개에서, '역사의 다시 씌'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사 네셔널리즘의 일종으로서, 네셔널리즘의 초석으로 위치 지워져 온 이슬람의 신도공동체의 역사를, 민족주의 사관의 범위에서가 아니라, 이슬람 사관 가운데서 바꿔서 말하는 것이, 아랍민족주의에 빼앗긴 '역사'를 탈환키 위한 제1보로 보여진다. 알제리 식민지해방투쟁이나 이라크 20년 폭동에서의 이슬람이 얻은 역할의 재평가에서 시작, 각국의 반식민지운동의 '네셔널리즘'성에 대해 노정 되는 의문은, 이슬람정치사를 '재발견'하는 것과 연결돼, '네셔널리즘이 아닌 무엇을' 찾는 것이 된다.

〈출처 : 酒井啓子 編, 『民族主義とイスラム』(アジア經濟研究所, 2001)〉

이슬람정치운동의 다양한 전개

이슬람주의자로부터도 종교지도자로부터도 비난되고, 어두운 이단이라고 취급된 빈 라덴은 무슬림 사회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동정과 공감을 끌어들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로발리제이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의가 행해져, 사회로부터 지지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자기들이 미국정권의 오만한 패권에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해온 사람들은 알 카이다가 사용하고 있는 종교 용어나 언어나, 그들의 정치적 주장에 고무되고 있는 것이다.

에릭 루로(Eric Rouleau) / 프랑스, 저널리스트

이슬람교와 테러리스트를 구별하려는 서방지도자들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일에 파고 들어간 벌레를 제거해 내기란 불가능했다. 공포에 질려 절절매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종차별이 확대돼 갈 위험은 부정할 수 없다. 거기에 있는 것은, '서양'이라고 하는 '문명적인 민주사회'가, '전체주의'에 중독된 '광신적인 무슬림'에 대해, '십자군'이라고는 말하지 않더라도 '전쟁'으로 대처하려는 감정이다. 테러리스트 측도 또 무슬림 사회를 억압할 '이교도 십자군'에의 '지하드' 등으로 부를 뿐으로, 이러한 견해가 여전히 더욱 선명해 진다. 쌍방의 주장이 놀랄 만큼 대칭형을 이루고, 두 개의 문명, 두 개의 세계 사이의 간격을 위협하리 만큼 깊게 하고 있다. 그것은 가진 자들과, 살아남아, 누적되어온 불만과 원한에 찬 사람들과의 간격이다.

일부 예외는 있으나, 서방 측 정치가나 미디어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 간격을 메우는데 가담하고 있다. '원리주의'라든가 '전통절대주의' 등

의 표현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이슬람교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전자는 프로테스탄트, 후자는 카톨릭에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슬람주의'라는 것도 동일하게, 일부의 이슬람연구자가 편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며, 정확하게 말하면 이는 '이슬람 정치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온당하다고 볼 수 있다. 확실히, 이슬람주의의 운동이나 정당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실제로 이들의 운동이나 조직은 크게 달라, '예언자 무하마드의 종교'를 신앙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공통점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을 각파들이 각각으로, 더러는 서로 용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극우에서 좌익까지의 나뉘져 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이슬람주의자들 간의 항쟁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호메이니가 1979년에 정권을 잡은 직후, 가장 두려운 반대세력이 된 것은 세속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이슬람주의 조직이었다. 그 가운데서는 자유주의적인

것도 있고, 사회민주주의 내지 마르크스주의적인 흐름의 것도 있었다. 호메이니 주의에 적대하는 사람들이 숙청된 후, 이란에서의 대립세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최고 지도자'인 호메네이로 대표되는 전체주의적 세력, 다른 쪽은 하다미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민주적이고 세속화 경향이 강한 다수파이다. 이러한 상태를 반영하여, 이슬람 법학자들도 보수파와 개혁파 둘로 나뉘져, 각각이 성전에 대해 서로 용납치 않은 해석을 내리고 있다.

같은 비 아랍 계 무슬림 국가 터키에서는 이슬람주의 운동은 과거 50년에 걸쳐, 다양하게 호칭을 바꿔 전개돼 왔다. 이들 운동은, 근대 터키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이 도입한 법체계를 존중, 국가의 세속 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중립성이 수호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그들은 유럽의 기독교 민주주의를 모방 '이슬람민주주의자'라고도 불리며,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도 커다란 세력을 만들어, 지금까지 좌우양파의 내각에 몇 차례나 참가해 왔다. 그 역사적 지도자 네쿠멧틴 엘바칸은 1996에서 97년까지 연립내각의 수반을 지냈으나, 그 후 공민권을 박탈당했다. 이슬람주의 세력은 지금의 터키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나, 그들이 역설적으로도, 터키의 구주연합(EU) 가입을 희망하면서 민주화와 개인의 권리존중의 급 선봉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집트의 경우 복수의 이슬람 조직이 있고, 이들은 서로 교리와 지향성을 달리하고 있다. 두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들 조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변혁의 달성을 주장한다. 그들 가운데 최고 최대의 조직, 무슬림 동포단도 폭력을 규탄하고 수단의 이슬람주의 '독재정권'이나 알제리아의 무장 이슬람집단(GIA)의 '범죄'를 엄격하게 비난한다. 그러나 40대의 젊은 멤버의 일부는 무슬림 동포단이 보수성이 지나치다고 생각, 분

공포에 질려 쪼쪼매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종차별이 확대돼 갈 위험은 부정할 수 없다. 거기에 있는 것은, '서양'이라고 하는 '문명적인 민주 사회'가, '전체주의'에 중독된 '광신적인 무슬림'에 대해, '십자군'이라고는 말하지 않더라도 '전쟁'으로 대처하려는 감정이다.

파 하여 신당 우사트(중앙)을 결성했다. 동 당은 복수 정당제와 개인의 권리 존중을 주장하고 있으며, 간사회에 여성1명, 코푸트 교도(기독교도) 1인을 넣는 등, 독자적인 색깔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로 아이만 자유히리가 이끄는 별도의 분파 이슬람 바하드 단은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조직에 합류했다.

적지와의 기리

대서양에서 페르샤 연안에 이르는 아랍 무슬림 제국의 이슬람정치운동이 어느 정도로 다양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실례는 이 밖에도 여럿 있다. 특히 1928년에 이집트에서 무슬림 동포단이 창설된 이후, 그 영향력이 지역 일대로 확대하다가 퇴조 되기까지, 이슬람주의 운동은 현저하게 진전, 특히 변모를 만들어 내고 있다. 최초의 커다란 계기는 1967년6월의 6일간전쟁(제3차 중동전쟁)에서의 아랍제국의 패배였다.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조직은 전부 붕괴되고, 굴욕과 절망 가운데 생활하던 민중들은, 고난에서 유일한 도망 처를 신앙에서 구했다. 거의 나라의 정권으로부터 비합법활동이라고 여겨지던 이슬람주의 운동은 모스크를 근거로하고, 산

하 자선단체나 원조단체를 전달 루트로 하여 그 사상의 보급을 기도했다.

이유가 어떠한 간에 그들의 정치적 주장은, 지금은 소멸한 라이발 조직과 같이 되었다. 이슬람 적 레토릭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소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민족주의적, 반 제국주의적 주장, 특히는 지배계급의 부정이나 부정, 전제를 규탄한다고 하는 사회적인 주장을 내걸었다. 이슬람 정치운동은 민중의 항의와 요구를 전파하는 적지 않은 회로의 하나가 된 것이다. 예컨대 호메이니의 성명은 신화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고 나셀 이집트대통령과 같은 제3 세계주의자의 성명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했다. 이렇게 하여 이 이란혁명의 지도자들은 추방된 국왕 이후의 정치적 공백을 보기 좋게 메웠다.

얼마나 대중 선동적이었던 간에, 이슬람주의가 만들어 내는 정치적, 사회적 주장이, 사회도덕 적 측면에서 반동적, 여성 멸시적, 억압적인 점이 제대로 된 종교적 주장보다, 영향이 컸던 것은 분명했다. 그들은 한편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밖의 페르시아 제국과 같이 이슬람을 표방하는 국가로부터, 자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었음도 사실이다. 이들 국가들은 이웃하던 적대적인 체제가 소멸한 기회를 타, 그들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들 나라는 이슬람 정치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반드시 친 체제적이 아닌 것을 이해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슬람주의 세력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아랍 정권들은 그들을 철저히 탄압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체제로 편입하는 것으로, 이용의 여지를 남기면서 발을 뺄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다. 레바논, 요르단, 쿠웨이트, 예멘 등에서는 체제로 편입된 이슬람주의세력이 의회에 진출, 국가에 따라서는 정부에 가담하고 있을 정도다. 반대로,

시리아에서는 처참한 학살에 의해, 터키와 이라크에서는 가치없는 탄압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살해됐다. 알제리에서도 그들의 '박멸'이 시도됐으나, 유혈 적 내전의 장기화를 가져올 뿐이었다.

이러한 기존체제와 이슬람주의 세력의 대결은 요컨대 정교분리에의 찬부를 둘러싼 대립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이슬람정치운동을 적대시하는 국가들 중에는, 성전이 가르침에 따라 헌법과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면, 그들과의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이슬람화를 추진하는데 진력, 한꺼번에 이슬람주의 국가와 같이 된 나라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우디와 이집트이다. 아랍제국의 정부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각각 어떤 시점에 이슬람주의 세력과 손을 잡고 있었다.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은, 그들을 회유하는 것으로 좌익적인 나셀주의자(아랍통일주의자)와 공산주의자를 억압하려 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 가, 1981년에 그는 이슬람주의자의 손에 의해 살해됐다. 후계자가 된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슬람주의자들이 아프카니스탄에서의 반 소투쟁에 가담하는 것을 보고 탄압을 중지했으나, 1995년에 암살 자에 저격의 대상이 됐다.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은, 반체제파 조직에 대항하는 하면서 그들의 힘을 빌리기도 했다. 예멘의 사레하 대통령도, 남 예멘의 마르크스주의자와 싸우는데 있어, 이슬람주의 세력의 협력을 배경으로 했다. 수단정권도 누메이리 대통령시대(1971-88년)에 같은 형태로, 독재체제에 반발하는 저항정당을 억압, 자치를 요구하는 남부 기독교도나 토착종교 신자의 반란에 대항했다.

적의 적은 동지

이스라엘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다. 역대정권

은 점령지역의 무슬림동포단을 은밀하게 지원했다. 당시의 무슬림동포단은 이슬람을 배반한 민족주의와 마르크스주의자의 집합이라고 하여, 오직 아라파트 의장의 PLO만을 적대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7년, 제1차 인디파다 초기에, 무력투쟁과 테러에 의한 팔레스타인해방을 겨냥한 하마스 조직이 동포단에서 생겨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스스로의 시야의 협소함에 신경을 쓰게 된다.

미국이 취한 행동도 또 이스라엘이나 아랍제국과 다른 것은 아니었다. 워싱턴은 전부터 이슬람주의 세력에 협력하여 온 당연한 상대라고 보아왔다. '공산주의 무신론자' 들을 철저히 적대시, 시장경제를 강력하게 지지해 준다면, '자유세계'의 일원이었어야 했다. 50년대와 60년대를 통해, 무슬림 제국과 이슬람주의 세력은 미국인영 측에서, 나셀주의와 '악의 제국' 소련을 적으로 하여 싸웠다. '선과 악과의 투쟁'의 제1탄이라고 볼 수 있다.

아프카니스탄에서 소련군이 추방되고, 페르시아만 전쟁이 일어났으며, 소련제국이 붕괴하자, 정세는 일변했다. 종래의 것과는 이질적인 이슬람주의가 나타나, 아프카니스탄 산악지대에서 세력을 확대케 되었다. 무자히딘은 자기들이 미국의 보충부대에 지나지 않는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들은 빈 라덴이나 그의 동지들과 같이, 자기들의 용감한 싸움과 희생, 그리고 동지의 다수에 의한 순교가 이슬람의 땅을 해방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승리후의 실망은 큰 것이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움직일 틈도, 원조자도 없고, 감사를 받는 것도, 보수나 보상을 얻을 수도 없고, 사회복지에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 그들은 후에, 알제리나 카시밀,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집트 특히 보스니아나 체첸에서 폭행에 노출되게 됐다. 이집트나

기존체제와 이슬람주의 세력의 대결은 요컨대 정교분리에의 찬부를 둘러싼 대립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이슬람정치운동을 적대시하는 국가들 중에는, 성전이 가르침에 따라 헌법과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면, 그들과의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이슬람화를 추진하는데 진력, 한꺼번에 이슬람주의 국가와 같이 된 나라도 있다.

사다트 압살에 관여했던 오말 압둘 라만의 입국을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1990년에 그에게 비자를 발급, 이어 거주자격을 부여했다. 1993년, 압둘 라만은 세계무역센터 빌딩의 제1테러사건 공모자가 되어, 종신형에 처하게 되었다.

1990년부터 91년의 페르시아만 전쟁은 아랍 무슬림 세계에 데모나 항의의 폭풍을 불러일으켰다. 일부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담 후세인에 동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워싱턴의 선동적인 태도, 소위 '이중기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이슬람주의와 민족주의의 미디어는 이스라엘이 수십년 전부터 아랍의 토지를 점령하고 있어도 처벌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제재가 가해진 것인가고 분개하고 있었다. 그곳에 미국이 전쟁종료 후에도 여전히 성지가 있는 사우디를 비롯, 페르시아만 제국에 주둔을 계속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어, 쓰러지려는 체제를 보호키 위해서인가. 이러한 세계 유일의 초대 국은 빈 라덴 파를 지칭하는 집단은 물론 모든 이슬람주의 조직의 좋은 표적으로 자리잡아왔다.

‘단순한 반미감정’일까. 워싱턴의 대외정책에 대한 반감은 아랍 무슬림 사람들의 유전자에 각인돼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원한의 소리가 지금은 전세계로 확대돼, 미국에서도,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 유럽 등, 무슬림 사회의 내외를 불문하고 들끓고 있었다. 그러나 이 거부반응도 아직 불변은 아니다. 근년의 역사에서 보면, 미국이 아랍세계에서 커다란 갈채를 받은 시기는 여러 차례 있었다. 제1차 대전 직후, 윌슨 대통령이 모든 식민지 사람들의 해방을 약속했을 때, 1945년에, 루즈벨트대통령이 이란, 사우디 왕에 대해서, 아랍제국의 협력아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을 때, 제2차 대전 종료 후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식민주주의에의 반대세력으로 취급되었을 때, 1956년의 스위스 동란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집트에의 파병을 중지, 즉시 철퇴하도록 권고했을 때, 이러한 시기였다면, 빈 라덴과 같은 인간이 나타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뿌리 없는 물의 병력

테러리즘은 이슬람과 불가분인 것인가. 실제로는 그것은 세계의 모든 지역을 엄습하는 현상이며, 독일, 일본, 이태리,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 전혀 사정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주 최근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의 테러는 연속적이거나 동시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집트나 예멘에서 일어나, 만성적인 것도, 일회적인 것도 있었고, 그 성격은 개인적, 민족주의적 혹은 국가적으로, 그 목적의 대부분은 그 지방 사람들에게 국한되었다.

아프카니스탄의 대소 전 말기에 빈 라덴이 창설한 알 카이다의 테러는 그것과는 전혀 의미가 달랐으며, 역사상 전혀 그러한 예가 없다. 5개 대

륙에 흩어져 있던 ‘무슬림 민족’의 ‘운마’(공동체)의 이름아래, 초국가적으로 인원을 모아, 자기규정을 행한다. 세계 가운데 전개, 그로발리제이션이 만들어 낸 행동양식이나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로발 화 되고 있다. 그 멤버는 중류계급출신으로 구미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고, 소규모의 활동 그룹으로 나뉘어 있으며, ‘중앙’이 지침을 제시한 경우에도 거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행동한다. 이 막연한 집단은 어떤 국가에도 편입되지 않고, 자금과 물자의 조달에 대해서는 오직 민간의 지원, 자선단체, 여유 있는 출자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것도 빈 라덴의 찬동자들은 조금전의 테러리스트 조직이 비폭력적인 정치부문도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조직적인 대중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소위 뿌리 없는 풀이 군상을 이뤄, 모든 종파의 무슬림 수십 억 사람들이 되어 주장하고 행동한다고 칭하고 있는 것이다.

서방측의 미디어는 그다지 보도하지 않고 있으나, 고위의 이슬람지도자들은 순니파도 시아파도 모두, 9월11일의 테러를 비난했다. 그들은 공식성명이나 모스크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육하는 것은 성전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있으며, 카미카제들의 자살은 세 가지의 일신교가 어디까지나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단죄한다. 그렇게 되면 빈 라덴과 그 도당의 지하드를 촉구하는 ‘파두’(종교전해)는 신학적인 권위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가는 의문이다.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아랍세계의 이슬람주의 운동도 조용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특히 라지드 카누지가 이끄는 튀니지의 (비합법)단체 알 나프다는 “테러리즘은 무엇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고, 무슬림에 돌아갈 수도 없는 만행이며, 이것을 전면적으로 단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 다른 이슬람주의 조직도, 거기까지 분명하게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든, 모든 폭력'을 비난했다.

이슬람주의자로부터도 종교지도자로부터도 비난되고, 어두운 이단이라고 취급된 빈 라덴은 무슬림 사회의 내의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동정과 공감을 끌어들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로발리제이션

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의가 행해져, 사회로부터 지지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자기들이 미국 정권의 오만한 패권에 학대되고 있다고 생각해온 사람들은 알 카이다가 사용하고 있는 종교 용어나 언어나, 그들의 정치적 주장에 고무되고 있는 것이다.

<출전 : 『Le Monde diplomatique』 2001/11월호>

FOCUS

Melting Pot 미국?

미국 내에서 흑인 및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 문제는 'Melting Pot'으로 불리는 미국 사회의 민감한 '아킬레스건'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 문제가 근래의 '미시간 논쟁'을 통해 다시 여론과 언론의 초점이 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미시간 논쟁'은 명문 미시간 대에 지원했다가 낙방한 백인 학생 3명이 '소수 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인해 탈락했다며 제기한 위헌 소송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다.

'소수 계 우대정책'은 1964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에 의해 통과된 민권법과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조치로써 기계적 평등을 시정하고 기회의 박탈로 일어나는 현실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현재 미국 내 대부분의 국공립 대에서 시행중인 제도이며 이번에 사건의 발단이 된 미시간 대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소수인종이 지원할 경우 20점의 가산 점을 주어왔다. 그런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3년 1월 15일 법원에 행정부 의견서 제출 마감시한을 하루 앞두고 생중계 된 연설을 통해서 "헌법에는 명백히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게 대접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이어서 "미시간 대의 방식은 분열적이고 불공정한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논란이 촉발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할 것 같은 부시 대통령의 '법 앞의 평등'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발언은 좀 더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사르토리라는 그의 저서 『Democracy Revisited』에서 평등의 유형에 관해 다섯 가지 단계로 구분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법적·정치적 평등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법적·정치적 권력을 주는 것으로 보통선거권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사회적 평등으로서 이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사회적인 중요성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남녀,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에 저항할 권리를 말한다. 세 번째는 '평등한 접근'으로서 '기회의 평등'이다. 이것은 동등한 장점에 대한 동등한 인정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평등한 출발'로써 '교육받은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달리 말하면 사회민주주의의 복지의 확대를 일컫는다. 마지막은 경제적 평등으로써 결과적 평등이다. 이는 현존 사회주의 권 붕괴로 인해 그 비현실성이 입증되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평등은 역사적 순서로 획득되어져 왔고 평등의 확대이자 자유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즉 '평등한 접근'으로서 '기회의 평등'은 네 번째, '평등한 출발'로써 '기회의 평등'을 전제로 하지만 역사적으로 '평등한 접근'으로서의 평등이 선행했다. 그것은 '평등한 출발'로서의 평등이 현재에도 확대하는 과정에 있으며 완전한 실현은 완전한 복지국가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평등한 기회'의 평등도 완전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부시 대통령이 주장하는 '법 앞의 평등'은 단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정치적, 사회적 평등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 소수민족 또는 소수인종으로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을 받으며 '평등한 출발'로서의 기회를 제약 당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 단지 법 앞의 기계적·형식적 평등은 현실의 문제에서 죽은 평등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 미국의 통합을 책임져야할 통수권자의 그 같은 발언은 'Melting Pot'을 넘어서 보다 이상적인 'Melted Pot'으로서의 미국을 지향하는 좀 더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불행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이 논란을 일으킨 1월 15일은 아이러니 하게도 전설적인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태어난 날이다. 평등과 화해를 열망하며 '나에겐 꿈이 있다'고 연설하던 그의 모습이 더욱 그리워지는 순간이다.

<이재정 / 본원 연구원>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총괄한다

최후로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전투는 지상에서의 특수 작전 부대와 상공에 있는 공, 해군의 비행기의 연휴가, 승리에 공헌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 당연히, 육해공군, 해병대에 의한 통합 군사행동에 관한 훈련과 개선을 통해, 특히 통합 작전 능력을 높여 갈 필요가 있다.

마이켈 오한론(Michael O' Hanlon)/미국, 브룩스 연구소 연구원

새로운 전쟁과 변모한 미군

“잔혹하리 만큼의 강력함에 의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대담함과 지략을 결여한 근육덩어리와 같은 거인” 이것이 바로 20세기 대부분의 시기를 통해, 사람들이 미군에 대해 가져온 이미지였다. 보다 지략을 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압도적인 강력함을 기반으로 한 전략은, 20세기 두 차례의 대전에서 제대로 작용, 그 결과 미국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미국도, 베트남에서는 패배했고, 한국전쟁에서는 명확한 승리를 얻지 못했다. 페르시아만 전쟁에서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쟁터의 지형이 미군의 강력함을 발휘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 세기를 맞이하여 미군은 놀랄 정도의 변모를 이뤄냈다. 아프카니스탄에서의 ‘볼후의 자유작전’의 성공은 군사적인 창조성과 지략

의 승리였다. 도널드 램스필드 국방장관, 미군 중앙군(CENTCOM)사령부 토미 프랑크스 장군, 미 중앙정보국(CIA)의 조지 테네트 장관은, 현지의 반 탈레반세력과 함께 탈레반과 알 카이다를 타도하기에는 미국 전력의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치 않는가를 잘 판단, 특정의 군사능력을 효과적인 한정 전력으로 편성할 수 있었다. 콜린 파우엘 국무장관도, 파키스탄정부가 탈레반과의 관계를 끊고, 북부동맹과의 협조관계를 구축하도록 설득, 미군이 필요로 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에서의 기지사용권이나 영공 통과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투의 인푸라를 만들어 냈다. 한편, 안전보장 팀에 “결정적인 전과를 올리기 위한 혁신적 전략”의 입안을 요구한 부시대통령은 미국시민에 전쟁에의 지지를 호소함과 더불어, 러시아의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 중앙아시아와 미국과의 군사적으로 협조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의한 탈레반 정권 전복 작전에 의해, 알 카이다는 아프카니스탄 내의 영역을 잃고, 살아남은 테러 네트워크의 지도자들

도 간신히 생명을 유지,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

‘불후의 자유작전’에 투입된 미군병력의 규모는 최대에 달했을 때도 6만 명을 초과하지 않았고, 유럽제국으로부터의 병력수도 1만5천 미만이였다.(즉 페르사만 전쟁 기에는 12만 명 규모의 병력이 투입됐다) 그것도, 미국 주도형의 아프카니스탄에서의 군사작전은 상당히 대규모적인 것이 되었다. 2002년1월말까지, 미군은 2만5천 회의 공중폭격을 했고, 1만8천 발의 폭탄을 투하, 그 가운데 1만발은 정밀 유도병기였다. ‘불후의 자유작전’에서의 공폭 회수는 1999년 코소보에서의 공폭 회수를 상회했고, 투하한 정밀 유도병기의 수에서도 동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이 세르비아 공격에 사용한 수를 상회하고 있다.

실제, ‘불후의 자유작전’에서 사용된 정밀 유도병기의 수는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사용된 수의 반을 초과하는 규모였다. (추가하여, 2002년3월의 아나콘다 작전에서는 3천 발이 넘는 미국과 프랑스의 폭탄이, 살아남아 있던 알 카이다 세력을 표적으로 투하돼, 아프카니스탄 동부의 산맥지대에 잠복하고 있던 수여명의 적 세력에, 1천5백 명의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군과 2천명의 아프카니스탄 병이 공격을 가했다.)

‘동맹의 힘’ 작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이 참가, 동 작전에서 행해진 공격가운데, 총 출격 회수의 60%를 미국이 실시, 발사된 정밀유도병기의 80%는 미국의 것이었다. ‘사막의 폭풍’ 작전에는 미국을

20세기 두 차례의 대전에서 제대로 작용, 그 결과 미국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미국도, 베트남에서는 패배했고, 한국전쟁에서는 명확한 승리를 얻지 못했다. 페르사만 전쟁에서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쟁터의 지형이 미군의 강력함을 발휘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포함 28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군이 참가, 총 출격회수의 85%를 미국이 실시, 발사된 정밀유도병기의 89%는 미국 것이었다. ‘불후의 작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제국이 참가, 총 출격회수의 92%를 미국이 실시, 발사된 정밀유도병기의 99%는 미국의 것이었다.

미군의 전략은 그 나름대로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편에서 결함도 있었다. 최대의 문제는 ‘적의 두목인 빈 라덴 그 밖의 지도자를 체포 하던가, 살해한다’고 하는 전쟁의 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던 점이다. 이러한 포획작전은 본질적으로 어려우나,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적의 퇴로를 봉쇄하는 임무, 그리고 동굴의 소탕작전의 임무를 파키스탄 군이나 아프카니스탄 병력에 위임한다고 하는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작전성공의 전망을 크게 저하시키고 말았다. 만약 알 카

◆ 3개의 공중 폭격작전 비교

작전명	총 출격 회수	발사된 폭탄총 수	발사 정밀유도병기 수
불후의 자유 (아프카니스탄)	38,000	22,000(추계)	12,500(추계)
동맹의 힘 (1999, 코소보분쟁)	37,500	23,000	8,050
사막의 폭풍 (1991, 페르사만 전쟁)	118,700	265,000	20,450

이달의 지도자들 태반이 행방불명이었다면, 미국이나 동맹국들은 대단한 테러재발의 위협에 빠질 가능성마저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전반적으로는 ‘불후의 자유작전’은 훌륭한 작전이었다. 최종적으로는 한국전쟁에서의 더글러스 맥아더에 의한 인천 공략 이래의 미군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기념비적인 싸움으로서 평가될지도 모른다. 노만 슈왈츠코프가 ‘사막의 돌풍작전’에서 취한 명예 높은 ‘레프트훅 전략’도, 이번의 작전에 비해, 영향력이 덜할지도 모른다. 실제 페르시아만 전역에서의 적의 소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면, 미국의 공중폭격에 의해, 지상에서 전개하는 다국적군의 측면을 보다 잘 방위,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며, 미국의 부대도, 이라크의 부대를 뛰어넘어, 지상의 대부분의 목표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페르시아만 전쟁 때와는 달리, ‘불후의 자유작전’의 수행에는 작전개시 전부터 많은 곤란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됐다. 압도적 규모의 미군을 투입하여, 징벌적인 전략 공폭 작전을 장기적으로 실시하거나, 대규모적인 지상작전을 실시했다고 한다면, 아프카니스탄의 부족이나 군사세력을 내적으로 단결시켜, 미군 병력의 대부분이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었을 뿐 아니라, 아랍세계의 반발을 싸, 파키스탄을 불 안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특히 많은 테러리스트를 탄생시킬 위험성도 있었다. 한편, 투입할 전력이 너무나 적거나, 부적절하다고 했을 때, 현지의 반 탈레반 군사세력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사작전은 실패로 끝나,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인도적인 위기를 더욱 심각화시킬 위험성도 있었다.

전쟁의 4가지의 국면

2001년10월7일 이후, 아프카니스탄의 반 탈레반

세력, 미군, 그리고 다국적군은 승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러한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늘 타지크 인이나 우즈베크 인으로 구성된 북부 동맹의 병사, 하루에 1백 회 정도 행해지는 미군의 공폭 작전, 구미제국의 특수작전부대와 정보팀, 수 천명규모의 구미의 지상 전개군, 그리고 11월이 돼 탈레반 정권을 적으로 돌릴 것을 결의한 아프카니스탄 남부의 수 천명의 파슈툰인 병사들이었다. 이들 전력이 일체화되자, 5만 명에서 6만 명 규모의 탈레반 병과 수 천명의 알 카이달 병은 열세에 놓이게 됐다.

NATO동맹국들이나 호주 등, 구미의 동맹국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다도 아프카니스탄의 지리적 위치나, 기밀성이 높은 유연한 작전수행이 필요했기 때문에, NATO가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현명치도 않았다. 그러나 NATO는 미국의 지지를 명확히 나타내, 9월11일의 공격에 대해서 NATO헌장의 제5조에 규정된 집단안전보장조항의 발동을 결정했다. NATO는 미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기의 공중경계관제기(AWACS)를 파견하는 것으로, 상호집단안전보장상의 개입을 호소했다.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부대도 아프카니스탄 전투에 크게 공헌했다. 3월의 아나콘다 작전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도 참가했다. 동맹국 공군은 구원, 정찰, 그 밖의 목적에서 연 3천 회를 넘는 발진을 했다. 이미 지적인 것처럼, 프랑스는 아나콘다 작전에 공폭 작전에도 참가, 영국도, 전투 첫날 크루즈미사일을 적지에 발사했다. 네델란드, 이탈리아,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도 아라비아해에 함선을 파견했다. UN의 안정화 부대가 주요한 동맹국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로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국제협조 체제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짧은 전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다양한 국면이 있다. 최초의 국면은 10월7일부터의 1개월로, 그 후, 11월에 탈레반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잃을 때까지가 제2국면이 된다. 제3국면은 토라보라 지구의 산악지대나 동굴에 있는 알카이다 거점을 대상으로 12월에 실시된 공폭 작전. 그리고 하미드 칼자이의 잠정정권 의장 취임으로 시작되는 제4국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전쟁의 제1국면에서, 탈레반 세력은 레이다, 비행기, 지휘통제시스템과의 전투인프라를 파괴당했으나, 그래도 아프카니스탄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다. 알 카이다의 훈련 캠프와 거점의 대부분도 이 시기에 파괴됐다. 급격히 붕괴하지는 않았으나, 탈레반은 주요도시의 주변지역에서 고립돼 있었다. 동료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탈레반 세력은 보급이나 전력보강의 길을 거의 단절당해, 제대로 연락을 취할 수도 없게 됐다.

전쟁이 시작된 최초 1주간, 미군의 출격회수는 1일당 평균 25회. 그러나 그후, 출격은 1일당 1백회 정도로 증가해 갔다. (토마스 호크 미사일의 경우, 전쟁초에는 70기가 사용 됐고, 12월까지에 합계 100발이 발사되었다.) 미군은 차례로 공수, 보급, 그 밖의 후방지원작전을 강화해 갔다. 인도양 남쪽의 디에고칼시아 기지에서서 B52, B1폭격기의 출격은 1일 평균 6회, 오만 기지로부터의 F15E전투기나 AC130무장 헬리콥터의 출격 등 그 밖의 기지로부터의 출격도 거의 같은 빈도로 실시되게 되었다. 그 밖의 출격은 아라비아해에 정박하는 3쌍의 미 항공모함에서의 발진이었다. 정찰, 연료보급용의 발진은 페르시아만 연안이나 데에콜시아 기지에서 이뤄졌고, 공중에서의 지원, 구원 임무는 미 육군의 제10산악사단이 활주로의 경비를 담당한 중앙아시아지역의 기지로부터, 혹은 중앙아시아의 영공을 통과하여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공폭은 아프카니스탄 중앙의 산악지

대가 아니라, 그 주변 부에 대해서 실시됐다. 산악지대는 알 카이다나 탈레반의 활동거점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10월 중순까지, 공폭 할만한 가치가 있는 시설의 대부분은 파괴됐다. 그후 공격의 목표는 현지의 탈레반, 알카이다 세력대로 전환돼 갔다.

군용기는 고도 1만 피드로 비행하도록 명령받았다. 탈레반이나 알 카이다가 소련제 SA7, SA13 가동형 대공미사일이나, 2백발에서 3백발의 스팅가 대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던 펜타곤은 이러한 병기에 의한 대공공격을 염려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미군의 정밀유도병기는 지상에 있는 미군부대로부터의 목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획득되기만 하면 어떤 고도에서 발사하더라도 상당히 정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개시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성과는 한정적인 것에 불과했다. 방위, 전략문제 전문가의 대부분은 작전의 기본노선이 잘못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다. 평론가의 일부는 대규모적인 지상군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 한편에서는 그러한 진공작전에 반대하면서도, 군사작전을 상당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11월 초순부터의 제2국면에서는 현실적으로 군사작전이 강화되었으나, 그것은 폭격기나 전투기수의 증가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폭격효율의 향상이었다. 이 시기까지에는 미군의 공중에서의 공격의 거의 8할은 지상의 반 탈레반 세력을 위한 지원공격이었고, 11월말에는 그 비율은 90%에 달하고 있었다. 무인비행기와 정찰, 공격 양용 레다시스템(JSTARS)도 본격적으로 투입돼, 많은 지역에서 계속적인 정찰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에서 반 탈레반 세력과 협조할 미국의 특수 작전부대와 CIA팀이 대폭적

으로 증원, 증강된 것이다. 10월 중순에는, 12명의 병사로 구성된 특수작전부대 'A팀'은 겨우 3개만이 아프카니스탄 작전에 투입되지 않았으나, 그 수는 11월 중순에 10으로 증가, 12월8일까지에는 17개 특수작전부대의 작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특수작전부대는 반 탈레반 세력에 원조를 쥐, 전술을 가르치는 한편, GPS(그로발 포지션인시스템)이나 레저 거리 측정기를 사용, 공폭 목표인 탈레반이나 알카이다 거점을 정확하게 찾아낸다고 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한편, 전투가 진전됨에 따라, 해병대가, 특수작전부대가 후방지원을 담당케 되었다.

이러한 전력, 전술 면에서의 강화책이 취해진 결과, 11월9일부터 11일에 걸쳐, 마자리샤리프나 다로칸 등의 북부도시에 있던 탈레반 세력은 차례로 붕괴돼 갔다. 탈레반 병사들은 진주 목거리가 풀어져 흩어지는 것과 같이 도망가기 시작, 상황을 우려한 오말은 병사들에 '도망가는 개처럼 날뛰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카블마저도 예외없이 함락했다.

펜타곤에 의하면, 11월9일의 시점에서는 아프카니스탄의 85%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탈레반은 그 1주간후의 16일에는 이 나라의 1/3정도의 지역으로 몰려나 있었다. 11월 중순에는 미군의 공폭에 의해, 알카이다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모하메드 아데프가 사망했다는 보도도 흘러나왔다. 북부에서의 적의 최후의 아성에서, 수 천명의 탈레반과 알 카이다 병사가 집결하고 있던 탄두즈도 11월24일부터 25에 예외없이 함락했다.

11월말이 되면, 해병대 제15, 제26선발부대의 1천명을 넘는 병사들이, 탈레반이 아직 장악하고 있던 칸다할에서 서남쪽 60마일의 포인트에 기지를 설치했다. 미군은 뮤사라프 정권에 대한 정치

적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려고, 병력수송을 위한 파키스탄 영공통과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해병대는 아라비아해의 전함에서 발진한 수송기에 의해, 밤중에 파키스탄 영공을 통과, 특히 내륙 4백 마일 지점에 있는 캠프 리노에도 직접 보내졌다. 미군은 이 기지를 거점으로, 일부 도로를 차단하여 특수 전 부대에 대한 후방지원을 하고, 한편에서 캠프 리노에의 후방지원은 파키스탄 기지에서 이뤄졌다.

이 시기까지에는 파슈툰인 세력의 일부가 탈레반에 공공연히 반기를 들기 시작하기도 했다. 11월에는 이들 파슈툰인 세력은, 그때까지 아프카니스탄 북부에서의 활동에 전념하고 있던 미 특수작전부대의 지원을 차례로 받기 시작, 공투노선을 취하게 되었다. 특히 하미트 칼자이, 아가 실자이가 이끄는 두 개가 파슈툰인 세력은 이미 칸다할을 포위하고 있었다.

오말은 12월 초순에 항복을 했으나, 결국 그는 수많은 탈레반 병사들과 함께, 12월8일부터 9일에 걸쳐, 근거지를 벗어나 도망쳤다. 마자리샤리프, 카블, 칸다할의 근교지역에서는 탈레반병, 알카이다병에 의한 산발적인 저항이 그후도 나타났으나, 이미 탈레반은 도시지역이나 교통루트의 장악권을 잃고 있었다.

왜 이 단계에서 전투에 의해, 그것도 신속하고 극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지금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만약 탈레반 세력이 도시에서 저항을 계속, 배치하고 있던 병기를, 미군의 공폭을 받기 어렵게, 모스크, 병원, 주택지역에 이용시켰더라면, 만약 조금 길게 버티어 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현지의 반 탈레반 세력은 수도 적고, 시가전에서 탈레반을 다그친 힘도 없었으며, 포위망내의 시민에게도 희생을 강요시킬 수 있는 兵糧攻擊도, 현실적으로는 선택지는 아니었다.

물론, 탈레반 세력이 도시 외곽지역에서 탈출도 방위도 할 수 없도록 한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에 승리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 탈레반 세력이 11월에 공세를 가했을 때, 탈레반 세력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이것에 의해, 미국의 특수작전 부대가 적의 정확한 주둔장소를 돌파, 공폭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도, 승리를 설명하는 커다란 요인일 것이다. 이 단계가 되자, 적의 참호도, 10미터부터 15미터 정도의 오차로 투하되는 2톤 폭탄을 투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무 방비한 상황에 처한 탈레반이 실제와는 달리 전투가 가능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보다 공세를 가할 것인가, 야음이나 비를 틈타 도시를 떠나는 작전을 펴는 것이 그들에 있어서는 좋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탈레반과 같은 세력도가 떨어진 군사세력이 그러한 기동작전을 취하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위험하기도 했다.

전쟁의 제3의 국면은 12월초에 시작된다. 이때까지는, 미국의 정보기관은, 아프카니스탄 동부의 자라라바드 근처에 있는 알 카이다의 거점 거의 대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부대는 트라보라 지구의 산악지대 동굴에 잠복하여 있다고 생각되어 졌다. 빈 라덴은 그 대부분이 아랍인으로 구성된 알카이다 병을 1천명에서 2천명을 이끌고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이 미군에 의한 상공으로부터의 정찰의 눈을 설령 피한다고 하더라도, 현지 사람들의 눈에서 피할 수는 거의 없었다.

반 탈레반 세력이 CIA 팀, 특수작전부대와 함께 트라보라 지구 근처에 병을 주둔시킴에 따라, 미군의 공폭이 점점 위력을 발휘하는 기회도 높아 졌다. 이렇게 하여 12월 중순까지는 트라보라 지구에서의 전투도 종료한다. 주요한 동굴의 대부

압도적 규모의 미군을 투입하여, 징벌적인 전략 공폭 작전을 장기적으로 실시하거나, 대규모적인 지상 작전을 실시했다고 한다면, 아프카니스탄의 부족이나 군사세력을 내적으로 단결시켜, 미군 병력의 대부분이 위기에 처할 위협이 있었을 뿐 아니라, 아랍세계의 반발을 싸, 파키스탄을 불안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특히 많은 테러리스트를 탄생시킬 위험성도 있었다.

분이 파괴돼, 알카이다 병사의 활동흔적도 없어 졌다. 이 지역에서의 산발적인 공폭은 그후도 계속 돼, 알 카이다의 훈련 캠프 자위키리가 완전히 파괴된 것은 2002년 1월 중순이 되어서나, 공폭 작전은 실질적으로는 2001년 말에는 종료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빈 라덴 및 알 카이다의 지도층은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일 가. 그 이유는 미군이 토라보라 지구에서의 알카이다의 퇴로 차단작전의 대부분을 파키스탄 군이나 아프카니스탄 내의 동맹세력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러한 동맹세력이 미군과 같이 강한 결의를 가지고 작전에 임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그것도 퇴로를 차단한 것은 본질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임무이기도 하다. 빈 라덴과 알카이다의 지도자들이 아직 생존해 있는지 여부, 펜타곤이 확신을 가지고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2월 중순에는 빈 라덴의 소식은 점점 알 수 없게 되었다.

현시점에서의 전쟁의 평가는 어려우나, 그래도, 탈레반이 전쟁에 의해 커다란 타격을 받은 것은

틀림없다.

뉴욕타임즈의 리콜라스 그리스토프 기자에 의하면, 전투에 의해 탈레반 병력의 거의 20%에 상당하는 8천명에서 1만2천명의 병사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1인 희생자가 나는 것에, 2인 부상자가 생겼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탈레반이 전력은 전투 개시 당초의 반 정도가 되어 있을 것이 확실하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 만큼의 전력이 손상되면, 군대는 붕괴하고 만다.

특히 7천명을 넘는 탈레반 병이 포로로 체포되고 있다. 크리스토퍼의 추산으로는, 민간인 희생자는 1천명 정도로 파악되고, 미군의 오폭이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희생에 그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볼 수 있다.

한편, 2002년 3월 중순까지의 미군 희생자수는 30명 정도. 그 가운데, 아나콘다 작전에서 사망한 8명을 포함 십 수명은 전투에서 생명을 잃고, 그 밖은 아프카니스탄 주변에서의 우발사고에 의해 사망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해병 대원이었으나, 그 가운데는 CIA정보관 등도 포함되고 있다.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의 미군의 희생자수는 1980년대의 그라나다나 하이티 침공 때의 희생자수보다도 50%정도 많으나, 92년부터 93년까지의 3년에 소말리아에서 개입했을 때의 희생자수 보다는 적다.

잃어버린 기회

전반적으로 봐서, '불후의 자유작전'은 전략, 전술의 입안, 수행의 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기기를장비한 CIA팀과 특수작전부대가 정밀유도병기에 의한 공격 연휴체제를 취함으로써, 탈레반, 알카이다 세력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 정밀성 높은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

하게 됐다. 특히 미병은, 북부동맹을 전술, 후방지원의 양면에서 지탱하는데도 성공했다. 미국의 전략에 의해 탈레반은 11월 중순에는 아프카니스탄 북부에서의 대규모적인 철수를 당했고, 이미 상당히 큰 희생을 강요당했다.

한편 분석 관들의 대부분은, 아프카니스탄 남부에서의 탈레반과의 싸움은 대단히 위험한 작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 CENTCOM도 그 행방은 예단을 불허하는 것으로 봤다. 그 정도로, 반 탈레반의 파슈툰인 세력이 조직화와 전투능력을 지원하는 것이 성공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이러한 파슈툰인 세력이 탈레반보다도, 북부동맹이나 미국 쪽이 자기들에 위협이라고 판단한다면, 아프카니스탄은 분할 되었을지도 모르고, 알카이다가 남부에 숨은 장소를 찾아내, 전쟁도 결국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파슈툰인 세력을 미국 측에 연결시켜, 탈레반과 싸우도록 설득하기에는 외교, 군사적 승리에 의한 전국의 흐름, 전술상의 배려, 그리고 CIA팀이나 특수작전부대의 지상에서의 지원체제와의 사이의 절묘한 균형을 취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것에 성공한 것의 의의는 대단히 컸다.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작전은 전반적으로는 커다란 성공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잘못도 범했다. 예컨대 규바의 구안다치모 기지에 수용된 알 카이다, 탈레반 병에 대한 펜타곤의 취조다. '이러한 병사들이 포로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논의의 여지가 있었다. 탈레반, 알카이다 쌍방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가정부를 위해 싸운 것도 아니며, 알 카이다 병사들은, 병사에 관한 어떤 정의에도 해당되지 않은 존재이기도 했다.

부시정권이 이러한 이유에서 구속한 탈레반 병과 알카이다 병을 통상의 POW(포로)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아프

카니스탄에서의 전투가 끝난 단계에서 이러한 병사들을 복귀시키는 것을 워싱턴이 바라지 않고 있던 점에서도, 이 판단은 타당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군사법정이 그들을 제네바 현장이 정한 POW규정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까지는 전시포로로서의 통상의 권리를 그들에게도 인정했어야 했다.

POW의 문제를 별도로 하더라도, 부시정권이 탈레반 병에 제네바 현장이 정한 기본적 보호를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고, 알카이다 병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거절한 것은 현명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워싱턴의 결정이 '미국이 구속한 탈레반 병과 알카이다 병을 인간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인상을 강하게 하였다. 진실은 아니라해도,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파악되고 말았다.

손을 서로 연결한 병사들이 집 바깥에서 무릎 꿇고 있는 사진이 세상에 배포되자, 램스펠트 장관은 수세에 서게 됐다. 리차드 마이야스 통합참모본부 의장은 이송할 때는 병사들이 그렇게 포박하지 않으면, 비행기의 유압케이블을 잘라낼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조로 강변했다. 어쨌든 램스펠트가 발언을 하는 것이 너무 늦었다. 이것에 의해 아랍세계에서의 미국의 이미지가 특히 나빠진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이 범한 최대의 실패는, 알카이다의 최고지도자의 포로작전에 있었다. 오사마 빈 라덴, 아미만 자우비리, 알 즈베이다 그 밖의, 알카이다의 지도자들의 생존이 금후 확인된다면, 아프카니스탄 전쟁의 최대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것이 된다.

트라보라 근교에서의 2001년12월의 작전을 둘러싸고, 램스펠트와 프랑크스는 퇴로 봉쇄를 파키스탄 군이나 반 탈레반의 아프카니스탄 세력에 맡기지 않고, 국경지대에 미병을 배치, 알카이다

병사가 파키스탄에 도망가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 또 알카이다에 대한 작전에 비하면 중요도가 떨어진다고는 하나, 오말 및 탈레반의 잔존 병포로작전에도 미병이 투입되었어야 했다.

물론, 수많은 미병을 아프카니스탄에 투입치 않았던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램스펠드가 공식발언에서 표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펜타곤은 현지에서의 반미주의가 높아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또 파키스탄을 예외로 하면, 주변제국에는 수 만 명의 미병을 아프카니스탄으로 보낼 수 있는 거점기지가 없었으며, 파키스탄 또한 이러한 임무를 떠맡는데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램스펠트의 주장이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트라보라 지구에서의 작전에 미병을 투입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었다. 확실히 트라보라 지구라고 하는 내륙의 산악지대에 수천 명의 미병을 배치시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고 위험한 임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의 중요도를 생각하면, 여기에 미병을 투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도, 실제 CENTCOM은 미병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작전의 시나리오는 후방지원의 문제나 희생자가 날것에 의 우려에서 이를 포기했다.

군사적 강경파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군사력의 행사도 불사한다고 보여졌던 공화당 정권이 인도개입 때의 클린턴 정권과 동일하게 미국에 희생이 나는 것을 아주 염려한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실제 부시정권은 아나콘다 작전이 개시되기까지는 미병에 희생이 날 가능성을 아주 걱정해서, 이미 이 단계에서의 투입의 타이밍은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파키스탄 군이나 반탈레반 세력은 트라보라 지구에서의 퇴로를 차단하는 작전에는 대응치 않았다. 파키스탄은 국경선을 따른 4천명의

병사를 전개시키고 있었으나, 이 임무에의 부대의 열의는 반드시 충분치는 않았으며, 탈레반, 알카이다 세력이 뒤를 숨기고 파키스탄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부대도 적었다. 그 결과 적어도 수백 명의 알카이다, 탈레반 병이 파키스탄 군을 밀어내고, 파키스탄국내에로 침입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프카니스탄 국내의 반 탈레반 세력은, 임무에의 열의는 점점 회복해졌고, 야간의 전투경험은 충분치 않았다.

그러면 미국이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는, 무엇이 필요했는가. 트라보라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파키스탄과의 국경지대에 이르는, 백에서 1백5십의 루트를 25마일 폭으로 차단하는데는, 1천명에서 3천명규모의 부대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전력을 미국에서 현지로 전개하는데는, 연 수 백 회에 걸친 현지기지의 공수작전, 그리고 현지기지에서 전선에의 헬리콥터에 의한 인원과 장비의 수송이 필요케 된다. CENTCOM에 의하면, 더불어 연료를 수송하기 위한 활주로를 전선근처에 부설할 필요도 있었다. 이들 일련의 임무에 필요시 되는 인프라를 정비하기에는 일주일을 넘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12월에는 현지에 들어가 있던 총수 1천명을 넘는 해병대의 두 개 부대는 당시는 특히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전력을 트라보라 지구에 투입하고 있다면, 알카이다 병의 퇴로를 잘 차단했을지도 모른다. 먼저 현지의 해병대의 주요부대를 실전배치, 그 후 수일에서 수주간 이내에, 육군의 경 무장 부대, 혹은 해병대를 더욱 투입했다라면 보다 아프카니스탄 쪽 지점에서 퇴로를 차단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테러문제 전문가 불 피라가 지적하는 것같이, 페루의 '화려한 길', 터키의 '크루드노동자당' 등

카리스마적 리더가 이끌고 있는 테러집단의 역사는 그러한 조직이 지도자 없이는 세력이 전혀 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파토히 시카기가 95년에 암살된 것을 계기로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성전'이 힘을 잃은 것같이, '화려한', '크루드 노동자당'도 92년에 아비말 구즈만이, 99년에 아브드라 오 잘란이 각각 투옥되었기 때문에, 조직의 힘은 크게 손상 받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도자를 잃은 것으로 점점 세를 증대하고 있는 집단도 있다. 예컨대 96년에 이스라엘이 에비야 아세슈을 암살한 후, 하마스는 점점 과격화되어가고 있었으나, 지도자를 잃은 하마스는 새로운 전술이나 활동개념을 제시하지 못하게 됐다.

빈 라덴이나 아이만 자우히리 그 밖의 알카이다의 지도층이 작전 망에서 잘 도망쳤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도망생활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돈줄에의 접근도 어렵게 되어갈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신봉자들을 고무할 수 있으며, 금후 테러를 계획 할 수도 있다. 만약 추적에서 도망쳐 있는 알 카이다 지도부가 이것에 성공한다면, 그들을 도망치게 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잘못이 될 것이다.

군사적 기술혁명

'군사적인 기술혁명'(RMA)을 소리 높여 제창하는 사람들로서는, 이 10년간은 긴장의 시기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후의 자유작전'에서는 많은 신기술이 실전에서 이용되었다.

물론, RMA라고 하더라도, 전격 전, 공모에 의한 전투, 핵 병기의 등장에 비하면, 그 정도 혁신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그래도 아주 좋은 군사상의 혁명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급격한 군사기술의 변화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미군이 극적인 군사기술상의 변화 없이도, 혁신적인 싸움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실제, 전투방법을 둘러싼 걸출한 진보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첫째, 지상의 특수부대가, 레이저에 의한 거리측정장치와 GPS기기를 구사하여 공격목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 결과, 대단히 정밀성이 높은 공폭이 가능케 되었다. 지상에서의 탄착 관측자의 역사는, 비행기의 역사와 같을 정도로 오래나, 공격목표에 관한 수미터의 오차에서의 정확한 사전정보를 신속하고 계속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둘째, 미국의 정찰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 무인정찰기(UAV)는 화상처리위성(전역을 상공에서 파악하는) JSTARS기와 연동하여, 전역을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빈번하게 정찰할 뿐 아니라, 특정 장소를 지속적인 감시아래 두는 것도 성공시켰다. 마이야스 통합참모본부장은 이것을 미군의 '지속적 감시능력' 라고 묘사했다.

전장에서의 연락,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대폭적으로 진보했다. UAV, 위성, 전투기, 사령센터 간의 네트워크는 과거의 어떤 전쟁과 비교해도 신속화 됐고, 지속적 감시체계의 가치를 한 단계 높였다. 예외적으로 특정 목표에의 공격을 둘러싼 판단에 정치지도자가 관여할 경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지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모든 전투기가 네트워크 기기를 탑재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폭격기의 대부분에는 공군의 '링크 16' 이라 불리는 데타 링크 시스템은 아직 장착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의 진전에 의해, 공격목표의 확인에서 파괴까지의 시간은 20분 미만으로 단축되었다.

가장 획기적이었던 것은, CIA가 소유하는 무인

수년에 걸친 미군병사들의 급여가 인상된 결과, 지금은 군의 월급은 상당한 수준이 됐다. 이미 민간과 비교하면 군대의 급료는 적지 않으며, 더욱 더 인상하려고 노력하는 부시정권의 정책은 지나칠 정도다.

이에 더해, 연구, 개발예산도 이미 부시가 선거전 에서 약속한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정찰기 프레데타가 지상의 공격목표에의 폭탄투하에 성공한 것일 것이리라. 순항미사일을 별도로 한다면, 이것은 무인비행기가 실전에서 폭탄을 발사한 최초의 경우다. 또 정밀유도병기 영역에서도 획기적인 진전이 보였다. 대규모적인 전투가 거의 폭탄만으로 싸운 것은 이번의 전쟁이 처음일지 모른다.

이러한 정밀유도병기는 B52, B1 폭격기로부터 뿐 아니라, 공모로부터의 전투기, 지상기에서의 발전한 공격기로부터도 투하되었다. 특히 공격목표가 선정되기까지 수 시간에 걸친 전역을 비행할 수 있는 폭격기는, 공중에서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후방지원기반으로서도 잘 이용되었다. 물론, 폭격기는 공격 면에서도 그 효과를 올려, 아프카니스탄에서 사용된 폭탄의 70%이상은 이러한 폭격기에 의해 투하되었다.

정밀유도병기로서는 미군은 레이저 유도병기에 추가, JDAM도 많이 사용했다. 코소보에서의 최초로 사용된 1톤의 철로 된 폭탄은 GPS와 관성 유도장치를 사용, 목표에 대하여 10미터에서 15미터의 오차로 착탄 할 수 있는 2만 달러의 유도 키트를 탑재하고 있다. 레이저의 유도병기 정도

의 정밀공격능력은 없으나, JDAM은 기상에 의해 유도 능력이 좌우된다고 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코소보에서의 전쟁 때는, JDAM을 투하할 수 있었던 것은 B2폭격기뿐이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공격기에서 투하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2002년1월말까지에, 미군은 4천 개를 넘는 레이저 유도병기와 함께, 4천 개의 JDAM을 투하했다. 이밖에도 중요한 병기는 있었다.

예컨대 1천 개 정도의 크라스타 폭탄의 정밀성 높은 오차수준은 30미터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불발탄이 많다'고, 크게 비판된 구라스타 폭탄이었으나, 이 병기는 바깥에 있는 것을 발견된 탈레반이나 알카이다 세력에 대해서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 냈다. 또 수는 적으나, 니켈, 코발트와 철의 합금으로 만든 첨단부와 특별 소프트웨어를 탑재, 지표를 관통하여 동굴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특수폭탄(방카 바스타)도 사용됐다. 이 병기는 암반에서는 10 피이트, 토양에서는 1백 피이트를 관통할 수 있다.

미군이 전투작전의 대부분을 공폭에 의해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비용도 비교적 적절한 수준에서 그칠 수 있었다.

대 테러의 미 본토방위의 비용은 이미 26억 달러에 도달하고 있으나, 실제로 전쟁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8일까지의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전비 총액은 37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보다 상세히 말하면, 이 총액 가운데 19억 달러는 전력 배치에, 4억 달러가 피해나 파괴된 장비의 복구에, 그리고 10억 달러가 연료와 그 밖의 작전코스트에 충당되었다)

금후의 과제

아프카니스탄에서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으로 남기고 있는가. 첫째, 엄청난 비용이 드

는 병기시스템만이 반드시 군사적 진보의 담당자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다. 군사적인 기술이나 전술을 둘러싼 중요한 진보는 항공기, 선박, 전차나 장갑차 등의 하드면 보다는, 정보 네트워크나 병기 유도기술 등의 소프트 면의 근대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크다. 적극적인 예를 들며, '불후의 자유작전'에서는 JDAM을 탑재 한 B52폭격기 쪽이, 스텔스 B2폭격기보다도 위력을 발휘했다.

둘째, 특수작전부대와 CIA팀의 활동에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전장에서는 병기나 장비의 사용이나 유지를 둘러싼 기술이나 배려, 미군부대의 육체적, 정신적 강령함, 이들이 하이테크 병기와 같이, 전쟁의 각 국면에서 미군의 승리에 공헌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군대의 기동성 및 전개능력에 대해서는 금후도 개선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해병대, 언제나와 같이 선박에서 연안으로 상륙, 4백마일 떨어진 내륙 부대로 이동하지 않고, 선박에서 직접 목표지정으로 이동하는 작전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미국 육군의 대부분은 이 정도의 신속하고 스피디한 기동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육군이 장기계획으로 내세운 IT는 신형 경량형 장비의 개발도 대책 일부가 될지 모른다. 또 해병대가 소유하는 V22 오스프레이 디루트로다 항공기의 안정 선이 실증된다면, 육군도, 상당수의 동형 기를 병사들에게 이송을 위해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육군은 먼저, 해병대의 조직, 훈련, 후방 동원체제를 가능한 한, 그것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편을 실현할 수 있는 전망을 충분히 있다. 현실에 육군은 '불후의 자유작전'에서도, 전술면에서는 훌륭한 기동성을 나타내 보였다.

최후로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전투는 지상에서의

특수 작전 부대와 상공에 있는 공, 해군의 비행기의 연휴가, 승리에 공헌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 당연히, 육해공군, 해병대에 의한 통합 군사 행동에 관한 훈련과 개선을 행해, 특히 통합 작전 능력을 높여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아프카니스탄에서의 교훈과, 부시정권이 2001년9월30일에 발표한 카드레리알 디아판스레뷰(4년에 1번씩의 방위 개정), 그리고 2002년2월4일에 발표된 장기군사예산안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부시정권은 기본적으로는 클린턴 정권에 이어 전력재편 및 병기근대화계획을 답습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에 더해, 미사일방위 그 밖의 우선 순위를 줘, 상당량의 방위예산의 확대를 상정하고 있다.

부시정권은 국가안전보장예산을 2003년도에 3천9백6십억 달러, 2007년에는 4천7백억 달러로 증액시킬 예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안전보장예산이란 펜타곤의 예산과 에너지 성에 일부 나눠 가진 핵 병기 예산을 합산한 액. 즉 부시가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간 당시의 예산은 3천 억 달러, 2002년의 현시점에서는 3천9백 달러 규모) 그러나 대 테러작전만으로는 이러한 예산증액은 설명할 수 없다. 2003년도 이후이 대 테러작전용으로 계상 되고 있는 것의 거의 백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2007년도에 상정된 4천7백억 달러라는 숫자는 클린턴 정권이 최후 예산안으로 2007년 분으로서 상정한 액보다도 실은 1천 억 달러가 많다.

병기조달의 내실을 중시하는 평론가들은 부시정권의 문제점은, 미군의 편성면에서의 발본적인 변혁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에 의한 종래형 병기의 조달에 높은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비판은 절반정도의 타당성 밖에 가지지 못한다. 부시정권의 소위 '디펜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연구, 개발, 실험 계획도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07년간에 특히 1천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으로 있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예산이 너무 팽창하고, 목표도 너무 야심적인 것에 있다.

문제는 고전적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역대 정권과 같이, 부시정권도, 예산 면에서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에 전향적이지만은 아니나, 군부가 조달을 둘러싸고 우선 과제에 따라 판단하도록 움직이지도 않는다. 초 대국 라이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시정권은 주요한 전투시스템을 비용 면에서 2배나 들도록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 그것도 전군에 이러한 교체를 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 더해, 현재 6백억 달러 규모의 조달 코스트가 2007년까지는 9백90억 달러로 팽창하고 만다.

조달계획을 보다 타당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육군의 신형 자주포 시스템과 같은, 주요한 병기시스템의 하나이든 두 개를 먼저는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병기 시스템의 채용 조달을 둘러싸고, 개념, 인식 면에서의 근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값비싼 병기 시스템의 필요가 있는 것은 군대의 아주 일부분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고도로 정밀한 병기시스템을 보험 책으로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국군의 급속한 근대화 프로그램을 상정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밖의 전력은 그렇게 경비가 들지도, 그리고 높은 능력을 가진 기존병기시스템을, 보다 뛰어난 센서, 탄약,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유지하면 된다.

예컨대, 차기공격전투기(JSF)을 3천기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달 수를 1천기로 억제, 나머지는 신형 F16전투기를 증가하는 것으로 전

력의 구멍을 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부시정권의 계획을 고쳐야 할 부분은 있다. 수년에 걸친 미군병사들의 급여가 인상된 결과, 지금은 군의 월급은 상당한 수준이 됐다. 이미 민간과 비교하면 군대의 급료는 적지 않으며, 더욱 더 인상하려고 노력하는 부시정권의 정책은 지나치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연구, 개발예산도 이미 부시가 선거 전 중에 약속한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냉전이 종결된 90년대에도, 연구 개발예산은 그 정도 삭감되지 않았다.

여기에 와서 더욱 예산을 증대시키는 것은, 지나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펜타곤은 병사들의 의료제도, 주거, 그 밖의 기지활동에 관한 기본 서비스의 제도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에서의 예산이 너무 팽창해지면, 펜타곤은 그 효율화에 뛰어들 동기를 잃고 말 것이다. 전체적으로 봐서, 안정되고 있는 방위예산의 인상은, 금후 수년간에 실제로 필요한 액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빈 라딘이 살아있다면

다시, '불후의 자유작전'의 총괄로 돌아가자. 이 작전의 최종평가는 빈 라딘과 그의 측근들이 아프카니스탄에서 탈출했는가 아닌가에 좌우되나, 그 진상이 판명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지도 모른다. 실제 램스펠트 장관은 미군을 2003년까지 아프카니스탄에 주둔시키는 검토하고 있다. 또 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한다면, 아프카니스탄에 금후 어떤 방향으로 향할 것인 가에도 좌우될 것으로, 그 큰 줄기가 알려지기까지는 판단이 어렵다. 확실히 포스트 탈레반의 아프카니스탄 정권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하더라도, 탈레반이나 알 카이다가 이 나라의 넓은 지역을 다시

관리, 지배아래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테러리스트가 소수라도 이 나라에 거주를 계속한다면, 승리는 불안정한 것이 될 것이다.

만약 테러리스트가 거주를 계속한다면, 이 나라는 과거와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알 카이다에 의해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또 아프카니스탄이 다시 내전상태에 빠진다면, 미국의 이슬람세계에서의 이미지는 더욱 실추한다. 반미 파는 여기저기서 '미국은 이슬람교도의 것을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비판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한 결과를 회피키 위해서는, 워싱턴은 다른 지원 국과 함께, 재건, 지원 프로그램이 아프카니스탄에서 잘 개화하도록 노력치 않으면 안된다. 부시정권은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스스로의 정책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리라. 현재 부시정권은 아프카니스탄에서 전개하는 UN 안정화부대에 미군을 투입할 것에 뛰어들 것 같지는 않으나, 동맹제국들만으로는 완전히 상황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틀렸다. 아프카니스탄 전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2만 명에서 3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며, 카블에 수천 명의 병력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10월7일 이래, 아프카니스탄의 상황은 크게 개선돼, 미국의 안전보장도 같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 하다. 아프카니스탄의 반 탈레반 세력, 부시정권, 다국적 부대에 참가한 파트너 국, 미군, 그리고 CIA는 21세기의 위대한 군사적 승리의 하나로 기억되게 될 커다란 성과를 이번의 전쟁에서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전: 『Foreign Affairs』(2002년3-4월호)〉

후세인체제의 기반은 어디 있나

네서날리즘, 애국주의, 부족주의, 순니파의 혼합에 의해, 이라크 정권은 연맹, 위협이 되는 장애를 지금까지 전부 극복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에 침공할 때, 지금까지의 정책이 이 나라에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파래하 자발 (Faleh A. Jabar) / 영국, 런던대학 연구원

후세인체제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려는 결정을 부시정권이 내리고 있는 현재, 초읽기에 들어가 이라크에의 군사공격은 가브리엘 갈루시아 말게스의 소설에 묘사된 '죽음의 예고'를 생각해 본다.

그러나 후세인체제 타도의 대가는 크고, 진흙탕이 된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던 상대는 대 이란전쟁 (1980-88)의 실패나, 쿠웨이트 침공 후, 1991년 초의 군사적인 패배라고 하는 심각한 타격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정치체제다. 이 체제의 견고함은 우연은 아니다.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면서, 정교하게 계산된 권모술수의 결합체다. 젊은 사담 후세인은 히틀러 찬미자였으며, 후에 공산주의의 세례를 받아 스탈린도 그의 찬미자로 추가했다. 후세인이 구축한 체제는 이러한 유산을 계승한 것이나, 그러나 독자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라크의 바스당 체제는 나치 독일의 모델을 모방,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일당지배, 사회주의

를 표방한 경제통제, 그리고 미디어, 군부의 장악이라는 4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바스당은 나치와 달리, 도시 주변, 지방, 농촌 지방에 지금도 강한 영향력을 가진 부족집단 및 씨족집단이라는 전통적인 사회 기구를 국가의 기초로 유지하고 있다. 국방장관, 당 군사국장, 국가안전 보장국장의 3개의 전략적인 포스트는 모든 지배적 씨족집단에 배당되었다.

그럼에도 68년에 수립된 바스당 체제는 초기의 수년간은 국가부족주의에 국한되어 있으며, 알베자트 족을 중심으로 한 지배엘리트 부족인 알브 나질 만이 중용 되었다. 그러나 그 후, 그 밖의 부족집단도 추가되었다.

이러한 구조에 의해 공포체제가 구성되었다. 그 목적은 권력기반을 강화, 지배적인 엘리트를 만들어 냈고, 그리고 58년부터 70년까지 군부나 당 정치를 위협했던 내부분열과 권력항쟁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바스 당에 의한 전체주의체제의 또 하나의 요

소는 석유수입이었다. 국내에서 널리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덕택으로, 공공서비스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서양화된 중간층은 73년10월에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에 이은 석유 붐으로 부유화, 미래를 낙관시 했다. 이상하게도, 상류층에 예상외의 번영을 가져다 준 것은 계획경제하의 제약이었다. 소득이 100만 티날(당시는 1티날=3.10달러)을 초과하는 세대수는 68년에 53세대였으나, 80년에는 80세대가 되었고, 89년에는 3000세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사회세력의 번영은, 자유주의체제가 아니라, 오직 국가에 의한 고용과 계약에 의한 것이었다.

권력의 중심이나 상승하는 여러 계급 가운데, 부족집단이나 혈족집단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씨족계급'의 패권은 군대나 당 조직, 관청이나 경제계에도 뻗쳐있다. 공식적으로는 반부족주의가 주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권은 이데올로기적인 유대나 경제적 이해, 호인 관계, 그리고 친족질서애의 깊은 신뢰감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되었다.

이 바스 당의 전체주의체제는 근대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의 혼합이며, 권력기구를 장악함과 동시에, 불온한 대중을 지배할 목적으로 생겨났다. 이라크 아랍계 주민이 순리파와 시아파로 나뉘져, 대량의 소수민족 집단인 쿠르드를 포함한 다민족사회이기 때문이다. 후세인체제의 장수는 이렇듯 근대성과 전통의 융합에 유래하는 것이나, 동시에 그것은 아킬레스 근이기도 하다.

지배 엘리트들의 결속, 그리고 권력중심의 장악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바스당의 실험은 선행하는 어떤 체제와도 크게 차이가 있다.

쿠데타에 의한 왕정을 전복시킨 아부덜카림 카짐장군의 체제(1958-63)도, 군과 혈연(쥬마이라트족)에 의거한 아부두를 사람 아리프 장군의 체제

(1963-68)도, 안정한 권력기반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바스당은 이 군과 부족적 연대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조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했다. 이 복잡한 혼합체제는 당초부터 모순된 요소를 배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아랍 내셔널리즘과 사회주의를 주창한 바스당은 근대 정당으로서의 모범을 주장, 당의 내분은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 조직은 부족적인 유대나 연대와 공존할 수 없다.

초기의 바스 당 체제에서는, 당내의 문민과 군인의 공존에 곤란이 있었으나, 군인은 최종적으로 군사행동 이외에는 행동이 부자유스러웠다. 부족집단은 권력과 부를 둘러싼 경쟁이나 모략에 의해 분열되면서도, 체제에 일정한 결속을 가져다 줬다.

세속적 내셔널리즘을 주창하는 전통을 가지지 못했던 지배적 부족 엘리트층도, 결국은 아랍주의를 가치관으로서 받아들였다. 그리고 석유수입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별도의 원시적인 경제통제수단이 만들어 졌다.

67년6월의 제3차 중동전쟁에서의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의 패배 이후, 아랍 내셔널리즘의 주장을 지탱해온 지역환경과 국제환경이 변용하는 가운데,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행한 것이 이라크 내셔널리즘이었다. 다양한 사회세력이나 서로 배타적인 주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충돌도 있었으나, 이러한 새로운 공존체제가 뿌리내려 갔다. 위기가 일어 날 때마다, 붕괴된 균형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개혁이 도입되었다.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이러한 미세한 조정에 뛰어들고 있었다.

페르시아인 전쟁 후의 5가지 위기

후세인 체제가 지속적인 재편을 강요당하게 된

것은, 대 이란전쟁, 그리고 페르시아만 전쟁 이후의 일이었다. 먼저, 8년간에 걸쳐 '이슬람혁명'과의 대결을 통해서, 종교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과제로서 부상됐다.

국내의 시아파 아랍주민의 반항과, 호메이니가 거느리는 이슬람공화국에 편향된 그들의 시선은, 이라크 정부의 커다란 걱정이 되었다.

이 오랜 전쟁에서 피폐해진 국가는 많은 부족들에의 지배력을 잃고, 부족주의가 강화되어 갔다. 또 전쟁은 380억 달러의 자금을 허비하게 되었고, 500억 달러의 대외적인 채무가 남게 됐다. 특히 병력 수 100만 명을 헤아리게 된 군대에는, 불온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이전과 같은 문민으로서 풍부한 생활을 되찾으려 생각하고 있었으며, 병사의 통솔은 위험할 정도로 약화돼 갔다. 90년8월2일에 쿠웨이트에 침공한 이라크는 이러한 상황에서, 침공에 의해 국내의 안정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다.

91년의 패전은 적어도 5가지의 레벨에서의 이라크에 만성적인 구조적인 위기를 일으켰다. 통치기관으로서의 국가의 약체화는 중대했다. 군사기구는 전전규모의 1/3까지 축소되었고, 북부 쿠르디스탄과 시아파 주체의 남부를 필두로 지역반란이 이어졌다.

그것도, 미국은 양 지역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치하고 있다. 91년 봄의 민중봉기 때는 치안기교나 이 크게 타격을 받아, 많은 정보자료와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을 잃었다.

둘째로, 이데올로기적 통제제도, 즉 바즈당의 기구가 다같이 쇠퇴했다. 90년에 189만을 헤아리던 당원 수는 91년에 제10회 당 대회 전야에는 그의 40%를 잃어버렸다. 96년의 제11회 대회, 2001년의 제12회 대회에서, 이 감소는 더욱 심화되어갔다. 당으로부터의 이탈은 특히 남부 및 중

젊은 사담 후세인은 히틀러 찬미자였으며, 후에 공산주의의 세례를 받아 스탈린도 그의 찬미자로 추가했다. 후세인이 구축한 체제는 이러한 유산을 계승하면서 독자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라크의 바스당 체제는 나치 독일의 모델을 모방,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일당지배, 사회주의를 표방한 경제통제, 그리고 미디어, 군부의 장악이라는 4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부, 그리고 바그다드에서 현저했다. 바스당이 국정을 수행, 사회를 통제할 능력은 크게 잃었다.

셋째로, 경제 제재로 정부는 과거의 거액의 석유수입을 박탈당했다. 그 결과, 국민총생산(GNP)은 82년에 비해 75%이상이나 저하했다. 4219달러였던 주민 1인당 연평균소득은, 93년에는 485달러까지 떨어져, 오늘날은 300달러를 근소하게 상회할 정도라고 생각된다. 바스 당 체제는 사회서비스와 경제에의 자금제공에 의해 사회의 광범한 층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힘을 크게 잃고 있다. 국가와 사회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미 부에 관하여 권력의 독점자이지는 않게 되었다. 석유수입에 의해 지탱되던 계획경제에 균열이 생겼다. 또 맹아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힘이 국가권력을 침식해 가고 있다.

넷째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바스당의 최대지지 층이었던 중간 소득자층의 감소다. 그들은 악질적인 인플레이로 일자리를 잃고, 아주 형편없는 사회보장 덕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

다. 전쟁 전에 1디날은 3.10달러였다. 96년에는 1달러가 3000디날까지 치솟았다.

교환율을 그후 2000디날과 1만2000디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2000디날 전후로 고정되어 갔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의복, 가구, 서적, 보석,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까지 내다 팔지 않으면 안되었다. 중간층은 과거의 환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바스당 내에서 이데올로기, 선전공작을 담당하는 자프발 무후신은 '우리들은 잃은 중간층'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탄식을 나타내 보일 정도다. 수백만의 이라크 인들이 요르단, 유럽 미국으로 이민하고 있다.

다섯째, 일당지배와 국가관리경제의 근거가 되어왔던 '혁명적 정통성'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일당모델의 종언, 특히 중동에서의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던 정치적 자유화의 움직임에 의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무의함의 극치였던 두 번의 전쟁의 파멸적인 결과에 의해, 대중레벨에서의 애국주의와 정부가 내건 내셔널리즘에 괴리가 생겨, 유혈 참사가 된 91년 봄의 봉기 이래, 대량의 반역자가 나타나고 있다.

정전조건과 UN안보리의 일련의 결의의 결과, 이라크의 체제에는 전례가 없을 정도의 제약과 규제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지배 엘리트에 의한 권력기구의 장악은 완화되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온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도시의 대중을 관리하기에는 국가는 너무나 약체화되었다. 정권상층부의 분열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중심적 일족인 알 마지드 가까지 파급됐다. 군도 당도 만성적으로 내부의 반역에 시달렸고, 1500인 이상의 고급 중급장교가 구미에 도망, 다수의 당 간부가 외국으로 망명했다.

권력 핵심의 교체

이 전례가 없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한 체제는 10년에 걸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전개하게 된다. 그것은 다음 5가지 점으로 집약된다. 중심적 일족 알 마지드 내의 기강을 숙정하는 것, 군을 재편하는 것, 국내전역에서 다양한 부족을 부활시켜 당 조직과 교체하는 것, 이데올로기적인 도구로 쇄신하는 것, 새로운 경제통제수단을 구사하는 것들이었다.

가장 곤란한 과제는 권력을 장악하는 일족의 기강 숙정과 후계자문제의 해결이다. 국가의 정점에 있는 부족주의는 베자트 일족을 중심으로 하는 순니파의 씨족에 의한 광범한 동맹 위에 성립하고 있다. 이 베자트 일족가운데는 특히 10개의 족벌이 있다.

그들은 68년까지는 지방의 전통적 권력을 둘러싸고 경쟁, 78년 이후는 국가권력을 둘러싸고 싸워왔다. 족벌간의 표면적인 연대 때문에 권력중심은 철저하게 교체돼, 각 씨족이 당이나 국가와 연결관계는 변화를 거듭했다. 10개의 별족가운데 7개까지가 숙청돼, 연쇄반응을 불러일으켰다.

79년에, 그때까지도 정권의 중심에 있던 사담 후세인이, 하잔 알 바글에 대신하여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자, 알부 바쿨(알 바글 출신의 일족)은 제거되고 (사담 후세인의 일족)알부 가풀이 실권을 장악케 되었다.

디쿠리 티도 같은 운명을 거치게 된다. 80년대에는 사담 후세인은 주로 세 가지의 친족에 기반을 두고 있다. 3인의 의모 형제(알부 핫다부), 어머니 쪽의 종형으로 의형이기도 한 아드난 하이라라 돌파 원 국방장관, 그리고 알부 카풀 내의 별족인 알 마지드 가의 출신자이다. 알부 핫사, 알부 나잠, 알부 무림과 같은 다른 별족도 일

어났으나, 요직은 주어지지 않았다. 이들 3개의 부족은 이란과의 전쟁의 와중에서 직후에 걸쳐 실각했다. 부장은 처형되고, 일족은 권력에서 멀어져 갔다.

90년대가 되어, 알 마지드가 세력을 신장하자, 커다란 문제가 일어났다. 당과 군을 통해 있던 능률주의, 업적주의, 연공서열의 원칙에 반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후세인 카밀, 사담 카밀(2사람 모두 대통령의 사위), 알리 하산 알 마지드의 3사람이 각각 군수산업장관과, 특수기관의 장, 국방장관의 자리를 차지했다.

일족에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시종무관이 된 라칸과 같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있었다. 대통령의 2명의 아들, 우다이와 쿠세이가 대두하자, 알 마지드 가의 지위도 또 어렵게 되었다. 이 분쟁이 정점에 달한 것은, 카밀 형제가 그 부모나 자매와 함께 95년 요르단으로 도망, 96년2월에 귀국하여 처형당한 사건이었다.

이 유혈사건은 알 마지드가를 격렬하게 동요시켜, 대통령을 동요시켰다. 그는 알 마지드라고 하는 측근의 일족에 등을 돌려, 넓게 알부 가를 전반에 기반을 두게 되었다. 거기에는 알 마지드 이외에도 알브 슬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카말 무스타파에는 2개 군단으로 성립, 후세인 체제의 근위 부대가 되고 있는 공화국 방위대가 맡겨졌다. 그 동생인 자말은 대통령의 막내딸과 결혼했다. 알 마지드와 알브 슬탄 양가 사이에는 대통령의 두 아들들 사이와 마찬가지로 긴장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 아들 가운데 후계자로 뽑힌 것은 쿠사이이다. 그는 첩보기관과 치안기관의 재편이 맡겨져, 2000년에는 비상시의 대통령 임시대행에 지명됐다. 그 이전부터, 그는 공화국 방위대의 전신이었던 '전전모체부대'의 감독에 임명돼 있었다.

이라크 체제는 10년에 걸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전개하게 된다. 그것은 다음 5가지 점으로 집약된다. 중심적 일족 알 마지드 내의 기강을 숙정하는 것. 군을 재편하는 것. 국내전역에서 다양한 부족을 부활시켜, 당 조직과 교체하는 것. 이데올로기적인 도구로 쇄신하는 것. 새로운 경제통제수단을 구사하는 것들이었다. 가장 곤란한 과제는 권력을 장악하는 일족의 기강 숙정과 후계자문제의 해결이다.

2001년4월에는 당의 지역지도자에 선출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권력중심이 구축됐다. 단지 거기에는 쿠사이와 카말 무스타파의 두 사람이 병립되고 있다.

사회적 부족주의의 신장

국가기구에 부족집단을 받아들임으로서, 취약한 지배엘리트집단의 권력을 보강한다고 하는 국가부족주의의 시스템은 지금도 기능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낡은 것이었다. 이것과 대조적인 것이 사회적 부족주의로, 농촌에서의 이주자나 지방도시의 주민 사이에 남아있는 혈연네트워크를 통해, 부족구조를 부활시켜, 조작, 혹은 재구성하려 했다.

바스당은 쿠르드인 특유의 군사적 부족주의를 발견, 그 이용이 시도되었다. 이미 1974년에, 솔치, 메즈리, 도스키, 헬키라는 제 부족들의 장을 용병으로, 쿠르트 네셔널리즘과 싸우기 위한 고용하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되자, 바스 당 체

제는 이란 군과 용감하게 싸운 남부의 아랍 계 부족을 높이 평가, 중앙정부에 초대했다. 80년대 말에는, 근대적인 시민조직이 낡게 되기도 하여, 부족지도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다.

당 조직이 약체화함에 따라, 과거부터의 혈연 네트워크가 그에 대신하기에 이르렀다. 유서깊은 일족은 공공질서 유지에의 관여를 정부로부터 요구 당해, 이 일에 진지하게 뛰어들었다. 새롭게 재구성 된 것이든, 전부터 실제 하는 것이든, 부족 적 유대가 각지에서 고착화되어 갔다.

대통령은 92년에 제 부족들의 장을 대통령 부로 맞아들여, 과거의 농지개혁에 대해서 사과함과 동시에, 화해를 약속했다.

그들은 각각의 기치를 내걸고, 대통령에의 충성을 맹세했다. 대통령은 이렇게 하여 '족장 가운데 우두머리'로 재 탄생되었다. 부족은 군사의 무를 면제받고, 경화기와 수송, 통신기재의 제공을 받았다. 순니파를 주로 한 커다란 부족은 나라의 치안을 맡고, 적은 부족은 지방수준에서 경찰, 사법제도나 분쟁해결, 징세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 부족은 지금은 국가기구의 일익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족구조가 사회세력으로서 재생한 것은, 시민사회의 제도가 파괴되고, 치안이나 사법의 제공과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의 보호를 담당해야할 국가 그것이 쇠퇴했기 때문이며, 거기에서 생긴 진공상태를 메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롭게 부활이나 재구성을 본 부족의 활약장소는 농촌지대라고 하는 본래의 생활터전이 아니라, 도시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사회의 구조는 붕괴되어갔다.

국가부족주의와 사회적 부족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전략은 동원과 통제를 위한 많은 보조수단을 수반하고 있다. 예컨대 이데올로기의 쇄신이

다. 아랍이외의 민족도 포용하기 위해, 아랍애국주의에 추가, 바비론과 같은 고대의 역사도 들춰낸 이라크 애국주의가 주창되었다. 아주 부족적 관점에서 혈족을 칭송하는 혈연 이데올로기는 당의 선전공작 담당부분에 의해 아랍주의의 중심에 두어졌다.

선조 대대의 家系없이는 아랍주의는 전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또 이슬람정통학파의 하나인 한발 파에 속하는 사우디의 우하브 파가, 치안기관의 눈을 피해 남부국경을 넘나드는 것도 이 종교이데올로기가 시아파 활동조직의 대항세력으로서 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 현행체제의 존속을 가능하게 한 최후의 요인은 경제제재이다. 체제는 '석유와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있다. 식량의 배급을 받기 위해서는 배급증이 필요시 되고, 이것이 인심조작의 도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배급증은 반역자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발급되지 않았다.

이 정도로 강력한 사회통제 수단을 체제가 손에 넣은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이 전략은 '기아정책'이라고 불릴 수 있다. 상류층의 체제지지는 시장의 규제완화라고 하는 다른 수단에 의해 획득된다. 바그다드의 고급 크럽에서는 신구 부자들이 밤마다 소란을 계속되어서 어떤 전설의 '천일야화'도 빛을 잃을 정도다.

이러한 네셔널리즘, 애국주의, 부족주의, 순니파의 혼합에 의해, 이라크 정권은 연맹, 위협이 되는 장애를 지금까지 전부 극복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에 침공할 때, 지금까지의 정책이 이 나라에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출처 : 『Le Monde diplomatique』(2002/10월호)〉

팔레스타인의 혼미와 내부대립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조건을 모색한다

2001년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나 동시다발 테러사건은 팔레스타인 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줬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국제사회는 테러를 격렬하게 규탄, 미국 정부는 반 테러 전쟁에의 국제적 연대를 주도할 결의에 차 있다. 이러한 사태는 팔레스타인에 있어서는 위협이기는 하나, 동시에 외교적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 아라파트의 장은 민간을 표적으로 한 테러와 자기 들과의 관련을 어떻게 하더라도 회피하려고, 미국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할 일 슈카키 (Khali Shikaki) / 팔레스타인, 빌사이드대학 정치학교수

인디파다의 진정한 추진지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야셀 아라파트 의장은 의도적으로 제2의 '인디파다' (민중봉기)를 조직했을까. 그렇다면, 그 목적은 팔레스타인에서의 민중들의 지지와 자치정부의 정통성을 확보, 이스라엘 측을 약체화시켜, 팔레스타인 측의 극단적인 요구를 받아드리게 하려는 것일가. 그리고 일련의 무력충돌은 팔레스타인 민중들에 의한 자발적인 항의 행동인 것인가. 2000년9월(후에 이스라엘 수상이 되는)리쿠드 당의 아리엘 샤론 당수는 유대교도가 '신전의 언덕'이라고 부르고, 이슬람교도가 '하람 앗샤리프' (고귀한 성역)이라고 부르는 '성지 예루살렘' 방문을 강행했다.

이것이 점령지로부터의 이스라엘의 철퇴를 실행할 수 없는 중동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초조해하고 있던 팔레스타인민중들의 분노에 불을 붙인

것이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력 충돌의 원인은 아라파트 의장의 획책이었다고 생각, 반대로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샤론 현 이스라엘 수상의 성지 강행 방문 및 점령지의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틀린 주장이다. 2000년 9월 말 이후의 '인디파다'를 담당하고 있던 것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운동의 신세대파였다. 성지방문과 평화프로세스의 교착상태를 분노한 신세대파는 자치정부를 담당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주류파가 독립도, 제대로의 통치도 실현되지 않고 있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이것 자체가 제2차 인디파다의 진정한 원인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2000년5월의 요르단 남부로부터의 이스라엘군의 철퇴와 같이)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로부터 이스라엘 군을 철수시켜, PLO 주류파의 힘을 약화시켜, 종국적으로는 자

기들이 주류가 되는데 있었다.

제2차 인디파다의 개시 이래,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쟁취하려는 신세대 무장파들의 결의는 한층 강화되었다. 그것도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다. 이스라엘정부는 진지하게 일방적인 철수를 검토하고 있었으며, 신세대파의 리더들은 자치정부의 관리권을 사실상, 장악해 나갔다. 스스로의 정통성을 잃을 것을 두려웠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팔레스타인 내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아라파트는 그들을 앞에 두면 약한 입장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PLO 주류파와 이스라엘정부가 지금의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평화 프로세스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자치정부 측은 책임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안정한 통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었다.

이라파트의 파다이의 구심력 지이

제2차 인디파다는 팔레스타인의 정치와 사회에 두 가지의 중요한 움직임을 만들어 냈다. 그 하나는 팔레스타인의 민족주의운동에 갑자기 생겨난 신구 2파의 분단에 의해, 자치정부의 통치능력이 크게 저하된 것이다. 자치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스라엘과 실질적인 교섭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PLO등 민족주의세력의 지도력이 저하하고 있음에 대해서, 하마스 등과 이슬람주의 세력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주의운동이 앞으로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결속시킬 수 있을 가에 대해 PLO는 큰 걱정에 빠져 있다.

1993년9월 놀웨이 오슬로에서 팔레스타인 점령 자치 합의가 성립하자, 팔레스타인민중들의 2/3를 넘는 사람들이 단번에 이것을 지지했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기대는 대단히 높았다. '오슬로

합의는 이스라엘에 의한 점령을 어떻게든 종식시켜, 그 후 열린 민주정치체제의 수립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수준도 생활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팔레스타인 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대에 찬 나날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1996년 초에는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하는 팔레스타인민중들의 비율은 최고 80%에 달했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행사에 대한 지지율도 20%로 급락했다.

1996년1월에는 자치정부의장 선거와 팔레스타인 평의회 선거가 실시됐다. 직전의 여론조사에서는 아라파트 의장이 이끄는 PLO 최대 파벌의 파다하가 55%의 지지를 획득, 아라파트 자신의 지지도 65%에 달했다.

한편, 2년 전에는 40%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던 파다하 이외의 정치세력에의 지지율은 그 밖의 민족주의 운동과 이슬람주의 파를 합해 겨우 20%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현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체제는 이 때의 선거를 통해 결정되었다. 투표율, 지지를 모두 높았던 자치정부의 정통성은 대단히 견고했다. 반대세력이 기권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75%에 달했고, 아라파트 의장의 지지율은 70%를 넘었다. 백지 표는 22%, 대립후보 사미하 하릴의 지지율은 겨우 8%. 자치정부 평의회의 의식에서도 파다하가 77%를 독점했다.

94년을 예외로 하면, 93년부터 2001년에 걸쳐, 팔레스타인 민중의 오슬로합의에의 지지율은 60%를 하회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 기대감도, 1996년 중반의 이스라엘 총선거에서 리쿠드당의 네다랴프가 수상에 당선, 오르단 강 서안이나 가자 지구에서의 입식지 건설이 이어진 결과, 퇴색하기 시작했다.

시몬 페레스 수상 시대에는 '평화프로세스에 의해 언젠가는 팔레스타인 국가수립과 평화조약

체결이 실현된다'고 기대하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비율은 44%에 달했으나, 95-96년의 이스라엘의 페레스 정권 조각 1년제에는 30%으로 급락했다. 특히 그 4년 후, 노동당의 파라크 정권이 탄생했음에도 입식지 건설이 계속된 결과, 팔레스타인 측의 영속적 화해에의 기대는 24%까지 저하했다. 2001년 초 리쿠드 당의 샤론 당수가 이스라엘의 새 수상으로 선출되자, 평화를 기대하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비율은 11%까지 저하됐다.

'평화프로세스가 받아들여져 가능한 영속적 합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져 감에 따라, 대 이스라엘 무력행사노선을 둘러싼 팔레스타인들의 여론은 자폭 테러를 포함, 극적으로 변화, 긍정론으로 기울어 갔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 의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중개노력이 실패로 끝난 2000년 7월에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52%가 무력행사를 지지하게 돼, 1년 후에는 그 비율은 전대미문의 86%에 달했다. 평화 프로세스의 파탄에 의해, 아라파트 의장과 파다하의 지지율도 저하했다. 1996년 이후, 저하를 계속하던 아라파트 의장의 지지율은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회담 직후에는 47%까지 떨어져, 특히 1년 후에는 33%까지 급강하했다. 2000년 7월에 37%였던 파다하의 지지율도 다음해에는 29%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인디파다가 재개되기까지는 아라파트나 파다하에의 지지율이 저하가, 곧바로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세력 대두를 결과시킨 것은 아니었다. 주류파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의 분파세력은 단순히 방관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슬람 세력에의 지지율은 10%대 증반에 머물렀다. 그러나 인디파다의 재개가 이 구도를 변화시켰다. 2001년 7월의 시점에서 이슬람세력에의 지지율은 27%가 되고, PLO 반 주류파의 지지율이 파다하 지지율(30%)을 처음으로 웃돌

성지방문과 평화프로세스의 교착 상태에 분노한 신세대파는 자치정부를 담당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주류파가 독립도, 제대로의 통치도 실현되지 않고 있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이것 자체가 제2차 인디파다의 진정한 원인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로부터 이스라엘 군을 철수시켜, PLO 주류파의 힘을 약화시켜, 종국적으로는 자기들이 주류가 되는데 있었다.

게 되었다.

평화프로세스의 쇠퇴나 경제 생활수준의 악화만으로, 아라파트 의장이나 파다하에의 지지율의 급락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팔레스타인 민중의 대다수는 이 6년간에 민주정치가 쇠퇴하여, 정치가, 관료의 부패가 진척, 통치상의 능력도 열악하게 되었다고 느꼈다. 1996년의 여론조사에서는 43%가 팔레스타인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수호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2001년에는 그 비율은 21%로 떨어졌다. 자치정부의 각 기관의 움직임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도 동기간에 64%로부터 40%로 저하, 한편 '부패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49%에서 83%로 상승했다.

제2차 인디파다도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실망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이었다. 이스라엘 군에 의한 점령은 계속, 팔레스타인 자치구는 봉쇄됐고, 사람들의 이동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었다. 팔레스타인 민중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은 거의 정지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2000년 7월의 시점에서는 '교섭

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것도 폭력이라면 달성할 수 있다고'고 생각하던 팔레스타인 민중은 30% 이하였다. 그러나 1년 후에는 무력행사 지지파는 59%에 달하고 있었다. 실제, 인디파다 재개로부터 9개월 후에는 '무력행사가 일정의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1%에 달하고 있었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대부분은 평화프로세스는 파탄됐다고 생각, 자치정부의 통치능력이나 지도력을 거의 의심한 결과, 팔레스타인 사회에서의 자치정부 및 그 기반인 민족주의 주류파의 정통성은 크게 훼손됐다.

이러한 자치정부의 정통성의 쇠퇴에 의해, 주류파 이외의 세력이 사회의 무대로 뛰어 들 기회가 생겨나, 2000년9월, 민족주의 운동의 신세대파가 대두했다. 성지방문이라고 하는 샤론 당수의 도발적 행위와, 그것에 의해 야기된 혼란을 이용하여, 신세대파가, 주류파 라이벌을 따라잡기 시작했던 것이다.

대두하는 신세대파의 목적

1967년부터 94년에 걸쳐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운동 지도층은 타국을 유랑하는 생활을 강요당했으며, PLO본부도 요르단에서 레바논 튀니시아로 이동됐다. 그리고 이 사이 요르단 강 서쪽이나 가자 지구에 남아 있던 유력자들이 그곳에서 영향력을 확립하려고 시도한 것도, 그 만큼 이스라엘이나 PLO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했다. 그러나 1982년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서의 패배 때문에, 팔레스타인 정치에서의 PLO의 구심력도 약화, 점령지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영향력도 저하해 간다.

이렇게 하여, 팔레스타인 정치의 중심은 역외에서 활동하는 PLO로부터 역내의 제 세력으로

옮겨갔다. 1987-93년의 제1차 인디파다를 조직하여 싸운 것은 이러한 점령지역 내의 신 지도층들이었다.

그러나 PLO는 94년에는 오슬로합의를 실천하기 위해 서안과 가자지구로 돌아와, 자치정부에 본부를 설치했다. 그 후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운동을 오랫동안 담당해온 주류 파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신세대파와의 관계는 어색하게 계속돼 왔다.

주류파는 제1차 인디파다의 지도 그룹을 수용하려고도, 거부하려고도 시도했으나, 주류파의 권위주의가 장애가 되어 제대로 잘 되지 않았다. 그래도 이스라엘 점령지로부터의 부분적인 철수나 96년의 처음의 총선거의 실시에 사람들은 흥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립은 팔레스타인의 제 세력이 협조하고 있는 것 같은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주류파는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운동을 개시한 사람들, 다양한 게릴라 세력, PLO 중심부로 구성되고 있었다. 유력자의 대부분은 50세 이상. 정치가로서의 인생의 태반을 팔레스타인 역외에서 지내온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성취'들이, 파다하와 PLO로 기울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영향력을 가진 것은 (아부 마진으로도 알려진)마후무드 아바스 PLO 집행위원회 사무국장, 아프마드 쿠레이 팔레스타인 자치평의회 의장, 나빌 자스 국제협력장관 등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평화프로세스를 지휘해 왔다. 한편 신세대파의 중심은 제1차 인디파다의 지도자나 현지의 신 리더들로, 연령적으로는 거의 40세 이하로 젊은이들이다. 그 중에는 자치정부에 참가하거나, 팔레스타인 평의회의 의원, 혹은 치안부대의 간부인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신세대파는 전체적으로 보면 단결력, 지도력 그리고 권한이 없었다.

젊은 민족주의자 중에는 팔레스타인 민중들로부터도 왕으로 불려지는 사람도 있다. 라파의 사미 아브 삼하다네나 벳레헴의 아디프 에비야트와 같이, 이스라엘정부로부터 암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마저 있다. 한편 라마라를 거점으로 하는 파다하의 군사부문 지도자 말완 발구티나 나블즈 주재의 핫산 카달 등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같은 젊은 민족주의자들에게는 PLO의 주요기관에 대한 발언권은 거의 없으나, 파다하의 혁명평의회나 민병조직 '단집', 무장조직 '알 아쿠샤여단' 등에서는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정치의 기득권 층은 그의 정통성을 PLO의 역사적 유산, 오슬로합의 및 그 성과에 의존해왔다. 주류파는 PLO와 자치정부의 자금을 관리, 국제사회로부터 팔레스타인 대표로서 외교적으로 승인돼, 자치정부의 관료기구와 치안부대를 장악하고 있다.

한편, 신세대파는 제2차 인디파다를 통해, 반주류파 이슬람세력과 손을 잡고, 그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팔레스타인 여론이 평화프로세스와 국가수립이 진전하지 않은 것에 커다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신세대파의 추격의 바람이 되었다. 신세대파는 지금까지 다양한 요인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주류파의 정치력을 상쇄하려 시도해 왔다.

신세대파의 무장조직은 아직 소규모였으나, 약체화해 가고 있던 자치정부의 행정조직의 대부분을 영향력아래 두는데 성공했다. 신세대파의 목적은 새로운 정부기구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부조직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PLO 주류 파의 지도층에는 명확한 서열이 있다. 아라파트 의장은 압도적인 존재로서 주류 파의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다. 주류파의 존속 그것이 아라파트 의장의 존재와 그에의 지지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신세대파의 리더들은 아라파트 의장의 권위는 인정하나, 스스로의 정통성을 의장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세대파 리더의 신뢰를 확보키 위해 기델 필요가 있는 것은 아라파트 의장 쪽이었다. 사실 아라파트는 신세대파를 회유하려고 그들이 이슬람주의 세력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 특히 신세대파의 대 이스라엘 군 과격노선도 용인했다. 2001년3월에 이스라엘이 자치정부의 경찰이나 경비대를 공공연히 공격한 것에 대해, 아라파트 의장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의장 친위대나 정보조직에 이스라엘 병과 이스라엘 입식자들에 대한 공격에 가담토록 인정했다. 아라파트가 신세대파의 무력행사에 가담하는 것이, 정치체제를 개방하여 민주주의에의 이행을 약속하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신세대파는 아라파트 진용에 대해 한층 더 양보를 강요했다. 그들은 자치정부에 투명성을 높이려 했으며, 부패 박멸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요구, 이스라엘과 정면에서 대결하도록 했다. 자기들만이 아니라, 이슬람주의 세력의 간부나 그 밖의 비주류 파를 포함, 폭넓은 정치세력이 정부에 참가하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통일내각을 탄생시킬 것도 요구한 신세대파는 팔레스타인 사회와 국제사회가 함께 요구하고 있는 법의 지배, 사법권의 독립, 입법기관의 권한강화, 보다 효율적인 공적제도의 정비 등, 보다 좋은 통치의 실현도 요구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정치세력의 대립

신세대파는 결과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민족주의 운동이나 이슬람과격파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도록 하는 정전 합의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미첼 전 상원의원 등에 의한 최근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분쟁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나, 2001년6월, 데네트 미 중앙정보국국장이 정전, 치안유지를 위해 제시한 데네트 프렌 등, 각 방면에서 정전 합의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신세대파는 이들을 비판하고 있다.

신세대파는 아라파트 의장에게 정전구상을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디파다의 목적과 수단을 명확히 하여, 대 이스라엘 공격에 자치정부의 치안부대를 참가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주류파는 신세대파의 대 이스라엘 무력행사노선의 유효성을 의문시, 자치정부의 치안부대가 부분적으로라도 군사무력충돌에 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평화의 실현성이 다소나마 현실성을 띄고 진행되는 한, 아라파트 의장이 신세대파와 정면으로 대립해서도 안 된다고 이해, 이 관점에서 치안부대가 더러는 무력충돌에 관여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주류파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력충돌을 진정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온다고 하면, 대내적으로 정통성을 주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무력충돌에 참가한 사람들 뿐 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정부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주류파의 일부는 정부로부터 거리를 두고, 정치적 동원과 정치개혁을 위한 신 포럼을 조직하려 하고 있다. 사실 2001년1월에는 서안 가자지구와 재외 팔레스타인인을 대변하는 팔레스타인 민족평의회 의장이, 오직 추방과 법의 지배의 철저화를 자치정부에 요구, 각료들에게 현 내각에서 이탈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새롭게 민족독립기구를 조직, 도입하도록 제창했다. 그러나 신세대파는 이 움직임에 가담치 않았다. 그들은 자치정부를 상대로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군을 타파 자기들의 입장을 확립시키는 쪽을 선택했다.

그래도 신세대파의 최종적 정치목표는 주류파와 같이, 독립 팔레스타인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의심의 소리도 있으나, 신세대파의 목표는 적어도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국가를 이스라엘과 공존할 수 있는 이웃국가로 독립시켜, 팔레스타인 난민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젊은 투사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정치적 목표에 대해 주류파보다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그러한 주장도 나날이 이어지는 유혈에 의해 절실 감이 희석되어 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자치정부의 동 예루살렘 대표를 지낸 누세이베 알쿠스 대학 학장 등, 온건적인 입장에서 평화프로세스를 지지, 무력충돌을 수단으로 하는 정치목적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접근에 비판적이 세력도 있다.

주류파와 신세대파의 이스라엘에 대한 자세를 가르고 있는 최대의 요인은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에 대한 '승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가다. 아라파트 의장 그룹은 적어도 교섭에 의한 점령지로부터의 이스라엘인들의 완전한 철수를 목표로 하고, 팔레스타인의 현 지도자 층이 당면의 권력의 자리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신세대파의 리더들은 이스라엘과의 교섭노선을 필요조건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철수나 예루살렘 분할 책을 보다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물론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태반이 지지하는 평화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신세대파의 리더들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젊은 지도자들은 그러한 교섭을 성립시키기에는 대 이스라엘교섭의 경험이 풍부하여, 상대와의 밀접한 인적관계를 가진, 팔레스타인 민중을 단결시킬 지도력과 장래의 비전을 구비하고 있는 인물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인제가 주류파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은 팔레스타인민족의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교섭보다도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철수나 예루살렘 분할을 모색하는 쪽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자치정부간의 교섭의 이면을 숨기는 것으로, 주류파의 힘을 약화시켜,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치정부는 당초 인디파다의 재개를 환영했다. 이스라엘에의 압력이 높아지면, 교섭의 테이블에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세대파 리더들로 보면, 인디파다의 목적은 교섭을 진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이었다. 캠프 데이비드회담의 결렬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점령을 끝내는 것이 가능한 것은 교섭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민중의 봉기 만이라고 하는 인식을 점점 강하게 했다.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해, 스스로의 내적 입장을 강화하려고, 젊은 리더들은 인디파다 재개 당초, 이슬람주의 세력 그 밖의 반주류파와 손을 잡았다. 신 세대파는 최종적인 정치목표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슬람주의 각파를 통해서, 자기들의 관리하에 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봤다. 제1차 인디파다에서 이슬람주의 세력이 민족주의운동에 필적할 만한 리더쉽, 제도, 무장체널을 구축하는 것을 젊은 리더들은 교훈으로서 느끼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정치와 사회를 분단하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운동의 세대간 겹 뿐만은 아니다. 오슬로 평화프로세스에 관한 지지파와 반대파의 수면아래서의 대립과 같이, 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 세력간의 거리도 크다. 또 신세대파, 특히 자치정부나 팔레스타인LO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신세대파는 비폭력의 전통을 중시하는 누세이베 학장 등과 같이. 무장대립 노선은 형편없는

신세대파는 아라파트 진용에 대해 한층 더 양보를 강요했다. 그리고 폭넓은 정치세력이 정부에 참가하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통일내각을 탄생시킬 것도 요구한 신세대파는 팔레스타인 사회와 국제사회가 함께 요구하고 있는 법의 지배, 사법권의 독립, 입법기관의 권한강화, 보다 효율적인 공적제도의 정비 등, 보다 좋은 통치의 실현도 요구하고 있다.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는 주류파와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현상의 정치적 교착상황이나 무력대결 노선을 지지하는 압도적인 여론 앞에, 이러한 온건한 신세대파의 발언력은 그림자를 감추고 있다.

향후의 3가지 시나리오

팔레스타인의 내적 긴장이 해소될 것인가 악화될 것인가는 금후의 중동정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달려있다. 생각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3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관계가 이대로 교착된 채로 라면, 은혜를 입은 것은 이슬람주의 세력일 것이다. 한편, 이스라엘이 대규모적인 일방적 철수, 혹은 예루살렘 분할책을 선택할 경우, 이득이 되는 것은 신세대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양 지도부가 교섭 끝에 어떤 형태의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류파가 다시 그 영향력을 부활시키게 될 것이다.

1, 현상이 계속될 경우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평화프로세스 및 그것이 의미하는

타협책에의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지지는 점점 저하, 한편으로 무력대결노선에의 지지는 높아질 것이다. 자치정부의 권위는 쇠퇴하고, 아라파트 의장의 인기도 떨어질 것이다. 신구세대간의 대립은 민족주의 운동을 분단하여 약체화시키고, 신세대파가 드디어 주류파를 대신해 갈 것이다. 적어도 아라파트 의장은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계속해 갈 것이나, 전술을 이용할 여지는 거의 없 어지게 될 것이다.

아라파트가 팔레스타인 정치의 무대에서 모습을 감추면, 주류파의 쇠퇴는 점점 가속화돼, 신세대파 리더간의 권력항쟁이 유발될 것이다. 그 경우 현재 자치정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젊은 리더들은 신세대파로 기울어, 그들에 인재와 민중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신임을 제공한다. 그러나 아라파트 의장이 정치가로서의 살아 남을 가, 아닐가 가 이스라엘과의 교착이 이대로 계속되면, 팔레스타인에서의 세력 균형은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이슬람주의 각파에로 옮겨가, 드디어 그들 자체 팔레스타인 정치와 사회의 지배세력이 되어간다.

2,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이 일방적 철수 책, 혹은 예루살렘 분할책을 취하면, 그것은 신세대파에 있어서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예루살렘 분할은 교섭의 필요가 없는 매력적인 시나리오다. 팔레스타인 측에는 양보를 할 의도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나라의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도, 이스라엘인 지구와 팔레스타인인 지구를 가능한 일찍 분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의 예루살렘 분할 안의 지지수위가 어디에 경계선을 정할 가에 좌우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스라엘인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인 거주 구와의 사이의 벽을 친다고 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 경계선이

이스라엘 측에 있어 불리하게 되면 될수록, 예루살렘 분할 안에의 지지는 불투명한 것이 된다. 그렇다고 예루살렘 분할 안은 이스라엘 정계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점점 폭넓게 지지되고 있으며, 상당한 신뢰도 높은 선택지가 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것이 되든,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으로부터의 철수를 생각할 때는 2000년의 레바논 남부로부터의 철수가 비교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철수를 수용, 팔레스타인의 주류파는 당시 레바논 정부와 같이, 그리고 신세대파는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무장조직 '히즈보라'와 같이 반응을 보일 것이다. 즉 자치정부는 철수에 의해 손에 쥐고 있던 영지나 구입식지를 깨끗이 통치하지 않은 채 방치, 그 진공에 힘을 증가한 신세대파나 이슬람주의 세력이 손을 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철수지역의 '해방'을 선언, 여기를 남은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 군을 소탕하기 위한 거점으로 한다고 하는 시나리오다.

신세대파는 팔레스타인자치정부가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교섭재개의 구실로 하려하는 것을 저지하려 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자기들의 승리'라고 보고, 그 세력으로 주류파에 대해 정면에서 대립할 것인가, 아니면 민족주의 운동에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철수가 실현되면, 팔레스타인인 사회가 그것은 신세대파의 승리로 보는 것은 틀림없으며, 상황은 이슬람주의세력보다도, 신세대파의 민족주의운동에 유리한 형태로 추진할 것이다.

3, 최후로 교섭으로 평화합의가 달성된다고 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이스라엘과의 합의를 수락하는 것은 자치정부의 주류파 만으로, 주류파가 명실공히 복권하게 된다.

이스라엘과의 합의내용이 팔레스타인 민중에게

지지되면, 자치정부는 다시 지도력을 회복한다. 신세대파나 이슬람주의 세력은 합의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그것에 의해 민중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경우에는 신세대파와 손을 잡을 자치정부의 일익을 담당할 젊은 리더의 대부분은 합의가 성립하면, 주류파와 손을 잡고, 평화합의를 지지한다. 또 이스라엘과의 평화합의를 수용, 팔레스타인 내부의 정치개혁이 단행되면, 신구의 민족주의운동은 화해하여 손을 잡고, 이슬람주의 세력의 입장은 손상되게 될 것이다.

평화합의의 길

국제사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도, 교섭에 의한 평화합의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합의의 실현은 현상이지도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합의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이론적으로는 다음의 3가지가 생각될 수 있다. 분쟁종결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 합의, 분쟁의 완화와 현상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안정화계획, 분쟁종결과 분쟁완화의 사이의 어딘가를 겨냥하여 잠정타협의 3가지다. 그러나 어느 것도 현상에서의 실현성이 적다. 그러나 구미가 강한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안정화계획은, 아라파트 의장은 물론 샤론 수상도 받아드릴지도 모른다.

분쟁종결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 합의가 실현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전 쟁점이 해소돼, 분쟁도 종료한다. 캠프 데이비드회담기의 교섭이 진전되면, 이러한 포괄적인 합의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쌍방이 금후 교섭재개를 진지하게 바란다면, 2000년12월에 당시의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이집트의 다바에서 이뤄진 평화

안을 기점으로 교섭이 재개돼, 거기서부터 성과를 쌓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회담에서 각 세력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결국은 합의까지의 길이 어느 정도 먼가를 알 것이리라. 포괄평화의 경우, 현상에서는 하나도 만족되지 않은 다음의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첫째 조건은 대 이스라엘주의적 이데올로기 색을 전면에 나타내지 않은 정권이 탄생, 이 정권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획득한 거의 모든 팔레스타인 점령지로부터의 철수에 합의, 거의 모든 입식지로부터 철수함과 동시에, 남은 입식지를 유지하기 위한 영토교환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이 프로세스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미국정부가 깊이 개입할 필요도 있다. 셋째, 팔레스타인 측의 친구세력이 목적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최후의 조건은 주류파가 정치시스템을 개방, 친구 양파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정치개혁 마저 단행하면 실현한다)

이스라엘인도 팔레스타인인도, 현실에는 이러한 포괄적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어느 쪽의 여론도 합의에 필요한 아픔을 수반한 양보를 받아드릴 용의는 없다. 그러나 평화는 무리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서의 견고한 정통성을 정비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부만이 아픔을 수반한 평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쌍방에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이 출현할 때 비로써 서로의 시민이 합의 체결에 필요한 양보를 받아드릴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물론, 그러한 필연성이 높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한편에서, 안정화 계획은 간단히 사태를 진정시켜, 평화프로세스에의 시민의 신뢰감을 부활시켜, 보다 전망이 있는 최중지위교섭에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 책이다. 이러한 안정화 계획은 다음과 같은 제 조건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위 폭력의 완전정지, 인디파다 재개 이전의 현상여로의 복귀, 입식지 건설의 동결, 최종 지위 교섭의 재개 약속, 이미 교환된 잠정적 합의의 수순(팔레스타인자치정부의 의무 실행과, 오슬로합의에서 'C지구'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점령지구로부터의 이스라엘 군 철수, C지구는 서안지구의 약 6할을 점해, 여기에는 인구가 적은 지역, 이스라엘인 입식지와 군 시설 및 이들을 연결하는 주변도로가 포함돼 있다) 등이다. 이들 안정화계획에 필요한 제 조건은 쌍방이 지금까지의 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계획으로서 시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며, 쌍방의 여론이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미국 등 국제사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이스라엘의 현정권도 이러한 안정화계획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단지 입식지 건설의 완전동결 안이 이스라엘에서 지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995년의 잠정자치협정에서 정해진 C지구로부터 팔레스타인 자치구에의 3개의 이간의 최후에 대해서도, 그것이 서안지구에서의 수많은 소규모의 입식지와 전초기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발이 강하다.

팔레스타인 측에 있어서도, 이 안정화 계획을 완전히 실시하기에는, 신세대파를 전면적으로 정치체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신세대파의 합류가 없는 한, 주류 파는 혼자 라도 강력한 민족주의운동의 비주류 파나 무장 이슬람주의 세력으로부터의 반대를 억제, 인기 없는 정전합의를 시민들에게 납득시킨다고 하는 용이치 않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설사 신세대파가 주류파에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사태가 눈에 띄게 진전되지 않으면, 소규모적인 폭력사태가 계속, 최종적으로는 안정화의 시도도 손상되고 말 위험이 크다.

안정화를 위해서는 신뢰정세조치로서의 국제감시단의 역할도 필요케 된다. 주류파와 합체한 위에, 그래도 여전히 신세대파가 이스라엘 군을 공격하면, 국제감시단의 눈앞에 아라파트 의장에게 공공연히 반항, 수치를 줄이기 위해, 신세대파도 행동을 자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감시단의 투입은 정전파기를 일으키기 어렵고, 정전합의가 당사자 자신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장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감시단의 존재는 당사자 쌍방이 상대의 의도를 아는 수단이 될 것이며, 또 '정전' 합의의 단계적 실시를 보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의에 따르는 쪽이 득이라고 쌍방에게 인식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안정화계획의 조건에 다음 4가지가 추가되면, 그것을 중기적인 이행 프랜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입식지의 포기를 포함 가자지구로부터의 이스라엘의 완전철수, 서안지구로부터의 이스라엘군의 이동과 팔레스타인 자치구로부터의 주변지역으로의 완전한 접근의 보증,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립,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부대전개와 팔레스타인 국경경비대의 활동감시를 포함, 국제감시단의 권한확대라고 하는 4조건을 추가하면, 이스라엘 샤론 수상이 이것을 '장기적인 잠정합의'라고 보는 것은 가능하며, 아라파트 의장이 이것을 '잠정자치협정실시를 위한 개정 메카니즘'이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 어쨌든 상황을 전진시키려 하는 의사가 쌍방에 있다고 한다면, 안전화 계획을 전제로 한 행동계획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쌍방의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열거해온 화해에의 제 조건은 어느 것이나 이스라엘의 펠레스 의상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들뿐이다. 샤론 수상도, 수상으로서 처음으로 방미한 이래, 가자지구로부터의 완전한 철수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샤론 수상은 거듭하여 이스라엘의 이웃에 팔레스타인을 건국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대대적인 이행합의를 향한 진전을 이루는 일은, 먼저 온당한 안정화계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정치개혁인가, 딱곡인가

2001년9월11일 미국에서 일어나 동시다발 테러 사건은 팔레스타인 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줬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국제사회는 테러를 격렬하게 규탄, 미국 정부는 반 테러 전쟁에의 국제적 연대를 주도할 결의에 차 있다. 이러한 사태는 팔레스타인에 있어서는 위협이기는 하나, 동시에 외교적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 아라파트 의장은 민간을 표적으로 한 테러와 자기들과의 관련을 어떻게 하더라도 회피하려고, 미국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대부분은 (신세대파를 포함), 이스라엘이 기회를 타서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총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주의 세력도, 테러의 주모자로 지목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과 그 테러 네트워크와 동일시되는 것을 경계한다. 그 결과 이슬람주의 세력은 이스라엘인에 대한 자폭 테러를 걱정, 신세대파와 친구일 수밖에 없는 그들과 거리를 두고, 주류파는 지금까지 구축해온 국제적 신용을 자기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했다. 아라파트 의장은 지금까지와 같이 신세대파에 유화적 자세를 취하는 것에 대한 위협이 점점 높아져, 자기자신의 입장이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반 테러 전쟁을 행하는데 있어 아랍 이슬람 사회의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이 팔레스타인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아라파트 의장과 자치정부에게는 스스로 술선하여 자치정부의 정치개혁에 착수하는 것이다. 정치개혁을 실시하면, 그들의 민족주의운동은 다시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신구세대의 통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라파트 의장과 주류파,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회 전반에 향해지고 있는 경고는 지금은 명백하다. 그것은 개혁하지 않으면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어주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991년10월에 미국 주도로 마드리드 중동평화회의가 열려, 이스라엘과 인근 아랍계국이 한자리 모여 팔레스타인 문제가 토의된 것도 페르샤만 전쟁의 승리에 의해 미국의 중동에서의 영향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치정부의 주류파는 이번에도 동일한 전개를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파트 의장은 반정부세력에게 일시적이기는 하더라도 폭력행동을 자숙하도록 강은 쌍방의 수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신세대파나 이슬람주의세력은 샤론 수상이 팔레스타인 측의 폭력행동의 자숙에 같이 할 것은 생각할 수 없었으며, 지금까지의 사태의 추이를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았다. 샤론 수상과 이스라엘 군 간부는 '팔레스타인에서의 폭력사건이나 무력충돌은 모두, 아라파트 의장이나 그 일파가 획책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봐도, 아라파트 의장은 이미 자기들과 교섭할 것은 아니라고 결론 지우고 있는 듯 하다. 이스라엘지도자

는 아라파트 의장의 정통성을 차차 빼앗아, 그 권한을 없애려 할 지 모른다.

이스라엘 정부 간부는 팔레스타인 측의 온건노선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아라파트 의장이 9월11일 이후의 외교상황을 스스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는데 이용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다. 아라파트 의장이 단기간에 폭력사건의 발생을 8할 이상이나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테러리스트에 특정한 팔레스타인 활동가의 암살을 계속, 한번은 이관해야 할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침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의의 제3자가 어느 정도 중재나 외교노력을 거듭하더라도, 아라파트 의장이 '정전' 합의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없으며, 샤론 수상이 팔레스타인에의 도발전략을 취하는 것을 그만두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아라파트 의장과 주류파가, 전면적인 분쟁조정을 받아드릴 가능성은 낮으며, 그들에게는 '정전'을 강제할 만한 힘도 없을지 모른다.

제2 인디파다 개시 이래, 주류파는 위험한 곡예를 계속해 왔다. 자치정부는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의 유일하게 무력을 가진 세력은 아니며, 그 정통성에 의문을 가진 팔레스타인들 중에도 많다.

민중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행사노선을 지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정부의 이슬람 주의 세력이나 신세대 무장파의 탄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지에서의 실행 가능한 정치 프로세스가 부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라파트 의장이 팔레스타인 내부의 반 자치정부세력을 억압, 그것에 성공하면 이스라엘의 수하로 보여지고 말 것이다. 한편 아라파트 의장이 반대세력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정이다.

아라파트 의장의 선택 지는 썩 제한되고 있다.

정치정세가 급후 변화하여, 의장의 권위와 민중의 지지가 상향되면, 정전을 철저히 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화 프로세스를 단번에 재개, 진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평화프로세스의 재개를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며,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개가 될 확률은 아주 낮다.

2001년12월에 팔레스타인 측이 자폭 테러노선을 재개한 이상, 이 나쁜 현상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은 크다. 현재, 신구세대를 어떻게든 연결하고 있는 것은 아라파트 의장의 지도력이며, 의장의 존재가 없다면 신세대파는 곧바로 자치정부의 주도권을 거머쥐게 될 것이리라.

아라파트 의장은 민중과 의사의 소통을 하는데는 최선은 아니나, 그 존재자체로 팔레스타인 민중에 안심감을 줘, 질서 붕괴를 막고 있다. 아라파트 의장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주의 세력도 주류파 지배에 대공세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그가 없다고 한다면, 사태는 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물론 아라파트 의장과 자치정부에게는, 이 우울한 미래와는 다른 길이 남아있다. 그것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평화 안을 정비하여 자기들을 구해 주는 것을 단지 기다리지 만은 않고, 스스로 솔선하여 자치정부의 정치개혁에 착수하는 것이다. 정치개혁을 실시하면, 그들의 민족주의운동은 다시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신구세대의 통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라파트 의장과 주류파,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회전반에 향해지고 있는 경고는 지금은 명백하다. 그것은 개혁하지 않으면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출전 : 『Foreign Affairs』(2002년1-2월호)〉

중동에서의 반미주의의 기원

중동의 지배자들은 그러한 민중들의 기대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사회의 문제점을 미국의 책임으로, 대중들의 분노를 미국으로 향하게 하려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국가의 단결을 요구, '미국이 위협'을 방패로 개혁주의자들의 입을 막을 수도 있으며, 상황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표적을 자기들에 돌려지는 것도 회피할 수 있다.

바리 루빈(Barry Rubin) / 이스라엘, 글로벌 리서치 센터 소장

반미주의의 정치적 고려

“대미동시테러라고 하는 폭력은 미국의 잘못된 중동정책이 초래한 비극이었다.” 2001년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공격이래, 테러의 동기에 대해 일반에게는 이렇게 이야기 돼 왔다. 워싱턴이 평판이 나쁜 아랍의 억압적 정권과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기 때문에, 중동전역에서 미국에 대한 강한 불만과 반발이 생겨, 이것이 극에 달한 결과, 9월11일의 사건이 일어나, 3천 여명의 생명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다.

반미주의는 다분히 아랍세계 시민들과 정부에 넓게 퍼져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현실을 아주 잘못 보게 하는 것이다. 아랍, 이슬람 세계에서 반미의식은 단순히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반발에 그 뿌리를 두는 것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지도 않다. 지금까지의 미국의 중동정책 전반

은 분명히 친 아랍, 이슬람 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주의적인 적의는 아랍사회에서의 다종다양한 집단이 반미감정을 선동하는 것이 자기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결과로 생성되고 있다. 실제, 이슬람 세계의 각 집단은 자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일반 대중들이 주목하지 않도록, 반미주의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 있어, 이러한 중동에서의 반미주의의 기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아랍의 반미주의가 미국의 정책상의 실책에서라기보다는, 아랍세계의 국내적인 정치적 흥정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워싱턴이 홍보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거나, 중동정책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킨다하더라도 현실을 변화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워싱턴이 ‘자기들은 아랍 세계를 위협할 의도는 없다’고 상대에게 전하려 시도한다면, 반대로 상황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을 쓴다면, 과격파들은 자기들의 반미정책은 성공했고, 그러한 태도만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에서 타협을 이끌어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할 것이다.

미국의 친 이람정책의 결과

지금까지 오랫동안, 중동세계에서 정치체제가 기능마비에 빠지거나, 정치운동이 좌절되거나 했을 경우, 한꺼번에 '반미주의'가 한꺼번에 정치적 난국을 뛰어넘는 수단으로써 이용돼 왔다. 아랍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거의 모두가 미국의 책임으로 여겨져, 정치적, 사회적인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의 핑계로서도, 미국이 회자되고, 비판되어 왔다. 아랍 지도자들은 진정으로 자기들의 책임인 국내문제에 민중들이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모든 문제를 워싱턴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민중의 관심을 바깥으로 향하게 했다.

이렇게 하여, 민영화, 남녀 평등권, 민주주의, 시민사회, 언론의 자유, 법의 정당한 절차, 그 밖의 아랍세계가 필요로 하는 개혁은 방치되면서, 민중들의 관심은 오직 '증오의 미국'으로 향하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워싱턴이 지금까지 온건한 중동정책을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본 사실이다. 물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미국도 자기나라의 국익을 기반으로 외교정책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미국 국익의 대부분은 아랍의 지도자나 민중들의 이익과 중첩되어 왔다. 예컨대 1991년의 걸프만 전쟁이다.

이라크의 독재자에 의한 침략과 병합이라고 하는 위기에서 쿠웨이트를 구해낸 것은, 값싼 석유 공급을 확보한다고 하는 미국의 국익에도 관계되는 행위였다. 워싱턴은 쿠웨이트, 이슬람, 아랍의

이익도 배려했다. 이라크를 추출한 대신에 쿠웨이트 유전 지대의 관리권, 원유의 저 가격 보충, 혹은 정치체제 면에서의 타협(개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러한 요구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아랍, 이슬람 세계로부터 최대한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시도했다.

아랍세계의 분쟁에 관여할 때도, 이슬람 온건파에 기울어져, 세속적인 아랍 세계, 혹은 급진파 이슬람주의 세력과 싸운다고 하는 구도였다. 많은 이슬람교도는 이러한 급진파 이슬람세력(과격파)을 이단이라고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그것을 제물로는 보아 왔다. 일련의 분쟁을 경험하면서 미국은 아랍, 이슬람의 정통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입장 측에 가담했다.

이러한 구도는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후에 이라크가 친 소비에트 독재국가로서, 요르단,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협하게 된 1950년대 이래 일관되었다. 또 미국은 당시에도, 아랍 네셔널리즘에의 공감을 나타내려고, 이집트의 고 나세르 대통령과의 우호관계를 구축하려 했고, 56년의 스에즈 전쟁 때에는, 나세르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던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의 시도를 저지했다.

냉전 기 워싱턴은 아랍제국이 소비에트 측으로 향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일관하여 친 아랍정책을 취했다. 미국은 이집트 쪽으로 기울어, 레바논에서의 시리아의 패권을 받아들여, 테러지원국가에 대해서 마저 징벌 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급진파의 아랍 네셔널리즘에 쳐 박혀 있던 전통적 이슬람세력을 세속적인 공산주의에 대한 방파제로 보고 있던 미국은 중동지역의 전통주의 세력의 정치적인 후원자 역 마저 맞고 나섰다.

그러나 냉전 기 중동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반 아랍 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 되고 말았다. 급진파 정부가 스스로의 정통성을

확립, 강화하기 위해서는, 온건파를 서방측의 괴뢰라고 규정, 반미 선전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네셔널리스트단, 이슬람주의자이단,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혁명 후의 이란과 같은 급진파 아랍정권은 자기들의 것을 내세워, 미국이 지원하는 인근의 온건파 정부를 비민주적이고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아랍세계 내의 대립이나 분쟁은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대처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만들어 냈다. 미국이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우호적 정부에 구호의 손을 내밀면, '자기들에게 나쁜 혁명적 운동을 후방에서 교사하여, 자기들을 봉괴시키려 한다'고 비판되었다. 한편 워싱턴이, 아랍제국에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을 조금이라고 개선하도록 작용하면, 이번에는 '미국이 제국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반발을 샀다. 이집트정부가 유력한 인권활동을 투옥한 것에 대해 백악관이 항의했을 때도, 이집트에 의한 원조증액요청을 거부한 최근의 사태에도, 같은 비판이 들려왔다.

오히려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우호적인 정부가 전복된 경우에도, 권력을 손에 넣은 급진파가 '미국은 중립을 지켰다'고 감사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실제, 7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이슬람 급진파는 온건파 정부를 상대로 싸워, 중동 각지에서 분쟁을 일으켰으나, 이때의 워싱턴은 어딘가 한 편에 가담하는 것을 회피했다. 79년의 이란혁명 때도, 워싱턴은 파래비 국왕체제의 존속을 바라면서도, 그가 왕위를 유지키 위해 강경한 노선을 취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

당시의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혁명 이란이라는 새로운 이슬람정부에의 회유책 마저 사용했다. 미국은 혁명 이란이, 혁명사상을 이슬람세계

아랍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주의 적인 적의는 아랍사회에서의 다종다양한 집단이 반미감정을 선동하는 것이 자기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결과로 생성되고 있다. 실제, 이슬람세계의 각 집단은 자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일반대중들이 주목하지 않도록, 반미주의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 있어, 이러한 중동에서의 반미주의의 기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으나, 모스크바에 가까이 연결되지 않게, 가능한 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려 했다. 최종적으로는 이란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혁명정부를 전복시키려고 본격적으로 시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테헤란과의 관계 회복을 정기적으로 모색했다. 상대지역의 정부와 이슬람 혁명세력간의 분쟁에 직접 관여한 것은, 소비에트점령기의 아프카니스탄에서 뿐으로, 그 경우에도, 워싱턴은 이슬람 혁명세력 측을 지원했다.

미국의 중동정책의 역사를 이렇게 간단히 개괄하는 것만으로도, 아랍세계, 특히 이슬람세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워싱턴이 얼마나 열심이었던가를 알 수 있다. 73년의 중동전쟁말기, 워싱턴은 이스라엘에 정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집트를 구했고, 80년대에는 카이로의 용원자가 되어, 그 많은 군사원조를 제공했다. 82년에도,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 군에 둘러싸여 있던 아라파트에 구원의 손을 내밀어, 그들 받아들일도록 튀니지를

설득하여, 퇴로를 확보했다. 팔레스타인세력은 테러노선, 반미주의를 취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는 냉전 기에는 소비에트와 동맹관계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아라파트와 PLO를 지지했다. 걸프만 전쟁기에 팔레스타인이 이라크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의 미국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교섭의 스폰서 역할을 담당, 동 예루살렘에 수도를 둔 팔레스타인 국가건설을 요구하는 합의를 지지했다.

소비에트 군에서 아프카니스탄의 이슬람 교도들을 지키기 위해, 이라크에서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지키기 위해, 유고슬라비아의(세르비아인 세력으로부터)보스니아와 코소보를 지키기 위해, 미국은 자금과 병력을 투입했다. 인도와 대립한 이슬람계 파키스탄도, 그리스와 대립하는 이슬람계 터키도 지원했다.

다마스쿠스를 따뜻하게 대해, 시리아가 레바논을 관리하에 두는 것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이란 이라크 전쟁 때는 미국은 '페르시아-이란'과 대립하는 '아랍-이라크'를 지지했을 뿐 아니라, 91년의 페르시아만 전쟁 때는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추조했음에도 사담 후세인 추방 책은 취하지 않았다.

미국은 미국계 석유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그 밖의 제국에 의해 국유화되었어도, 73년의 오일쇼크로 원유의 가격이 급등했어도, 온건한 자세를 일관했다. 불유쾌한 행위를 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도, 혹은 힘을 들어 석유가격을 인하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소련이 붕괴했어도, 중동세계를 지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소련과 동맹관계를 체결하고 있던 나라들에 보복하는 일도 없었다. 90년대 이후도 페르시아만 지역을 억압적인 무력으로 지배하려 하지 않았으며, 현지 정권에 정책의 변경도 강요치 않았다. 98년

에는 알 카이다가 아프리카의 두 나라의 미국 대사관을 동시에 폭파하는 테러를 자행,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나, 그래도 워싱턴은 소극적인 보복공격밖에 취하지 않았다. 9월11일의 동시다발 테러이후도, 미국의 지도자들은, 좋지 않은 기분을 억지 해 가면서, "이슬람, 아랍세계는 미국의 적이 아니다"라고 세계, 그리고 미국시민들에게 계속하여 호소해 왔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친 아랍정책은 제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반세기 동안, 이슬람 세계와 비 이슬람세계, 전통적 이슬람세력과 세속적 이슬람 세력, (아랍제국대 비 아랍제국) 사이에서의 12번 커다란 분쟁이 일어났으나, 미국은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면, 그 모두에서 이슬람세계에 가담하고 있다. 친 이스라엘정권 정책만이, 이 같은 친 이슬람 정책의 유일한 예외다. 그러나 이러한 아랍, 중동지원책을 통해서 미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가. 아랍세계의 반미주의 급진파는 이러한 미국의 노선을 왜곡하여 파악하고 있다.

친 아랍정책을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지원책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아랍의 온건파들마저, 미국의 온당한 노선에 감사를 표명하는 일은 없다.

어유뚫은 미국

중동에서는 왜 미국의 정책 진의가 크게 무시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몇 가지 있다. 미국이 이 지역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동지역의 미국 이해의 쪽이 너무 저급한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다. "미국은 이 지역을 지배, 그들에 적대하는 세력을 소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지도자나 활동가들은 늘

이렇게 느끼고 있다. 그 이유는 만약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화나게 한다면, '자기들이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중동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정보가 통제되고 있는 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정보에의 접근이 없고, 늘 반미적인 견해만을 접근할 수 있다면, 대중들이 반미적이 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다. 한편 보다 균형적인 대미인식을 가진 정보에의 접근을 가진 사람은, 압력, 검열, 혹은 '미국의 앞잡이'라고 각인 찍히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늘 입을 다물고 있다.

워싱턴의 실제 노선이 늘 왜곡되어 파악된 점도 그 이유의 하나다. 예컨대 미국은 코소보와 보스니아의 이슬람교도를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이슬람교도가 곤궁한 것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반대로 비판당하고 있다. 소말리아에의 인도적 개입도, 현지세력의 영웅적인 노력으로 저지된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작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이 창을 제공하고 있는 중동세계에 있어서의 위협의 본질이 가볍게 생각되고 있음도 미국의 진의가 무시되고 있는 이유의 하나다. 예컨대 사담 후세인. 그는 두 번에 걸쳐 전쟁을 일으켜, 수십만의 이슬람교도나 아랍인들을 살육, 쿠웨이트를 약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근린제국들을 위협, 자국민을 고문하고 억압, 적이나 국내의 반체제세력에 화학병기를 공공연히 사용했다. 특히, (이스라엘의) 인구 밀집 지대에 미사일을 공격, 해안지역 전체를 지배하에 두려고 핵 병기의 개발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랍세계의 지도자들은 '이라크 문제의 일단은 미국에 있으며, 페르시아만 지역을 지배하려 하고 있는 것은 미국 쪽이다.'고 시민들에게 퍼트리고 있다.

모든 정책을 하나의 문제, 즉 미국의 친 이스라

엘정책으로 요약하려 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미국의 진의가 무시되는 이유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본질이나 정책도, 이러한 구도에서 왜곡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현지의 반미 레토릭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

이스라엘은 중동의 지배를 피하고, 아랍인들을 증오하고, 이슬람을 파괴하려하는 악마의 세력이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지원할 미국은 큰 악마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워싱턴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려는 인근의 아랍제국들의 시도로부터, 이스라엘이 자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또 이스라엘 건국 이후 25년간 미국은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원조에는 부정적이었고, 양국 관계도 애매한 것이었다. 양국의 관계가 강하게 된 것은, 아랍제국이 적대적인 행위를 보여, 소련과 동맹을 체결, 반미테러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적대행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아랍세계 쌍방에 있어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를 구축, 쌍방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동해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존속하는 것도, 중동이 안정되는 것도 바라지 않는 아랍의 급진파들은, 평화적인 타결 안을 늘 거절해왔다.

즉, 중동의 급진파가 반미적인 것은, 아랍 이스라엘분쟁의 공정한 해결에 미국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도대체 해결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급진파는 워싱턴이 평화의 조정에 실패하도록 획책해 왔다. 외교적인 평화 성공의 전망이 높아지자, 테러가 다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이 재촉하여 실현한, 레바논으로부터의 이스라엘의 철수도, 점령의 종말이나 평화의 도래로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측의 취약함의 증거로 파

나라, 오히려 이스라엘 측의 취약함의 증거로 파악, 아랍 측이 공세를 취할 호기라고 여겨지고 있다. 중동평화회의의 전망이 최대한으로 높았던 시점에서 9월11일의 테러공격이 감행된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동 예루살렘에 수도를 가진 팔레스타인국가의 건설을 지지하는 제안을 워싱턴이 하자, 그 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중동의 반미주의가 극으로 치달았다. 이것은 우연은 아니다.

이람사회의 인전판으로서의 반미

아랍세계에서 반미주의가 활성화된 이유는 급진파나 혁명운동의 지도자, 그리고 온건파 정권에 있어, 반미를 선동하는 것이, 국내의 지지를 얻어, 별다른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더없이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실제 반미전략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할 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란혁명을 예외로 하면, 이슬람의 신권정치를 겨냥한 혁명운동은 대중들에게 거절돼, 실패해 왔으나, 그래도 급진파 이슬람주의자들에 있어, 반미주의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편리한 수단이라는 점은 변함없다. 이슬람주의자들은 지금은 반미라는 뿌리를, 혁명보다도 배타주의 감정을 키워내기 위해 이용, 그렇게 함으로써 이슬람 세계내부의 항쟁을, 이슬람을 싫어하여 이슬람 교도들을 파괴하려 하려는 이교도와 이슬람의 싸움, 즉 이슬람 마을과 여타세력과의 전쟁으로서 묘사하려 하고 있다.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반미주의는 억압적인 중동의 정권으로서도 아주 좋은 수단이다. 반미주의를 사용하면, 대중의 관심이 자국의 제도의 결함이나 정책상의 잘못으로 귀책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중은 민주주의, 인권의

존중, 보다 좋은 생활수준의 실현을 회구, 정부의 부패와 기능부전성이 개선돼, 새로운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으로 회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의 지배자들은 그러한 민중들의 기대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사회의 문제점을 미국의 책임으로, 대중들의 분노를 미국으로 향하게 하려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국가의 단결을 요구, '미국이 위협'을 방패로 개혁주의자들의 입을 막을 수도 있으며, 상황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표적을 자기들에 돌려지는 것도 회피할 수 있다.

워싱턴에서의 군사지원과 보호를 오랫동안 받고 있는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도 정책으로서 반미노선을 취해, 국영 미디어에 반미적인 방송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라크도, 다시 아랍세계에의 중개역할을 하고, 제재로부터 도망, 군사능력을 재건하기 위해, 반미주의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인들을 경제제재로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침공한 것들을 민중들은 이미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편 이란은 미군을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철수시켜, 아랍세계에서의 이란의 취약한 입장에 민중이 눈을 돌리지 않도록, 반미주의를 이용하고 있다. 이란은 순니파가 아니라 시아 파 국가로, 민족적으로도 페르시아인으로 아랍계는 아니다. 이란의 강경파에 있어, 국내의 민주적 개혁파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하는데는 그들을 '미국의 앞잡이'라고 부르면 되고, 이 점에서도 반미주의는 편리하다. 시리아의 경우도 실현되지 못한 개혁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민중들의 관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도 반미주의를 선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들에 있어서도 반미주의는, 이스라엘에 의한 타협적인 평화 안을 거절할 때의 연막 역할을 해 줄 것이며, 아랍세계의 지지

를 얻어내는 수단도 된다. 또 워싱턴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들은 다른 아랍세계의 지도자와 같이, 워싱턴에서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

아랍세계에서의 반미주의는 정치가 이외의 사람들에 있어서도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식인이나 저널리스트들에 의해, 국내의 부정부패나 실책을 비판한다고 하는 부담을 안는 것보다도, 정부가 공인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비판의 표적을 내세우는 것이 그럴듯하기 때문이다. 대중들에 대해서도 반미주의는 사용하기 좋다. 그들의 생활의 문제부분의 모든 것을 미국의 책임으로 전가시킴으로서 왜 자기들의 생활이 그토록 빈한 것인가를 분개하면서도 납득케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글투법칙, 서양화의 빈발

지금까지 지적해 온 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폭력, 증오, 반발을 유발하고 있는 아랍세계의 반미의식은, 다른 지역의 반미강정과 비교하면 아주 그 정도가 지나치다. 실제로, 미국의 정책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아랍이나 이슬람세계보다도 확실히 피해를 입고 있는 그 밖의 지역이나 집단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이나 집단들이 중동에서 보여지고 있는 반미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고, 대미 테러에 손을 대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 착취'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랍세계가 미국에게 커다란 불만을 느낄 근거는 없다. 산유국들은 수출에 의해 커다란 이익을 손에 넣고 있으며, 중동 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점점 제한되고 있다. 당연히 미국의 풍부함이 아랍의 빈곤을 전제로 성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구미의 공업 제품이 높은

미국이 자국 및 동맹국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결연한 태세로 임하는 것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지, 온건파 아랍제국과의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그 노선에는 포함되며, 온건파 정부가 공식 장소에서 미국의 지원을 평가하는 발언을 하도록 촉진해야 할 것이리라. 견고하고 융감함만이, 지금까지와 같이, 아랍의 반미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가격으로 팔리고 있음에 대해서, 아랍의 원재료는 낮은 가격으로밖에 거래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도 진실은 아니다.

미국이 현지 정부에 과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비판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중동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CIA가 암약한 53년의 이란에서의 쿠데타 이후, 미국이 중동정부를 전복시키려 시도한 것은 한번도 없다. 유일한 예외가 이라크나, 이에 대한 시도도 지금현재의 상태에서 성공하고 있지 않다.

유럽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들은 중동제국과 비슷한 미국에 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반미감정이 대단히 강하고, 대중들도 그러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중동지역뿐이다. 예컨대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을 민중과 정부가 다같이 지지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중동세계에서만 보이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실이 아랍반미주의의 특질을 부상시켜주고 있다. 반미주의는 정치적 자유나 근대화 등, 미국에서 유래하는 매력 있는 일련의 개념을 제거시키는데도 이용될 수 있으며, 실제, 반미주의가 정치적 수단으로 사

내렸을지도 모른다. 이 의미에서 반미주의는 글로벌화와 서구화에의 반발이기도 하다.

미국은 강혁인가, 이인가

아랍의 반미주의에서 보이는 특질은 중동세계의 분노가 미국에 대한 모순되는 이미지에 의해 유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 대한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적을 강력한 악한으로 묘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도전을 촉진키 위해서는 상대를 약체로 위치 지을 필요가 나타난다.

중동세계의 혁명파나 급진파는 강력한 악한이라는 이미지에 더해, 많은 아랍인, 이슬람교도들이 미국에 겁내,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득이 되는지 아닌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미국이 그 정도로 강대하다면, 왜 미국이나 미국이 보호하고 있는 세력에 도발해야 하는가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반미 레토릭을 효과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 '미국은 지독한 나라이긴 하나, 무력하다'고 대중들을 납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독재자의 억압 때문에, 의사표명의 수단인 정치프로세스도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중동의 사회적 불만은 방향을 잃고 있다.

반미주의는 '미국은 너무 손을 쓴다'고 하는 인식보다도, '악하고, 의지가 없다'고 하는 인식에 의해 유도되고 있다. 사실, 호메이니, 사담 후세인, 오사만 빈 라덴 등은 '미국이 종이 호랑이인 것'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대미공격이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민중의 지지가 아니라, 힘만이,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해 온 것은 이해할만하다. 시리아의 고 아사드 대통령은 과거 '동정이 아니라, 존경을 쟁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편이 되려한다'고 말하는 빈 라

덴도 이 점에서는 동의할 것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반미주의자가 스스로의 신조에 따라 행동해 온 것은, 미국은 후회하지 않는 악한으로 봐서가 아니라, 연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초 국내의 미국 시민들을 표적으로 하는 테러공격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란과 레바논에서는 미국인을 인질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이란의 샤 정권이 붕괴해도, 사담 후세인인 권력의 자리에 존재하는 것도 방치했다. 이렇게 하여, 중동의 친미세력은 약화됐고, 적대세력은 세력을 가졌다. 중동평화 프로세스가 파괴된 것도 방치했다. 이미 중동사람들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거나, 미국의 분노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미국이 베트남전쟁이후, 해외에서 모험주의에 신중하게 된 것을 중동의 전문가들이 알아차리지 않았을 리 없다. 실제, '너무나 우리들 멋대로 행동하게 되면, 미국이 뛰어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많은 이란인들이 걱정하고 있던 70년대 말기, 호메이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이미 우매한 짓을 할 여유는 없다'고 말한바 있다. 98년, 호메이니의 후계자인 하메네이도 '워싱턴의 움직임에는 걱정할 일도, 마음을 쓸 필요도 없다'며 미국과는 교섭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사담 후세인도 아랍 이슬람세계에 향해, '미국은 약하다'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코자 했다. 그는 미국의 화해 시도를, 워싱턴이 자기와 정면에서 대결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는 증거라고 선전했다. 실제, 국내의 쿠르드인 세력에 대한 화학병기의 사용, 이스라엘에 대한 공갈 책, 공공연한 반미주의의 표명, 쿠웨이트에 대한 최후통첩 등, 이라크의 만용에 대하여 강경한 자세를 나타내지 않았던 미국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90년8월에 보다 큰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90년2월24일, 사담 후세인은 아랍 사미트에서 자기들에게는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항복한다. 유럽이 강대화 해서 미국과 대항할 수 있게 되기까지 사정을 지켜본다, 혹은 미국을 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아래 결집한다', '미국인은 군사적 대결노선을 취해, 인적, 물적 비용을 강요당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한 그는, 베트남전쟁과 이란혁명에 의해 '미국은 지친 결과, 좌절감을 가져,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해병대원 수명이 희생된 것으로, 레바논에서 도망친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증거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이라크가 대담한 행동으로 나와도 미국이 대항조치를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사담의 선언은 지금까지의 중동내부에서의 불쾌한 역사의 모든 것을 씻어내고, 위험한 모험주의로 나가기 위한 준비였다. 사담은 바라던 대로 의 반응을 보였다. 아랍세계의 대중은 그의 연설을 칭송, 지도자들도 그의 조종에 따랐다. 미국마저, 일시적으로는 방관하는 태도를 취했다. 물론 쿠웨이트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의 인식은 잘못됐으며, 미국은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전망도 잘못이었다. 그러나 이 오산을 범하고부터 몇 년도 지난 지금도 그가 권력의 좌에 있다는 사실은 그의 미국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는 맞았음을 의미한다.

90년대, 빈 라덴을 포함한 이슬람과격파도 '미국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공격해도, 그들은 손을 쓰지 않을 것이며, 미국을 공격하면 이슬람혁명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프카니스탄의 탈레반이 단기간에 미군에 의해 타도된 것으로, 그후, 수개월간은, 빈 라덴에의 공감도 회복해 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후, 반미주의는 숨을 되물어 쉬며, 다시 원기를 회복하여 지금은 전에 없이 고양되고 있다.

'워싱턴은 이 곤란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에 대답하는 것은 어렵다. 중동에서의 반미주의 노선이 아랍세계에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준 이상, 워싱턴이, "미국을 증오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라고 아랍세계의 적대세력이나 평론가들에게 얼마나 강조해도, 상대를 설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자제를 요구하며 압력을 가해, 이라크에의 경제제재를 해제, 해안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더라도, 아랍세계의 저널리스트와 정치가들이 미국을 훌륭한 친구, 모범을 보여주는 들도 없는 존재로서 칭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대로 이 이상 양보를 거듭하면, 점점 미국을 모욕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고, 반미주의노선의 매력은 더욱 높아져 갈 것이다.

그렇다면, 워싱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새로운 홍보전략을 취하거나, 사죄나 유화노선을 취한다고 해도, 혹은 정책을 변경하거나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서는 반미주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은 반미주의를 만들어 내, 선동할 수 있는 중동의 구조적 시스템이나 메카니즘을 도태시킴으로써 비로소 대중의 입장도 변할 수 있을 것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장, 워싱턴에 가능한 일은, 미국이 자국 및 동맹국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결연한 태세로 임하는 것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지, 온건파 아랍제국과의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그 노선에는 포함되며, 온건파 정부가 공식 장소에서 미국의 지원을 평가하는 발언을 하도록 촉진해야 할 것이리라. 견고하고 용감함만이, 지금까지와 같이, 아랍의 반미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출전 : 『Foreign Affairs』 (2002년9월호)〉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쿠르드 문제

이라크의 쿠르드인들은 후세인 정권으로부터 계속 억압과 탄압을 당해 왔다. 하라부자사건과 같은 엄청난 피해도 있었다. 이유가 어떻든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 후세인 정권을 타도해 주는 것은 쿠르드인들은 환영해야 할 일이다

中川喜興志 / 일본, 쿠르드 연구자

2002년11월8일의 UN안정보장이사회에서의 '대 이라크 신 결의안' 채택에 의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쿠르드 인에 있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일단 이라크 공격 개시가 시작되면, 현지의 쿠르드 세력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라크의 쿠르드인들과 후세인 정권의 관계에 있어 하라부자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야기 할 수 없다. 하라부자 사건이란 1988년3월, 이란 이라크 전쟁(80-88)말기에, 후세인 정권이 북 이라크의 쿠르드인 마을 하라부자에 대해서 화학병기를 사용, 약 5천명의 주민을 일순에 살해한 사건이다. 부상자도 약 1만여 명 나왔고, 생존자의 그후의 사망도 포함하면 2001년9/11테러 희생자의 2배를 넘는다.

사용된 화학병기는 비란성 가스인 이페리트(통칭 마스다도카스), 신경가스인 사린, 다분, VX 등의 혼합 가스. 희생자는 일반시민으로, 거의가 여성, 아이들, 노인들이다. 이 정도의 비전투원을 화

학병기에 의해 살해한 예는 역사를 되돌아봐도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한 후세인 정권 측은 당시 쿠르드 세력이 적국인 이란과 손을 잡고, 이란 군을 이라크 영내에 끌어들여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부자 사건 책임은 이란 측에 있다'는 것이다.

후세인 정권의 화학병기 사용은 이때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라부자 사건의 약 1년 전인 87년4월에 최초로 이라크 북부=쿠르드인 거주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때는 약 200-400명 정도의 희생자를 냈다.

특히 88년 2-9월에 걸쳐, 하라부자를 포함하여 함께 60이상의 마을에 대해서 화학병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때의 이라크 군에 의한 대 쿠르드 군사행동은 '안팔작전'이라고 불려져, 화학병기에 의한 사상자를 포함한 희생자의 총수는 5만-10만 여명에 이르렀다.

겨우 반년사이에 이 정도 수의 쿠르드인이 살해되고 있다. 실은 이라크 대량파괴병기의 최초이자 최대의 피해자는 쿠르드인들이었다. 쿠르드인들에 있어 사담 후세인은 아무리 중요해도 끝이 없는 존재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면 이라크의 쿠르드인들은 이번의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일제히 손을 들어 환영만 하는 것일까.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부시정권은 이라크 대량파괴 병기의 위협을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 하라부자 사건에의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라부자 사건을 일으킨 당시의 후세인 정권을, 정치, 경제적으로, 특히 군사적으로 지지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1979년에 일어난 이란 이슬람혁명의 페르시아 지역에서의 파급을 방지하려는 '이란 봉쇄 정책'의 이름아래, 미국은 80년대 중반부터 보다 공공연히 후세인 정권을 지원, 그 보호자 역할을 맡아왔다. 미국만이 아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각국, 서방세계 전체가 후세인 정권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건 직후, 형식적인 후세인 정권 비난의 소리는 있었으나, 그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인도범죄는 진상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으로 국제정치의 배후로 묻혀 버렸다. 미국이나 영국이 하라부자 사건이라는 후세인 정권의 화학병기사양의 '전과'에 언급하려 하지 않은 것은, 특히 이 점에서다.

'셰이크 에이븐'에서 '쿠르드자치구'로...

이라크에의 군사행동이 개시된다면 분명 그 초점이 될 곳은 북 이라크의 쿠르드인 거주지역이며, 쿠르드인들의 동향이다. 북 이라크에는 현재, 미국 및 영국군에 의한 공중에서의 보호 아래

이란 이라크전쟁(80-88) 말기에, 후세인 정권이 북 이라크의 쿠르드인 마을 하라부자에 대해서 화학병기를 사용, 약 5천명의 주민을 일순에 살해했다. 부상자도 약 1만여 명 나왔고, 생존자의 그후의 사망도 포함하면 2001년9/11테러 희생자의 2배를 넘는다. 이 사건에 대한 후세인 정권 측은 당시 쿠르드 세력이 적국인 이란과 손을 잡고, 이란 군을 이라크 영내에 끌어들이어 공동행동에 나섰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라부자 사건 책임은 이란 측에 있다'는 것이다.

'쿠르드 자치구'가 성립하고 있다.

페르시아만 위기 - 전쟁(90년8월-91년2월)와중에, 미국은 지금과 같이 '후세인 정권의 타도 없이는 문제해결은 없다'고 보고, 이라크 내의 쿠르드세력, 시아파세력에 후세인 정권 타도를 공공연히 호소했다. 전쟁종결 직후, 쿠르드 세력, 및 시아파세력은 이에 응해, 반 후세인 봉기에 나섰다. 그러나 북 이라크에서는 다국적군에 의해 행동이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던 이라크군 정예부대가 전투 헬리콥터 등을 사용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전개, 봉기는 겨우 3주간에 진압되었다. 다국적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살해된 쿠르드인 수는 수 천명, 수 만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하여, 세계의 주목을 모은 '쿠르드 난민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약 150만 명(일설에는 2백만 명)의 많은 쿠르드 난민들이 터키와 이란으로 빠져 나왔다. 이때 터키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터키에는 하라부자 사건을 둘러싼 "안팔 작전"

에서 이라크 군의 화학병기 사용으로 이미 6만 명이 넘는 쿠르드 난민이 유입돼 있었기 때문이다. “인권문제의 챔피언 미국과 유럽은 이 대량 난민을 터키에만 강요하는가”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은 쿠르드 난민의 귀환을 촉진하기 위해 ‘세이프 헤이븐’ (안전한 난민처)를 북 이라크에 설치, 이라크 군으로부터 쿠르드인 보호를 요구했다.

북위36도 이북을 이라크 군용기의 ‘비행금지 지역’으로 하여, 다국적 군용기가 감시 비행을 개시했다. (남부에서는 32도 이남, 후에 33도 이남을 비행금지지역으로 정했다)

92년에는 북 이라크에서 총선거가 실시돼, 자치 정부가 탄생했다. ‘세이프 헤이븐’은 ‘쿠르드자치구’라고 불리게 됐다. 그 후,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이라크의 2대 쿠르드 세력이 대립, 분열한다. (96년). 현재 북 이라크를 ‘이라크 ‘쿠르드스탄민주당’ (KDP)과 ‘쿠르드스탄애국자동맹’ (PUK)이 2분하는 형태로 실질지배, 두 가지의 자치정부가 병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라크의 2대 쿠르드 조직은 ‘미국의 이라크공격’에 어떤 입장을 취해 왔는가, 부시정권이 자신의 군사행동을 후세인 정권 타도의 선택지로서 공언하기 시작한 작년2월경부터(후세인 정권의 타도 그것은 페르시아만 전쟁 후도 일관된 미국의 주장이다), 북 이라크의 쿠르드 세력은 미국에 메시지 보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사담 후세인에 대신할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는가”, “후세인체제보다 좋은 신체제가 보증되지 않은 한, 협력하지 않는다” 군사행동에의 협력과 합류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쿠르드 세력은 ‘사담 이후’의 확실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입장은 11월말 현재에도, 양 조직의 공식적인 견해로서 변함이 없다. 구두 약속이 아니라, 공식문서로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제 구상의 반발

이라크 2대쿠르드 조직으로 알려져, ‘쿠르드 자치구’를 10년간에 걸쳐 운영해온 이라크 KDP와 PUK. KDP의장은 메즈드 발자니. 6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중반에 걸쳐 이라크 중앙정권에 대한 자치권 획득운동을 이끌어 온 무스타파 발자니의 아들이다. PUK의장은 젤랄 다라바니. 75년에 무스타파 발자니와 결별한 PUK를 결성,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양 세력은 모두가 세속세력이다.

현재, KDP, PUK가 거느리고 있는 병력은 각각 4만, 3만 명 정도로 보여진다. 이 쿠르드 병사들은 ‘페시멜케’라고 불리며, 소위 ‘이라크 반 체제파 세력’ 가운데 많은 수를 자랑하고 있다. 페시멜케들은 현재, 각 자치정부의 ‘군대’ ‘경찰’에 편입되어 있다. 단지 어느 쪽이나 경화기만의 무기로, 중화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2002년4월 하순, KDP는 ‘이라크 신 헌법초안’을 발표했다. ‘사담 이후’의 신 국가체제를 규정한 신 헌법 초안이다. 이것에 PUK도 전면적인 찬의를 나타냈다.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상정하여, 워싱턴에서 개최를 예정하고 있던 ‘이라크 반체제파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이 초안은 7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로운 국가체제는 ‘의회제민주주의에 근거 비종교적인 연방국가’, 국가명칭은 ‘이라크연방공화국’으로 하고 있다. 이라크연방공화국은 쿠르디스탄 주와 아랍 주로 구성, 쿠르디스탄 주에는 현재의 ‘쿠르드자치구’의 스페이마니에, 알빌, 도후에, 킬쿠쿠 이외의 8개를 더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수도는 킬쿠쿠.

이러한 구상에 대해 터키정부, 군부가 즉각적으로 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쿠르드독립국가로 연결되는 연방제는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경주변에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개시, 북 이라크=쿠르드자치구로 통하는 국경의 마을 할불에서 왕래를 엄격하게 제한, 실질적으로 국경을 봉쇄했다. 한편 이라크 군도, 쿠르드자치구를 둘러싸고, 그 경계선을 따라 지상부대, 전차, 대공포를 보강배치, 역시 위협했다. 이란도 역시 군을 국경을 따라 전개, 역시 이 연방제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북 이라크 내의 투루쿠멘인의 자치조직 '투루쿠멘 민족전선'(TNF)도 터키에 호응하여, 격렬하게 반발했다. 킬쿠쿠는 당초 투루쿠멘인들의 지역이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킬쿠쿠를 둘러싼 역사논쟁까지 야기됐다. 투루쿠멘인은 이라크의 유전지대로 알려진 킬쿠쿠, 모솔 등에 사는 이라크 내의 터키계 소수민족으로, 인구는 60-100만명. 투루쿠멘 민족전선은 배타주의적인 터키민족주의 조직으로서, 또 터키정부, 군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터키 측도 그들을 '민족적 동포'라고 부른다.

이라크 KDP와 터키와의 대립

부시정권은 작년 6월, 8월 두 차례, 양 쿠르드 조직을 포함한 이라크 반체제 세력을 워싱턴에 불러모아, '사담 후세인 이후'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이라크 공격에의 협력을 강요했다. 여기서 KDP가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연방제이며, 독립국가는 아니다'며, 신헌법초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때부터 터키정부와 KDP 간의 격렬한 옹수가 이뤄지게 됐다.

터키국방장관이 '북 이라크는 강제적으로 터키로부터 분리된 지역' '북 이라크는 우리들의 보호아래 있다'고 발언. 동 지역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오스만제국의 붕괴의 과정에 빼앗긴 것으로, 당초 터키영토였다는 것이다.

특히 군사 관계자도 '킬쿠쿠, 모솔은 절대로 쿠르드인들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발언한다. 이것에 대해서 KDP는 '그들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편승, 알파한 목적을 달성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쿠르티스탄은 그들의 묘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있다.

KDP는 80년대 말부터 90년대를 통하여, 터키정부, 군과 아주 밀접한 협력관계를 가져왔다. 터키군의 PKK의 소탕작전에는 스스로 협력해 왔다. PKK라는 것은 터키 남동부를 기반으로 하는 쿠르드 조직 '쿠르티스탄 노동자당', 현재는 조직명을 변경하여 '쿠르티스탄 자유민주회의'(KADEK)로 알려지고 있다. 북 이라크에도 게릴라 기지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터키군은 빈번히 월경군사작전을 반복해 왔다. 95년에는, '쿠르드 자치구'에 3만5천명의 병력을 월경시켜, 6주간의 군사작전을 전개, 이때도 KDP는 터키군과 행동을 같이하고 있다.

그것이 8월, 급격하게 대립으로 전환됐다. 10월에는 터키의 에제비트 수상(당시)이 '쿠르드국가 저지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취한다'고 북 이라크에의 군사개입의 자세를 분명히 했다.

그 후, KDP 및 PUK는 "독립이 아니라, 연방제다" "어디까지나 초안이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수정을"라는 성명을 거듭, 지도자들은 앙카라까지 와서, 터키와의 관계수복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연방제는, 92년에 쿠르드 자치정부가 미국지원아래 성립한 이래, 일관하여 주장되어온 구상이다. 미국은 최대의 동맹자 터키를 배려, 또 그 폭주를 억제하기 위해, 애매한 태도를 10년을 지내온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다시, 이 연방제구상에 관한 구체적인 발언을 피하면서 쿠르드 세력을 후세인 정권타도 작전에 현지 병력으로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쿠르드 측의 '입으로의 약

속이 아니라, 공식문서로의 보증'이라는 요구는 연방제 구상에의 코사인과 함께 주변제국, 특히 터키의 개입저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쿠르드 국가 저지에 중력

이렇게 보면, '쿠르드 문제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라고 하는 테마에서의 또 하나의 요소, 잊어버리기 쉬우나,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나타난다. 중동세계에서의 유일의 NATO가맹국이며, 중동 유일의 군사대국인 터키의 동향이다.

쿠르드인 총 인구는 약 2천5백만-3천만명으로 추정되며. 중동에서는 아랍인, 터키인, 페르시아인에 이은 네 번째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민족 집단이다. 이라크(북부)의 쿠르드 인구가 약 420만 명인 것에 비해, 터키(남동부)의 쿠르드 인구는 약1200-1500만 명. 이란(북서부)에는 약 570만 명, 시리아에는 약 100만 명. 아르메니아나 아젤바이잔에도 각 각 수십 만 명 단위의 쿠르드인이 생활하고 있다.

터키는 쿠르드 인구의 약 반수를 포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동에서 가장 서구화가 진전, EU가맹 문제에 정권의 운명 마저 걸린 터키는, 실은 가장 강경한 반 쿠르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다. 이것은 이의라고 인식되지 않는다. 공화국 수립(1923년) 이래, 일관하여, 쿠르드 민족의 존재 그것을 부정할 궁극의 동화정책을 취해왔다.

8월, 터키는 EU가맹을 겨냥, 'EU적합화 법안'이라고 칭해지는 민주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그들의 반 쿠르드 정책을 조금이나마 완화했다. 그러나 국가의 공식적 견해로서는 여전히 쿠르드 민족의 존재는 인지하지 않는다 (동 법에는 '쿠르드인', '쿠르드 어', '쿠티스탄'의 단어는

일체 없다) 쿠르드 민족의 존재부정은 터키공화국의 숨은 국시라고 해도 좋을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나, 인접국가에도, 쿠르드 독립국가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10월의 에제비트 수상의 "쿠르드 국가 저지에 모든 수단을 취할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위협의 말만은 아니다.

터키 군에 의한 북 이라크 개입. 얼른 보면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질지 모르나, 미국의 대 이라크 군사행동에서, 쿠르드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 있는 사태라고 볼 필요가 있다.

터키 중선, 이슬람 당 입승

터키에서 2002년11월3일 총선거가 실시됐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주목되었다. 결과는 사전의 여론조사에 근거한 예측에 아주 가깝게 나타났으나, 적잖은 충격을 국제사회에 던졌다.

그때까지의 연립정권의 여당 '민주좌파당'(DSP), '민족주의자 행동당'(MHP), '조국당'(ANAP) 어느 쪽도 대패, 3당 모두가 의석이 제로가 되고 말았다. 대신에, 이슬람주의 정당, '공정 발전당'(AKP)이 득표율 34.41%로 제1당으로 성장, 전 의석의 2/3를 획득. 중도좌파라고 여겨지던 '공화 인민당'(CHP)이 득표율 19.49%로 제2당이 되고, 나머지 의석을 점했다. 그리하여 터키국민의회는 이 양당만으로 구성되게 되게 됐다. 쿠르드당의 정당연합 '민주인민당'(DENHAP)은 득표율 6.21%로 제5위. 정권여당의 DSP(1.22%), ANAP(5.14%)를 상회, 의석을 획득할 수 없었다.

이 정권 교체극에는 조그마한 제도적 트릭이 개재하고 있다. 터키의 의회선거는 현을 단위로 하는 비례대표제이나, 정치정당법에는 전국에서

득표율이 10%를 획득하지 못한 정당에는 의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1980년의 군사 쿠데타 후, 소당 분립, 난립을 방지, 정치적인 안정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된 규정이나, 여기에는 쿠르드 거주지에서의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소리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상하게도, 이 규정이 중앙정계의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어쨌든, 터키 혁명 이래, 세속주의를 또 하나의 국시로 내걸어온 현대 터키에 있어, 처음 이슬람주의 정당에 의한 단독정권이 생겨난 것이다. 터키의 협력이 불가결한 이라크 공격. 그 터키에 이슬람정권이 생겨나게 되면 어떤 미디어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으나, 과연 그럴까.

터키 혁명과 모슬림 문제

‘공정발전당’(AKP)은 분명 과거 이슬람주의 정당 ‘복지당’(RP)의 흐름을 이은 정당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건 정책은 지금까지의 연립정권과 거의 변한 것이 없다. 복지당이 과거 반대한 EU 가맹 마저, AKP는 ‘가장 급한 일은 EU가입’이라고 말할 정도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에제비토 정권도 역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은 없다. 터키의 이슬람주의 정당은 역사적으로 터키민족주의의 범주 안에 있다. 쿠르드 문제에서 말하면, 오히려 민족의식의 각성, 민족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데올로기장치로써 이용되어왔던 것이다.

적어도, 터키공화국은 술탄 카리브제의 폐지(1923년 및 24년)이래, 약 80년간에 걸쳐, 정치제도로서 의회제민주주의를 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정치권력은 군부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 터키 국군은 터키 건국의 아버

하라부자 사건에서 5천명의 일반시민이 학살되었으나, 걸프전쟁 직후 반 후세인 봉기에서는 인구 420만 명 가운데 150만 명이 고향에서 추방당해, 난민이 된 경험을 가진 이라크의 쿠르드인들. 터키, 이란, 시리아의 쿠르드인들도 역시 격렬한 민족박해 아래 놓여있다. 그 쿠르드 민족이 ‘자치’, ‘독립’의 한마디를 요구하면, 격렬한 반발에 부딪힌다. ‘지역적 혼란,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지, 무스타파 케말의 가장 순수하고 정통적인 후계자를 자임하고 있으며, 과거 3차례에 걸쳐 군사 쿠데타(60년, 71년, 80년)를 단행해 왔다. 지금도 ‘국가치안평의회’의 이름으로 내외 기본정책을 책정, 또 최종적인 결계를 내리고 있다. 특히 국내치안, 방위, 근린외교는 ‘국가치안평의회’의 전결사항과 같다. 그리고 이 군부가, 쿠르드 문제에서는 타협을 허용치 않은 강경파로 늘 존재해 왔다. 터키에서의 이슬람 정권의 탄생 그 자체가 이라크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터키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북 이라크는 당초 터키의 영토”라는 소리가 불유쾌하다.

현재의 터키 영토는 기본적으로는 1923년의 로잔조약에 의해 확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쿠르드인 거주지역=쿠르티스탄이 여러 개의 국경선으로, 복수의 국가에 의해 분단되었다. 그러나 이때도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나, 이미 유전지대로서 주목을 받고 있던 것이 모슬 지역의 귀속문제였다. 조약 조인 이후도 터키 측은 모슬 지역

에 대한 요구를 계속했으나, 최종적으로 26년, 당시 영국 지배였던 이라크에 양보할 것을 강요당했다는 역사적인 내력이 있다.

위기에 빠진 이라크 쿠르드자치구

이라크의 쿠르드 세력은 2002년4월 현재, '이라크 신 헌법초안'을 기초하고, 미국이 소집하는 '이라크 반체제회의'에는 모두 참석하는 등, 일찍부터 반 후세인 정권 혹은 후세인 정권 타도지의 기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간단히 미국의 군사행동에 합류할 자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 이 2002년10월초에는, 쿠르드 자치정부 분열로부터 6년째에 '쿠르드 민족의회'가 개최돼, KDP, PUK는 화해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 자체는 미국으로부터의 요청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으나, 자치권의 강화를 도모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언급치 않았으나, 양 쿠르드 조직의 대립 배경, 자치정부 분열의 경위 등을 생각하면, 자치구를 전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 등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어렵다.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KDP, PUK는 당초 이라크에서의 '북부동맹'일 수 없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한편에서의 아프칸 스타일의 공폭, 또 한편에서의 북 이라크에서의 터키 지상부대의 전면전개로 전개된 것은 아닌가. 터키 군이 바그다드에 진주하는 것으로 미군의 지상전을 지탱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KDP의 발자니 의장, PUK의 다라바니 의장은 90년대, 터키의 쿠르드 조직 PKK를 적으로 하는 것으로, 터키정부, 군부와의 긴밀한 관계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터키가 '사담 후'의 북 이라크의 보호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들도 터키 군이 쿠르드 민족에 의해

가장 위험한 세력인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르시아만 전쟁 후에 성립한, 입장이 확실치 않은 '쿠르드 자치구'. 그래도 10년이라는 시기는 분열적이기는 했어도 자치의 기성 사실화와 자치권의 강화를 진전시켜 왔다. 그것이 제로로 돌아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터키, 이란, 시리아의 반발을 각오하고, 미국으로 향한 '독립 국가 아닌, 연방제'로서 주변국 불개입의 보증을 강요하는 것도, 소위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라크 쿠르드 세력의 어려운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쿠르드 조직의 지도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대국이나 주변국의 이해에 우롱 당하고 있는 모습, 우매함을 지적하기는 쉽다. 그러나 예컨대, 하라부자 사건에서 5천명의 일반시민이 학살되었으나, 페르시아만 전쟁 직후 반 후세인 봉기에서는 인구 420만 명 가운데 150만 명이 고향을 추방당해, 난민이 된 경험을 가진 이라크의 쿠르드인들. 터키, 이란, 시리아의 쿠르드 인들도 역시 격렬한 민족박해 아래 놓여있다. 그 쿠르드 민족이 '자치', '독립'의 한마디를 요구하면, 격렬한 반발에 부딪친다. '지역적 혼란,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입에 의해 혼란, 정치적 불안정을 만들어 내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이들을 박해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들 눈앞에서 시작하려는 부시정권과 후세인 정권의 전쟁. 불량배들끼리의 전쟁인 것은 분명하다. 반전, 비 전파 사람들로부터 '희생이 되는 것은 이라크 국민'이라는 소리가 들리나, 부시정권, 후세인 정권, 특히는 주변국의 제정권 사이에서도 이 전쟁으로 전화에 휩싸이게 될 것이 분명한 쿠르드 민중들을 걱정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출전 : 『世界』 2003/1월호〉

쿠르드 - 역사의 교차로에서

“만약 쿠르드 민족이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통일된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면..., 그들의 정신문화의 발전 정도는 아주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쿠르드 민족의 잘못은 없다... 서양과 동양의 국가들이 쿠르드의 영토를 나누었던 데에 죄가 있다.”

압사다르브 에르 베(Absattrov R. B.) / 알마티국립대학교 교수, 철학박사
미르조예브 카. 이(Mirzoev K. I.) / 알마티국립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번역 · 김 병 학 / 알마티국립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쿠르드 민족은 세계에서 매우 오래 전에 형성된 민족들 중 하나다. 풍부한 민족전문문화를 가지고 있고 민족적 자주성을 세계에 뚜렷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몇몇 중·근동국가에서 정치적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열강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민족적 자주성을 요구하는 것을 지금까지 사실상 봉쇄 당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가 다른 민족에게는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것인데도 유독 쿠르드 민족에게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인생이 흔히 그렇듯이 객관적 현실은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 쿠르드 민족문제를 방치하거나 미봉책으로 덮어두는 것은 쿠르디스탄¹⁾과 쿠르드 디아스포라(diaspora)가 존재하고 있는 국가에 새로운 사회운동의 조류를 제공하고 쿠르드의 정치적 역사와 사회문화·종교·민족·언어 등의 운동과정을 촉진시킨다.

현재 쿠르드 민족은 4천만 쿠르드인의 민족자

결권을 굳건히 획득해가고 있다. 쿠르드족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기본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쿠르드 역사상 두드러진, 본질적 사실들의 몸통’이라고 명명되는 쿠르디스탄 민족해방 운동의 기본적 윤곽을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아쉽게도, 역사적 자료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계속하여 부딪히는 문제는 쿠르드의 역사를 조명하는 전통의 부재와 참고자료 및 문헌적 기반의 부족이다. 역사가와 동양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오늘날 쿠르드 역사에 관련된 다양한 핵심문제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1) 자료 출처의 부족 2) 다양한 변종의 민족학적, 언어학적 자료와 그 두 자료에 대한 학문적 신뢰성의 부족 3) 자료 저자의 정치적 소신과 견해가 저작의 객관성에 미치는 영향의 다발성 4) 터키 정권당국의 쿠르

1) ‘쿠르드인의 땅’ 또는 ‘쿠르드인의 나라’라는 뜻으로서 쿠르드 민족이 옛날부터 거주해 왔고 지금도 거주하고 있으며 과거에 국가도 세웠던 토착지역을 의미하는 명칭이다. 현재 국가가 없는 쿠르드인에게 민족적, 문화적, 정치적, 지리적 통일성을 심어주는 가상적 국가 개념으로도 쓰인다.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의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다. : 역자 주

드 역사에 대한 왜곡 등이다.

쿠르디스탄의 중요한 지리적, 전략적 상황은 여러 세기에 걸쳐 쿠르드인을 자국에 복종시키려 했던 이웃 나라들의 주의를 오래 전부터 끌어왔었다. 쿠르디스탄은 '미디' 국가(6세기)의 멸망 이후 끝없는 전쟁의 각축장이 되어왔다. 7세기에서 9세기까지 쿠르디스탄은 아랍 칼리프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 후 쿠르디스탄의 영토로 유목민인 터키족과 몽골 족이 침입해 들어왔다. 자주적인 쿠르드의 샤흐레주르 공국과 메르바니드 공국은 몽골과 셀주크 투르크의 침략에 파괴되고 말았다.

쿠르드는 위대한 살라흐-아드-딘(살라딘) 치세에 세력을 뻗쳐 에르빌레에서 십자군과 성공적인 전투를 벌였다. 12세기에 쿠르드는 통일을 이루어 아이유비트 국가를 건국했다. 비록 쿠르드 민족의 기원과 쿠르드인이 쿠르디스탄 지역에 민족적 분포를 이룬 건 그 연원이 오래 되었지만 '쿠르드 국가'의 형성시기는 12세기로 잡는다. 첫 국가는 바하르를 주요 거점 도시로 한 근동(이란지역 내)지역의 한 주였다. 이 주의 건설자는 셀주크에서 온 산자르였다.

쿠르디스탄은 독립적인 몇 개의 쿠르드 공국으로 구성되었다. 대개 종족의 지도자가 이와 같은 각 공국의 수장이 되었다. 셰다디드, 메르바니드, 아이유비드 등과 같이 세력이 강한 쿠르드 왕조에서 대부분 봉건국가의 왕자가 나왔다. 그들은 디야르바쿠르, 마르딘, 샤흐레주르와 같은 공국의 봉건영주뿐만 아니라 외카프카즈²⁾ 지역의 영주까지 되었으며 역시 별도의 국가를 다스리기도 했다. 사료는 쿠르드 샤흐다디드 왕조가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카프카즈 지역을 통치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쿠르드의 통치영역은 통치자의 소재지

인 간즈와 드빈을 포함한 쿠르에서 아라스까지 달했다. 쿠르드의 살라흐-아드-딘 종족(아이유비드 왕조)의 이름난 통치자들은 오랜 기간동안 이집트를 다스렸다.

이미 언급했듯이 찰다른 전투 이후 자하브 조약이 체결되었는데(1514년, 1639년) 이로 인해 쿠르드 민족이 거주하는데 지리상으로 문제가 없었던 쿠르디스탄의 영토가 침해를 받았고 침해는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현대 터키와 이란과 이라크와 시리아 사이에 그어진 국경선은 쿠르드 민족의 사회경제, 문화의 발전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였다. 이와 같이 쿠르디스탄의 존재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쿠르디스탄의 지리적, 민족적 경계는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 쿠르디스탄의 주민은 여러 씨족과 종족과 종족연맹으로 구성되어 있다.

쿠르드 민족의 문제를 완전하게 상정하기 위해서는 한 때 통일국가를 이루었던 쿠르디스탄이 위치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의 몇 가지 핵심적인 정치적 문제를 자세히 언급해야 한다. 이 나라들이란 이라크, 터키, 이란, 시리아를 말하며 이 나라들에서 말하는 쿠르드 문제란 언제나, 쿠르드인이 단결하여 민족자결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내부적 문제를 말한다. 정치활동의 독점, 독재적 통치방법의 보급, 쿠르드 민족문제에의 강제적 해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부... 바로 이것이 위 나라들의 두드러진 주요한 정치적 특성이다.

남쿠르디스탄의 투쟁은 무스타파 바르잔을 지도자로 한 쿠르디스탄 민주당(이라크)의 주도 아래 전개되었다. 민주당은 통일된 이라크의 테두리 안에서 남쿠르디스탄 자치주의 지위를 위임받는 성과를 이룩했다. 역사가들이 지적하듯이 활

2) 카프카즈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한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카프카즈산맥을 경계로 하여 산맥의 남서쪽을 외카프카즈라고 부른다. 외카프카즈에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이 자리하고 있다. 산맥의 동북지역은 러시아의 영토다. : 역자 주)

동규모에 있어서 무스타파 바르잔(1961-1975)의 부흥운동은 가장 두드러진 60-70년대 부흥운동 중에서 가장 지속적이었고 연속적이었다.

1974-1975년의 사건이 있은 후 바크당(이라크의 우익 정당)은 쿠르드의 무장부흥운동을 제압하고 국가의 완전한 주인으로 들어서면서 쿠르드 부흥운동의 모든 흐름에 하나의 예외도 없이 복수를 가하기 시작했다. 쿠르디스탄에 이라크가 가한 테러는 근본적으로 전반적인 성격을 띠었다. 바크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쿠르드가 등장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면서 이라크 쿠르디스탄의 민족 구성원을 바꾸는 조치를 취했다. 그것은 쿠르드 민족을 정착지에서 국경부근으로 몰아내고 대신 그 자리에 아랍인을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은 쿠르드 민족에게 새로운 재앙을 가져다줬다. 그 전쟁은 쿠르드 민족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장기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들 국가는 무기를 사용하여 《자국내 쿠르드》를 징벌했는데 심지어는 화학무기까지 사용하였다.

1991년 페르시아만 전쟁 중에 쿠르드는, 미국과 서유럽연합이 이라크 중앙정부를 반대하고 연방 국가의 원리에 바탕을 둔 이라크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쿠르드 국가건설을 선언했던 것에 교사되었으나 그것은 기만으로 판명되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쿠르드인이 집을 잃고 거지가 되었다. 이것은 남쿠르디스탄에서 쿠르드 지도를 찢어버리고 쿠르드 민족을 대대적으로 말살시키는 정치였다. 이 정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터키에서 민족관계의 긴장이 첨예화되었음이 관찰되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쿠르드 민족문제의 불확정성을 초래했다. 터키는 공화국을 건설한 이후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라도 쿠르드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단 한 건의 주목할 만한 입법기관의 법규도 수용하지 않았다. 헌법

쿠르드는 위대한 살라흐-아드-딘(살라딘) 치세에 세력을 뻗쳐 에르빌레에서 십자군과 성공적인 전투를 벌였다. 12세기에 쿠르드는 통일을 이루어 아이유비트 국가를 건국했다. 비록 쿠르드 민족의 기원과 쿠르드인이 쿠르디스탄 지역에 민족적 분포를 이룬 건 그 연원이 오래되었지만 ‘쿠르드 국가’의 형성시기는 12세기로 잡는다. 첫 국가는 바하르를 주요 거점 도시로 한 근동(이란지역 내)지역의 한 주였다. 이 주의 건설자는 셀주크에서 온 산자르였다.

에 따르면 터키에는 오직 터키인만 살게 되어 있다. 비록 터키에 1천 5백만에 달하는 30여 민족이 있지만, 터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민족이건 관계없이 헌법에는 동일한 터키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터키 헌법 제 42조에는 “터키어 이외의 어느 언어도 교육기관에서 모국어로서 연구되거나 가르쳐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쿠르드어는 터키 경내의 사회정치, 문화활동의 전 영역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쿠르드민족의 민족해방투쟁은 70년대 말에 압둘라 오잘란의 지도하에 새로운 조직 즉, 쿠르디스탄 노동당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정치적 활동무대에 쿠르디스탄 노동당의 등장은 쿠르디스탄의 해방을 기반으로 하는 쿠르드인의 민족적 자각의식을 급속도로 신장시켰다.

이란의 쿠르디스탄을 언급하자면, 거기서도 쿠르드 문제는 민족자결에 도달하고자 하는 쿠르드인의 지향에 관련되어 있어서 항상 중요한 문

제점이었다. 이란에서 쿠르드 문제의 특징은 이 문제가 정치적 성향에 따른 민족 내부 반정부행동의 다양한 힘 뿐만 아니라 민족 간의 힘까지도 끌어들이는 근동지역 국가들 간 모순의 부분적이고 복잡한 분기점으로 나타난다는데 있다. 이란 쿠르드인의 종교적 다중계획성은 쿠르드와 이란 우익 정부의 관계에 뚜렷한 긴장을 야기했다. 테헤란은 쿠르드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내의 민족적 다양성을 공식적으로 스스로 부정하는 완고함을 고수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비록 쿠르드인들이 그들의 머리를 단지 아랍인으로 바꾸는 걸로 양보하였을 뿐이지만 시리아의 공식문헌에는 쿠르드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쿠르드 문제는 시리아 우익사회가 쿠르드 민족의 권리를 승인하는 것과 쿠르드의 민족적·정치적 자각의 올바른 신장을 오래도록 부정하는데서 첨예화된다. 모든 쿠르드 당들은 쿠르드인의 민족적 권리의 실현을 요구하면서 시리아의 영토적 통일성의 보존과, 아랍 민족과 쿠르드 민족들 간에 '형제적 관계'의 발전이 불가피함을 바라고 있다. 터키, 이라크, 이란에서의 쿠르드 운동과 달리 시리아에서는 이 운동이 평화적으로, 비무장적 방법으로 전개·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쿠르드인이 살고 있는 나라들이 쿠르드인의 민족적 각성이 증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 문제는 항상 불안 야기했고 앙카라와 테헤란과 바그다드를 단합시켰다. 그들은 인종지리학적인 쿠르디스탄의 각기 다른 지역의 정세를 끊임없이 주시하면서 쿠르드 민족운동에 반하는 활동에 자기 정부의 힘을 집중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약속의 테두리 안에서 쿠르드 문제를 놓고 이란과 이라크와 터키는 외무장관 수준의 조직적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은 1992년 11월, 1993년 여름과 겨울

그리고 1994년에 열렸다. 그 외에도 쿠르드인이 사는 국가간에 쿠르드 문제에 따른 국가 간 정치적 조절에 관한 상무 협정이 조인됐다.

쿠르드인의 입장에서는 교섭과정으로의 복귀, 쿠르드 자치지역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 전사들에게 개인적인 안전 보장, 충실한 법률의 수용, 그 법률의 지체 없는 준수로서 적대감을 극복하고 쿠르드 문제를 정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여겨왔고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평화는 전쟁으로 인한 대립이 아닌 방식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평화는 오직 모든 이해당사국들의 굳건하고 건설적인 작업으로서만 이룩할 수 있다.

19세기 초 쿠르드권의 민족적, 문화적 독립을 위한 부단한 해방투쟁의 과정 중에 쿠르드인들은 러시아로의 이주, 특히 외카프카즈로의 이주를 강요받았고 이주 후 그들은 러시아국적을 취득했다.

19세기초에서 19세기말까지 러시아 경내 쿠르드 주민들은 특히 외카프카즈 지역에 집중하여 살았다. 외카프카즈에 쿠르드인이 출현하고 기반을 쌓은 역사는 쿠르드학에서 매우 절박하고도 현실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서 현대 쿠르드 학문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쿠르드인이 이 지역에서 충분히 오랜 기간을 살았음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모든 고문서, 현장 자료, 문헌자료들은 더 이른 시기에 쿠르드인들이 외카프카즈 지역으로 이주해와 쿠르드인 집단을 형성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11세기에 쿠르드의 유명한 세다디드 왕조가 예전의 엘리자벳 평원(현재의 아제르바이잔 영토)에서 안 평원(현재의 터키 영토)에까지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다스렸다는 동방학-쿠르드학의 거장 베미노르스키의 연구는 유명하다. 이 왕조 이외에도 위 영토에는 수많은 쿠르드 씨족 연합들이 존재했었다. 쿠르

드가 8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외카프카즈에 분포되어 살았다는 정보자료가 있다.

특별히 많은 숫자의 쿠르드인이 나타난 것은 1801년 외카프카즈에서 그루지야와, 상당한 수의 인구로 구성된 쿠르드 씨족 통일체인 몇 개의 '한국(汗國)'이 러시아의 합병에 연관되었을 때였다. 간진, 카라바흐, 세킨 《한국》을 고려해 놓고 함께 합병하여 《러시아는 자기의 민족 중에 쿠르드 민족도 소유하게 되었다》 쿠르드인의 외카프카즈 이주는 1804년-1813년과 1826년-1828년 굴리스탄 조약 및 투르크만차이 조약이 체결되면서 러시아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끝난 후에 특히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쿠르드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로의 이주원인은 각기 다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인은 근동국가의 민족말살행위로부터 탈출을 지향하고, 과중한 사회경제적 예측으로부터 구원을 지향하고, 생계를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토지와 목장을 찾고, 신앙에 따라 동향인들과 재결합하려는 지향성에 있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현대 학계에서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쿠르드인의 빈번한 이주를 그들의 유목습관 및 이에 상응하는 심리적 귀결로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으로 드러난다.

러시아의 쿠르드인들은 소비에트 정권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태고 적부터 살아온 고향에 남아 있는 수백만의 동족과 달리 소련 영토에서 모든 공민적 권리를 향유하였다. 유감스럽게도 1937년, 1944년에 있었던 스탈린의 혹독한 박해는 쿠르드 민족을 비껴가지 않았다. 사회·정치적, 역사적, 고문서학적, 다른 문서적 자료에 입각한 역사주의의 원칙적이고도 다양한 관점의 분석에 기초하더라도 쿠르드 민족을 포함한 소수민족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학살한 것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쿠르드인들은 20세

1995년에 이른 및 응용 정치학과에서 카자흐스탄 쿠르드 지식인연합, 쿠르드 협회와 함께 행한 설문조사는 쿠르드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적응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공화국 내 다른 많은 거주자들처럼 자기만의 문제와 고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와 살아남았던 때와 비교해보면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쿠르드인들에게 카자흐스탄은 제 2의 조국이 되었다.

기의 30-50년대에 소비에트정권의 가혹한 정치의 인질이 되었다. 쿠르드인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자기들의 민족 소속이 쿠르드라는 공동책임의 원칙에 따라 나이, 직위, 상황, 그리고 건강상태까지도 고려되지 않고 강제이주를 당하였다.

이렇게 하여 쿠르드인은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땅에 나타났다. 1937년 강제이주 이후 아이들이 많았던 대부분의 이주민 가정은 생존수단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노동능력을 소유한 사람조차 없었다. 봄이 오자 그들은 미래에 아무런 희망도 걸 수 없는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카자흐스탄의 봄철의 어려운 상황은 카자흐인에게도 마찬가지로여서 그들도 물질의 궁핍에 시달렸다. 그러나 친절한 민족 카자흐인의 도움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예로부터 손님에게 친절한 카자흐인들은 1937년 가을 외카프카즈에서 강제이주 당해온 2천 여명의 쿠르드인뿐만 아니라 수십만의 각기 다른 민족구성의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장소를 제공했던 것이다.

아홉 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아버지였던 쿠르드

노인 마흐무드 압둘라 하시크 옹은 이렇게 말한다. “1937년 가을 강제이주 열차 화물차량에 실려 바카나스 마을에 도착했던 때를 마치 오늘 일어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요 카자흐 가족들은 우리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우리를 위해 몇 개의 천막집을 비워주고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영혼이 대단히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아홉이나 되는 나의 자식들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다 죽게 된 우리를 구해준 대단히 선량한 카자흐인들과 친하게 지내라.’”

1944년에는 그루지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3천여 명이 강제이주 되어 왔다. 그 해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매우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카자흐인들은 쿠르드인을 포함한 수십만의 강제이주자들을 받아들이고 거처를 제공해 주었다.

현재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어려운 사회경제적 과정을 겪고 있다. 이 과정의 대부분은 신생독립 국가의 주권의 형성과 발전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공화국 내 민족인구학적 상황의 재 구성화 과정이다. 쿠르드인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온 민족들 중에서 인구수가 증가한 민족들 중 하나다. 1989년에서 1993년까지 카자흐스탄 쿠르드인은 29%가 증가했다.

반드시 특기해야 할 것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정치적 방침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소수민족들의 문제점에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2030>국가발전 장기계획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카자흐스탄인들이 사람들간 상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한 걸음씩 나아가며 우리의 민족적 단결을 깊게 하고 민족적 역량을 증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월한 입헌적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모든 국민을 위하여, 평등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이고 통일된 국민성을 발전시킬 것을 보장한다. -민족적 불화의 원인을 제거하고 모든 민족집단이 평등권을 갖도록 보장한다.>”

카자흐스탄 쿠르드 디아스포라의 형성에 특별한 역할을 한 것은 대통령의 발의로 발족된 카자흐스탄 민족총회다. 국가수반인 대통령 자신이 이와 같은 유일한 사회기구의 대표를 맡았다. 오늘날 이 카자흐스탄 민족총회는 정치분야, 소수민족기관의 조직, 특수한 사업, 또는 학문연구활동 등 임의의 모든 사회활동의 영역에서 가능한 모든 창조적, 정신적 역량을 실현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카자흐스탄 쿠르드협회 <바르방>(새벽)이 알마티시에, 시 쿠르드 문화센터가 알마티 주, 남카자흐스탄 주, 잠블 주 등지에서 주 쿠르드 문화센터가 기능하고 있다. 신문 <쿠르드스탄>과 문학-예술잡지 <누바르>가 발행되고 있다. 쿠르드 밀집지역에 창조적인 종합민속 연주단과 쿠르드 서정시 연기단이 조직되어 있다. 학교에서는 쿠르드인 어린이들이 쿠르드어를 배우고 있다.

1995년에 이론 및 응용 정치학과에서 카자흐스탄 쿠르드 지식인연합, 쿠르드 협회와 함께 행한 설문조사는 쿠르드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적응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공화국 내 다른 많은 거주자들처럼 자기만의 문제와 고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와 살아남았던 때와 비교해보면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쿠르드인들에게 카자흐스탄은 제 2의 조국이 되었다.

오늘날 많은 쿠르드인들이 카자흐스탄에서 다른 민족들과 나란히 학문, 교육, 사회정치활동영역에 진출하였다. 카자흐스탄은 화학박사이며 교수인 쿠르드인 엔. 카. 나디로브를 소련연방시기

에 최초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쿠르드 민족과학아카데미회원으로 받아들였고, 그 후 공화국 국민간 이공계 아카데미회원, 기타 국민간 아카데미회원으로 받아들였으며 국가상을 수여했다. 현재는 학문영역에 추가적으로 더 발전이 이루어져 카. 이. 미르조예브 교수가 어문학 분야에서 문학박사, 고등교육기관 과학아카데미 국민간 아카데미회원, 카자흐스탄 작가협회 이사, 공화국 사회과학 아카데미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슈무하메드 교수가 다음과 같이 확신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만약 쿠르드 민족이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통일된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면..., 그

들의 정신문화의 발전정도는 아주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쿠르드 민족의 잘못은 없다... 서양과 동양의 국가들이 쿠르드의 영토를 나누었던 데에 죄가 있다."

카자흐 민족과 쿠르드 민족은 혈연적, 정신적 매듭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확증해 보려면 1937년과 그 후 1941- 1944년에 쿠르드인들이 카자흐인의 땅에서 안식처를 찾았을 때를 상기해보면 된다. 역사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이러한 두 민족간의 친선에는 결코 어두운 그늘이 없다.

●●●●
신간안내

민족정치론의 체계화를 위한 정지작업

현대정치와 민족문제

조정남 저 / 교양사회 / 값 15,000원
주요 목차

- 제1부**
1. 새로운 정치환경과 민족문제
 2. 개념 정의
 3. 네이션론
 4. 내셔널리즘론
 5. 국민국가론
- 제2부**
1. 중국 :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건설
 2. 華僑 : 落葉歸根에서 落地生根으로
 3. 러시아연방 : 마트료시카적 중층성
 4. 미국 : '멜팅 포트'에서 '샐러드 볼'로
 5. 일본 : 단일민족 신화의 허구
 6. 캐나다 : 다문화주의의 실천장
 7. 북한 : 통일정책과 민족정책

무엇이 체첸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는가?

민족현장

김인성 /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러시아 주재)

지난해 10월 23-26일 발생한 모스크바에서의 인질극과 두 달 후인 12월 27일 체첸공화국 수도 그르즈니에서 발생한 공화국 정부청사 폭파사건은 각각 129명, 89명이라는 인명피해를 동반하며, 그간 체첸 사태의 장기화, 만성화로 인해 뇌리 속에 묻혀있던 체첸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1999년 8월 2일, 2차 체첸전이 시작된 이후, 푸틴 정부는 전쟁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체첸 공화국의 모든 도시들과 산악지대의 주요 거점들을 확보하는 등 체첸 반군들을 성공적으로 진압하여 왔다.

2000년 2월에 진행되었던 '늑대 사냥 작전'을 통해 수 천명의 반군들이 소탕된 이후, 사실상 대대적인 전투는 종결되었고, 2002년 4월 체첸 주둔군의 기본적인 임무가 완수되었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 후, 일부 병력이 체첸으로부터 철수하기도 하였다. 연방정부의 발표에 따르자면, 체첸을 거점으로 하는 테러리스트들은 대부분 소탕되었고, 난민들은 점차 체첸으로 귀환할 차비를 하고 있으며, 체첸 공화국 정부는 전후 복구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체첸 분쟁의 해결은 시간문제이고, 민간정부로의 권력이양을 통해 공화국 내에 정상적인 삶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러시아의 주요 언론매체들에서 역시 점차적으로 체첸에서의 크고 작은 전투들에 대한 기사가 감소하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2002년 초부터 체첸공화국 헌법제정 및 민선 정부의 수립을 통해 체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작년 말에 잇달아 발생한 초대형의 테러사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체첸에서의 전투행위는 종식된 것이 아니라 일상화되었을 따름이다. 연방차원의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는 무력충돌에 관한 기사를 체첸 언론들은 매일 수건씩 게재하고 있으며, 무력충돌의 과정에서 연방군과 체첸 반군, 민간인을 포함하여 하루 수명 내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제2차 체첸전, 공식적으로는 '대 테러작전'이 시작된지 3년 반, 구 소련 붕괴를 기점으로 한다면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체첸 문제는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체첸 사태를 장기화시키는 제 요인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연방정부의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체첸인들을 부단한 투쟁에 임하게 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투쟁으로 점철된 지천시

역사적으로 볼 때, 특히 체첸에서 무장 독립투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세 이후 현재까지 체첸인들은 외부의 침략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왔으며, 동시에 끊임없이 저항해왔기 때문이다. 북 카프카즈 지역이 주변 열강들의 정복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다민족 봉건국가인 알란 왕조가 형성되었던 8세기 이후이다. 9-11 세기에, 카프카즈에는 비잔틴 제국과 이란이 진출하여 세력확장을 꾀하였다. 비잔틴 제국의 영향이 강했던 그루지아와 아르메니아가 정교회를 받아들인 반면, 북 카프카즈의 제 민족들이 이슬람교를 수용한 것은 이란의 영향력이 강했던 데 기인한다. 최초의 대규모 침략은 13세기초의 몽골인들에 의해 행해졌으며, 알란 왕조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몽골인들과의 투쟁과정의 와중에서 체첸-잉구쉬인들은 14세기에 심시습 정부로 결집된다.¹⁾

타타르-몽골인들에 대한 투쟁이 종식된 16세기부터는 이란과 오스만제국, 그리고 러시아가 카프카즈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였다. 세 열강간 영토쟁탈전 과정에서 러시아군 요새가 이 지역에 최초로 건설된 것은 이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체첸인들에 대한 심각한 착취가 이루어졌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은 심지어 노예로 팔리기까지 하였다. 정치적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체첸인들이 격렬하게 투쟁하였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편, 예카테리나 2세(1729-96) 시기가 되면서 러시아제국의 남하가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1780년대 반봉건, 반식민 투쟁을 목적으로 이슬람교

에 기반한 다양한 독립투쟁집단들이 결성된다. 이 과정에서 카리스마적인 종교지도자가 이들 집단을 통합하여 현재의 체첸, 다게스탄 지역에 이슬람정부를 건설하는데, 이가 바로 이맘(종교지도자) 샤밀이다. 샤밀이 러시아군에 의해 체포되고, 뻬쩨르부르그로 압송되었던 1859년 러시아제국은 체첸을 합병하게 된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무장투쟁은 계속되는데, 이로 인해 러시아제정 정부는 러시아 혁명 직전까지 비상사태를 유지해야만 했다.²⁾

볼셰비키 혁명 이후 1922년 체첸은 자치 오블라스트로서 러시아사회주의소비에트연방공화국(РСФСР)에 편입된다. 1934년에는 잉구쉬 자치 오블라스트와 통합, 체첸-잉구쉬 자치 오블라스트가 편성되는데, 1936년 자치공화국으로 승격된다. 한편, 체첸인들의 독립투쟁은 구 소련 시기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최근에 공개된 합동국가보안부(ОГПУ)와 중앙집행위원회(ЦИК) 등 구 소련의 비밀문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³⁾ 이를테면, 1925년 8월 북 카프카즈 군사령부의 한 부대장이 서명한 작전계획서에 따르면, “체첸 자치오블라스트의 무장해제를 위한 작전 수행은 합동군 및 합동국가보안부의 기구들 전체를 아우르는 군사 통제를 통해 행해진다. 군부대는 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무장해제가 결정된 마을을 포위한다. 완전 봉쇄 후에는 —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무기들의 반납을 요구하고 반납에 2시간 미만을 배정한다. 만일 무기반납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때는 위협포격을 개시한다. 경고시한 만료 후에는 합동 국가보안부의 작전 담당 부대는 모든 주민에 대한 수색과 반당적 요소들의 압수를 개시한다. 상황에 따

1) Гаджиев К. С. Геополитика Кавказа, Москва, 2001. С. 9-22 참조

2) Дегоев В. В. Большая игра на Кавказе: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осква, С.362-366 참조.

3) <http://kavkazcenter.com/russ/history/stories/x%20files.html> (검색일: 2002. 12. 28)

라서 몇 차례에 걸쳐 포격을 할 수 있다..... 무장 해체에 대한 적대적 반항이 있는 경우, 마을의 유력 인사들을 체포하는 것이 허용된다.” 한편, 스탈린 헌법이 제정되던 1936년 베리야가 스탈린에 상신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에트 권력은 전지역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유일한 예외는 체첸-잉구쉬 지역인데, 이곳에는 조직적인 무력항쟁이 존재하며, 붉은 군대에의 입영기피와 탈영이 횡행하고 있다.” 1920-1940년대에 걸쳐 유사한 문서들이 러시아연방 정부기관 및 군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1940년대까지 체첸인들의 무장독립투쟁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스탈린의 민족 이주정책은 어떠한 소수민족도 예외라 할 수 없지만, 체첸 지역에서의 강제이주가 그 규모와 가혹성에 있어 다른 민족과 비교될 수 없는 데는 위와 같은 사연이 있다. 1944년 2월 무려 20여만에 달하는 붉은 군대와 내무인민위원회 산하 부대가 이 지역에 투입되어 약 50만의 체첸인들과 잉구쉬인들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시키는 데는 단 며칠이 소요되었을 뿐이다.⁴⁾ 이때 체첸-잉구쉬 자치공화국 자체가 폐지되었는데, 1957년이 되어서야 다시 자치공화국으로 복원되었다.

구 소련이 해체의 막바지에 이를 무렵인 1991년 10월 체첸인들은 조하르 두다예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다른 민족공화국들의 민족독립 열기를 부추겨 왔던 옐친 대통령이 체첸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선언하고,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에 군대를 파견하는 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러시아군은 사흘 후 철수하였지만, 신생러시아연방과 체첸공화국과의 관계는 투쟁

과 진압이라는 과거의 역사를 또 한번 재현하면서 시작되었다.

계속되는 지천인 학대

푸틴은 체첸의 이른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그의 입장을 “мочить в сортире”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밝힌 바 있다. 갱 영화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이 속어의 뉘앙스를 한국어로 옮기기는 힘들지만, 대략적인 의미는 “뒷간에서라도 끝장 내버리겠다”이다. 방송매체를 통해 러시아 전역에 알려진 이 표현은 다분히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방군의 작전능력 및 효율성에 대한 푸틴의 확신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는 체첸 테러분자들에 대한 어떠한 타협이나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푸틴의 언사에서 드러난 공격성이나 비타협, 불관용은 비단 이른바 테러분자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체첸인들 전체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기억하는 한, 체첸 지역에서 연방군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민간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푸틴은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체첸에서의 연방군의 작전 행위는 ‘청소(за чистка)’로 불리워진다. 매일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 작전은 테러리스트들의 거점을 찾아내고, 이들을 체포 혹은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방정부가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리는 만무하지만, 국내의 인권단체들의 발표에 따르면, 체첸 민간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가혹행위, 살해가 ‘청소’의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Народы России Энциклопедия, Москва, 1994. С. 399.

2001년 1월 “노바야 가제타”의 한 여기자는 연방군에 의해 구덩이에 갇혀있던 9명의 체첸 민간인들과의 인터뷰에 성공한 바 있다. 그녀의 기사 내용은 국내외의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그 후 이들은 전원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체첸에서 수십 구에 달하는 사체들이 묻힌 구덩이가 간혹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위 사례에서와 같이 구덩이에 체첸인들을 감금하고 살해하는 것은 그리 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첸에서 활동하는 “메모리얼 센터”의 한 자료는 체첸 마을을 대상으로 한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⁵⁾ 2002년 8월 체첸의 베덴스키 지역의 한 마을에서 연방군 45연대 공수부대원들이 ‘청소’를 실시하였다. 이 때 마을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던 중이었다. 약 일주일 전 연방군들이 역시 ‘청소’를 목적으로 마을에 들어오던 중, 한 여인과 그녀의 두 아들을 구타하였는데, 며칠 후 그녀가 사망하였던 것이다. 공수부대원들은 체첸 남성 64명을 윗도리를 머리에 뒤집어쓴 채 마을 외곽에 엮드리도록 지시하고는 벗겨진 등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였다. 이 상태는 하루종일 계속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45연대의 막사로 옮겨졌는데, 이들이 억류된 막사는 구덩이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바닥은 진흙탕이었다. 군인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눕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묶인 채 감자더미 위에 앉아 나홀 동안을 보내야 했다. 이 기간동안 이들에게는 하루에 단 몇 모금의 물만 제공되었을 뿐이었다. 한편, 억류된 남성들의 부인이나 어머니들은 부대 근처를 떠나지 않고 죄 없는 사람들을 풀어줄 것을 간청하였지만 이 요청은 무시당하였다.

마침내 사건발생 닷새 째가 되던 날 한 무리의

여자들이 공화국 정부 대표 카드로프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그로즈니에 있는 정부청사에 몰려들어갔다. 45연대에 억류된 체첸 인들을 풀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 이었다. 경비병들이 이들을 저지하였으나 막무가내였다. 기관단총에 의한 위협 사격으로 일단은 주춤거리는 여인들의 무리 속에서 한 체첸 남성이 경비병들의 눈에 띄었다. 그는 왼팔이 없는 불구자였다. 경비병들은 그를 어디론가 끌고 갔다. 이 때 몇 명의 정부관리들이 청사로부터 나와서 일부 여성들과 카드로프와의 면담을 허락하였다. 카드로프의 입장은 단호하였다. 전쟁은 마스하도프가 시작했으니, 그에게 전투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연방군이 우리들에 대한 전투행위를 중단하면, 마스하도프에게 전투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겠다.” 면담이 끝난 후, 여성들은 경비병들이 끌고 간 체첸인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청사를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이 불운한 체첸인을 돌려주었는데, 이미 그는 심하게 구타당한 뒤였다. 이마가 찢겨졌고, 온몸은 멍투성이였으며, 양쪽 눈동자도 출혈로 인해 멍이 든 상태였다. 경비병들의 말에 따르면, 이 불구의 체첸인이 그들을 먼저 공격했다는 것이었다.

체첸 여성들에 대한 러시아 연방군의 성추행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말, 러시아 연방군 대령 한 명이 체첸 소녀를 강간한 후 살해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 사건은 한동안 언론 매체를 통해 전국에 알려졌는데, 올해 초 법원이 사건 발생 당시 그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종결되었다.

러시아 연방군에 의해 행해지는 극도의 인권침

5) “Зачистки и наруш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www.svoboda.org/11/caucasus/0802/11.082902-1.html, 2002. 8. 2.)

해 행위가 체첸 공화국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체첸인들을 끊임없이 분리주의자들에 동조하고 더 나아가서는 체첸 독립 투쟁에 직접 참여케 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에서 역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인질범들의 주요한 요구가 체첸으로부터의 연방군의 철수이었지만, 인질범들의 지도자가 이 사건을 계획하게 된 것은 그의 외삼촌이자 분리주의자였던 아르비 바라예프의 살해가 주요 동기였으며, 몸에 수 십 킬로의 폭탄을 두르고 인간폭탄을 자칭했던 체첸 여인들이 인질극에 참여한 이유는 러시아군에 의해 살해된 자식, 남편을 포함한 근친들의 복수였다.

체첸 문제와 러시아 민족주의

위와 같은 체첸인 확대를 중단시키는 데는 푸틴 대통령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푸틴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못해, 흡사 그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마저 준다. 이러한 태도는 러시아인들의 민족주의적 정서 그리고 이에 기반한 푸틴 정권의 정당성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푸틴 정부가 강력한 통치를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실 그의 정치적 기반은 여전히 허약하다. 지방정치인들, 재벌들, 언론매체 길들이기, 또한 경제의 안정화에 푸틴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경제의 안정화 추세는 유가상승의 덕택일 뿐이며, 과거 반 푸틴 성향의 정치, 경제인들이 푸틴과의 협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80%에 달하는 러시아인들의 푸틴에 대한 지지 때문이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러시아 국민들, 특히 인구의 81.5%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민족의 푸틴에 대한 지지철회는 러시아의 정치 상황이

열린 시절로 회귀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푸틴의 정책에 러시아인들의 민족주의적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동안 체첸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여겨지는 대규모의 테러들은 상당히 많다. 백 명 이상의 사상자를 야기한 사건만 열거하자면, 1999년 모스크바와 볼고돈스크에서 아파트가 통제로 폭파된 바 있고, 2001년에는 크레믈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하철 출구가 폭파되었고, 2002년에는 모스크바에서 인질극이 있었으며, 그로즈니의 체첸 정부 청사가 자살조에 의해 폭파되었다. 러시아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일체성을 위협하는 체첸인들에 대해 러시아 민족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일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태도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함과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주 맹목적인 민족적 적대감으로 표현된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제2차 체첸전을 야기시킨 하타프와 바사예프의 다게스탄 침공을 포함하여 위에 열거한 테러사건들이 체첸인의 주도하에 행해졌다고 믿지 않는다. 물론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지만, 반정부성향의 언론들이 종종 제기하는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 러시아인들은 대체로 동의를 표하고 있다.

작년 여름, 프랑스 방송기자들이 제작한 “러시아 침공(Покушение на Россию)”이라는 다큐멘터리 필름이 러시아 정가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필름은 영국에서 사실상의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러시아 재벌 베레좁스키의 주문에 의해 제작되었다. 런던에서 시사회를 가진 후, 연방 두마 의원이 이 필름의 복사본을 베체르부르크의 뵤보 공항에서 세관 직원에게 압수 당

하기도 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후, 결국 연방정부에 의해 방송 금지된 이 필름은 99년의 모스크바와 불고돈스크 아파트 폭파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연방보안국(ФСБ)의 발표에는 상당히 많은 모순과 의문점을 담고 있으며, 이 테러사건은 푸틴의 지시에 의해 연방보안국이 계획했다는 것이 이 필름의 요지이다. 우연찮게 이 필름을 입수하고 시청한 후, 필자는 뻬체르부르그 국립대학의 한 중년 강사와 이 문제와 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그는 폭파사건이 있는 직후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는데, 이미 그때부터 이 사건은 연방보안국의 작품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었다고 한다.

체첸전의 재개에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문이 횡행하고 있다. 한 택시기사는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한 바 있다: “체첸전은 몇몇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일으켰다. 전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의 일부를 이들이 착복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체첸전을 중단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에서이다.” 내용 차이는 다소 있지만 이러한 시각은 대체적으로 다른 러시아인들로부터도 들을 수 있다. 모스크바 인질극에 관한 시각도 대체로 크게 다르지 않은 데, 뻬체르부르그 대학 박사과정에서 있는 한 러시아 학생의 말에 따르면, 인질극은 푸틴의 지시에 의해 연방보안국이 꾸민 것이 분명하며, 체첸 테러분자들에 대한 강경책의 정당성 확보와 지지율의 유지가 그 목적인데, 러시아인의 80% 정도는 자기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 한다.

푸틴이 체첸전의 재개 및 테러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루되어있는 지를 알 수는 없다. 중요한 점은 그가 이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으면

서도 러시아인들이 그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필자가 받은 느낌은 그들에게 이와 같은 사고가 매우 자연스럽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고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실마리를 찾을 수는 있다.

첫째, 현재 러시아인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러시아민족성의 불변의 요소인가 아니면 단지 이행기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 상인가는 논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 현재의 러시아 사회에 이른바 ‘강한 손(сильная рука)’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거의 없다. 2000년에 한 러시아 연구소에 의해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러시아국민의 54%는 피터 대제가 통치했던 때가 러시아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시기였으며, 46%는 현재 스탈린과 같은 통치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⁶⁾ 다시 말해서, 현재 러시아인들은 마키아벨리적인 군주를 필요로 하며, 이 경우 도덕률은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푸틴 정권이 민주 국가가 요구하는 정치적 게임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여기면서도 러시아 사회 내에 질서를 확립할 만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에게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러시아인들은 현재의 러시아에는 민주주의보다는 질서가 더 많은 가치를 지닌다고 여기고 있다.

엘친 대통령은 러시아인들에게는 허약한 군주였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체첸전쟁에서의 사실상의 패배이다. 엘친 정부가 본격적으로 체첸전을 시작한 것은 1994년 12월 초였다. 이 시기는 엘친으로써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1994년부터 엘친

6) *Россия на рубеже веков*// Российский независимый институт социальных и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блем, Москва, 2000. С 13-15

은 서구주의를 포기하고 민족주의적인 노선을 표방하기 시작한다. 즉, 폭넓은 지지 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했던 시점이었다. 둘째, 행정부/의회간 극단적 대립은 해결하였지만, 그 대신 중앙/지방간 세력균형은 점점 더 지방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때문에 균형을 역전시킬 기제를 필요로 하는 시기였다. 셋째, 대통령 선거전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제1차 체첸전에서 연방군이 체첸공화국의 수도 그로즈니를 점령하는 데는 약 두 달이 소요되었다. 체첸인들이 게릴라전과 산악전에 능하지만 전면전에는 약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 셈이다. 대통령선거출마가 결정되었던 96년 2월 연방군은 체첸 반군들을 산악 지역에 묶어놓는 데마저 실패하고 그로즈니의 공격재개를 허용한다. 이 시기 옐친의 지지율은 10% 이하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같은 해 7월, 간신히 재선에 성공한 옐친은 그로즈니를 포기하고 레베드를 사령관으로 임명, 반군과의 협상을 지시한 후, 8월 31일 반군과 평화협상을 체결하고 연방군을 체첸으로부터 철수시킨다. 그 후 러시아인들은 옐친 정부의 통치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게 된다.

제1차 체첸전의 교훈은 푸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는 이를 완전히 습득한 것 같다. 제2차 체첸전은 많은 점에서 보다 극적인 효과를 동반한 것이었다. 적절한 시기에 아파트 폭파사건이 일어났고, 체첸 반군들이 다게스탄을 침공하였다. 체첸공화국에서의 대통령 선거전은 푸틴이 전투기를 타고 체첸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3년 반이 지난 현재도 체첸전은 종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푸틴 정부의 단호한 체첸 정책에 러시아인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둘째, 대다수의 러시아인들은 대체적으로 체첸 민족에게는 독립할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러시아 중년 여성이 필자에게 피력한 의견에 따르면, “체첸 공화국에 석유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연방이 체첸을 포기하지 못한다고들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다. 체첸의 석유가 러시아 전체 석유 부존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체첸이 독립한다고 해도 그 정도의 석유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체첸은 러시아의 도움에 힘입어 살아왔는데, 독립한다면 얼마 안가 바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다른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체첸인들은 러시아와 합병하기 전까지는 국가다운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채, 비문명적인 씨족 단위에 기반한 생활을 해왔으며, 이들이 문명을 접하게 된 것은 러시아의 덕택이다.

셋째, 대개의 러시아인들은 체첸 분리주의 자체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구 소련의 붕괴로 인해 상실한 영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해 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러시아인들은 구 소련의 붕괴로 인한 소비에트공화국들의 독립은 잘못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여 왔다. 이러한 정서 속에서 또 한번의 러시아연방해체를 용납할 수는 없다는 감정을 러시아인들은 가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베푼 은혜를 망각하고 체첸인들이 독립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이다.

넷째, 러시아인들은 대량의 인명피해에 대해 상당히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필자와 가까운 한 러시아인의 표현을 빌자면, “러시아에서는 지금까지 수 천만 명이 죽어왔다. 공국들 간의 전쟁, 타타르-몽골인들의 침입, 피터 대제 시기, 프랑스와의 전쟁,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 스탈린에 의한 학살, 아프간 전쟁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은 상당히 정기적인데, 지

금 다시 그 시기가 돌아왔다.”

역사적 경험 이외에도, 인명피해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반응은 이들의 멘탈리티를 통해 설명될 수도 있다. 러시아민족성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공동체(община)’인데, 이는 촌락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한편으로는 공동체 내부의 깊은 결속력을 표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 외부에 대한 단절, 무관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현대의 러시아 사회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러시아인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철저히 구분한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꺼이 모든 것을 다 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체첸에서 누가 죽어가든, 내 문제는 아니라는 사고가 가능할 수 있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굳이 체첸공화국 영토가 아니더라도, 러시아연방 전역, 특히 대도시와 러시아 서부, 남부 지역에서 카프카스인들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민족감정이 자주 발산되고 있다.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카프카스인들을 습격하여 구타하거나 살해하고, 경찰들 역시 사망에까지 이르는 인권침해를 가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민족주의적 단체와는 관련이 없는 보통의 청소년들이 카프카스인들을 집단 폭행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유색인종에 대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가진 러시아인들이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카프카스 민족들을 상대로 한 민족주의적 감정은 보다 널리 확산되어 있다. 이를테면, 언젠가 러시아 대학생 한 명이 술자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한 적이 있다: “우리 집 근처에서 카프카스인이 야채를 팔고 있는데, 그 녀석은 나만 보면 무서워한다. 한번은 감자를 샀는데, 알고 보니 상한 것이었다. 그래서 돌아가서는 가판대를 옆

어버렸다. 카프카스 놈들은 언제나 부정직하게 장사를 한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러시아인들은 체첸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그 자체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러시아 제정 이후로 계속해서 러시아에 저항하는 카프카스 인들, 특히 체첸인들에게 러시아 민족의 강력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여기에 불안정한 러시아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만한 강한 대통령에 대한 요구로 인해 푸틴 정부는 체첸전을 재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이 이렇다면, 체첸 민족은 푸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러시아 민족주의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희생양이 되는 셈이다.

시기상조의 저전 헌법제정

체첸공화국 내의 정치,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작년 초부터 헌법제정문제가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고, 연방정부와 체첸 정부의 조율을 통해 헌법안이 작년 12월에 마련되었다. 헌법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올해 3월 23일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은 체첸 문제의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헌법과 정당성 있는 민선정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푸틴은 대통령 당선 이후 민족공화국들의 헌법을 연방헌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 공화국들은 연방최고재판소의 판결에 합치하는 헌법개정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2002년 12월 17일 확정된 체첸 헌법안은 연방 산하 공화국 헌법의 모범 답안과 같은 느낌을 준다. 헌법초안에는 ‘러시아와의 역사적 일체성(서론)’, ‘체첸은 러시아 연방의 불가분한 영토(제1조2항)’, ‘정책사항에

있어 연방헌법의 우선성(제6조), ‘연방대통령의 결정에 의한 공화국대통령의 해임(제72조)’ 등 연방정부가 지금까지 민족공화국들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제1조 1항에서 ‘체첸공화국의 주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인데, ‘러시아연방의 정책사항과 권한이 아닌 한, 체첸공화국의 불가분의 질적 상태이다’라고 함으로써 ‘주권’은 제한적임을 밝히고 있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내용은 사실상 헌법의 부록에 기재되어 있다. 공화국대통령과 공화국 의원이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공화국 행정부 대표와 정부소비에트가 각각 대통령과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대통령 선거는 헌법채택 이후 6개월 이내, 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출 후 3개월 이내에는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의 카디로프 임시정부 체제는 시효없이 존속할 수 있으며, 의회의 역할을 대행하는 정부소비에트가 공화국 산하 지역정부대표로 구성되는 만큼, 공화국 행정부 대표는 행정권과 입법권을 모두 통제하는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헌법채택은 공화국 내부의 정치적 질서의 변화,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안정과 평화의 정착과도 무관하며, 헌법채택을 빌미로 푸틴의 대리정권체제를 보다 공고화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한편, 푸틴 정부는 체첸 헌법 채택의 시기가 무리였음을 강조하기 위해, 대다수의 체첸인들은

연방정부에 협조적이며 극소수의 테러리스트들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인상을 심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테면, 모스크바 극장 테러와 그로즈니 정부청사 폭파는 체첸 민선 대통령인 마스하도프가 아랍계 테러조직의 협조 하에 직접 계획했다는 것이 푸틴의 주장인데,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체첸공화국 내에 이러한 테러리스트들은 약 천명 정도 밖에는 남아있지 않으며, 체첸 민간인들은 테러리스트들을 색출하기 위한 연방군의 작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⁷⁾ 또한 2002년 10월에 러시아 전역에 걸쳐 실시된 인구 센서스에 체첸인들의 90%가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들이 연방정부의 정책에 협조적임이 판명되었다는 발표도 있었다.⁸⁾ 그러나 연방정부의 이러한 발표들은 신빙성이 그다지 없어 보인다. 현재 체첸공화국에 남아있는 체첸 인구는 비 체첸 민족을 포함 40만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주변 공화국들의 난민촌에 거주하거나 모스크바, 예페르부르크 등의 대도시에서 분산되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경찰의 여권검사를 피해 숨어살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난민촌 체첸인들의 증언에 따르자면, 이들은 자신들이 러시아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구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어느 민족보다도 빨리 발표된 체첸 인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체첸 민족 전체구성원은 현재 1백만 명 이상인데, 1989년의 인구조사에서는 구 소련거주 체첸인은 도합 90만 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발표를 따르자면, 90년 이후 두 차례의 전쟁과, 극도로 열악한 생활환경

7) “В Чечне сейчас действует около тысячи боевиков”, (www.smi.ru/russian/news/news_id168000/168741.html, 2003. 1. 13)

8) “Итоги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в Чечне”, (www.svoboda.org/11/caucasus/1002/11.101302-1.html, 2002. 10. 2.)

9) “Чеченцы примут бесполезную конституцию”, (www.smi.ru/print/2003/01/10/4e4encyprimu.stml, 2003. 1. 10)

10) “Ликвидация палаточного лагеря чеченских беженцев вблизи селения Аки-Юрт”, (www.svoboda.org/11/caucasus/1202/11.120302-1.html, 2002. 12. 3)

속에서도 체첸 인구는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연방정부의 인구조사결과가 정치적 목적의 조작을 통한 것이라면, 국민투표 역시 조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OSCE의 체첸 파견사무소 대표 요르마 잉키는 국민투표의 결과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말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는 한편, 체첸에는 8만 명의 연방군이 파견되어 전쟁이나 다름없는 대 테러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구의 대다수가 타 지역에서 피난민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헌법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였다.⁹⁾

대다수 체첸인들은 헌법제정은 시기상조라 여기고 있으며, 그 결과에 전혀 희망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체첸에서의 전쟁 상태의 종식이다. 연방정부와 체첸 임시정부는 체첸 복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 천명의 체첸 난민들이 이미 귀환하였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물론 이는 체첸에서의 상황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연방정부의 재정능력으로는 수 만 호에 달하는 파손 가옥을 단기간 내에 복구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난민의 귀환이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 ‘메모리얼’의 증언에 따르면, 체첸 이민국의 관리들이 난민촌들을 자주 방문하여 귀환 희망자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기실은 체첸 인들이 난민촌을 떠나지 않을 경우 전기와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경고가 주임무라 한다. 실제로 이들 난민촌에서는 하루에도 10-20여 차례씩 규칙적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있다.¹⁰⁾

체첸 난민들은 난민촌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체첸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고향에 돌아간다고 해도 이들 난민들에게는

집도, 일자리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연방군에 의한 체첸인 학대다. 바로 이 때문에 이들은 연방과 체첸정부가 자식들의 안전만 보장한다면, 정부로부터 주택 복구를 위한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귀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귀환의 조건은 전쟁 종식과 체첸공화국의 비무장화이다.

대화를 거부하는 연방정부

체첸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은 연방정부가 체첸 반군들을 협상의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2차 체첸전 개시 이후, 연방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마스하도프와 비밀협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었지만, 연방정부는 줄곧 이 사실을 부인해 왔다. 한편, 지난해 모스크바 인질극 이후, 푸틴은 체첸 반군들과의 협상 가능성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체첸 문제 해결은 더 이상은 어렵게 됐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입장은 체첸의 반군들은 테러리스트들이며, 테러리즘과는 타협할 수 없고, 마스하도프 민선정부는 실제적인 통치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러시아가 체첸에 진입하기 시작한 16세기 이래로 몇 차례의 보호조약이 체결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가 체첸을 대화의 상대로 인식하고 협상태이블에 앉은 적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다. 1996년 8월 연방정부대표 레베드장군과 체첸 공화국 대통령 마스하도프 간에 체결되었던 하사부르트 협정이나 1997년 5월 엘친과 마스하도프 간에 체결된 평화조약이 상호인정에 기반한 협상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었지만, 러시아 정부는 두 조약의 이행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1997년 5월 체결된 평화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다: “조약 체결 당사자들은 1996년 8

월 31일의 하사부르트 조약을 확인하며” 이 문구는 조약에 서명하기 직전 열친이 직접 만년 필로 줄을 그어 삭제하여 버렸다. 한편 이 평화 조약은 향후 체결될 조약 및 협정의 기초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1997년 8월 양측 간 우호협정 계획안이 발표되었는데, 제1조에 따르면 양측은 서로를 독립주권국가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결국 체결되지 못했고, 더 이상의 부수적인 조약이나 협정은 계획된 바 없다.

러시아정부가 체첸과의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가 낫다는 상투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제1,2차 체첸전을 통해 이미 최소 십만 이상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체첸인들의 독립 요구를 무력으로 잠재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대화 없는 강경책은 양측간의 희생자수를 계속 증가시킬 뿐이다. 현재까지 체첸전을 통해 몇 명의 인명피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러시아연방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자면, 제2차 체첸전에서의 연방군 전사자는 대략 4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병사 어머니 회’는 죽어간 군인들의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통계가 더 정확할 것이라면서, 전투현장에서의 전사, 부상으로 인한 병원에서의 사망, 전쟁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 등을 모두 합하면 전사자수는 약 1만4천5백 명이라고 밝혔다.¹¹⁾ 하루 평균 12명의 연방군이 죽어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체첸인 사망자수는 더욱 더 파악하기 힘든데, 체첸 측의 주장을 따르자면 제2차 체첸전에서만 약 10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나폴레옹의 군대를 패퇴시키고 파리에 입성했

던 러시아제국군이 체첸을 항복시키는 데 걸린 기간은 무려 50년이였다. 예카제리나 2세가 남하 정책을 시작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따지자면 체첸인들은 200년이 훨씬 넘는 기간동안 러시아로부터의 독립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한편, 데카브리스트로 잘 알려진 뻬벨 이바노비치 뻬스첸(1793-1826)은 그의 자유주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카프카즈의 전투적 민족들을 러시아인 마을에 소규모 단위로 강제 분산 이주시켜 동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¹²⁾ 뻬스첸의 주장은 스탈린에 의해 보다 강력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체첸인들은 러시아 민족에 의해 동화되지도 않았고, 독립의 열기 역시 조금도 식지 않았다. 구 소련체제에서의 가혹한 러시아 동화정책에 의해 대다수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상실한 반면에, 체첸 민족은 러시아어보다는 자 민족어의 구사에 더 능하다는 사실은 이들의 민족적 자긍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고려할 때, 푸틴의 대 체첸 강경책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에는 체첸 민족의 멸종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체첸 주둔 연방군 사이에는 어느 정도 유사한 분위기가 퍼져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 기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기사화한 적이 있다. 그는 연방군 장교 한 명이 공중전화통해 자신의 부인과 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 이 장교는, “이 전쟁은 체첸인들 중에 치마 입은 사람들만 남을 때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체첸 사태는 단순한 지역분쟁이 아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러시아연방의 장래를 결정할만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이

11) <http://kavkazcenter.com/russ/article.php?id=3013>(검색일: 2002. 12. 25.)

12) Галина Королева-Конопляная "Идея Федерализма в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граммах декабристов и анархистов", *Федерализм* № 1(25), 2002, с.189-191 참조

문제가 러시아 연방체제의 존속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푸틴 정권 등장 이후 중앙/지방 관계가 급격히 변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지만, 러시아연방 독립직후의 중앙/지방 관계를 형성했던 제반 정치, 사회적 조건들이 건재한 것도 사실이다. 즉, 공화국들의 민족주의 및 분리주의, 지방정부들의 지역이기주의 등은 변함없이 남아있다. 게다가 과거 옐친 시기 분리주의적, 지역주의적 감정을 이용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진 지역 정치 지도자들 대부분이 건재한 상태이다. 체첸 문제는 일면 연방정부능력의 실험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중앙/지방간 관계가 러시아연방 초기 시절로 회귀할 가능성, 더 나아가서는 연방해체에까지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체첸 사태의 해결방식은 장래 러시아 정치체제의 성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대화와 설득, 타협 등의 민주주의적 해결방식과는 요원

하게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자국민의 인명피해까지 수반하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러시아연방에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정착이 어렵게 됨과 함께, 구 소련 체제의 붕괴를 야기한 제반 문제들을 고스란히 보존함으로써 체제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적 가치관과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정상적으로 편입될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체첸 민선 대통령 마스하도프는 체첸 반군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온건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 푸틴과 달리 그는 계속해서 연방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해오고 있다. 푸틴 정부는 아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 시점에서 협상을 통한 체첸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푸틴 정권이 체첸 정책을 통해 누리고 있는 정치적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대가를 훔칠 러시아 전체가 치러야 할 수도 있다.

●●●●
신간안내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러시아와 중국혁명이 갖고있는 진면목과 혁명의 뒤에 존재하고 있었던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의 사상적 맥락

사상과 혁명

조정남 편역 / 교양사회 / 값 10,000원

- 주요 목차 제 1 부 프랑스 혁명사상과 유토피아
제 2 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애
제 3 부 러시아혁명
제 4 부 중국혁명

국민국가와 난민문제

난민문제에 있어 진정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의제로서의 국민국가 가운데, 차이와 다원성과를 가진 인간의 아이덴티티의 장을 어떻게 확보, 그것을 실현키 위한 제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러한 관점은 예컨대, 버리기 어려운 단일민족 신화에 더해, 외래의 타자로서의 난민의 수입에 소극적인 나라들을 각각 문화적 개성을 가진 다양한 민족이 자기실현을 찾아 정주하기에 마땅한 열린 국제국가로 변화해 가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난민문제는 우리들의 장래와 우리들의 생활양식을 뿌리에서부터 되새기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加藤節 / 일본, 成蹊大學 교수

난민문제가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현대는 '난민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구 동구권을 중심으로 다발 하는 민족분쟁에 의해 고향 땅을 잃고 난민화 한 사람들의 비참한 실정이나,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선진제국으로 유입한 대량의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이 배척운동의 파도를 받아 난민화 하는 비극이 계속되면서, 난민문제는 현대세계가 내포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서는 난민문제가 발생하는 역사적 배경을, 19세기 이래, 정치생활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보편화한 '국민국가'의 제 문제의 가운데 찾아보려 한다. 난민현상이 국가의 굴레를 뛰어넘어 일어나는 인간들의 대량이동 현상인 한, 국민국가와의 관련을 벗어나서는 난민문제에의 이론적 접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국가의 논리와 난민

현대세계에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은 대체로 4가지로 본다. 자본, 상품, 정보, 인간이 그것이다. 이들 가운데, 보편성을 가진 경제의 논리에 의해 일어나는 자본과 상품과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이며, 정보도 전달수단의 기술적 고도화에 의해 용이하게 세계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이동에는 다양한 제한이 뒤따른다. 국민국가의 보편화에 따라 인류의 대부분이 국가를 가지게 된 현대세계에서, 사람들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주권과 국경에 의해 그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 당한 특정 국민국가의 국적의 제한 아래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국적에 의해 차별화하고, 주권과 국경에 의해 그 차이를 고정화하는 국민국가의 굴레를 전제로 하

는 한, '난민조약'에서 말하는 '국적 국의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난민은, 적어도 예정 밖의 존재, 본래 존재할 수 없는 문제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1917년의 혁명과 그것에 이은 내전에 의해 "난민의 세기"로서 20세기 난민사의 기점을구획 한 구 소연방이 난민의 존재를 일관하여 부정해온 사실은, 체제의 안정성을 과시하려 하는 정치적 이유를 별도로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국민국가의 논리와는 원리상 서로 어울리지 않은 난민은 사실상, 국민국가의 영역을 넘어 차례차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식민지 해방에 의해 제3세계에 국민국가가 연이어 탄생, 전 세계가 거의 국민국가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제2차 대전이후, 그 경향이 현저했다. 이것은 원리적으로 '국적 국 바깥에 있는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국민국가가 보편화한 현대에 있어, 더욱 국민국가의 제약을 파괴하는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현대사에서의 하나의 역설이기도 하다. 왜, 이러한 역설이 생기는 것일까. 인간은 어째서, 스스로가 그 속에서 태어난 국가를 이탈, 그것에의 네셔널한 자기동일화를 버리고 난민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는 네이션에의 귀속감이 아주 강하고, 국가를, 항상 돌아가야 하는 조국이라고 보는 경향이 현저한 우리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어떤 이유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

당초부터, 이들의 의문에 대한 일의 적인 해답을 끌어내는 것은 곤란하다. 난민문제의 발생에는 정치적 내란, 경제적인 격차, 민족분쟁, 부족대립, 자연재해 등의 요인이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을 모든 사례에 해당하는 단일의 논리에 의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난민문제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배제할 수 없는 논리가 있다고 봐

야 할 것이다. 그것을 국민국가의 의제성에 더해, 구조상, 네이션에 자기동일화 할 수 없는 타자를 포함하고 있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국민국가의 탄생 지역인 근대 유럽의 경우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서구의 국민국가

서구에서 18-19세기에 걸쳐 전형적인 형태로 성립한 국민국가(nation state)는 그 초기부터 이중의 의미에서 강한 의제적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그것이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역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간들의 작위의 산물이며,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의제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국민국가가 다양한 실질적 차이를 추상화하는 것에 의해 창출된 픽션으로서의 네이션이라고 하는 일반관념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며, 그 점에서, 허구로서의 관념적, 의식적 사실을 존재근거로 하고 있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근대 국민국가는 절대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주권국가(state)의 영역적인 구조를 전제로 한 이상, 그 구조만의 실질을 이루는 인적단체로서의 공동체 성을 네이션이라고 하는 관념에 의해 조달, 혁명을 통하여 주권을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바꾸는 것에 의해 성립했다. 거기에 통일적인 국내시장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부르조아지의 역사적인 요구가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 국민국가는 국민경제에의 요구를 기초로 하면서, 절대주의가 만들어 낸 권력기구로서의 스테이트를 의형으로, 그 내용을, 인적공동체라고 하는 고대 이래의 국가개념의 근대판이며, 언어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하는 네이션, 공통의 언어, 공통의 권력기구, 통일적인 분업체제로서의 국민경제를 가진 정치사회의 전혀 새로운 단위로서 성립한 것이

다. 그러나 근대국민국가의 의제성은 그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정치체제라고 하는 사실만에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의제 (fictitious)적인 성질은, 국민국가의 내실을 이루는 네이션 개념 그 자체의 의제성에서 파생하는 것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말 한 것처럼, 근대국민국가의 외형은 절대주의가 만들어 낸 영역성이다. 그 경우 절대주의는 특정 지역 내에서의 문화적, 언어적, 민족적(ethnic), 인종적(racial), 종교적인 차별성이나 다원성을, 절대주권에 의해 소위 바깥에서 폭력적으로 억누르는 것에 의해, 통일적인 영역 국가를 만들어 내었다고 말해도 좋다. 따라서, 종래, 절대주의 국가는 주권이 통일성의 상징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본래 다원성을 내포한 통치체제였다. 근대국민국가가, 절대주의가 만들어 낸 영역 내에서, 그것도 절대주의를 청산하면서 확립되었을 때, 그것은 한편에서 주권개념을 이어감과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절대주의국가가 국왕의 사적인 통치기구로서의 성격 속에 가지지 못했던 공동체 성을 네이션이라고 하는 관념에 의해 조달, 다원성을 극복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네이션이라는 근대어도, 소위 의제적, 관념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당초 절대주의 국가가 내포하고 있던 다원적인 요소를 추상적인 레벨에서 초월, 새로운 정치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공공상징으로서 발견돼, 동원된 관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대국민국가가 자본재 생산양식에 유래하는 새로운 차별성으로서 계급대립을 내포한 것으로 되었을 때, 정치적인 공공상징으로서의 네이션은 그 대립을 은폐할 허위의식으로서, 마르크스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데올로기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국민국가에 공동체 성을 부여한 네이션이라는 관념은, 절대주의 이래의

지역 차나 신분 차에 더해, 계급 차라고 하는 역사적 실체를 버리는 것에 의해 비로써 성립된 픽션이며, 의제였다. 그러한 강한 의제성을 가지면서, 그것이 국민국가의 실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관념이 다른 국민국가와의 관계에서 국가에의 구심력을 만들어 낸 내셔널리즘을 만들어 내, 국민의 동의라는 이름아래 대내적인 차이나 다원성을 실력에 의해 억제하여 주권의 발동에 정통성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좋을 것이다.

이러한 근대의 국민국가는 단순히 그것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 아니라, 그의 공동체성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상정된 추상적인 네이션 개념 가운데 지역적,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계급적 차이를 용해시키는 것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하나의 擬制이며, 픽션에 지나지 않았다. 근대의 국민국가, 예컨대 스페인, 프랑스 영국에서, 종교나 문화의 차이와 연결되면서 자치를 구하는 민족분쟁(ethnic conflict)이 반복되어 온 사실은 그러한 의제성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해서 좋을 것이다. 근대의 국민국가는 네이션과 에스니시티와의 실질적인 분리를 극복할 수 없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네이션에의 자기동화를 거부하여 분리에의 욕구를 계속 가져온 타자를 최초부터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세계의 국민국가

이상과 같은 구조를 가진 서구의 국민국가를 대상인식을 위한 하나의 이념형으로서 설정, 그것과의 거리에서 볼 경우, 국민국가의 의제성은 식민지 해방에 의해 제2차 대전 이후, 제3세계에 연속적으로 탄생한 신흥의 국민국가 군에서 한층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들은 유럽의 국민국

가를 모델로 하면서, 독일 국가학에서 말하는 주권, 영토, 인민을 3요소로 하는 독립국가의 자립을 목적으로, 해방투쟁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네이션의 자결권을 주창하는, 네셔널리즘을 고취, 국가형성(nation building)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만들어 낸 국가의 실태는 대부분의 경우, 유력한 민족이나 부족, 일부의 엘리트나 군인, 구 종주국에 연계되는 특권층에 의한 강권적인 지배체제로, 그것을 자연이나 혈연, 민족이나 부족, 언어나 종족, 신분이나 계급 혹은 부의 분배에서의 국민의 실질적인 분단을 초월한 공공의 것으로서의 국민국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한 의제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세계에 성립한 국민국가의 강한 의제성은 분명히, 서구 열강을 중심으로 하는 관습화된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유산이다. 그들의 국민국가는 거의 예외 없이, 다원성을 포함한 그 대로의 자의적으로 분할된 종주국의 지배지역을 그 영역으로 계승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의 국민국가에 의제성을 각인한 절대주의 역할을 제3세계에서 행한 것은 다양한 민족집단이나 문화집단이 모자이크 상태로 들어선 지역을 힘에 의해 위에서부터 통합한 열강의 식민지 지배였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예컨대 아프리카나 중근동의 신생국들의 국경이 가지는 극도의 인공성은, 그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제3세계에 태어난 국민국가 군은 다양한 다원성이나 차이성을 내포, 네이션에의 아이덴티티를 가지지 않은 의제적 성질을 숙명적으로 부여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그러한 의제성에 더해, 거기에서는 주권의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그 성원들에게서 네이션에의 자기동일화를 찾는 것이, 원칙적으로도 불가능하며, 강권적 지배를 은폐할 이데올로기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의 국민국가를 이념형적인 모델로 하여, 제3세계에 계속하여 국민국가가 탄생, 전세계적으로 170여 개가 넘는 국민국가가 성립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안으로는 다양한 차이나 다원성을 포용하면서, 그것을 추상적인 단일의 네이션의 이름에 의해 관념적으로 숨긴 국민국가의 의제성이 보편화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해도 좋다.

난민문제의 궁극성

그러면 이러한 국민국가의 의제성이 보편화한 사실은, 특히 제2차대전 이후, 국민국가체계의 일원이 된 제3세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난민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할 경우에 중요한 것은 난민의 발생 원인의 궁극에 있는 것에 주목하는 일이다.

‘난민조약’은 ‘난민’의 발생 원인으로서는, ‘인종, 종교, 국적 내지는 특성의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인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들고 있다. 당초부터, 난민의 발생이 이러한 이유에 의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이라크이나 터키에서의 쿠르드 난민이 당하고 있는 운명이 그것이다. 그러나 가끔 지적되고 있는 것과 같이, 동서 냉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동양 측을 견제하려고 하는 서방 측 진영의 정치적 의도를 받아, ‘난민’의 발생 원인을 ‘박해의 공포’에서 찾는 ‘난민조약’의 이러한 시점은 현재의 난민문제의 실정을 파악하는데는 그다지 충분치 않다고 본다. 현대세계에서의 난민의 발생원은 ‘박해의 우려’뿐 아니라, 보다 많은 내란, 내전, 외국에 의한 지배, 심각한 정치적 혼란, 극도의 빈곤, 기아, 자연재해 등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민의 이러한 발생 원인은 여전히

표면적인 것이며, 그 근원은 아니다. 그들의 근저에는 내셔널한 아이덴티티의 동요를 필연적으로 결과시키는 국민국가의 의제성이 있으며, 그것 자체가 다양한 난민 문제의 발생원인의 궁극에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난민의 유력한 발생원인으로 여겨지는 것 가운데, 박해와 내란, 외국에 의한 지배, 빈곤,

자연재해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박해와 내란 등은 대부분의 경우, 민족분쟁이나 부족분쟁,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유래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1960년부터 1979년에 걸쳐 콩고동란이나 르완다 내전, 1983년에 일어난 스리랑카에서의 인종분규에 의한 난민의 발생은 전자의 예이며, 1959년의 쿠바, 1975년의 베트남과 라오스, 1979년의 니카라과에서의 공산주의 정권 수립에 의한 난민의 국외유출은 후자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경우의 최대의 특징은 민족분쟁이나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내셔널한 과제로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적인 공존의 조건을 만들어 내려는 공통의 노력이 생겨나지 않은 채, 민족이나 이데올로기의 상위가 곧바로 국외유출이나 국외도망을 일으킨 것이며, 여기에는 제3세계에서 내셔널한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취약한 것이며, 국민국가가 얼마나 의제적인 것인가가 짐작될 수 있다. 거기에 인정되는 것은 민족, 인종, 부족, 이데올로기의 분단에 유래하는 차별화에의 원심력이, 국민적인 통합을 가져오는 내이션에의 구심력에 우선하는 사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에 의

**내셔널한 관점에서
 자연재해를 극복, 생존의 조건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계획적인
 시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국민공동의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보다 풍부한 나라,
 보다 자연환경에 혜택을 받은 나라
 에로 사람들의 유출이
 당연한 것처럼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배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예컨대 1978년 베트남에 의한 캄보디아침공, 1979년의 소련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개입, 1990년의 이라크에 의한 쿠웨이트병합 때, 피 침략국 국민의 적지 않은 부분이, 내셔널리즘을 공통의 사상적 근거로 하여 외적에 저항, 공동의 것으로서 조국을 방위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버리고 난민

이 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당초부터, 그 경우, 이러한 사태를 몰고 온 요인으로서, 저항을 무의미화 하는 군사력의 압도적인 차이의 문제가 있고, 국민적 공동전선의 형성을 방해하는 민족이나 종교의 분열의 문제가 있으며, 적어도 국민의 동의에 정통성 근거를 가지지 않은 피 침략국의 권력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에 의문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외국에 의한 지배를 내이션 전체의 존속의 위기로 파악하는 공통감각, 국민적 동포의식, 저항의 이념으로서의 내셔널리즘의 회박성으로, 그런 의미에서, 외국에 의한 지배가 난민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민족이나 종교의 화해하기 어려운 차이, 권력배분에서의 현저한 격차를 내포하는 현대의 신흥 국민국가에서의, 내셔널한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모험을 걸 가치가 없는 것이며, 얼마나 의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또 극단적인 빈곤이 만들어 내는 '경제난민'이나 기아 등으로 유래하는 '자연난민'에 대해서도, 그 근저에 있는 사정은 동일하다. 거기에는

많은 국민에 자기보존의 수단을 제공, 공존의 물질적 기초를 보증하는 국민경제를 확립하는 것에 의해 빈곤문제의 해결을 도모, 내셔널한 관점에서 자연재해를 극복, 생존의 조건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계획적인 시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국민공동의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보다 풍부한 나라, 보다 자연환경에 혜택을 받은 나라로 사람들의 유출이 당연한 것처럼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이는 것도, 빈곤이나 기아를 자국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국민적 과제에의 방책을 저해하는 제3세계의 국민국가 군에서 있어서의 동일한 내이션에의 공속 의식의 결여이며, 내셔널한 아이덴티티의 취약함 이상이 아니다.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현대 세계에서의 난민문제의 궁극에 있는 것은, 용이하게 나라를 버리고, 국경을 넘게 하는 국민국가의 의제성이며, 그것에 유래하는 내셔널한 아이덴티티의 뿌리의 얽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에서의 난민문제는 전세계를 엄습한 국민국가의 의제적 성질에 유래함과 동시에, 그 의제성을 현재화시켜, 그것을 점점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도 국민국가체계 가운데 '국적 국 이외에 있는 사람'이 된 난민에 있어서의 최대의 비극은 그들이, 국경을 넘어, 국민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유출하면서, 그 유출 선에서도 스스로의 아이덴티티의 근거를 용이하게는 나타내지 않은 점이다.

난민의 이중 비극

난민으로서 국경바깥으로 유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가운데서 태어난 국민국가에 있어서, 정치적인 권력중심에서 소외된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인 마이너리티 그룹이며, 합리적인 배분에서 배제된 사회의 저변을 구성하는 경제적

약자인 것이 통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미 재삼 지적해온 것처럼, 국민국가는 다양한 차이성을 초월하는 내이션이라고 하는 의제적인 관념에 지탱되는 것에 의해서 비로써 성립할 수 있는 국가였다. 따라서, 거기에는 늘 내셔널한 것에 대한 해석 문제 누가 그것을 해석할 권위를 가지는가의 문제를 포함, 치열한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경우, 용이하게 상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해석권은 특정의 국민국가에서의, 정치권력을 장악한 다수그룹, 혹은 경제적인 특권층에 귀속하는 예가 대부분으로, 그 결과, 그들은 누가 내셔널한 것이며, 누가 정치적, 경제적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인 것인가의 판단권을 독점하여, 거기에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에 대해, 국민국가 가운데 구조화돼, 늘 권력관계를 수반하는 차이의 체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특권에서 필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정치적 소수파나 경제적 약자는 내셔널한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길이 막힌 존재로서, 국민국가의 내부에서의 타자성을 최초로부터 각인 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국가의 외부에로 유출하여 난민화 할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비극은, 난민으로서 유입한 곳이 또 국민국가이며, 거기에 있어서도, 그들은 환영되지 않은 타자, 방황하는 이방인으로서의, 그 나라의 내이션으로 동화되지 못하고, 아이덴티티의 확립을 이루지 못하는 점에 있다. 어떤 국민국가도 본래, 다양성을 포함하는 의제성을 가지면서, 다른 국민국가의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내셔널리티를 실체화하여 배타적이 될 경향성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셔널 아이덴티티로부터 소외되어 귀속해간 국민국가를 버리고, 난민이 된 사람들이, 그것도, 유입

선의 국민국가에 있어서 마저, 외부로부터 온 타자로서 안심하고 의거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아이덴티티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들에 있어, 이것 이상으로 비극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난민은 현대세계를 뒤덮은 국민국가의 체계 가운데, 자기의 아이덴티티의 확립을 저해하는 이중의 비극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난민의 이러한 이중 비극을 극복, 이중의 타자성을 해소할 방도는 없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관점을 먼저 고찰치 않으면 안 된다.

난민문제의 역사성

난민문제의 궁극에 있는 것이, 내셔널한 아이덴티티를 부단히 파내는 국민국가의 의제적 성질이며, 그것도, 그러한 국민국가가 정치생활의 단위로써 여전히 강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는 한, 난민문제는 금후 점점 심각하게 될 것이다. 정보가 자유롭게 교차하는 현대세계에서, 사람들은 자국과 타국과를 비교하면서, 보다 자유스러운 나라, 보다 풍부한 나라, 보다 생존의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찾아 '국적 국 바깥에 있는 사람', 즉 난민이 될 조건을 점점 많이 손에 넣고 있다. 그 의미에서, 우리들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되는 것은 우리들이 난민의 발생이 불가피한 '난민의 세대'를 공유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역사 의식을 가지는 일 이상이 아니다.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비로써, 우리들은 난민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도덕적 악으로 비난하거나, 난민을 오직 연민의 대상으로 생각하려는 관념에서 자유롭게, 난민문제의 해결을 피할 수 없는 인류사적 과제로 보는 객관적인 관점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식에 서서, 난민문제의 해결을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관점을 가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난민의 발생을 어떻게 해서 극소화할 것인가를 구상할 실제적인 관점이다. 그것이 국민국가의 의제성에서 유래하는 이상, 난민의 발생이 예컨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난민을 받아들이는 근린국가나 선진국에 부담시키는 높은 코스트를 고려할 때, 난민이 대량현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난민문제가 인간의 아이덴티티에 관여, 비극으로 내몰린 난민의 존엄에 관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이념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고민이나 부담을 진 난민에의 인간적 관점에 서서 난민문제의 해결을 도모기 위한 출발점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민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방도를 추구할 리얼리스트틱한 관점과, 난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는 비극으로 보는 가치판단에서서 난민의 아이덴티티나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할 이념적인 관점 등이 불가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래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의 송출국과 수입국 쌍방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조건을 생각해 보자. 그 경우 논점의 핵심은 난민문제의 근저에 있는 국민국가의 의제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자각함에 더해, 그것을 난민문제의 해결에 어떻게 생생하게 적용할 수 있을 가 일 것이다.

난민 송출국

먼저, 난민들을 대량으로 송출하고 있는 제3세계가, 난민 발생을 극소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

은 내셔널한 형태를 취한 스스로의 정치사회가, 실질적으로 민족적, 부족적, 인종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인 아이덴티티에의 절실한 요구를 가진 다양한 여러 집단의 의제적인 복합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히 자각하는 일이다. 그러한 작업 없이, 다수파집단 스스로의 가치체계나 이해 관심을 내셔널한 것으로 주장, 그것에의 동화를 소수파 집단에 대해서 권력으로 강제하는 한, 거기에는 내란이나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게 일어나, 본래적으로 타자성을 내포하고 있는 소수파를 난민으로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러한 비극을 회피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이너리티 그룹의 요구가 존중되고,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민주적인 정치제도의 확립과, 부의 평등한 분배가 가능하도록 공정한 경제체계의 형성이다.

국민국가의 의제성 자각에 의해, 민족적, 문화적인 차별성이나 다원성을, 특정 집단에 의한 권력이나 부의 배타적인 독점체제를 타파하는 방향으로의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는 한, 권력과 부로부터의 배제된 집단은 자국에 스스로의 아이덴티티의 뿌리를 가지지 않은 채, 권력과 부로부터 배제된 집단은, 자국에 스스로의 아이덴티티의 뿌리를 가지지 못한 채, 자기실현의 장을 타국에서 찾으려는 난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난민의 주요한 송출 국인 제3세계의 국민국가에 있어, 그 의제성에 내포되어 있는 '내적인 타자'를 국경 바깥으로 추방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발의 이점을 빌린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와, '정부개발 원조'로 대표되는 외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를 특정의 특권층이 독점할과 점적인 경제체제를 타파하고, 다양한 마이너리티 집단이, 권력과 부와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적, 경제적인 제도를 확립

하는 것이 특히 요청된다. 그러한 제도가 내셔널한 수준에서 수립되었을 때, 특권에서 소외된 마이너리티 그룹도, 스스로에 각인된 타자성을 청산하고, 자국 내에 스스로가 행해야 할 역할을 발견, 거기에 자기의 아이덴티티의 근거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부터, 이러한 제도의 확립은 극도로 곤란할 것이다. 제3세계에 성립한 젊은 국민국가에 있어, 내이션으로서의 대외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권을 절대화하여 반대파를 억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며, 또 국민자본의 축적의 절대적인 결여와 국민경제 시스템의 실질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선진제국에 있어, 예컨대, 정치적, 군사적인 전략에 근거한 특정의 권력집단에서의 유입을 자제, 정치적 소수파에 대한 인권의 유린이나, 부의 분배에서의 극도의 불평등이 보이는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원조를 동결한다고 하는 정책적 배려가 강하게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보는 한, 그러한 배려는 선진국들에 있어, 신흥의 국민국가의 정치적, 경제적인 성숙을 촉진, 스스로 높은 코스트로서는 계속하여 물려오는 난민의 대량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선행투자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난민 수입국

난민 수입국인 선진국에 있어서도, 그 송출 국인 제3세계의 나라들과 같이, 본래, 내부적으로 타자들을 내포하면서 성립한 스스로의 국민국가의 의제적 성질의 자각이 강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선진제국도, 그 의제성에 더해, 내부적으로 민족적, 문화적인 자립이나 아이덴티티를 요구하는 마이너리티 그룹을 포용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인식은 내적인 타자와의 공존의 조건을 구비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에 의해, 난민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한 타자, 혹은 산업구조의 저변을 지탱할 뿐인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늘 손을 맞잡고 살아가야 하는 공생의 상대라고 생각하는 성숙된 의식을 키워, 관용적인 사회를 가져올 것이다.

그것도 난민을 동포로서 포용하려고 한 관용적인 사회는 난민의 내부에 숨어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도야, 다양한 민족이나 문화가 생생하게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에 의해, 그 사회에 종래에는 없었던 활력을 가져오는 높은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진제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에 있어, 내적인 타자를 포함한 스스로의 국민국가의 의제적 성질의 자각은 현대세계에서는 불가피적으로 생겨나는 난민을,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형식을 추구, 그것에 의해 상호 유익한 가치를 만들어 낼 주체라고 파악하는 근원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난민정책의 이념으로 생겨날 때, 난민문제는 이미 문제로서의 의미를 상실, 국민국가를 '동화 없는 통합'을 가능케 할 다양성의 공존상태로서 성숙시키고, 또는 네이션 관념을 절대시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변화시킴으로서 국민국가의 굴레 그 자체를 상대화할 적극적인 조건으로 전환할 것이다.

거기에는 난민도, 민족이나 인종이나 문화의 차이를 가지면서, 오히려 그에 더해, 배타적인 네이션의 관념에 지탱되는 기성의 국민국가의 제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사회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위치를 획득, 스스로 각인 된 타자 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진제국에 있어, 난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이 요구된다고 본다.

결 어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래 다양한 타자를 포함하고 성립된 국민국가의 의제성의 철저한 자각을 전제로, 난민 송출 국에는 '내적인 타자'를 내적인 국민적 동포로 하기 위한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정치, 경제제도의 수립이, 난민 수입 국에는 '외적인 타자'를 내적인 인간적 동포로서 받아들이는 관용적이고 성숙한 사회의 형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난민은 결국, 스스로 각인 된 이종의 타자성을 청산하지도,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 지나지 않은 비극의 주인공의 지위에서 탈각하지 못하고, 현대세계를 뒤덮고 있는 국민국가체계 가운데 스스로 있어야 할 장소를 가진 아이덴티티의 주체에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난민문제에 있어 진정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의제로서의 국민국가 가운데, 차이와 다원성을 가진 인간의 아이덴티티의 장을 어떻게 확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러한 관점은 예컨대, 버리기 어려운 단일민족 신화에 더해, 외래의 타자로서의 난민의 수입에 소극적인 나라들을 각각 문화적 개성을 가진 다양한 민족이 자기실현을 찾아 정주하기에 마땅한 열린 국제국가로 변화해 가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난민문제는 우리들의 미래와 우리들의 생활양식을 뿌리에서부터 되새기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출전 : 加藤節外 編, 『難民』, (東京大學出版會, 1996)>

난민의 정의와 국제법

물론, 그 이전에도 난민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치난민이라든가, 정치망명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보호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국가가 비호권을 행사하는 것에 의해, 그러한 사람의 입국을 인정, 재류를 허가, 혹은 제3세계에의 출국을 보장해 왔었다. 그것들은 국가의 권리로서 인정된 것으로, 의무는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비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이유로 그러한 입장에 처해 진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의식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난민을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는 없었다. 그것은 국가 재량권의 문제이며, 국내법상, 비호의 대상을 특정화할 필요는 있더라도, 국제적으로는 국가에 맡겨져 있던 것이다.

廣部和也 / 일본·成蹊大學 교수

난민은 그들이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즉 자기들의 국적 국 바깥에 있으며, 국적 국에 의한 박해나 공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적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난민들은 보호를 요구하여 타국에 입국할 경우, 입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이 처해 있는 특수 상황으로, 통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혹은 필요한 사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합법적으로 외국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비호를 위해 입국하려하는 국가가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도 아니다. 각각의 국가들의 사정으로 난민 수입에 적극적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 난민은 가끔 무국적자와 같이 취급된다. 인간 개개인들은 특정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그 국가

의 보호아래 있는 것을 전제로, 국제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국가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 국적 국이 보호를 해 주지 않은 사람은 무국적자와 같은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난민은 긴급하게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국제사회에서 난민에 관한 법의 총체를 국제 '난민 법'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법은 20세기에 들어온 후, 국제조약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난민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치난민이라든가, 정치망명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보호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국가가 비호권을 행사하는 것에 의해, 그러한 사람의 입국을 인정, 재류를 허가, 혹은 제3세계에의 출국을 보장해 왔었다. 그것들은 국가의 권리로서 인정된 것으로, 의무는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비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어

편 정치적 이유로 그러한 입장에 처해 진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식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난민을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는 없었다. 그것은 국가 재량권의 문제이며, 국내법상, 비호의 대상을 특정화할 필요는 있더라도, 국제적으로는 국가에 맡겨져 있던 것이다. 최근에는 기본적 인권보호의 입장에서 다양한 주장이 있으나, 국제관습법상의 이러한 기본구조는

오늘날에도,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량의 난민 발생을 국제적인 입장에서 보호하려 할 때, 국제적인 입장에서 난민에 일정한 평가를 부여, 국가의 재량권을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국가의 비호권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난민들에게 특정의 보호를 줄 경우, 국가의 비호권에 제한을 가하기 위한 조약이 필요하다. 그러한 조약은 대량의 난민이 생길 때 체결되어왔다. 그 최초는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 후 대량으로 발생한 러시아인 난민들에 대처하기 위한 '러시아인난민에 대한 신분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조치'(Arrangement with regard to the Issue of Certificates of Identity to Russian Refugees)였다. 그리고 1924년에는 이것이 알메니아인 난민에도 확대 됐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신분증명서의 발급에 대해서만 규정, 소위 년센스 여권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1928년에는 난민에 관한 국제협력을 더욱 진전시킴과 더불어 시

**국제난민기관(IRO;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은
제2차대전 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난민기관 헌장에
근거, IGCR과 UNRRA를 계승,
대전 중 및 그 직후에 발생한
대량의 정치난민의 구제를 위해
설립됐다. (헌장이 채택된 것은
1946년12월15일이며,
실질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것은
1947년7월1일이나,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헌장이
발효한 1948년 8월 20일이다)**

리아나 시리아 칼다 등에 확대하기 위해 3개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상 조약은 특정 그룹 난민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난민의 일반적인 보호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난민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려 하는 최초의 시도는 1933년의 '난민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조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Status of Refugees)이었다. 그 후, 독일에서의 난민이 문제가 돼, 1938년에는 '독일

로부터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Conven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Refugees coming from Germany)이 체결됐다.

그리고 제2차대전후, UN에서, 국제난민기구나 그에 이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HCHR)가 많은 난민의 보호를 담당함과 동시에,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이하, 1951년 난민조약)이 채택됐다. 특히1967년에, 1951년 난민조약의 의정서가 체결돼, 난민의 지위를 보다 일반화했다. 오늘날, 양 조약의 당사국은 1백 개국을 넘었으며, 국제법에서 난민이라고 할 경우, 통상, 이 1951년 난민조약에서 정의되고 있는 난민을 말한다. 그것은 국제연맹시대의 여러 조약들의 집대성이라고 볼 수 있다.

1951년 난민조약은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첫째, '난민'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난민의 지위를 부여한 사람에 대해서 허용되는 권리의 기본

적 현장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조약 이행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난민에 관한 조약 혹은 관련 문제는 이들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서가, 1951년 난민조약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난민의 정의에 대해서는 조약에 규정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연맹 및 국제연합에서의 난민 취급은, 조약과 함께, 다른 몇 가지의 문서가 기초가 되고 있다. 특히 국제연합에 있어서는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가 난민의 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조약상의 난민에 그치지 않는다. 또 최근에는, '경제난민'이나 '기아난민' 등의 용어 등도 범람하고 있다. 특히 난민과 구별하기 위해, '流民'(displaced persons)과 같은 용어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난민의 정의에 대해 좀더 살펴보자. 난민에 대한 정의의 기본은 1951년 난민조약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조약은 그때까지의 여러 조약들의 결과물이다. 1951년 난민조약의 난민개념에 대해서 검토, 근래의 난민 정의를 둘러싼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

국제연맹 시대

국제연맹시대에는 난민의 정의는 특정집단이나 카테고리를 전제로 했다. 최초의 1922년 조약에서는 난민의 정의 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타국의 국적을 취득치 않고, 러시아로부터의 난민으로 신분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후의 조약에서는 정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국을 벗어나 있는 사람 및 본국정부의 보호가 없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의 요건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예컨대 1926년 조약에서 러시아인 난민이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있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국

적을 취득하지 않은 러시아출신자(person of Russian origin)로 하고 있다. 여기서, '러시아 출신자'의 의미는 그 출신지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에 편입되었거나 또는 신 국가 형성 부분으로 속하는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출신이 전 러시아제국에 속하는 영토로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즉 여기서 '출신'의 의미가, 인종이나 종교가 아니라 영토가 기준이 되고 있다. 러시아인 난민의 대부분은 소비에트 법에 의해 국적을 빼앗겨 무국적자가 된 사람이나, 현재는 무국적자이긴 하나 과거 소비에트국적을 취득했던 적이 있었던가 아닌가는 문제로 하지는 않고,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 만이 기준이 되고 있다.

아르메니아 인 난민들에 대해서는 1926년 조약이 규정을 하고 있으나, 러시아인 난민과는 다소 다르다. 아르메니아인 난민이란 터키공화국 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거나 또는 이미 향유하지 않고, 또 다른 국적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했다. 즉 과거 오스만제국의 신민이었던 아르메니아 출신의 사람들을 말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정의는, 1928년 조약에서, 앗시리아인 난민, 앗시리아 칼디아인 난민, 동화난민(assimilated refugees, 시리아인이나 쿠르드인 등)의 정의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즉 이들 모두는 아르메니아인 난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족적 기준에 의해 분류되었다. 독일인 난민에 대해 규정한 1938년 조약에서도, 같은 방법이 취해지고 있으며, 이것을 발전시킨 1938년 조약은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독일국적을 과거나 현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과거 다른 국적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으로, 법적 또는 사실상 독일 정부의 보호를 향유하지 않은 것이 증명된 사람 (b) 독일영역에 정착한 후, 동 영역을 떠나, 또 법적 으로나 또는 사실상 독일정부의 보호를 향유하고

있지 않음이 증명된 사람으로, 지금까지의 조약 또는 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무국적자.

이상이 제2차대전 전의 국제연맹에서 정해진 난민관련 조약에서의 난민 정의의 개괄이다. 여기서는 난민이 된 원인을 문제화하고 있지 않고 난민인 현재의 상황에 중점이 놓여 있으며, 출신 장소나 민족을 기준으로 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이미 외국으로 떠나 있는 것과 본국 정부의 보호가 없는 것이 요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가 채용된 것은 그때까지의 난민 보호와는 달리, 조약에 의해 대상으로 되어야 할 난민을 일정의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난민 보호는 소위 '정치난민'(political refugees)의 보호로서, 국가 비호권의 문제로서 취급되어 왔으며, 정치난민의 경우는 국가에 비호권 행사의 재량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경우 기준이 되는 국내법은 여하간, 국제법상 반드시 난민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조약을 작성하여 보호를 할 대상이 되고 있는 대량의 난민들은 그 원인이나 이유가 명확하며, 보호를 부여할 범위 내에서, 그 원인을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국적난민기구

제2차대전 전의 난민에 관한 국제적인 기관으로서, 국제연맹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Office of the League of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및 정부간 난민위원회(IGCR;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Refugees) 두 가지가 있었다. 후자는, 나치 독일에서의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 1938년 프랑스에 설립됐다. 그후, 1943년 연합국은 전후 유럽에서의 대량의 유민을 구제하기 위해, 국제연합구제부흥기관(UNRRA; 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의 설립에 합의했다. 이것은 어느 것이나 다 1947년에 국제연맹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와 같이 폐지됐다.

국제난민기관(IRO;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은 제2차대전 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난민기관 헌장에 근거, IGCR과 UNRRA를 계승, 대전 중 및 그 직후에 발생한 대량의 정치난민의 구제를 위해 설립됐다. (헌장이 채택된 것은 1946년12월15일이며, 실질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것은 1947년7월1일이나,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헌장이 발효한 1948년8월20일이다) IRO는 당초부터 잠정적인 것으로 고려되고 있었으며, 그 후 난민 수의 감소에 따라 1952년3월 정식으로 해산, 그 활동은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사무소로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IRO헌장에 의하면, 국제난민기관의 임무는 부속서1에 규정된 원칙, 정의 및 조건에 따라, 난민 및 유민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것에 의하면, 유민(displaced person)이란, 나치정권, 파시스트정권, 제2차 대전에서 이들과 같은 입장에 선 정권, 연합국에 반대하여 이들 정권을 도운 것과 유사한 행위의 결과로서, 자기들의 국적 국 또는 이전의 거주 국에서 추방되었던가 또는 떠날 것을 강요당한 사람들이다. 예컨대 무리하게 강제노동에 내몰린 사람들이나, 인종, 종교, 정치적 이유 때문에 추방된 사람들이다.

이것에 대해서 난민(refugee)은 4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첫째, 자기의 국적 국 또는 이전의 거주 국을 떠났거나 또는 현재 고국을 떠나 있는 사람 및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관계없이 다음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a) 난민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나치 정권 혹은 파시스트정권 또는 그 밖의 정권의 피해자 (b) 난민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스페

인 공화국 국민 및 그 이외의 스페인의 폐랑에 당 정권의 피해자 (c)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의 이유로, 제2차대전 전에 난민으로 여겨진 사람

이상의 카테고리 중에는 제2차대전 전에 난민으로 여겨진 사람들은 거의 포함되어 있다. 앞에 언급한 조약상의 난민으로, 독일인, 오스트리아인 등은 (a)에 포함, 러시아인, 아르메니아인, 아시리아인, 터키인, 구루드인 등이 포함되는 다른, 국제연맹이사회의 결의(1939년1월19일)에 의해 난민으로 여겨진 난민들도 포함된다. 둘째로, 위의 '유민' 이외의 사람들로, 자기의 국적 국 또는 이전의 거주 국 바깥에 있는 사람 및 제2차 대전 발발 후에 일어나 사건의 결과로서, 자기의 현재의 국적 국 또는 이전의 국적 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없는 사람 셋째로, 나치에 의한 박해의 피해자,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에 억류되어 있거나 또는 거기서 도망하는 것을 강요당한 사람 및 적국의 행위의 결과로서 또는 전쟁의 상황 때문에 그들 나라에 그 후에 돌아간 사람인 유대인, 외국인 및 무국적자이다. 넷째, 전쟁고아, 양친이 없는 아이들, 모국 이외에 있는 고아들이다.

이상의 난민 및 유민들 중에서 IRO의 관심대상이 된 것은 다음의 사람들이다. (a) 이들이, 본국귀환이 가능하며, 또 그들의 귀환을 위해 IRO의 원조가 요청될 경우 (b) 그들이 자기의 국적 국 또는 이전 거주 국에 돌아가는 것에 근거가 확실한 이의를 표명한 경우이다. 근거가 확실한 이의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이견을 이유로, 박해 또는 박해의 공포 단지, 정치적 의견은 국제연합 현장의 전문에 규정되고 있는 국제연합의 원칙과 저촉되지 않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2. IRO에 의해 근거가 확실하다고 판단된 정치적 성질의 이의. 3. 앞의 박해

로부터 생긴 부당한 가족의 이유 혹은 병 또는 질환의 치유를 못한 이유 IRO는 이상의 사람들을 난민으로 취급하나, 이들 중에, 전쟁범죄인이나 인도한 범죄인 혹은 주축 국의 원조자 등,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일단 난민으로 취급된 사람이, IRO가 취급하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 예컨대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새로운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IRO현장에서의 난민의 정의에서는, 난민의 요건으로서, 처음으로, 박해 또는 박해의 공포라는 요소가 도입되었다. 이것은 난민의 집단 레벨에서의 파악이 아니라, 개인에 중점을 둔 파악인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또 본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요건도 새롭게 시도되고 있으며, 개인의 주관적 요소가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IRO현장에서는 상술한 것과 같이, 난민과 유민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유민에 대해서도, 난민과 같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난민과 구별하여, 유민의 용어가 사용될 경우, 그 개념은 반드시 명확치는 않을 뿐 아니라, 적어도, 난민의 자격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그와 유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 점에서 IRO현장에서 말하는 유민은, 이유가 명확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난민에 포함하여야 할 사람들이다.

양자는 다음에 말하는, 소위 조약난민의 카테고리 중에 들어감으로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난민'을 특정 지역 혹은 구체적으로 이미 인정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유민'으로서 일반적인 정의를 필요로 한 것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오늘날의 난민의 정의개념은 IRO현장에 있어, 명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51년 난민조약

1951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은 국제연맹 시대와 그 이후 난민 보호에 관한 제 제도를 기초로, 난민의 인권보호와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더욱 효과적 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연합총회 결의 429(V)에 근거, 1951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난민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전권회의'에서 채택됐다. (1951년7월28일에 채택돼, 1954년4월22일에 발효) 이 조약은 그때까지

거의 애매했던 난민의 일반적인 정의에 일정 기준을 설계, 난민의 비호 및 정주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지위, 직업, 복지, 행정상의 조치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1951년 난민조약은 보호의 대상을 1951년1월1일 이전에 생긴 사건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1967년에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돼, 시기적 조약을 없애고 모든 난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난민조약에서는 난민의 일반적 정의를 하기에 앞서, 종래의 제 조약에 의한 난민이라고 인정된 사람은, 이 조약에서도 난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들 조약이란 이미 살핀바 있으나, 1926년5월12일과 1928년6월30일의 조치, 1933년10월28일과 1938년2월10일의 조약, 1939년9월14일의 의정서, 그리고 국제피난민기관헌장 등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정의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자유나 안전을 향유할 수 있도록,
난민의 기본적 인권을
일반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10가지 항목으로 그 역할이
정리되고 있다.

- 1, 송환의 방지
- 2, 난민 지위의 결정
- 3, 비호의 부여
- 4, 추방의 방지
- 5, 신분증명서 및 여행증명서의 발행
- 6, 자발적인 본국귀환의 촉진,
- 7, 가족재회의 촉진
- 8, 교육을 받을 것을 촉진
- 9, 노동의 권리 및 다른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의 이익의 확보,
- 10, 귀화의 촉진 등이다.

가능한 사람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당해 상주지를 가지고 있던 나라에 돌아가기 어려운 사람) 오늘날의 난민에 대한 정의는 이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난민에는 몇 가지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동시에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국적 국 또는 상주지 바깥에 있어야 한다.

국적 국 또는 상주지에 있는 한, 난민이 될 수는 없으며, 다른 나라에 대해서 난민 지위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즉 국경을 벗어나지 않으면, 난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나라 바깥에 있는 것과 박해와의 관계다. 박해나 박해의 공포 때문에 국외로 떠난 경우는 문제없으나, 국적 국을 벗어난 후에 박해의 공포가 생겨날 경우다. 외국 체제 중에, 본국의 사정 혹은 본인 자신의 행동에 의해, 난민, 그 밖

(인종, 종교, 국적 혹은 특정의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일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국적 국 바깥에 있는 자로, 그 국적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국적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및 상주지를 가지고 있던 나라 바깥에 있는 무국적자로, 당해 常住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돌아가는 것이 불

의 요건이 구비될 경우, 재외현지난민(refugees sur place)에 대해서도, 나라 바깥에 있는 것이 박해를 직접의 이유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무국적자의 경우 상주지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된다. 상주지란 어떤 사람이 상당기간 특정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상당기간 체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과거에만 그치지 않고, 장래 확실한 가능성도 포함되고 있다.

다음에, '박해를 받을 위협성이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라고 하는 요건이다. 난민의 법적 개념의 중심적 요소라고 말하고 있으나, '박해'(persecution)의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고, 이 용어 자체가 다의적이기 때문에, 해석도 다양하다. 즉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생명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에 처해 있다는 상황에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상황은, 가끔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인권존중의 입장을 보다 강조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해석을 인정하려 하는 것과, 생명이나 육체적 자유의 박탈 등 외관적으로 명확한 상황에 한정해야 한다는 한정적인 해석을 취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적어도 살상, 구금, 생활수단의 박탈 등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인내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오는 공격 내지는 압박으로, 생명,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의 침해 또는 억압 및 그 밖의 인권의 중대한 침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 침해라고 하는 개념은 여전히 다의적이며, 구체적인 판단으로는 곤란한 장면도 있다.

이점, 예컨대 새로운 체제 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단순히 스스로의 생활을 경제적인 의미에

서 보다 잘 하고 싶다고 하는 이유일 경우에는, 난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즉 경제적인 이유로는 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인종이나 특정의 사회집단에 대한 경제적인 차별이나 불리한 취급이 이뤄져, 그러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회적 집단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박해를 이유로 난민 청구를 한 경우는 어떨까? 박해라든가 공포의 관념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의 사회집단, 정치적 의견과 같은 특정 이유가 단일의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나, 그런 이유가 상호 혹은 다른 사정과 연결하여 생길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것에 따라서 박해의 태도도 복잡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박해에는 그것을 가하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박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질 경우는 분명하나, 반드시 국가기관에 한하지 않고, 개인에 의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경우는, 합법적으로 행해질 소추나 처벌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 경우도, 명시되고 있는 이유가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범죄의 소추나 처벌, 객관적인 혐의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소추나 처벌, 통상범죄에도 인종이나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부당한 엄중한 취급이 일어날 경우, 혹은 불법출국에 대한 처벌 등이 해당될 것이다.

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 (well-founded fear)의 개념도 분명치는 않다. 공포라고 하는 관념은 본래 주관적인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의 개념은 객관적이지 않으며 거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는 공포라고 하는 관념은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라는 이중의 요소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하나의 상황이,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상당한 공포를 느끼지 않더라도, 다

른 사람에게는 대단한 공포감을 가지는 것은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공포라고 하는 점만을 문제로 한다고 하면, 어느 특정인이 진정으로 공포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것만으로도 난민으로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특정의 이유에 근거한 박해라고 하는 개념을 전제로 한 공포이며, 또 충분히 이유가 요구되는 이상, 거기에는 일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 말할 것도 없이, 이유도 없는 공포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봐서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의 판단은 결국 각각의 체제 국에 맡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제2의 요건에 대해서 무국적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요건으로서 박해의 공포가 부가되어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도 박해의 공포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는 의견의 나뉘질 것이다.

셋째로, 특정한 박해의 이유도 중요한 요건이다. 외국에서,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귀국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홍수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 혹은 그러한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에 의한 기아 등은, 난민조약의 정의에 구체화되고 있는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의 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의견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정치난민이라든가 정치망명자라고 불려져온 것과는 무관치는 않다.

이런 이유는 다소간, 직접 정치적 상황과 연결되고 있다. 정치적 의견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박해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 인종차별정책이나 침략의 제창 등 국제연합의 원칙에 반하는 것 같은 의견을 주장할 사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조약의 예외자 대한 규정에서도 분명하다.

넷째, 국적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자, 또 무국적자에 대해서는 상주 국에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 그 대상으로 인정되어왔다. 특히 이와 더불어, IRO 이후,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것을 바라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난민의 의사를 존중하려 하는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 측면이 강조돼, 인권에 대한 배려가 높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재외에 있어 본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국민이라면 당연히 받을 것이 가능한 여권이나 각종 증명서의 발행 등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조나 보호를 거절당한 경우다.

이렇게 볼 때, 난민 지위를 부여할 가 아닌가의 판단은 미묘한 정치적 고려와 연결되기 쉽다.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이 도망해온 본국 혹은 상주 국의 어느 나라와 상주국의 국내정책에 대한 비판, 비난이 되거나, 또 그것에 의해, 양국의 관계가 악화 야기된다고 한다면, 당해 국가는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1951년 난민조약은 당초, 제2차대전 직후의 유럽에서 많은 난민, 유민의 상황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으며, 또 그러한 사람들에 무엇인가의 보호를 하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조약에 가입할 국가는 그 의무를 가능한 한 구체화, 특정화하고, 의무의 범위가 불명확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상당히 사정이 달라졌다. 오늘날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은 조약에 규정되고 있는 난민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는 국제연합의 보조기관으로서 설립됐다. UNHCR은 난민 보호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그 기능이나 역할 혹은 권한 등은, 그 규정에 규정돼 있다.

그 실제적 활동은 다양하나, 보호활동은 전체적으로 보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혹은 자유나 안전을 향유할 수 있도록, 난민의 기본적인 권을 일반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10가지 항목으로 그 역할이 정리되고 있다. 1. 송환(refoulement)의 방지 2. 난민 지위의 결정 3. 비호의 부여 4. 추방의 방지 5. 신분증명서 및 여행증명서의 발행 6. 자발적인 본국귀환의 촉진 7. 가족재회(family reunion)의 촉진 8. 교육을 받을 것을 촉진 9. 노동의 권리 및 다른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의 이익의 확보 10. 귀화의 촉진 등이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UNHCR이 채용하고 있는 난민의 정의는 UNHCR 규정에 규정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1951년 난민조약과 다르지 않다. 먼저, 종래의 난민에 관한 여러 조약에서 인정된 소위 '규정상'의 난민(statutory refugees)에 대해서는, 1951년 난민조약과 동일하다.

즉 UNHCR규정에 의하면, 다음 다섯 가지가 요건이 규정되고 있다. 1. 자기의 국적 국, 또는 무국적의 경우는 이전의 상주국 밖에 있을 것 2. 국적 국이나 상주지를 가지고 있던 나라에서 박해를 받을 위협성이 있다고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을 것 3. 인종, 국적 등 일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 4. 1951년1월1일 이전에 생긴 사건의 결과 일 것 5. 국적 국 또는 상주지를 가지고 있던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바라지 않은 것.

첫째, 1951년 난민조약에서는(1951년1월1일 이전에 생긴 사건)의 정의를 하고 있으나, UNHCR 규정에는 이런 규정은 없다. UNHCR 쪽이 당초부터 장소를 유럽에 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당초 이 점은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된 이후와 같다. 둘째, UNHCR규정에는 박해의 이유로 '특정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용어는 당초, 1951년 난민조약에서도 최종단계에서 삽입된 것이나, 그 밖의 이유를 넓게 해석하면, 이 용어의 범위는 카바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UNHCR규정에서 이것을 제외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로, 1951년 난민조약에서는 국적 국 또는 상주국에서의 박해를 받을 공포를 이유로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던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UNHCR규정에서는, 보호를 받는 것의 불가능한 이유로서, 그러한 공포 이외에, '개인적 상황 이외의 이유'(resons other than personal convenience)가 인정되고 있다.

이 표현은 1938년2월10일의 조약에서 채용한 것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과거에 받은 고통을 고려한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1951년 난민조약에서는 제1조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전혀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이상과 같이 보면, 1951년 난민조약과 UNHCR 규정에서 대상으로 하는 난민은 같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난민 조약 쪽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한 변할 수는 없는 것이나, UNHCR은 국제연합의 보조기관이며, 국제연합의 지시에 따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1951년 난민조약과 UNHCR 규정은 그것에 대한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

1951년 난민조약의 정의 규정인 제1조 A항은

조약상의 의무의 인적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말할 것도 없이, 조약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 그것 자체가 국제법의 법원이다. UNHCR규정에는 국제연합 총회 결의로서 성립한 것이며, 그 제6항 A(2)는 UNHCR의 권한행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UNHCR은 규정에 구속돼,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임무를 행함과 동시에, 특히 국제연합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운 임무를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결과 양자에는, 대상으로 하는 난민이 다르다. 난민조약에서 난민의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은, 개인에 한하는데 반해, UNHCR에서는 난민의 집단에 중점이 있다. 당초 정의가 거의 같은 것은, 취급 대상도 같아야 할 것이며, UNHCR의 경우도, 규정을 엄밀히 적용한다고 하면, 난민 심사와 인정은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UNHCR규정에는, UNHCR의 활동은 그룹이나 카테고리의 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UNHCR가 취급해온 난민문제는 집단으로서의 난민에 관한 것이었다. 그 결과 UNHCR이 취급하는 난민은, 1951년 난민조약에서 정의된 난민은 물론, 그것과 거의 같은 UNHCR 규정에서 정의된 난민에도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당초, UNHCR의 활동대상이

UNHCR의 활동에서 난민에 대한 정의는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확대된 부분의 '권한 외의 난민'이나 '유민'의 정의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인도적인 요청과 현실에 대응하여 UNHCR이 취급하는 인적대상을 확대시키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난민의 전통적인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난민에 유사한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들의 그룹이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UNHCR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집단이며, 그 권한의 인적 범위는 당초부터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UNHCR는 국제연합총회의 보조기관으로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연합총회가 스스로의 임무를 위해, UNHCR규정에 따라, UNHCR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제연합은 그 권한을 일탈하지 않는 한, 또 UNHCR 규정의 범위를 초월하지 않는 한 인정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단계에 따라 행해졌다. 최초의 제1단계는 총회결의 1388(14)(1959년11월20일)에 근거, UNHCR에 알선(good offices)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 본래의 대상이어야 할 난민관은 별도로, '국제연합의 권한 외의 난민'을 취급하는 것을 인정, 기부의 전달, 알선 등, 이에 대해 일정의 관여를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것에 의해, UNHCR은 그 규정에 정의된 난민이외의 난민 그룹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제2단계는 총회결의 1673(16)(1961년12월18일)에 근거, 종래의 권한내와 권한외라고 하는 분류를 없애고, 보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UNHCR은 고등판무관이 알선을 행하는 난민그룹(good offices refugees)과 UNHCR규정에 근거한 난민(mandatory refugees)에 대하여 원조하게 되었다. 제1단계와는 달리, 양자가 같은 기반에 선 것이다.

제3단계는 총회결의 2039(20)(1965년12월7일)에 근거, 종래의 2종류의 난민에 대한 구별을 폐지하여 양자를 통합, 어느 것이나 UNHCR의 권한 아래, 적절한 국제적 보호를 확보, 난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만족하게 하는 항구적 해결을 부여할 목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2종류의 난민은 구별 없이, UNHCR의 보호와 원조를 받을 자격이 인정된 것이다. 제4단계는 총회결의 2958(27)(1972년12월12일)에 근거, 난민과 함께 유민(displaced persons)에 대한 원조를 명확히 했다. 이것은 수단 난민에 대한 결의였으나, 그후 유민 현상은 일반화해, 국제연합은 총회결의 3454(30)(1975년12월9일)에 의해, 난민 및 유민을 위한 UNHCR의 활동을 훌륭한 인도적 성격의 것으로 인정했다.

이상과 같이, UNHCR의 활동에서 난민에 대한 정의는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확대된 부분의 '권한 외의 난민'이나 '유민'의 정의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인도적인 요청과 현실에 대응하여 UNHCR이 취급하는 인적대상을 확대시키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난민의 전통적인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난민에 유사한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들의 그룹이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UNHCR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희생자이며, 생활의 장소를 빼앗기고, 가정을 잃는 상황에 있으며, 무엇인가 국제적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유민의 용어는 이미 IRO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오늘날 UNHCR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민과는 다른 것은 이미 지적했다. 또 UNHCR에서도 유민의 정의로서, 엄밀하게는 난민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나, 이것에 유사한 사람을 말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했다.

이프리카통일기구조약

1960년대 중반부터, 독립전쟁이나 내란 때문에, 정치상황이 불안하게 되고, 아프리카에서의 대량의 난민이 배출 되었다. 이것에 대응하여, 아프리카통일기구(OAU)는 독자의 난민조약을 작성했다. 1969년9월10일, 아디스 아베바에서의 개최된 OAU총회는 수년간을 거쳐, '아프리카에서의 난민문제의 특정 측면을 차지하는 아프리카통일기구조약'(이하 OAU난민조약)을 채택했다.

OAU난민조약은, 1951년 난민조약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그 보편성, 일반성을 전제로,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정한 측면을 취급, 지역적 보완물로 존재하는 것이다. OAU난민조약은 난민 보호에 관한 유일한 징계적 조약이며,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며, 난민의 정의도 그 하나다. OAU난민조약은 난민의 정의로, 1951년 난민조약의 정의를 그대로 계승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난민'이란, 출신 국 또는 국적 국의 일부 혹은 전부에서, 외부로부터의 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 또는 공공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한 사건에 대해, 출신 국 또는 국적 국의 바깥 장소에 피난키 위해 상주 지를 떠날 것을 강요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제1조2)

이러한 난민에 대한 정의는 1951년 조약에서 정의되고 있는 본래의 난민에 더해, 전쟁이나 내란 혹은 항쟁의 결과로서 사회적, 정치적 동란 때문에 고국을 잃은 사람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UNHCR이 그러한 것처럼, 아프리카에서의 다양한 난민을 보호키 위해서는 1951년 난민조약의 정의로는 불충분했다.

이 정의에는 박해나 박해의 공포라고 하는 요건은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 공공질

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어느 것이나, 난민자신의 개인적인 자질과는 관계없는 인위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다.

결 어

이상으로, 난민 정의에 관한 주요한 문서들을 개괄해 보았다. 난민문제에 대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난민문제의 해결은 난민의 정의에서만 어떤 결론이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일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상황이나, 측면이 서로 복잡하게 얽힌 복잡다단한 문제다. 또 문제의 해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의의 문제에 국한하더라도, 이러한 개관만이 아니라, 특히 국내법의 상황과 보호의 양태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실제의 난민 인정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그것은 개별 국가들이 조약과 함께 스스로의 국내법에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조약 당사국은 조약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국내법이나 국내절차를 제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난민문제의 경우도 그러하다. 또 정의는 인적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난민이 전부 같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닌 이상, 개인과 집단, 정주적인 보호와 일시적 보호, 보호와 원조 등 몇 가지의 분류는 대상으로 하는 인적범위와 그것에의 대응의 내용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정의를 개괄한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도 있으나, 결코 그렇지는 않다. 정의는 문제점토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난민문제를 검토할 경우, 먼저 난민이란 무엇인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제한된 고찰이기는 하나, 결론에 대신하여 몇 가지 점을 지적해 본다.

첫째, 난민과 유민의 문제다. 이 구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위에서 보면 적어도 난민의 정의는 확실하다. 1951년 난민조약에서 명확히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의도, 그때까지의 누적된 것에 의한 것이며, 선진국에서는 이론 없이 받아들여진다. 개개의 구체적인 인정은, 국가별 조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판단에 독자적인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의미의 정의는 명확한 것이다. 문제는 이 정의 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이다. 유럽 주요 국에서, 망명 신청자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자 전체의 약 8%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난민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그 두배 정도는 있다고 생각된다. 즉 신청자체에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전체의 25-30%정도다. 거기에 유민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소간의 원조나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유민의 개념은 난민에 비하면 명확치는 않다. 그러나 난민과 유사한 사람들라는 것은 분명하며,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유민이 현상적으로 난민과 같다고 하는 것과 함께, 그 정의 면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조약이나 국제문서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한에서는 박해나 박해의 공포의 개념 유무가 그 최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발생원인과도 관련되어 있다.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이 원인이라면, 박해나 박해의 공포에 연결되는 것은 용이하다. 개념상은 같은 원인이라도, 박해 유무의 차이는 크다. 또 박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들과 유사한 개념, 즉 전쟁이나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동란이 전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개념을

포함하면, 대상이 된 인적범위가 상당히 애매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현상은 다양하며, 늘 정의가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로, 어떤 내용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난민과 유민의 분류를 재편하여, 피보호민(protected persons)과 피원조민(assisted persons)으로 나누려는 제안이 있다. 이것은 난민에 대한 대응을 정의와 연결시키려 하는 생각이며, 어떻게 수호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에 의해 인적 범위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호란, 소위 국가와 국민이라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그 관계가 기능하지 않게 된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국제관계에 새로운 보호형태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다. 무국적자, 1951년 난민조약 및 UNHCR 규정상의 난민, 그 밖의 인도적 견지에서 같은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다. 원조는 일시적으로 자국 밖에 있으며, 일시적인 비호를 받을 것을 필요로 하고 있을 경우이며, 국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다. 유민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나, UNHCR의 알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셋째로, 난민문제에 대한 국가와 국제조직의 대처 혹은 권능의 차이에 대해서다. 특히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을 것이다. 개별국가가 법적인 의미에서 각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1951년 난민조약 상의 난민으로, 소위 개인을 기조로 제정된 제도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조직의 경우는 보편적인 국제조직이라면, 국제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또 지역적인 국제조직이라면, 그 지역 전체의 입장에서, 난민에 대처할 것이 의무 지워져 있음과 동시에, 그것을 임무로, 그를 위한 권능이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현상적으로 대량의 난민 혹은 난민과 유사한 유출자가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어느 것이나, 인도적 혹은 인권옹호의 입장에서의 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국가의 경우에는 비호권과의 관계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 국제조직의 경우는 오직 옹호의 관점에서만 파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국가는 이것에 대해, 스스로가 가맹하고 있는 국제조직에 대한 의무로서 협력을 하는 것이며, 소위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국가와 국제조직의 역할 권능이 다르다고 하면, 그것에 대응한 정의가 있는 쪽이 좋게 될 것이리라. 그래서 국제조직에서의 국제협력 및 국가에 있어서의 법적 의무와 협력의 태도가 요청되는 것이다.

넷째, 인도적 혹은 인권의 보호와 난민문제와의 관계다. 난민을 어떻게 정의하려 해도, 인도적인 관점에서는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보호나 원조를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면, 정의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호해야 할 인적 대상의 범위는 어떤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1951년 난민조약은 인도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인정 아래, 국가의 비호권을 제한하기에 충분한 인적범위는 어떤 것인가를 규정했다. 다시 말해, 일정의 이유에 근거 유출해 온 사람들과 인도 혹은 인권의 보호의 관계와 의미를 묻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문제는 실제의 난민인정 절차와도 관련이 있다. 전술한 것과 같이, 난민신청 가운데,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전체의 겨우 30%로, 70%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절차에 1-2년간을 필요로 하고, 그 사이는 신청자들의 생활을 각국이 보장하지 않으면 안되며, 특히 신청이 각하 되더라도, 체제자격을 잃은 사람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은

인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실현하기 어렵다. 때문에 신청을 각하당한 사람들의 80%가 불법 체류자로 지내고 있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구조 변화와의 관계다. 냉전이 끝나, 동구의 소실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구조는 크게 변화했다. 이것이 난민문제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 1990년대에, 유럽에서의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80년대 중반까지는 동서대결 가운데,

정치적 이유가 난민을 수입하는 전제가 되었다. 종래의 난민 정의의 중심에는 이데올로기상의 대립이 있고, 정치적 요인이 배경에 있었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었다. 동서대립에서 남북간 격차문제로 옮겨져, 많은 사람들이 풍부함을 찾아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 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난민의 정의에도 유민의 정의에도 해당치 않고, 배척되어야 할 사람으로 여겨져, 적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하나는, 본래의 보호되어야 할 난민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보호나 원조와는 무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후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변동을 이유로 한 경우, 혹은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기아의 상황에 있는 난민의 보호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 가

**난민신청 가운데,
승인은 전체의 겨우 30%로,
70%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절차에 1-2년간을
필요로 하고, 그 사이
신청자들의 생활을 각국이
보장하지 않으면 안되며,
특히 신청이 각하 되더라도,
체제자격을 잃은 사람들을
국외를 추방하는 것은
실현키 어렵다.
때문에 신청을 각하당한
사람들의 80%가
불법 체류자로 지내고 있다.**

가 문제가 된다.

여섯째, 국가의 기본적 요소에 대한 의문이다. 1951년 난민조약에서의 난민의 정의는 전통적인 인적 관할권을 가진 국가와 사람들과의 연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적을 기본적인 전제로, 개개인들의 특성의 이유와 국적 국과의 관계가 명확히 됨으로서 비로소 난민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인적유출 현상만이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유불문하고 국가는 대량의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가. 또 대량의 난민을 배출하는 국가란 도대체 어떤 나라일가 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항구적 인민은 명확한 영토나 정부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국적이라고 하는 유대에 의해 개인을 연결, 일정한 보호를 행해 왔다. 그러한 기본적 요소의 하나가 대량으로 유실하는 것을 간과, 하등의 보호를 부여하려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국가성에 대한 배려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또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에 있어서도, 대량의 난민이 유입해 온다고 하는 사실은 종래의 외국인의 법적 지위라고 하는 입장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보면 국가의 인적 관할권의 의미가 재해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출전 : 加藤節外 編『難民』(東京大學 出版會, 1996)>

기획망명후의 탈북자문제 해결방안

탈북자 해결방식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의 중심에는 중대한 난점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는 각국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다는 점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각국이 원칙적인 논리와 실제사이에서 상호 모순된 입장과 처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난민지위 인정 여부는 그것의 인도주의적 관점의 적용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전체에 대한 집단적 부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한국정부의 개입이라는 것이 외교적 노력 이외에 법적 원칙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강권찬 /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기획망명’의 성과와 한계

지난해 6월 장길수 가족이 중국 베이징의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에 진입한 뒤 이른바 ‘기획탈북’¹⁾이 줄을 잇게 되었다.

2002년에는 스페인·독일·미국대사관과 선양주재 일본·미국총영사관에 이어 그동안 ‘기피대상’이던 한국대사관까지 탈북자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최근 기획탈북은 재외공관으로의 망명과 더불어 대규모 보트피플화를 통한 망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탈북자들의 이런 움직임은 인권·인도적 문제 뿐 아니라 중요하게는 현실 정치적으로 중국·북한과의 외교문제 등 복잡한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일본대사관과 한국대사관 진입시 불거진 ‘외

교적 문제’와 일본으로의 보트피플의 실패후 북송 및 제3국추방 논쟁 등 탈북자 문제가 언제든 동북아의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국 정부는 1999년 이후 한국의 종교그룹, 특히 기독교그룹 활동가들의 중국내 활동에 대한 경고를 한국정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후 현장에서 압박을 느낀 활동가들이 탈북자 문제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상황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²⁾.

한국과 중국정부가 ‘조용한 외교’로 처리하면서 연간 수천명의 탈북자들이 체포돼 송환되는 것을 지켜본 NGO 활동가들은 탈북자 문제를 국제화·여론화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탈북과 공관진입에 대한 기획’, ‘보트피플 기획’으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1) 용어가 정확하지는 않다. 기획탈북 또는 망명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두가지 모두를 적절히 사용하기로 하였다.

2) 『조선일보』 7월2일자.

할 점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기획탈북이 한국의 NGO가 아니라 국제 NGO 네트워크가 주도해 국제여론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더군다나 공관침입과정에 대한 치밀한 사전 시나리오와 언론방송용 '몰래 촬영'을 통해 여론화를 극대화시키는 치밀함도 보여줬다.³⁾

일본공관침입의 실패와 보트피플의 실패 등 일부의 기획탈북이 직접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과를 내었다는 국내외의 평가가 따르고 있다.

기획탈북의 가장 큰 성과는 첫째, '탈북자'의 국제여론화에 있다. 지원세력, 호소대상, 연관국가, 처리방식 등의 면에서 예전의 탈북자 문제와 확연한 차이가 표출되었다. 비정부 기구가 중심이 되고, 그 기구가 국제적으로 조직화하여 국제여론을 집중시켰다. 탈북자 처리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 문제로 부각되고, 그 결과 한반도를 둘러싼 이 지역의 안보와 연관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둘째, 국제여론화를 통해 중국정부의 새로운 외교양식을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어찌되었건 탈북자들은 대부분 제 3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으며 특히 지난 6월 25일 한국공관에 진입했던 탈북자 26명이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보트피플의

**기획탈북은 재외공관으로의
 망명과 더불어 대규모 보트피플화를
 통한 망명으로서까지 이어지고
 인권·인도적 문제뿐 아니라
 중요하게는 현실 정치적으로
 중국·북한과의 외교문제 등
 복잡한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일본대사관과 한국대사관
 진입시 불거진 '외교적 문제'와
 일본으로의 보트피플의 실패후
 복송 및 제3국추방 논쟁 등
 탈북자 문제가 언제나 동북아의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경우에도 강제복송보다는 중국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한국 또는 제3국으로의 송환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기획망명의 형태로 중국 외공관 시설에 들어갔던 탈북자 처리가 사실상 정리됨으로써 새로운 외교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정부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탈북자 문제를 가지고 협상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전은 공식적으로 탈북자 문제가 조-중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중간의 문제임을 중국정부가 인정한 것이자 중국 외교가 새로운 양식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획탈북은 향후 중국이 가부간에 정책적 결단을 불가피하게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단기적으로 현장 탈북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탈북자 문제 처리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해지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반면, NGO들이 기획한 탈북은 방법론상의 미숙함과 함께 결과적으로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일부 NGO들이 의도와 관계없이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지나치게 언론에 의존하는 편협성을 드러낸 측면도 있다.

NGO는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은 있지만 해결할 능력은 없다. 특히나 현장에 남은 탈북자들의

3) 『한겨레21』, 2002년 7월.
 4) 『한겨레신문』, 6월 28일자.

생존권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 최근 중국공안당국의 탈북자에 대한 검거선봉과 중국 내 탈북자 관련 NGO 활동가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탈북자 신고시 상금까지 내걸고 있어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머물고 있는 조선족 사회의 공동체 위기마저 예견되고 있다. 더욱 어려워진 것은 탈북자들의 생존권 문제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심지어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충격적 보도는 더욱 어려워진 탈북자들의 생존권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기획탈북은 무엇보다 탈북자들을 어떻게 중국에서 탈출시켜서 한국으로 데리고 오느냐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즉, 탈북자에 대한 장기적인 인권의 관점과 남아있는 탈북자의 생존권 확보가 기획탈북에 의해 더욱 어려워지는 역설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공관진입을 통해 한국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을지언정 이것이 근본적인 또는 또 다른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많아야 수천명에 불과할 것이며 중국내 모든 탈북자를 포괄할 수도 없다. 더군다나 공관진입에 대한 중국공안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정부의 ‘조용한 해결’ 정책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제, 한국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한반도의 미래 통합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탈북자 정책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새로운 정부의 탈북자정책은 이전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과거 정부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보게 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원-원 계

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북한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나 핵문제 해결이후 이에 대한 평화정착의 확고한 단계로의 발전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북한과의 원-원계임도 가능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탈북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탈북자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기획탈북 이후 변화된 지형속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와 해결을 가능할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인황과 실태

탈북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현황과 실태조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몇몇 시민단체의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이거나 정확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어느정도 규모의 탈북자가 중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원집계도 수천명 수준에서 수십만명 규모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며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바로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분석은 향후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특히, 탈북자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해결방안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지원방법이 보다 면밀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탈북자 현황과 유형

탈북자 규모에 대해 중국측은 비공식적으로 7천~1만명, UNHCR은 3만명 우리 정부는 약 1만~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영리 인권단체인 미국 난민위원회(USCR)는 6월 연례 세계 난민

표1- 조사 단체별 탈북자 현황

조사단체	중국정부	한국정부	미국 난민위원회 (USCR)	유엔고등 판무관실 (UNHCR)	불교운동 본부	'좋은 벗'	국내 시민단체
탈북자수	7천-만명	1만-3만	5만	3만	10만	14만-20만	30만

출처: 미국난민위원회, 「난민실태보고서」(2002), 좋은 벗들,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1999)와 정부 보고서 자료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종합하였음

표2- 거주지 대비 난민의 비율

지역	총주민수	조선족주민수	유민수	주민기준비율	조선족기준비율
연변	829,582	416,236	15,525	1.9%	3.7%
동북 3성	822,598	259,329	12,947	1.6%	5.0%
총계	1,652,180	675,565	28,472	1.7%	4.2%

출처: 좋은 벗들,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실태조사보고서에서 지난 해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 수가 5만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수천명이 북한에 강제송환되고 538명만 한국에 들어오는데 성공했다는 집계가 나왔다.⁵⁾

현지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NGO 단체들은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부기구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탈북자를 파악하고 있다. 불교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현지에서 보고들은 바를 기초로 추측하기로는, 유동적이긴 하지만 대략 10만 명 정도가 중국에 들어와 있다고 본다.

특히 99년 동북3성을 중심으로 탈북유민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대표적인 탈북지원단체인 '좋은 벗'은 99년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를 통해 29개 마을을 현지조사한 결과 조선족 사회를 중심으로 탈북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략적인 비율을 바탕으로 최소 14만명에서 최대 20만명이라는 기준을 내린 바 있다.⁶⁾

탈북자 규모가 최소 14만에서 최대 20만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다. 국내 탈북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최대 30만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불교운동본부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난민 가운데 함경북도(59.6%)와 함경남도(20%) 출신이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함경남북도 출신이 이처럼 많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사가 무엇보다 연변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는 점과 함께 함경북도 출신이 가장 많은 것은 조선족 집단거주지인 연변지역과의 지리적 인접성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량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출신보다 함경남도 출신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함경남북도의 식량난이 가장 심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량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출신의 난민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교통 조건과

5)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한국 홈페이지(<http://www.unhcr.or.kr>)와 난민구조기독교활동가단체 피난처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현황자료를 찾아볼 수 있음(<http://pnan.org>).

6) 실제 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난민의 비율을 통한 간접적인 파악이다. 좋은 벗,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서울:1999).

도강 조건(강폭, 수심, 지형, 감시 등)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면담 대상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남자가 52.2%, 여자가 47.8%로 남자가 약간 많다. 연령별 구성을 보면, 30대(33.8%)와 40대(28.1%)가 가장 많고, 그 뒤로 50대(15.8%), 20대(15.1%), 60대(5.0%), 10대(2.0%), 70대 이상(0.2%) 순으로 이어진다. 현지에서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10대와 20대 초반 연령층에 해당하는 난민의 수가 실제보다 적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꽃제비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여 면담 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는 점과 관련된다.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난민들의 직업 분포를 보면, 생산직 노동자가 5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직업(15.3%), 사무직 노동자(13.8%), 농민(5.3%)이 그 뒤를 잇고 있다.⁷⁾

탈북자들의 구성을 통해서 보자면 30-40대의 노동자들이 함경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연변 쪽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탈북자의 현황은 인권실태와는 또다른 측면에서 탈북자문제의 쟁점이 되어왔다. 왜냐하면 탈북자의 규모야 말로 사안의 심각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탈북자 규모가 10만을 넘어선다고 보았을 때에는 동북아 각국의 이해관계와 더불어 체제적 문제까지 포함될 수 있는 수준의 규모로 분석될 수 있다.

사태의 탈북자의 규모가 조사단체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탈북자의 유형 중 어디까지를 '난민'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탈북자가 유동적이거나 탈북자의 현지조

사에 중국정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내·외적 조건과는 또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탈북자 현황파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탈북자의 유형이다. 사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 필요한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하고는 바로 북한으로 돌아간다. 중국이나 한국, 또는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실에서는 이들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정치적인 망명자의 성격은 사실상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과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약 1-3만 정도의 규모로 탈북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일 것이다.

하지만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이들이 검거되어서 북한으로 되돌려질 경우 처벌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과 함께 생존권과 인권의 심각한 위협에 놓이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밖에 없으며 시민단체가 이들 모두를 탈북자라고 규정하는 것도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탈북자의 현황 그 자체 보다는 탈북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탈북자 문제에 해결에 대한 보다 전진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의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크게는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⁸⁾ 제1유형은 단순히 중국에서 양식만을 구한 후 북한으로 바로 귀환하는 집단이다. 제2유형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은신처와 일자리를 구하여 정착하는 집단이며 제3유형은 망명을 위하여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이동하는 집단이다. 북한에서 중국을 오가는 사람의

7) 장수현, "중국 접경지대 북한 난민의 실태와 인류학적 연구"

8) 분류유형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대학 세분류를 따르는 것이 탈북자 연구자들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도 이러한 분류를 따랐다. 제성호, '북한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북한연구 1994 가을호

숫자는 일정하지 아니며 계절, 상황등에 따라 수시로 달라진다. 예컨대 중국과 북한에서 탈북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되는가의 여부는 탈북의 추세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제1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에서 흔히 탈북자로 인식되는 경우는 제2유형, 또는 제3유형이다. 제3유형이 극소수이고 탈

북이 성공할 경우 망명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권과 생존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제2유형에 속한다.

난민지위를 인정하느냐와 인정하지 않느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제2유형의 경우 때문이다. 또한 제2유형의 경우에도 중국내 장기간 체류이후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경우다.

또한 제2유형의 탈북자는 신분이 매우 불안정하다. 그들의 중국체류는 그야말로 불법체류이다.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사회주의국가에서 살아온 관계로 자본주의적 노동관계에 전혀 익숙하지 못하며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시피 하다.

여성의 경우에는 사창가에 해당하는 안마시술소 같은 곳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국의 농촌총각에게 매

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윈-윈 게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북한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나 핵문제 해결이후
이에 대한 평화정책의 확고한
단계로의 발전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북한과의 윈-윈게임도
가능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탈북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매혼의 형식으로 시집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안마시술소나 농촌총각들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아예 북한에 건너가서 떠돌아 다니는 여성들을 수소문하여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국의 입장은 제2유형의 대부분을 제1유형으로 축소 파악하는 입장이기에 난민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게 되며 NGO는 1유형과 2유형을 광범위하게 '난민'

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다. 반면 한국은 헌법상 1유형이든 2유형이든 모든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NGO의 압력과 중국 정부사이의 국제법상의 모순을 겪고 있으며 공신력있는 국제단체의 경우에도 2유형에 대한 난민판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여진다.

6개월 미만을 제1유형으로 잡을 경우 대략 70% 즉, 좋은 벗이 파악한 전체 난민 약 14만-20만의 경우를 대입해본다면 대략 10만-14만이 된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의 제2유형은 4만-6만 가량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난민위원회에서 파악하는 5만과 추정치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1년미만의 거주를 제1유형이라고 볼때는 제2유형은 1만 5천에서 2만 가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유엔고등판무관실에서 한국정부까지 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조사단체 별로 탈북자의 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은 탈북자의 제2유형의 경우를

표3- 탈북자 거주기간

거주기간	탈북자 수	백분율(%)	유효백분율(%)	누적백분율(%)
15일 미만	6,729	22.1	22.4	22.4
1개월 미만	4,476	15.7	16.0	38.4
3개월 미만	3,327	11.7	11.9	50.3
6개월 미만	5,815	20.6	20.9	71.1
1년 미만	5,001	17.6	17.8	89.0
3년 미만	3,085	10.8	11.0	100.0
총계	28,472	98.4	100.0	

출처: 좋은 벗,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1999).

‘난민’이라 보고 제2유형의 거주 기간을 어느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과연 제1유형에 속하는 최소 10만에서 최대 18만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좁혀질 수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제2유형에도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제1유형까지도 난민으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탈북자는 단순하게 파악될 수 없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탈북자문제는 탈북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그 추세를 파악하며 대책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탈북자 해결에 있어 제3유형의 망명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개입과 국제사회의 정당한 개입이 요구되어 질 수 있으며 제1유형의 경우에는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위한 경제지원 방식을 통해 체제안정화를 꾀하는 보다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2유형은 두가지 모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고려가 부가 되어야할 것이며 탈북자 해결방안은 제2유형에 보다 집중적인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탈북자의 실태

대다수 난민은 오래 체류하지 않고 돈이나 식량을 구하면 금방 돌아간다. 이들은 중국쪽 조선족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강아지, 숟가락, 젓가락, 칼, 고춧가루, 명태, 미역, 골동품 등을 가지고 와서 식량이나 현금으로 바꿔 간다고 한다. 목적인 바를 이루게 되면, 이들은 대개 기다리고 있는 굶주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북한 쪽으로 되돌아갔다가 사정이 나빠지면 다시 국경을 넘는 난민이 된다.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안전한 피신처를 갖게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난민들에 대한 중국 공안당국의 단속이 심해지고 난민을 돕는 사람들에게 몇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경 조치를 시행하면서 도움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남자들 중에는 산간지역의 탄광, 채석장, 임업장, 양돈장 등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보통 하기를 꺼리는 일터에서 막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농번기 때는 일손이 모자란 중국 농촌 곳곳에서 일꾼 노릇을 하기 위해 넘어오는 난민들도 있다.

여자들 중에는 기름집, 노래방, 식당, 심지어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신분이 드러나 붙잡힐 것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일이 거의 없다.

난민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때때로 실컷 일해 주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발되어 체포되기도 한다. 접경지대의 여러 도시지역에는 부모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북한 어린이들이 많다. 어린이에 대해서는 북한과 중국 양쪽 모두 대체로 관대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어린이 몇 명 혹은 몇십 명이 한 집단을 형성하여 함께 월경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제1유형에 속하는 이러한 탈북자의 경우에도 최근 인권문제가 다각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획탈북 이후 중국 공안은 탈북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1000위안(15만원)의 상금을 주고, 탈북자를 보호하다 적발되면 3000위안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연변에는 기획망명 이후 공안들에게 매달 2명의 탈북자를 잡아들이라고 할당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2002년 12월 초부터 중국의 지린(吉林)성 동북 3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탈북자 소탕작전을 펼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합동검거반이 작전 개시 한달여 만에 수천명을 체포, 강제 복송하고 있으며 중국 고위관계자와 탈북자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탈북자 색출을 위해 이른바 '100일 전투'에 돌입 지금까지 3200여명을 강제 복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⁹⁾

탈북자들이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핵' 문제로 쏠리고 있는 사이 또 다시 가공할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100일 전투'로 명명돼 3월15일까지 지속되는 탈북자 색출작전은 중국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지난해말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 체제를 출범시킨 중국도 끊임없이 외교공관 담을

넘어 국제적 이슈를 제공하는 탈북자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핵파문을 적절히 활용하는 듯하다.¹⁰⁾

언제 붙잡혀 갈지 모르는 불법 체류자로서 이들이 중국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한계적인 삶과 인권침해의 현실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일시적 방문자로 머물건, 단속의 눈을 피해 중국 접경지대에 발을 붙이고 살건, 이들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기존 방식의 문제점

기획탈북이후 탈북자 문제는 동북아의 중요한 문제로 국제문제화 되었다. 더이상 중-북간의 문제로 축소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에 개입하기 시작하였음은 물론이고 일본공관진입 사건에 의해 일본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최근의 기획탈북이 스페인 대사관 등 유럽의 각국으로 확산되었고 보트피플 식 기획망명의 실패는 국제여론의 쟁점으로 대두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더군다나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갖는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제여론화 되었고 동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의 중심국가가 관심을 갖는 사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문제의 해결은 국제여론의 힘으로 풀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탈북자 문제의 해결방식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이는 이면의 각종 합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원칙

9) 『세계일보』 2002년 12월 19일자.

10) 『세계일보』 2003년 1월 10일자.

적으로는 상당한 모순과 난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키워나가고 있다.

탈북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각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탈북자 문제의 논쟁지형을 살펴 보아야만 한다. 논쟁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탈북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체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기획망명은 탈북자의 한국수용경로의 대안이 되었을 뿐이다. 그것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중국내 탈북자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와 사실 하등의 관계가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가 그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한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 두가지가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외교적 원칙을 들렀싼 난점이 각국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식과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각국의 입장차이〉

미국에서, 일부 시민단체 및 상하 양원이 탈북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정치적 난민지위를 인정할 것을 중국정부에 촉구하면서 이 문제는 중미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전향적인 망명허용 검토나 중국내 정착촌 건립 등을 고려한 다면서도 미 행정부는 초기에 탈북자의 자국공관을 통한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¹¹⁾

또한, 탈북자 문제는 중일간에 만주의 한인계 문제로 교섭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본정부의 입장 역시 탈북자를 경제난민으로 보고 있으며, 망명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였다.

중국은 탈북자를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

지 않으며, 식량난 등 경제적 사유에 따른 밀입국자 또는 불법체류자로 보고 있다. 탈북자 처리 문제는 중국의 주권사항이며 중·북한간의 문제로, 제3국정부나 국제기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이다. “중·북한간 변경지역 관리의정서”(1986)에 따라 중국은 북한 주민의 불법월경 방지를 위해 북한과 협력해야 하며, 불법월경자에 대해서는 송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획망명이후 중국은 모순된 두 입장사이에서 갈등하였다.¹²⁾ 천치첸 부총리는 탈북자를 강제송환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법, 그리고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에 입각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공관 망명자에게 제3국을 통한 한국행을 허용하는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탈북자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는 물론 조선족도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불법적인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강화된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국제문제화하는 탈북자 문제를 한반도 및 한인계 문제로 국한하려는 고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탈북자 문제는 헌법에서 주장하는 국민의 개념과 실제 정책의 모순, 대북 및 통일정책과의 연관, 남남 갈등의 원천이라는 난점부터, 탈북자의 한국정책과정과 연관된 한국 내의 인권, 민족, 국민의식의 모호성 등이 나타나는 첨예한 이슈다. 특히 조선족과 연관된 탈북자 문제는 한국의 동포개념에도 회의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이 문제가 단순한 정치외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한국은 국제법적인 노력과 동시에 중국과의 외교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놓고 있다. 최근 유엔의 난민개념 및 보호대상의 확대에 따라 탈북자를 ‘광의의 난민’으로 간주, 보호해야

11) 양운철, 『탈북자에 대한 미국의 시각』, 『정세와 정책』(세종연구소, 2002).

12) 이진영, 『탈북자 기획망명사태에 대한 중국의 반응』, 『정세와 정책』(세종연구소, 2002).

하며 어느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나, 인도적인 측면과 특히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의 박해 위험 등을 고려, 중국측에 대해 체류목인 및 송환자제 등 특별배려를 요청하면서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통한 '조용한 해결'에 여전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획탈북을 주도하고 있는 NGO 활동가들은 한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탈북자지원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현재까지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과 노력이 원칙적인 일반론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최근 선박을 이용한 탈북자들의 수송계획을 입안했던 탈북자 지원 활동가들은 2003년 1월 21일 도쿄에서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탈북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미교포인 더글러스 신 목사는 회견에서 "한국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만 애쓴다"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탔는지는 몰라도 탈북자 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획탈북으로 유명한 독일인 의사 노블레트 플러첸은 "나는 한국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서울

탈북자의 유형은 세분류로
나눌수 있다.* 제1유형은 단순히
중국에서 양식만을 구한 후
북한으로 바로 귀환하는
집단이다. 제2유형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은신처와
일자리를 구하여 정착하는 집단
이며 제3유형은 망명을 위하여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이동하는
집단이다. 북한에서 중국을
오가는 사람의 숫자는 일정하지
아니하며 계절, 상황등에 따라
수시로 달라진다.

에서는 나를 심하게 도청하고 감시해서 마치 평양에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¹³⁾

그간 정부는 '조용한 외교'에 안주해 온 것이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무관치 않다. 햇볕정책은 각종 회담과 교류의 성사에 주력한 정책이었다. 반면 북한주민(탈북자 포함)의 인권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인권문제 제기와 탈북자 문제의

국제 공론화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여 이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집단적 난민지위 획득 방식의 문제점〉

인도주의와 국제법 충돌

탈북자는 난민협약상 난민, 소위 정치적 난민에 해당하는가와 아닌가, 또는 탈출동기를 불문하고 UNHCR 관행상의 난민(위임난민)으로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탈북자 해결 난점의 핵심이다.

난민(refugee)라는 용어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난민이란 용어는 일반적인 언어적 의미에 있어서는 여전히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것은 때로는 자신의 일상적인 거주장소를 본 의 아니게 떠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13) 『동아일보』 2003년 1월 23일자.

도 사용되기도 한다. 박해, 정치적 폭력, 사회 내부적 혼란, 생태적 재해 혹은 빈곤 등과 같은 동기를 불문하고 난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법적 의미에 있어서 난민의 개념은 보다 엄격하다. 즉 일반적인 의미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즉, 난민이라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인도주의적 원칙만을 가지고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탈북자가 과연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는 곧 인도주의와 국제법간의 충돌지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난민협약 제1조 A항 2호 및 UNHCR규정 제6조 A항 2호에 의하면 난민의 개념을 매우 좁게 정의하고 있다.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혹은 개인적인 사정 이외의 이유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혹은 개인적인 사정 이외의 이유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난민의 정의는 ‘개인적인 박해’, ‘정치적 난민’, ‘개별적 난민’이라는 점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UNHCR은 그의 관행을 통하여 난민의 개념을 결코 난민조약과의 정서 등의 개별적, 특수한 조약법상의 해석에 한정시키지 아니하고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수용하여 왔다.

그렇게 볼 때, 탈북자 유형중 제3유형은 확실히

난민지위를 가질 수 있지만 제1, 2유형은 보다 복잡한 경로를 거쳐야만 한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난민은 탈출동기를 고려하여 대체로 정치적 난민, 전쟁난민, 경제적 난민, 인도적 난민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렇게 볼 때, 난민협약상의 난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난민만을 의미하는 반면에, UNHCR의 관행에 따른 난민은 전쟁난민, 경제적 난민 및 인도적 난민도 아울러 포함한다.¹⁴⁾

이에 따라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승인받은 UNHCR의 일반관행에 의하면 난민 개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의를 하기도 한다. 즉, 난민이란 박해, 대규모적인 인권침해, 일반화된 폭력, 무력충돌, 내전 혹은 공공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 안전 혹은 자유를 위협당함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때때로 ‘사실상의 난민’ 혹은 ‘인도적 난민’이라고 불리는 ‘비난민’(non-refugees)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위협에 처할 수 있다면 인도적 이유로 UNHCR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한다. 위와 같이 UNHCR의 관행에 의해 확대된 난민 개념을 흔히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이라고도 부른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은 난민협약상 난민 혹은 UNHCR의 관행상 위임난민에 해당하는가. 과거 관행적으로 탈북해서 짧은 기간 동안 머무르는 제1유형의 경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고서는 위임난민으로 인정받기가 힘들다. 제2유형의 경우도 전체적인 판단이 어렵다.

이것은 어떤 경향에 있는 전 집단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데 중요한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탈북자 전부에게 해당될 수는 없

14) 김태천, "대량 난민사태에 대한 국제법적대응" (<http://www.humanrights.or.kr/HRLibrary/HRLibrary13-tckim1.htm>).

다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탈북자의 일부 제2 유형의 경우 개별적으로 난민지위를 획득할 수는 있지만 탈북자 전체에 대한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국제여론의 관심과 난민지위의 획득이 중요한 해결방식으로 한국의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되어 왔고 가장 큰 걸림돌이 중국정부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국제난민법의 엄격한 적용을 상정했을 때에는 중국정부에 대한 비판이 도덕적으로는 충분할 지언정 국제법적으로는 온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제2유형의 탈북자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난민지위인정이 가능하지만 집단적으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1유형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방식의 해결방안이 도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학자들 중에는 난민협약상의 난민 개념은 주로 정치적 난민을 중심으로 형성, 발전되어 온 좁은 의미의 난민임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설령 정치적 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정치적 난민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설령 탈북동포들이 당초 경제적 궁핍이나 곤경을 피하기 위한 경제적 동기에서 탈출했다라도 탈출행위 자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하여 소위 '조국을 배신한 자'에 해당하여 모두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¹⁵⁾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제1유형의 탈북자가 송환되었을 시, 이에 대한 처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뒤따르지 않는

이상, 무리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외교적 보호권 인정의 문제점〉

국내법과 국제법의 충돌

대한민국은 국내법상으로는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한국정부가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탈북자 문제해결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항에 속한다.

한국정부는 북한주민을 포함, 탈북자를 국민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하에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를 수용하고 탈북자의 국내정착을 지원한다. 문제는 탈북자를 국민으로 인정하는 경우 탈북자의 수용여부가 초점이 아니라 중국내 거주하는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이 더 중요한 것이 된다. 더군다나 대량난민 사태가 아니더라도 중국내 거주하는 탈북자의 규모로 볼 때, 한국수용의 원칙은 사실상 문제해결의 근본책이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거주하는 탈북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한국정부의 외교권이 행사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국내 법제도나 관행은 북한주민을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하여 왔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북한은 헌법상의 영토조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의 공민이나 중국 또는 러시아 등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의 해외공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내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¹⁶⁾ 1997

15) 계성호,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방안-국제인권기구의 활용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법 2호(1998).

16) 노영돈, '우리 나라 국제법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문집 41권 2호(1997), 53 쪽; 노영돈, '1997년 국제법 개정안의 검토', 서울국제법 연구 4권 2호(1997), 50쪽; 이장희, '통 일시대에 대비한 국제법의 개정방향', 이장희(편),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제법의 개정방향, 사회 과학연구원(1998), 55-56쪽; 손희두, 북한의 국제법, 한국법제연구원(1997), 61-62쪽.

년 국적법 개정 당시 법개정작업을 담당하고 있던 법무부측은 외국인, 즉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율하는 국적법에서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는 북한주민의 국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국적법 개정안에서 북한주민의 국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이를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중국과 북한에 의한 국제법적, 또는 정치현실론적 충돌이 아니라 헌법적 해석의 충돌이기도 하다.¹⁷⁾ 대한민국의 성립시기는 헌법이 제정된 시기로 보는 것이 정당하며 헌법의 영토조항은 현실점에서 통일한국의 영역범위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고 일정한 지역 및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해 실효적인 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현실로 각기 다른 국가 내지 정부를 구성하여 이미 50여년을 지냈는데 단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국민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통일된 한국의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요컨대,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해석간의 논쟁은 차지하고서라도 북한주민이 한국국적을 갖고 있기에 당연히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이 한국에게 있다는 주장은 탈북자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다.

특히, 중국과의 수교과정에서 한국국민의 범위

와 북한 주민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적 보호권은 중국측에서 보자면 공허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만약에 경우, 북한과의 완전한 외교단절의 경우가 아니면 몰라도 한국의 자국내 헌법을 통해 외교적 보호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탈북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로서는 가능하겠지만 국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탈북자 해결방식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의 중심에는 중대한 난점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는 각국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다라는 점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각국이 원칙적인 논리와 실제사이에서 상호 모순된 입장과 처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난민지위 인정 여부는 그것의 인도주의적 관점의 적용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전체에 대한 집단적 부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한국정부의 개입이라는 것이 외교적 노력이외에 법적 원칙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새로운 대안으로의 접근

기획망명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더 이상 탈북자를 방치할 수 없을 뿐더러 탈북자의 국내수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더 이상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있다. 또한 '조용한 해결' 원칙의 외교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던져 주었다.

그 과정에서 몇가지 중요한 해결원칙과 새로운

17) 김명기, "북한주민을 대한민국국민으로 본 대법원 판결의 법이론", 제스티스 44호(1997).

203-204쪽; 김명기, '계의탈북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무',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이 주최한 제1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세미나 발표문(1997), 5쪽.

접근이 가다듬어질 수 있다고 본다.

〈강제송환에 인도주의적 원칙 적용〉

인도주의적 원칙은 탈북자 집단전체에 대한 난민지위의 획득이라는 기존의 주장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탈북자 문제는 탈정치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장선에서의 인도주의적 원칙의 견지이다.

주요하게는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집중해야 하는 것은 강제송환과 관련해서이다. 탈북자의 유형을 떠나서 중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탈북자 전체를 그 발생론적 시각에서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합리적인 해결방식이 아니라는 점은 누차에 걸쳐 지적해 왔다. 또한 탈북자 해결의 발생론적 접근이 북한체제비판이라는 정치적 주장과 연관되어질 경우 문제해결에 하등 도움이 될 수 없다.

국제단체와 공조하여 난민지위를 중심으로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강제북송의 경우에 보다 집중해야 하며 최근 중국정부의 북송에 대한 유연한 처리를 보다 관례화하고 규칙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거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농레풀망 (non-refoulement,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난민협약 제33조에서 명문으로 인

'사실상의 난민' 혹은
'인도적 난민' 이라고 불리는
'비난민' (non-refugees)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본국으로
강제송환된다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 인도적 이유로
UNHCR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한다. 위와 같이
UNHCR의 관행에 의해
확대된 난민 개념을 흔히
'위임난민' (mandate refugees)
이라고도 부른다.

정되고 있다. 또한 각종 국제기구들의 결의와 각국의 관행도 농레풀망 원칙을 난민에 대한 국가행동의 기본원칙으로서 재확인하여 왔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이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농레풀망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54차 유엔인권소위원회회는 14일 탈북자를 비롯한 난민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강제송환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송환될 경우 사람들이 처벌을 두려워 할만한 근거가 타당한 지역으로 돌려 보내서는 안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중국정부가 유엔난민협약에 의거해 난민(refugee)의 지위가 부여된 사람은 물론 일 반적인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원-원 전략의 다각적·국제적 접근〉

이미 탈북자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보다 국제적 해결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가 인정할 수 있는 해결방향을 한국 정부가 제시함으로써 원-원 계임을 이끌어 내야만 한다. 특히 UNHCR 종합적이고 새로운 메커니즘의 마련과 새로운 난민법의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통적 망명(비호)-대량국의탈출-국의 이주-실향민 등을 포섭하는 종합적인 대책마련 (포괄적 접근방식), 종래의 난민협약을 대체하여 현대적인 대량난민문제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신난민협약의 제정 움직임(‘난민의국제적보호에 관한유엔협약’)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라도 먼저 광의의 난민에 대해 ‘일시적 보호’ 이후 ‘자발적 본국 귀환’이라는 메커니즘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러한 경우 중국의 경우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북한도 암묵적인 묵인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여진다.

〈노동이민자 해결방식의 적용〉

포괄적인 한국계 노동이민 정책의 수립으로 한국정부의 개입 명분을 보다 확고하게 하고 실용 주의적인 지원도 가능하게 하는 전략이다. 이는 탈북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을 주장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탈북자를 노동이민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조선족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 분포하는 한국계에 대한 중요한 이해 당사자가 한국정부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인계에 대한 중국정부와의 적극적 협상과 탈북자 문제를 노동 및 이민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는 2002년 1월 23일, 탈북자 문제가 잠재적인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리라는 것을 이번 사태로 열강은 인정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탈북자 문제 및 조선족 문제를 탈정치화하여 동아시아 전체의 노동이민 문제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족이 그러하듯 탈북자도 경제 및 노동과

연관된 이민자이다. 국제노동이동의 입장에서 탈북자에 대한 동아시아 차원의 국제협조들을 구축한다면, 중국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량난민 발생시 우려되는 남북한 관계의 경색은 물론 동북아의 안정도 해치지 않는 방침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태천, "대량 난민사태에 대한 국제법적대응" (<http://www.humanrights.or.kr/HRLibrary/HRLibrary13-tckim1.htm>)

김찬규, "북한탈출자의 난민자격과 그 처우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214호(1994)

제성호, "북한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북한연구 1994 가을호-----,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방안-국제인권기구의 활용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법 2호(1998)

좋은 벗,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서울:1999)

이진영, "탈북자 기획망명사태에 대한 중국의 반응", {정세와 정책}(새종연구소, 2002)

양운철, "탈북자에 대한 미국의 시각", {정세와 정책} (새종연구소, 2002)

윤여상, '재외 탈북자들의 인권현황과 대책'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전망과 해결방안' (<http://paulkyu.vlink.or.kr/cgi-bin/technote/main.cgi?board=MyMajorData> 2003년 1월 23일)

장복희, "UN 난민고등판무관(UHCR)", 국제인권법 제2호(1998)

장수현, "중국 접경지대 북한 난민의 실태와 인류학적 연구" (<http://www.jungsan.eskr/study//통4.htm>)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겨레21}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http://www.unhcr.org>)

유엔 난민 고등 판 무 관 실 한국 홈페이지 (<http://www.unhcr.or.kr>)

난민구조기독교활동가단체 피난처 (<http://pnan.org>)

남북나눔운동(<http://users.aol.com/tonglnara>)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및 난민법 제도 해설 (<http://www.unhcr.or.kr>)

18) 이진영, "탈북자 기획망명사태에 대한 중국의 반응",를 통해서 국제노동이민을 중심으로 탈북자문제를 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민의 정치경제학

1950-60년대에 벌어졌던 미국으로의 고급인력유출 현상이 일부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70년대 이후로 이들의 노하우와 지식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려 한 정책의 결과 상당히 많은 재외 한인들이 실제로 모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또 중국 연변의 한인사회가 정보산업단계로 들어선 모국의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매우고 기도하다. 이러한 점들이 종종 사회문제화 되는 이민 집단의 이질성이 보다 전면적으로 대두되지 않고 있는 이유의 하나가 될 것이다.

조 현 구 /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미국 주재)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위나 재외 한인 교포들에 대한 논의는 법률적, 세부적인 절차와 인도주의 혹은 민족주의적인 감성 사이를 극단적으로 오가는 듯 보인다. 이러한 원칙적인 감성과 구체적 실행 사이의 공간이 크면 클수록 합리적인 정책의 도출이나 그 일관된 실행이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문제를 제대로 프레임해서 일반적인 감성이나 정치적인 성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일종의 거름 틀이 없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사항에 매몰되거나, 유동적이고 때로는 편향적인 감성에 휘둘리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연결체로서의 거름 틀,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에 기반한 문제의 인식체계가 필요하다. 이 글은 앞으로 점점 더 국내정치문제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민 문제가 국제적으로는 크게 어떠한 인식 틀 속에서 분석, 대응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세계화와 이민 문제

지금 소위 세계화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그 정체를 규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세계화와 비교를 하고 있다. 20세기의 세계화를 하나의 동떨어진 현상이 아니라 근대이후 지속되어 온 통합이라는 조류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화의 특징과 과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분명히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된다. 또 이러한 지속성 사이에 나타난 단절의 역사에서 왜 운송비용의 하락이나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전 등 기술적인 혁신이 필연적으로 세계화를 가져오지 않고, 개별국가들의 정책적인 선택으로 큰 흐름 자체가 결정되는 지가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먼저, 이러한 비교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통계치 『무

역통합, 금융통합, 인구이동』이 두드러지게 강조된다. 적어도 이러한 수치상의 비교에 있어 오늘날의 세계화는 100년 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계 생산량 중 국가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가간 투자규모의 대 GDP 비율만으로 보면 오늘날 세계화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심지어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민의 문제 또한 약 100년 전에 이미 가장 큰 양적 변화를 겪었다. 경제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815년 이후 약 100년간 역사상 가장 큰 자발적 인구이동이 일어났다. 유럽인구의 약 6천만 명 이상이 아메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동했고 약 천만 명 정도가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로, 1천2백만 명 이상의 중국인과 6백만의 일본인이 아시아의 도처로, 그리고 1백5십만 이상의 인도인 역시 동남아시아, 서남아프리카 등지로 이동했다. 이러한 19세기의 급격한 인구이동은 1890년대에 들어서 그 최고조에 이르러 미국에서만 10년간 인구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렇다면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지리적인 영역의 확대와 무역, 자본이동의 구성요소에서 그 차이가 드러난다. 많은 경우 19세기 말의 세계화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인 아시아, 아프리카도 이 현재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또 1900년에 세계무역의 약 70퍼센트를 점유하던 1차 생산품이 이제는 약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자본이동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개별 채권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지던 해외투자의 양상이 몇몇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디케이트 론의 시대를 거쳐 이제는 단기 자본이동,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경향을 보인다.

개별 국가들의 경우, 무역 대 GDP 비중으로 볼 때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100년 전 상황보

다 더 개방적인 경제구조를 나타내고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개방정도가 100년 전보다 낮은 상황이다. 재미있게도 가장 무역의 개방정도가 높아진 것이 미국 (1910년의 11퍼센트에서 1995년의 24퍼센트)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통계적인 차이에서 오늘날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세계화의 중심에 위치한 미국에서 그에 대한 반작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0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국가간 인구이동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그 절대수의 비교에 있어 현재의 이민들의 수는 100년 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1990년대에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민자의 수는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약 1억5천만 명, 세계 총인구의 3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10년간 미국은 이민들로 인해 4%의 인구증가가 나타났고, 실제로 1989년과 1998년 사이에 매년 약 1백만 명의 합법적 이민과 약 5십만 명의 불법이민이 미국으로, 약 1백2십만 명이 합법적으로 약 5십만 명이 불법적으로 EU국가들로 이동해갔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선진 국가들에 있어 1990년대의 인구성장은 전적으로 이민들의 도착에 기인하고 있다. 과거 100년 전 세계화에서 나타난 국가간 인구이동이 주로 유럽의 저소득층의 신대륙을 향한 이동이었던 데 비해, 현재의 상황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동이 그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지리적인 거리의 장애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민을 꿈꾸고 가능하다면 불법적으로라도 이민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지닌 사람들의 수가 이전시대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데 있다. 100년 전의 상황이 제도적인 통제가 약한 상황에서의 자유로운 이

동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과의 절대적인 수치 비교 자체는 무의미하다. 이민을 원하고, 할 수 있는 인구수의 풀이 커진데 반해 받아들이는 쪽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점점 더 악화되고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997년에 있어 미국이 약 7십3만7천 명의 이민들을 개도국으로부터 받아들였고, EU가 약 6십6만5천 명을 받아들였다. 이들 수치는 잠재적인 이민 가능자들의 0.05%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민문제의 경제적 입의

이렇듯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인구이동은, 떠나는 모국이나 받아들이는 수입국 모두에서 경제적인 변화를 수반시킨다. 개도국에 있어 최근의 이민양상은 고등교육을 받고 기술수준이 높은 고급인력의 유출 경향을 보이면서, 모국에서의 인적자원의 공동화 양상을 불러일으키고, 그 반대 급부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로부터의 송금이 점점 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를 띤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복지국가의 운영에 변화를 초래하는 조세 원의 변동, 자국의 저소득 임금노동자들의 실업률의 증가 등의 문제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먼저 이러한 이민의 양 측에 있어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변화를 살펴보는 데 앞서, 세계경제에 있어 인구이동 자체가 갖는 의미부터 살펴보는 것이

**신·고전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날의
 세계화는 전 지구적인
 소득수준의 향상과 부국과
 빈국간의 격차를 점차
 완화시키는 올바른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시장의 확대가
 평균소득과 국가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고전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날의 세계화는 전 지구적인 소득수준의 향상과 부국과 빈국간의 격차를 점차 완화시키는 올바른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시장의 확대가 평균소득과 국가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근거에 기반 한다. 즉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볼 때, 자본은 노동비용이 싼 개도국으로 더 큰 이윤을 찾아 이동하고, 반대로 개도국의 노동자들은 보다 높은 임금을 찾아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도국의 임금수준이 점차 상승하고, 선진국에서의 임금상승이 노동의 유입으로 압박되면서 그 결과로 소득수준이 점차 수렴해 가는 것이다. 개도국에서 필요한 자본의 유입, 그리고 시장의 확대는 보다 가난한 국가들의 경제가 이미 높은 소득수준에 도달해 있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수준으로 성장할 것을 예측한다. 그러나 물론 현실이 이러한 이론적 단순화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최근 반세기에 있어 세계의 평균소득이 증가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아직도 약 20억 이상의 인구가 하루 \$2 미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97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소득수준 상위 삼분의 일의 국가들의

연평균 개별국민소득은 약 1.9%, 중간의 삼분의 일의 국가들이 0.7%의 성장을 보인 반면에, 저소득의 나머지 삼분의 일의 국가들의 연평균 소득성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세계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선진국에서 세계 GDP의 약 60% 이상을 생산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수치는 이론적 모델을 심각하게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고전적 이론이 현실과 동떨어진 중요한 차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초를 다루는 금융자본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명제 앞에서도 우리는 아직도 대부분의 금융자본의 이동은 선진국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세계대전 이후 50년에 걸쳐 도도하게 이루어진 무역자유화에 있어서도 최근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농산물 등 개도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자유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결정적으로는 모델에서 상정하고 있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중 노동력의 이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Bruce Scott(Scott 2001)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 연결되어 모델에서 상정하고 있는 개도국의 발전을 막고 있는 요소가 된다.

국경을 뛰어 넘어 억압적이고 기회가 없는 모국의 상황을 도피할 수 있는 선택이 원천적으로 부정된 상황은 개도국의 정치형태가 좀 더 유권자들의 이익에 맞추어 변화하는 조건을 약화시키고, 이렇듯 아직까지도 국경이 의미하는 일정정도의 격리성은 개도국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자본주의의 발달에 필수적인 법의 지배, 인프라의 구축, 금융제도의 정착 등 큰 사회적인 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게 하여, 외부로부터의 자본 유입의 유인을 상실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Bruce Scott의 연구

에서 보여주듯, 미국의 남북전쟁이전의 남과 북의 소득격차의 확대, 전쟁 후 소득수준의 수렴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자리를 찾아 남에서 북으로 대대적인 인구이동이 있는 후에야 두 지역의 소득수준이 수렴해 나아갔다. 신 고전경제학에서 제시하는 발전과 수렴의 동인으로서의 생산요소의 가격수준의 차이는 현실에서는 좀처럼 좁혀지고 힘든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민들의 모국과 수입국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경제적인 변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앞에서 잠시 언급된 바와같이, 이민을 떠나 보내는 개도국들의 입장에서는 젊은 고급인력의 유출과 그에 따라서는 조세원의 축소가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인도의 경우 2001년에 약 1백만 명 이상의 인도인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고, 그 중 대부분이 한창 일할 나이의 고등학력의 소유자들이다. 인도 전체인구의 약 0.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들 소수의 인도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체 인도 국민소득의 10% 가까이 차지한다는 놀라운 통계에서도 현재의 인구이동의 경제적 동인은 충분히 드러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인력유출에 따른 조세원의 축소로 인도의 GDP의 약 0.25% 정도의 재정수입의 감소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좀더 일반적으로, 세계노동기구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몇몇 개도국에서는 고급인력의 약 30%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경우 다시 모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인력의 유출이 모국정부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한 예로 알바니아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약 75%에 달하는 액수의 송금이 해외의 교포들로부터 들어오고 있고, IMF에 따르면 개도국 전체가 이렇

듯 해외에서 송금으로 받는 금액이 일년에 약 6백억 불, OECD 국가 전체로부터 받는 공식 원조금액보다도 약 60억불 가량이 더 많은 수준에 이르러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렇듯 고국의 가족에 보내지는 금액의 상당부분이 기초생활에 필요한 주택 등의 비 소비재에 투자되고 약 3-4배의 경제적 부의 창출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한다. 전세계 개도국으로의 직접투자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에도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직접투자자금의 약 75%가 해외의 화교자본이라는 점을 보아도 이러한 이민들이 모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 선지 오래다. 다음으로, 문제의 다른 한 축인 선진국내에서 새로 밀려들어오는 이민들이 불러일으키는 경제적인 변화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국내의 점점 강화되는 정치적인 저항은 논외로 하더라도, 서구 선진국들이 20세기 후반에 발전시킨 복지국가의 유지와 자유로운 이민의 허용은 경제적으로도 양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민의 양상은 일반적으로 볼 때 선진국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듯 하다.

특히나 받아들이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급인력이 아닌 개도국의 저학력, 저기술의 노동자들의 유입이다. 세금원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사회복지제도의 지출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이민은 복지제도에 압박을 가할 뿐 아니라, 국내의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일세대의 이민 한사람당 약 3천불 정도의 재정적 손실이 나타나고, 2세대로 가면 일생동안 약 8만 불의 재정수입 확

대가 예상된다고 한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의 감소가 이미 시작된 선진국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이민의 재정적인 함의는 부정적으로만은 보기 힘들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이민2세대의 재정적 기여를 염두에 두고 당장 복지제도에 압박을 가하는 자유로운 이민정책을 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실 이민 2세는 이미 자국민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그 비교대상이 다른 이민자가 아니라 내국민들이므로 이들간의 조세기여도의 차이에 기준을 맞추어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민 2세들이 성공적으로 선진국사회에서 통합하고 경제에 기여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그 부모세대가 고학력, 고소득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복지국가제도가 자유로운 이민의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의 또 하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제시되는 것이 국내 저소득층의 실업률 확대와 임금 하락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학력의 국내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약 2분의 1가량 하락했고, 그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바로 값싼 해외 노동력의 유입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경제의 틀에서 봤을 때, 고등학교 미졸업자가 차지하는 노동시장의 규모는 전체의 약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들의 임금이 하락으로 인한 국내물가상승의 저하 등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일면 긍정적인 반작용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문제는 딱 떨어지는 해답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이 문제에 천착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민이 임금이나 국내의 직업 등에 특별히 눈에 띄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놀라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떠나보내는 개도국이나 받아들이는

선진국 경제에 있어 이민이 가지는 경제적인 순효과 (net effect)는 딱 떨어지게 긍정이나 부정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고학력 인구의 유출을 걱정하는 소리가 개도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존재는 개도국이나 선진국 모두에서 별 불평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오히려 선진국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들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나가기도 한다.

문제는 저학력, 저기술의 인력들의 이동이 선진국 사회에서 일으키는 반작용에 있다. 선진국의 이민제도 자체가 원칙상 고학력의 인력을 끌어오는 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이민자들과의 관계, 가족관계, 사업관계가 가장 중시되는 형편이다 보니, 이 문제는 별 해결될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위의 여러 가지 경제적 손익분석에 따르면,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은 개도국, 선진국 등의 정부가 아니라 바로 이민 그 자신들이다. 미국에 있어 그린카드를 획득하는 데 성공한 이민들의 경우 이전과 비교해서 연소득 약 2만 불, 현재가치로 환산한 평생소득 약 30만 불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소득의 급격한 증가는 고학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국경을 넘는 모험은 계속된다.

이민자 문제의 정치적 입의

해외에 존재하는 이민들의 존재가 고국의 정치에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이들은 이민 간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왔다.

자신들의 존재가 이민 온 국가에서 일정정도 인정을 받는 수준에 이르면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난 것이 이민 온 국가를 상대로 떠나 온 모국에

유리한 정책을 쓰도록 압박하는 형태의 정치적 결집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전형적인 모습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민' (diaspora - 모국을 떠나 타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으로 일컬어지는 이민 사회는 점점 더 그들이 물리적으로 떠났을 망정 심정적으로는 머물고 있는 모국의 정치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해진 데에는 이들의 경제적인 힘이 그 근처에 깔려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 예로 1991년에 구 유고연방에서 독립한 크로아티아의 경우를 보자.

유럽의 공산주의가 붕괴했지만 유고연방은 존립하고 있던 1990년대 초반, 크로아티아에서는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에게 모국으로 돌아오라는 호소가 계속되었다. 몇몇은 돌아와 1991년에 발발한 내전에 참가했고, 돌아오지 않은 재외 크로아티아 교포들은 3천만 불에 달하는 성금을 모았다. 한편, 독일에 있던 크로아티아 망명자 단체는 독일정부에 강력한 로비를 지속했고, 일정부분 그 결과로서 유럽연합의 크로아티아 조기 인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열렬한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러한 망명자 단체들은 1990년에 실시된 선거에서 민족주의를 강력히 표방하고 나선 Franjo Tudiman의 진영에 적어도 4백만 불이 넘는 기부금을 헌납하고 그 대가로 1992년 크로아티아가 독립한 후 국회에서의 의석을 보장받았다. 총 120석의 의회에서 12석이 재외교포사회에 할당된 것이다.

그들은 거주 국에 있는 영사관이나 Zagreb (크로아티아의 수도)에서 지정한 교포단체회장, 클럽, 혹은 교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크로아티아 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7개의 의석만이 부여되었다.

크로아티아의 경우는 특별하다고 하더라도 결

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조류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개도국 정부에서도 현 상황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인력유출의 통제 대신 점점 더 이들의 돈이나 전문적 능력을 활용하는 데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국방문 모임 등의 구성을 통해

이들과의 감정적인 유대를 강조하고 결국에는 보다 더 많은 돈과 기술을 모국으로 돌려줄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두되는 흥미 있는 정치적인 변천은 다름아니라 돈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로서의 모국에서의 투표권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멕시코, 크로아티아, 에리트리아(Eritrea: 아프리카 북동쪽 이디오피아와 수단에 국경을 접한 신생 독립국)뿐 아니라, 아르메니아와 인도가 교포들의 투표권을 약속해 놓았다. 해외에 거주하는 필리핀 인들도 투표권부여를 원하고 있다. 에리트리아(Eritrea)와 멕시코의 경우처럼, 터키 역시 해외동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였지만, 터키 이민들이 밀집해 있는 독일 정부는 자국 땅에서 외국의 선거가 열리는 것을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

이밖에 다른 나라들은 해외교포들의 정치적 에너지를 활용하는 색다른 방법들을 고안해 내고 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에리트리아(Eritrea)가 가장 선도적인 예가 될 것이다.

1993년에 치러진 독립국가 안에 대한 투표에 해외동포 중 선거가능자의 90%가 투표권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그 후 이들은 향후 선거에 있어

미국의 경우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일세대의 이민
한사람 당 약 3천불 정도의
재정적 손실이 나타나고,
2세대로 가면 일생동안
약 8만 불의 재정수입 확대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들의 투표권을 담보하는 헌법제정에 일조했던 것이다. 터키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실제로 교포들의 귀환을 유도해내는 방안도 등장하고 있다. 현 집권세력인 터키의 회교도당(Turkey's Islamist Party)은 해외에서의 자금조달에 대한 반대급부로, 교포사회의 지도자들을 당선안정권

의 선거구에 공천하기도 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교포사회로부터의 인재 도입과 발탁에 열정적인 것은 발틱 국가들이다. 1991년에 독립을 선언한 후, 에스토니아는 두 명의 외무장관, 한 명의 국방장관, 그리고 외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수많은 공무원들을 해외교포사회에서 발탁했다. 라트비아의 현 인기 높은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건너왔고, 전직 국방장관(재미라트비아인), 많은 수의 국회의원, 외교관등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교포출신이다. 다른 발틱 국가에 비해 민족주의 성향이 약한 리투아니아의 교포사회 역시 전직 대통령을 비롯, 현 비서실장(모두 재미라트비아인 출신),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나 소설가, 시인등을 배출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결코 손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지만, 그 동시에 그 영향력이 과대 평가되는 것에도 주의해야 한다. 해외의 유민들이 단순히 그들의 영향력만으로 모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모국정부로 하여금 취하게 만드는 일은 거의 없다. 결국 새롭게 등장하는 이들 이민집단의 영향력의 핵심은 모국의 이익과 그들의 거주국의 이익은 점점 더 혼합시키는 힘, 그로 인하여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를 모국의 상황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몰

론 그 수단은 이들의 금전적인 영향력에 기반하고 있다.

제외 이민 사회의 현황

2001년 현재 우리는 약 5백7십만 명 정도의 해외교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전에 많은 부분 강제성을 띤 이민의 양상에서 1960년대 들어 인구억제책의 하나로 정부가 취한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산물로 많은 이민들이 보다 좋은 기회를 찾아 주로 선진국으로 향해 갔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만 미국에 약 5십만 명이상의 이민이 이루어졌고, 전체 교포중의 약 80%이상의 미국, 일본, 중국의 삼국에 살고 있는 집약적인 양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20%는 전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다. 한인들은 전세계 151개국에 퍼져 살고 있으며, 1만 명 이상의 한인이 거주하는 나라는 15개국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이러한 이민 집단의 크기도 매년 십만 명 가량 증가, 이 기간동안 17% 이상 증가했고, 또한 그 결집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약 2000개가 넘는 각종 한인 단체가 결성되어 있다. 이렇듯 남한 인구의 약 15%에 육박하는 해외 이민 사회는 고국에 어떠한 형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 위에서 언급한대로 경제적인 관계의 심화에 따르는 정치적인 영향력의 확대라는 큰 조류에서 어느 정도 다가서 있는 것일까? 최근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출간 된 연구결과를 보면 (Korea Diaspora in the World, 2002, IIE)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수치들이 눈길을 끈다. 먼저, 통계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한인 이민자의 수가 많은 나라들과의 교역수준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한인의 수가 100% 증가했을 때 그 나라를 상

대로 한 수출은 약 16%, 수입은 약 14%정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해외 한인들의 모국으로의 투자형태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에는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통제하고 조인트 벤처 등을 통한 소주주의 위치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데 그 큰 이유가 있다. 하지만 1997-8년 외환위기 이후로 IT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교포자본이 직접투자의 형태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위에서 강조된 모국으로의 송금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많은 개도국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00년 한해에 GDP의 약 2.9%에 달하는 135억불의 송금을 해외로부터 받아들였고, 중국의 경우에도 70억불에 달하는 송금이 해외로부터 보내졌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1년 약 65억 불의 송금이 해외로부터 보내져 그 크기에 있어서는 중국과 비슷한 규모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인도나 중국의 경우 해외로 나가는 송금이 거의 없는데 비교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거의 해외에서 들어오는 금액에 달하는 규모의 돈이 해외로 송금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에는 약 69억불이 해외로 송금되어져서 이 항목에서(Current Transfers in the Balance of Payments)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중 상당부분이 한국에서 일하는 해외노동자들이 모국에 송금하는 돈이지만, 한국에 있어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가장이 종종 한국에 돌아와 직업을 가지면서 해외에 교육의 목적상 거주하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해외 한인들의 역할은 지금까지 한국경제에 있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듯 보인다. 1950-60년대에 벌어졌던 미국으로의 고급인력유출 현상이 일부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70년대 이후로 이들의 노

하부와 지식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려 한 정책의 결과 상당히 많은 재외 한인들이 실제로 모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다른 한 예로는 중국의 연변에 거주하는 한인사회가 정보산업단계로 들어선 모국의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이 종종 사회문제화 되는 이민 집단의 이질성이 보다 전면적으로 대두되지 않고 있는 이유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이민자의 문제는 위에서 보여지듯 다른 산업사회와 다른 몇 가지 특징들로 인해, 언어나 문화가 급격히 섞이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 않다. 해외교포들의 모국에 대한 경제적 기여 역시 송금이나 정치적 영향력의 강화보다는 물리적으로 모국에 귀향하는 경향을 띠어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민들

의 정치경제학과는 일면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가 우리의 이민에 대한 인식이나 한국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적지 않은 해외노동자들의 문제에 좀 더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The Economist 2002. Research Surveys on Immigration, Oct 31.
- The Economist 2003. A World of Exiles, January 4th.
- Bruce Scott 2001. "The Great Divide in the Global Village", The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 Martin Wolf 2001. "Will the Nation-State Survive Globalization?", The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 Bergsten, Fred and Inbom Choi eds 2002. Korean Diaspora in the World Economy.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FOCUS

독일 - 프랑스, 이중국적 허용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유럽은 민족국가(nation state) 단위로 구획되었으며, 민족국가적 체제형식은 대내적 단일성과 대외적 배타성을 그 중심적인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근대국가의 성립 이래 가장 보편적인 체제모형으로 자리잡았던, 거대한 패러다임으로서 근대 인간의 삶을 체계적으로 규정해왔던 민족국가의 틀은 냉전체제 해체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화 내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크게 동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 세계적 변화의 맥락 속에서 견고해 보이기만 하던 민족국가의 장벽에 치명적인 균열을 발생시키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독일과 프랑스는 독일·프랑스 화해협력조약(엘리제 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아 1월 22일 공동선언을 발표했으며,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은 서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독일에 사는 프랑스인이나, 프랑스에 사는 독일인은 본인이 희망하면 원래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국적까지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국적 취득자들은 양국의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며, 이중국적 취득자와 내국인간의 차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구성원의 융합현상에 따라 양국 정부의 고유한 기능 역시 연계와 공조의 고리로 연결된다. 모든 정책은 사전에 상호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외교·군사문제에 관한 정책결정은 사전조율이 의무화된다. 또한 6개월에 한번씩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과 때를 같이하여 양국 각료 전원이 참석하는 공동 각의가 개최되며, 각료의 인적 교환 역시 이루어진다. 장피에르 라파랭 프랑스 총리는 독일 각료 한 명을 프랑스 내각에 입각시키겠다고 선언했고, 독일도 호혜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은 주정부간 교류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 16개 주지사들을 프랑스로 초청할 계획이며,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도 같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유럽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이번 선언으로 유럽통합의 길은 다시 한번 질적 전환의 계기를 맞아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국가 경계의 해체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은 가시적 현실로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프랑스인' 또는 '독일인'이 아닌, 민족국가의 범위를 초월하는 정체성을 지닌 '유럽인'의 출현을 보게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박찬규 / 본원 연구원)

Changes, Problems, and Solutions of Immigration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after Second World War

김 용 찬 (본원연구원) / 영국 그라스고대학박사과정

This article shows the history of immigration policy, the formation of the immigrant community, and solutions to problems caused by immigration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It focuses on changes of immigration, coloured immigrant settlement that has been influenced by the policy, and indicates problems and some suggestions. In fact, the government changed the policy in the first half of the 1960s, so influx of Asian immigrants grew rapidly.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1960s, the immigration policy of restriction and control had continued. In the 1990s, the United Kingdom had new problems: asylum and European Union citizenship. Therefore, it should change the established policy and prepare a new policy that lessens the limitation of immigration and deals with immigrant problems efficiently.

Immigrant policy focuses on the integration of new immigrants, while immigration policy refers to the restriction and control of immigration (Hammar, 1985). It is a very important subject in the United Kingdom. During half a century, communities of Indian sub-continental, Caribbean, and African origin have grown to about 6% of total population of the United Kingdom. Furthermore, immigrant activities have increased in various areas.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he restriction and control of coloured immigration. This analysis places immigration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in a historical perspective, points out the change of policy, and looks at the formation of immigrant community to be influenced by policy. Finally, solutions to problems of immigration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are stated at the end of article.

The government had a positive position toward the formation of a black immigrant community before Second World War. However, the government immigration policy from the end of War turned to limit the immigration of Asian and black people from the Empire and Commonwealth (Spencer, 1997). In 1948, the British Nationality Act was one part of a process of blocking immigration. At that time, Indian subcontinent people followed Caribbean people who had settled as the first coloured immigration. Severe constraint of immigration flow caused turbulence in several cities and built up the race

and immigration issue as important problems in the United Kingdom.

In the United Kingdom, immigration policy experienced very important change in the early stage of 1960s. From the second half of the 1950s, Employers in the United Kingdom wanted to hire low wage labors because of labor shortages. They recruited coloured immigrants, were first from the West Indies, then India and Pakistan and later from Bangladesh (Phillips, 1998: 1681-1682). Although official limitation policy had continued, labor market mechanism created demand for immigrants in poorly paid occupations. Moreover, there was a significant matter of how to deal with British subjects who came from the Empire and Commonwealth after riots in 1958(Kay and Miles, 1994: 25). Therefore, the government temporarily ceased the restriction of incomer entrance. Spencer (1997) argued that the 1962 Act had very great significance in the making of multicultural Britain. In fact, the Act stimulated the growth of Asian and black immigrant community rapidly. Expectation of the new Act brought about an increase in newcomer immigration, also temporal residents in the United Kingdom applied for permanent residency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Act. After enacting the new Act in 1962, the unification of family was carried out, so the dependents of immigrants increased rapidly.

After coloured immigrants had rushed to the United Kingdom in the 1960s, the government started restriction and control of immigration of Asian and black people. The Immigration Act of 1971 halted the entrance from the Indian sub-continent, Caribbean, and Africa, but South Asian families flew in continuously and reconstructed their community (Spencer, 1997: 143). The Act in 1971 strengthened the power to control immigration, but did not prevent an influx of British Asians. In 1981, the British Nationality Act provided three

forms of citizenship: British Citizenship, Citizenship of the Dependent Territories, and British Overseas Citizenship (Hollifield, 1997: 50-52). Furthermore, the Immigration Act in 1988 included management of overstayers and illegal immigrants, but the entrance of immigrants who had economic power in Hong Kong was accepted (Spencer, 1997: 148-149). Although immigrants were reduced from the latter half of the 1960s, immigration of Asians continued despite the limitations imposed by the government. In the 1990s, immigration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has faced a new environment: European Integration and Post Cold War. In this circumstance, the government has sustained limited entrance of newcomers. For example, the United Kingdom has not joined the Shengen Agreement that European citizen freely move in or out of the European Union. Moreover, asylum applicants for the United Kingdom from Middle East and Eastern Europe have increased and this problem has emerged as a very important matter.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has made an effort to remove racial discrimination and to integrate the immigrant community.

The discussion above has shown that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a restriction policy regarding immigration except for the first half of the 1960s. Despite the government policy, Asian immigration from India, Pakistan, Bangladesh, and China has constantly

existed since the Second World War. Recently, while a large influx of immigrants has not occurred in the United Kingdom, asylum problem and immigration of European Union citizens has been important from 1990s.

Although immigration policy of the United Kingdom has continued in consistency, several problems can be pointed out. First, as the British Nationality Act in 1981 stated the category of British citizenship, this strict definition of nationality can result in discrimination regarding acquirement of citizenship. It can also enforce the personal nationality principle (*jus sanguinis*) against free movement of people in European Union. Second, the maintenance of restriction policy has caused the increase of antipathy in Asian and black immigrants, and resistance to discrimination and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s in the riots of Asian immigrants in Northern England. For example measures to limit immigration of Dependents from 1960s to 1980s were strictly criticized because integration of family belongs basically to human rights. Third, after the Cold War, the many asylum applicants who were from Eastern Europe and Middle East hoped to settle in the United Kingdom, but the lowest rate of asylum permission in the Western Europe show that the United Kingdom has been a fortress against outside world. Likewise, even though free movement of European citizen has been accelerated with European integration,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close its door except for occasions when it acquires a profit.

Therefore, the United Kingdom should perhaps prepare immigration policy in coincidence with significant changes and modify established policies. First, if the government will open the door to immigrants and include the territorial principle (*jus soli*) in a nationality act, the United Kingdom would be a leading state in European Union, be freed from the dishonour that it is a closed state, and acquire immense benefits through influx of promising immigrants: experts in IT, and bio-technology. Second, while the government should welcome immigration of asylum applicants and respect their rights, it should check illegal immigration and facilitate cooperation with states from which immigrants have emigrated regarding illegal immigration and problems of immigrants. Sometimes, the best way to defend a fortress is to open its door.

Bibliography

Hammar, T. (ed.) (1985) *European Immigration Policy: A Comparative Stud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llifield, James F. (1997) Immigration and Integration in Western Europe: Comparative Analysis, in Emek M. Ucarer and Donald J. Puchala (ed.), *Immigration into Western Societies: Problems and Policies*, London, A Cassell Imprint.

Miles, Robert and Kay, Diana (1994) The Politics of Immigration to Britain: East-West Migrations in the Twentieth Century, in Martin Baldwin-Edwards and Martin A. Schain (ed.), *The Politics of Immigration in Western Europe*, Essex, Frank Cass.

Philips, Deborah (1998) Black Minority Ethnic Concentration, Segregation, and Dispersal in Britain, *Urban Studies*, Vol. 35, No. 70.

Spencer, Ian R. G. (1997) *British Immigration Policy since 1939*, London, Routledge.

수단- 끝없는 전쟁

란돌프 마틴(Randolph Martin) / 국제구제위원회 시니어 디렉터

수년에 일어난 수단에서의 바람직한 사태의 전개가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에서의 분쟁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화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수개월간에 있는 비극은 현지에서의 평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현실점에서 수단의 내전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평화를 요구하는 국내기반이 소산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외의 관심과 기대와 더불어, 미국이 평화를 위한 연대를 주도할 기운이 성숙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봐서도 드문 기회이며, 이것을 무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수단의 변화와 전쟁의 행방

수단이 독립한 뒤 45년간, 이 나라에 내전상태가 없었던 시기는 겨우 11년뿐이다. 현재의 내전이 시작된 것은 1983년부터. 이는 그때까지 11년간에 걸쳐 수단 남부에 인정되어 왔던 자치권을 누메이리 대통령이 박탈, 전 국토에 이슬람 법(샤리아)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남부(혹인 기독교도)가 반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슬람교가 주류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구구성에서도 아랍인들이 적은 수단 남부는 국가의 자원 배분체계로부터도 배제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들 남부주민으로서의 자리아의 도입이라는 것은 빈곤 상태를 영속화하는 조치였던 것이다.

당초 정부에 대해 총을 겨누는 것은, 남부 존 켈란이 이끄는 수단 인민해방운동(SPLM). 그러나 그후 19년에 걸친 유혈항쟁 동안, 수단내전의 당사자는 바뀌어, 북부의 4개 정권과 남부에서의 수많은 세력들이 서로 바뀌가면서 전투를 되풀이 해 왔다. 이미 2백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내고 있는 이 내전의 사상자들은 앙골라, 보스니아, 체첸, 코소보, 리베리아, 페스샤만, 시에라치온, 소말리아, 르완다에서의 분쟁의 사상자 합계를 상회하는 규모에 이르고 있다. 놀라운 것은, 2천9백만 인구 가운데 4백만 명이 자기 집에서 내쫓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사적인 결말이 난 것은 아니다. 현재 정부는 남부에서의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 이외의 남부지역은 여전히 SPLM, 혹은 그 밖의 군벌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수년간 수단의 정치 경제정세는 분쟁의 종결을 위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교섭에 의한 공정한 평화실현의 가능성을 한층 희미하게 하고 있다. 그 가장 구체적인 것이 수단정부가 기반강화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채무를 잘 융통하여(IMF 등으로부터 용자 등으로), 수단정부는 자기들의 권력기반을 강화, 오랫동안 겪어온 국제적 고립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적대하는 남부의 군벌 대립을 이용하여)전투를 나름대로 잘 수행하고 있으며, 북부로부터 남부로 정부군 병사들이 직접 공격하는 일도 거의 없다. 파이프라인의 건설로 남부의 석유채굴이 궤도에 들어섰으며, 정부는 하루 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세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군사작전을 실시하거나 외국의 친구들을 새롭게 만들기에 충분한 자금이며, 할즘은 남부와 내전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가지고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여 내전은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계속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은 수단내전의 교착상태를 타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미국이다. 1990년대를 통해, 워싱턴은 남부의 반정부세력을 지원, 할즘에 대해서는 봉피를 기대, 고립화정책을 일관적으로 취해왔다. 이렇게 하여 워싱턴의 정책은 수단정부가 시민의 인권을 탄압, 이웃 아프리카지역 전체를 불안정화 시켜, 국제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정당화되어 왔으나, 그것이 내전을 종결로 향하게 하는데는 공헌치 못했다.

그러나 최근 수단정부는 "지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제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악평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정해도 좋을 만큼 개선에 노력해 왔을 뿐 아니라, 인권상황도 어느 정도는 개선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종래의 고립화 정책에 대신하여 단계적이기는 하나 새로운 조용한 개입정책을 취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 봄직하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은 수십 년에 걸친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공정한 중개역을 담당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그 목적이 무역제재의 해제, 세계은행이나 IMF를 통해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 등이라고 하더라도, 수단정부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열망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계속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과거의 나쁜 행동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낮으나, 한편에서 미국의 개입이 없으면 남부에서의 전쟁이 금후도 끊이지 않고 계속될 위험성이 있다.

알 바실과 핫산 토라비

1989년 이래, 수단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딕 알 마하티 정권을 쿠데타로 몰아낸 알 바질 장군이다. 바질 정권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수단은 엄격한 통제하에 두고 수많은 가혹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독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외화 보유는 비합법이라고 봤고, 야간 외출금지령이 발동되는가 하면, 민간기업이 소유하는 재고도 정부에 압수됐다.

이렇게 하여 민주주의자와 상인계급을 적으로 돌린 바질 정권은 그 지지기반으로 이슬람원리주의의 이슬람동포단(NIF)과 손을 잡았다. 최후로 실시된 1986년의 선거에서 NIF의 지지율은 겨우 6% 였으나, 알 바질의 쿠데타에 의해 NIF는 뜻밖에도 권력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NIF는 그 즉시 억압

정치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알 바질은 폐지할 예정이었던 자리아의 사회적 적용은 NIF의 의향에 의해 반복되었고, 종전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실시되게 되었다. 공개적인 태형이나 수족 절단 등의 형이 할즘의 스타디움에서 재개됐다. 오사마 빈 라덴의 입국도 환영하였을 뿐만아니라 이란, 이라크, 리비아와의 관계도 강화됐다.(이들은 모두 수단정부의 남부에 대한 공격을 물심양면에서 지원하고 있던 나라들이었다.)바질 정권은 이슬람주의 우파나 알 마하티 정권의 실증을 느껴왔던 사회 층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지를 불러모았다. 그러나 신 정권의 어떤 지지기반도 할즘의 정책이 이 나라를 점점 빈곤, 정치적 혼란, 국제적 고립으로 향하게 함에 따라 해체해 가게 된다.

변화하는 내외 환경

그러나 알 바질은 예상 이상으로 유연한 정치가인 것이 그후 입증되게 된다. 바질 정권은 '국제사회의 천덕꾸러기'라는 수단의 별명을 서서히 벗는데 성공하였고, 경제 붕괴도 가까스로 피해가기 시작했다. 할즘을 방문해 보면, 지금은 상황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전화도 통하고, 도로의 수리도 이뤄져, 10년 전에는 일상의 일부였던 주유소에서의 장사진도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주유소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비해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외화보유도 인정되고 있으며, 자국 통화도 안정되고 그 가치도 크게 축소된 암시장에서의 가치에 가깝게 되었다. 거리에서도 밤늦게 까지 사람들의 움직임에 활기가 차 있고 난민이나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감도 줄어 들었다.

과거 추방된 수단의 정치엘리트들도 바질 정권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예컨대 1985년의 쿠데타로 추방된 누메이리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 그는 지금은 인기 있는 원마 당의 당수를 맡고 있다. 인기 있는 민주 통일당(DUP)의 간부인 알마드 알 밀가니 등도 12년의 추방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고국에 되돌아왔다. 이 때문에 그의 동생으로 DUP와 국민민주동맹(NDA)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반정부계 정당의 당수를 겸임하고 있는 오스만 알 밀가니도 정부와 화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마저 나돌고 있다.

바질정권은 온건파의 정치지도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한편에서 급진파에게는 강경 노선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예컨대 작년 3월, 이 나라의 아주 저명한 이슬람원리주의자로, 과거 바질 정권의 일을 담당하던 NIF의 간부 핫산 트라비는 과거의 숙적인 SPLM과의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정부에 의해 체포되었다. 수단정부의 이러한 국내정책의 전환에 의해 국제사회의 사선도 변했고 고립상황도 완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정부가 남부와 화해할 동기는 옅어지고 있다. 과거 비판적이고 적대적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수단의 파트너, 협력자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웃나라들로부터도 소원시 당했던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건설적인 외교 무역상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있다. 예컨대 수단은 에리트리아와의 전쟁을 거쳐 재건을 겨냥하고 있는 에치오피아와의 사이에 전력의 매매, 철도나 석유 파이프라인의 건설안 등의 수많은 합의를 맺고 있다. 에리트리아는 수단의 반정부세력인 NDA를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으며, 수단도 또 에리트리아의 반란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양국이 다 함께 관계개선에 뛰어들 결의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1999년 말, 수단과 우간다는 함께 상대국의 반란세력에 대한 지원을 중지할 것에 합의했다. 그것은 우간다는 SPLM에의 지원을 그만두고, 수단도 우간다의 악명 높은 '신의 저항군'(LRA)과의 관계를 끊게 하는 것이었다. 지금도 양국의 관계는 불안정하지만,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2001년 봄에 알 바질리 우간다의 요웨리 카구다 무세베니 대통령의 신임 임기 취임식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관계의 개선을 증개한 것은 자국의 국제적 입장을 어떻게든 회복해보고 싶어 하는 리비아의 카다피 대좌였다.

식민지시대의 종주국인 이집트와의 관계마저 회복되고 있다. 확실히 1995년에 아디스아베바에서 일어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 암살미수사건에 관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수단 정부가 이집트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은 간단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미 양국은 수많은 상업적인 합의를 교환하고 있으며, 영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하라이프 트라이앵글을 둘러싼 긴장도 완화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무바라크 암살미수예의 관여를 이유로 96년 이후 수단에 제재조치를 적용해 왔으나, 이것이 2001년 10월에 해제될 때도, 이집트 측이 항의하지는 않았다. 또 수단정부는 2001년 10월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위한 평화회의의 호스트 국을 맡았다. 이것도 또 수단이 이 지역에서의 안정촉진세력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이외에 눈을 돌려도 아시아나 유럽 등 수많은 나라들이 수단에 새로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워싱턴의 정책에 동조키 위해 2년여에 걸쳐 폐쇄되었던 영국의 고등판무관사무소(대사관)도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미국을 예외로 한 거의 모든 주요국이 이미 수단과의 완전한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수많은 나라가 상당한 규모를 가진 수단의 석유자원에 주목, 경제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다. 근래 수개월에만도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말레시아, 일본의 기업대표단이 수단을 방문할 정도다.

테러지원 국에서 대미협조로

수단은 테러지원 국이라는 낙인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1996년 미국은 UN 안보리와 같이 수단이 무바라크 대통령의 암살계획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대사관을 폐쇄하고 제재조치를 발동했다. 2년 후인 98년에 나이로비와 달에스사람에서 일어난 미대사관 동시 폭파 테러의 보복으로 워싱턴은 할즘 교외의 약품공장이 화학병기의 생산에 사용됐다고 주장, 순항미사일로 공격하기도 하였다.

한편 96년에 수단정부는 워싱턴의 강한 지원아래, 오사마 빈 라덴을 국외 추방을 결정했다. 바질 정권은 빈라덴의 신병을 미국 측에 인도하려고 했으나, 클린턴 정부는 그를 국내에서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의를 거절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지금 수단은 97년의 폭탄테러 방지조약, 99년의 테러자금제공방지국제조약에도 조인하고 있다. 특히 할즘은 9월11일의 동시다발테러에 대해서 즉시 비판성명을 내고, 테러조직이나 그 자금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명한 테러리스트를 구속하는 등으로 동시다발테러 이후 워싱턴과 협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여전히 수단을 국무성의 '테러지원국가' 리스트에서 빼지 않고, 경제제재조치도 적용시키고 있다. 실제 경제 제재의 해제조건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국정부는 애매한 태도로 시종일관하고 있다. UN안보리가 대 수단제재 해제

의 표결을 했을 때도 기권한 것도 미국뿐이었다.

대리전쟁과 노예매매

수단의 대외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피 흘리는 내전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수단정부는 전투계속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지 않는 형태로 내전을 행하고 있으며, 분쟁을 종식시킬 의도는 없다.

수단에서의 분쟁은 국가간의 국경선을 둘러싸고 싸우는 전통적인 전쟁과는 전혀 다르다. 수단내전의 진정한 희생자는 전투에서 생명을 잃은 병사들이 아니라, 기근이나 질병으로 생명을 잃는 남부의 민간인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근이나 질병은 농촌경제나 사회적 인프라의 붕괴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단체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음도 문제를 심각 화하고 있다.

병사들의 측면에서 보자면, 싸움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같은 남부의 세력, 즉 SPLM의 부대와 정부가 지원하는 라이발 부족의 무장집단이다. 내전에서 싸우고 있는 수단국군의 병사들의 대부분도 실제로는 할즘의 거리에서 모집한 남부출신자들이며, 그들이 배로 동포들과의 싸움에 내보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군의 사기 저하라고 하는 문제, 특히 자식들이 전장에서 사망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상하거나 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양친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정부는 새롭게 민중방위군(PDF)을 제2군으로 조직했다. 이 무장집단은 자기들은 남부의 이교도와 성전을 하고 있다고 자임하고 있는 이슬람교도의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다. PDF에 참가하는 무자하딘들은 전투는 종교적인 의무이며, 전투에서 생명을 잃는 것을 순교로 보고 이것에 의해 신의 은총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할즘은 북쪽에 모여든 징집 병을 전선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아랍계 무라하렌인의 무장집단에 전선에서의 전투를 맡기고 있다. 무라하렌 사람들은 목초지, 가축의 약탈, 노예의 유괴 등을 둘러싸고, 남부의 딩카인들과 옛부터 적대하고 있다. 수단정부는 이 적대의식을 이용하여 무라하렌인에게 발할 알가잘에서 생활하는 딩카인을 곤란하게 하여서 발할 알가잘주의 수도인 와우의 병기고에 물자공급 열차의 운행을 방해토록 방조하고 있다.

물자 보급열차는 1년에 수 차례 영토분쟁이 일어날 위험지역을 통과한다. 이 화물열차는 거의 사람이 걸어가듯 것과 같은 속도 밖에 내지 못할 뿐 아니라, 노선의 수리를 위해 빈번히 정차한다. 무라하렌인은 말이나 낙타를 타고, 노선에서 20킬로를 행동범위로 열차를 습격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마을을 불태우고, 가축을 빼앗고, 노인들을 죽이고, 여성이나 아이들을 유괴해서는 함께 빼앗은 열차에 싣고 북의 거점으로 데리고 간다. 이러한 유괴된 여성이나 아이들은 '처'나 노예로 여겨져, 가축과 교환하거나, '선의의 유럽인'에 팔기도 한다. (수단 내전에는 기묘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노예를 사는 것으로 이러한 불행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게 되면, 노예거래를 중지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구미의 단체나 종교단체의 일부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 수단 법무부는 유괴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니세프가 그러한 행위의 박멸을 위해 활동하는 것도 인정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울한 현실은 수단정부가 무라하렌인을 남부와의 항쟁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계속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석유개발이 내전을 격화

할즘은 내전이 북부에 주는 충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데 성공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수단의 석유 파이프라인이 전쟁을 영속화시키는 최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수 년 전까지는 수단의 석유자원은 단 순히 가능성의 수준에 있었다. 실제 수단정부는 내전을 계속하기 위한 자금을 바그다드, 다마스카스, 테헤란, 트리폴리에 의존하였고 그 결과 수단은 국제사회로부터 외교적으로 고립, 경제적인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1999년에 6백 마일의 파이프라인이 유전지대와 홍해에 면하는 포트스탄을 연결한 이래, 수단은 석유자원을 경제 정치자원으로 전화할 기회를 얻었다. 그 성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2001년도의 수단의 석유수입은 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추산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금후 수년간의 생산량이 현재의 2배,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수단은 많은 자금을 요하는 내전을 계속할 재원을 확보케 되는 것이다. 할즘은 이러한 석유수입을 보다 고도의 병기조달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병기생산개시에 충당할 수도 있다. 미국의 난민위원회는 수단의 군사지출은 1998년 이후 배증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수단정부 소식통도 경 화기와 탄약을 국내에서 생산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대포나 전차마저 언젠가는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 새로운 산업기반이 북부에서의 전쟁계속을 요구하는 사회층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수단은 세계의 주요한 석유기업과의 상업적 파트너십을 연결하고 있다. 칼레시아의 마토로나스, 중국의 국영석유공사, 스웨덴의 룬딘석유, 오스트리아의 OMV, 프랑스의 토달피나엘프, 그리고 구미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캐나다의 다리스만 에레르기와도 거래관계에 있다.

이러한 석유기업과의 관계가 수단의 외교관계의 개선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예컨대 석유 붐이 일어나기 전에는, 할즘의 외교 커뮤니티는 만성적인 한발, 홍수, 난민위기, 인권탄압 등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해 왔으나, 석유개발이 시야에 들어오자, 제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석유의 개발을 둘러싸고는 특히 위험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내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유전지대가 거의 대부분 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지역의 저항세력을 일소할 작전을 강화하고 관리체제를 강화하려하고 있다. UN의 여러 기관, 외국정부, 비정부조직에 의한 수많은 리포트가 '수단정부는 유전지대로부터 주민을 확실히 퇴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정부의 태도가 국제 미디어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외국의 석유기업도 그 공모관계를 의심받아 비판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캐나다의 다리스만 에레르기에는 보다 커다란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리스만이 현지 개발에 관여하는 최대의 외국 기업이며, 특히 국제여론이 캐나다의 공영기업인 다리스만은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의 기업보다도 상업

활동 면에서 도덕이나 윤리면을 중시해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나 미국에서의 풀뿌리 운동의 활동가들은 다리스만에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동사의 주주에 대해서 수단이 내전과 인권탄압을 그칠 때까지는 그 권리를 포기, 현지에서의 상업활동을 정지토록 다리스만에 요구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편 다리스만 측은 수단에의 투자는 평화를 향한 공헌이 되고 있다고 반론, 스스로가 사회공헌하고 있다는 점, 수단의 경제개발에 의해 석유로부터의 세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 자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민간인의 단속은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자원의 탐색과 개발이 수단의 평화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한 것'이라는 리포트가 상당하나, 그러한 분석의 대부분은 석유산업 측의 자금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수단정부가 관리하는 남부지역에서의 조사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분석이 NGO나 UN의 분석과 크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도 놀랄 일은 아니다. 휴멘라이트 워치, 엠네스티 인터네셔널, 특히 UN의 제 기관이 수단의 현상에 관한 리포트를 발표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의 수단에 대한 리포트도 공개되고 있다. NGO가 후원자가 되어 정리되어, 2001년 10월에 발표된 '나일강 상류와 수단에서의 석유개발, 분쟁과 주민퇴거에 대한 조사리포트'에서는 '석유산업이 보유하는 활주로로부터 정부가 군사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지역의 민간인들의 소개작전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북부에 의한 남부의 예속화

수단내전은 이슬람세력의 역할을 배제하고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슬람세력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나, 종교만으로 내전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교가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이슬람법에 의해 통치한다'고 하는 정부의 결정이 분쟁의 원인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부인들에 있어, 이 분쟁은 자원의 공유와 문화적인 자유를 둘러싼 싸움인 것이다. 북부의 아랍계 주민이 이슬람원리주의적 문화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않다. 이 지역을 여행해 보면 알 수 있으나, 구미인이 이란이나 다리반 시대의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등에서 느끼는 반감이나 배외주의 감정을 수단에서는 느낄 수 없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단의 주요한 이슬람주의 정당인 NIF가 대중의 커다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설사 그들이 권력을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책모와 쿠데타에 의한 것이었다.

민중은 이슬람법에 의한 금령을 지지하지 않고, 수단전국에서의 이슬람법의 적용은 점점 형해화되어 가고 있다. 기독교도가 많은 남부의 군사거점의 거리에서는 이슬람법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아랍인이 많은 북부에서도 엄격한 속박이나 징벌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수단내전에서의 정치적인 이슬람이라고 하는 요인은 작아지고 있다. 현재의 대통령부 담당장관인 아부델 라힘 모하메드 후세인 등 지배엘리트들 가운데 지금도 유력한 이슬람주의자들이 있음은 사실이나, 이미 바질 정권은 스스로의 정치권력기반의 탈이슬람화에 성공하고 있다. 이슬람주의 정당인 NIF 그것도 분열되어 지금 그 후속체로 존재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는 무색의 국민회의와 핫산 토라비의 인민국민회의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북간의 대립을 종식시키는 것은 간단치는 않다. 이 내전에는 종교분쟁의 측면

보다는, 문명충돌적인 요소가 더욱 뚜렷하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랍계 수단인의 상당수는 내전을 19세기 미국인들이 서쪽으로 서쪽으로 개척지를 넓혀가는 것을 ‘명백한 운명’이라고 보고 있던 것과 같은 감각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부의 수단인들은 남부의 문화를 경멸하고 있으며, 그 주민을 지배아래 두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보고, 남부의 자원개발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실제, 북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시키면, 이 내전은 과거의 미국이 서부의 토착 아메리칸에게 강요한 것과 같이, 수단 북부의 사람들이 남부의 사람들을 노예화하고, 정복자가 자원을 모두 수중에 취하는 형태로 귀착될 지도 모른다.

무모한 남부 독립론

정확하게 말하면, 평화를 향한 장애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오직 북부의 수단정부측만이 아니다. SPLM은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들은 북부와 화해에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SPLM은 지금까지 늘 바질 정권의 퇴진이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측이 스스로의 존재를 소멸시키기 위해 남부와 교섭에 응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한편으로, SPLM의 카란이 민주주의에 개입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는 엄격한 자유선거를 거부해 왔으며, 실제로 자유선거가 실시되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미지수다. 또 분쟁이 끝난 수단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도 확실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카란은 평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개인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위험한 것은, SPLM의 젊은 간부의 일부가 수단남부의 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독립하려 하더라도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으며, 이것은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이 선택지에는 남북의 경계선을 어디에 정할까 하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풍부한 석유자원이 있는 곳은 전통적인 지리적 구분상의 경계라인의 남측이며, 이 자원지대를 북부가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 두 나라로 나뉘진다면, 북부에서 생활하는 2백만-3백만의 남부출신 자에게는 어떤 운명이 주어질 것인가. 또한 명확한 수는 알 수 없으나, 상인층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부출신자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수단이 2분되면, 1947년에 인도가 경험한 것과 같은 유혈참사, 극도의 혼란, 대규모적인 인구이동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특히 문제인 것은, 남부가 통일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내적인 분열은 남부의 정치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왔다. 이것은 수단정부가 남부에서 대리전쟁을 수행할 괴뢰세력을 간단히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도 명백하다. 따라서 만약 남부의 독립이 실현된다하더라도, 폭력사태나 분쟁이 끝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실제 독립한다면 SPLM이나 딘카인의 가란이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딘카인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닌 가하고 남부인의 대부분이 걱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단 남부가 경제적 이익때문에 북부에 주목하게 될 지도 모른다. 석유 붐은 3-40년에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며,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수단의 진정한 경제적인 가치는 수자원과 농업

자원이 될 것이다. 이미 수자원을 수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남부의 독립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동일하게 수단 남부도 적대적인 북부에 의해 육로를 저지 당해, 이집트 시장에서의 접근을 방해 당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국가로서의 이집트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쪽이 무역상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인도적 지원활동의 공과

이상하게도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활동도, 수단의 끊임없는 내전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요인의 하나이다. 인도적 지원단체는 오랫동안의 전투, 되풀이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한발이나 홍수 등의 재난에 시달리고 있는 수단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 외국의 정부나 민간부문, 특히 UN이 각출한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인도적 지원단체를 통해서 수단에 유입되었다.

그러나 정부측, 남부의 반란군 쌍방모두, 이러한 자금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유용해 왔다. 수단정부의 궁핍 상에 손을 쓸려고 UN이 1986년에 개시한 '수단명강작전'(OLS)은 수단정부가 한정적이나마 반란군지역에서의 UN 활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실현했다. 그러나 할증은 스스로의 전략 전술상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일부지역에서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OLS의 활동을 자기 이익에 따르도록 관리 인도적 지원활동을 인정한 지역을 빈번하게 공중폭격하고 있다. 한편 SPLM측도 정기적으로 원조를 유용,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은 내전에 의한 심대한 인적피해와 재난이라는, 본래 분쟁세력이 받아야 할 가책과 책임을 확실하게 경감시키고 있다. 남부의 2대 반란세력은 독자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위한 초보적인 관료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자력으로는 제대로 자원을 배분할 수 없었다. 수단정부도 석유에 의해 얻은 새로운 부를 전쟁의 희생자나 빈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다. 한편 지원단체가 거든다고 하더라도, 분쟁세력이 전투를 위해 자금을 인도적 필요성에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지원단체가 인도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려 하는 열의가 있다면, 정부와 남부의 반란세력 쌍방이 문제에 대처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정책을 바꾸도록

클린턴 정권기의 미국의 수단정책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의 쿠데타에 의한 전복과 수단의 국제적 고립에 연결된 끝없는 국내의 혼란 등 1990년대 초기의 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 98년의 미국의 순항미사일에 의한 수단공격은, 이러한 시대의 이미지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이 공격은 현실의 정보에 근거, 계산된 대응이라기보다는 시대에 뒤쳐진 이미지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었다.

순항미사일에 의한 공격을 했다고는 하나, 임기말기의 클린턴 외교는 그때까지의 대항적 접근을 차차 완화시켜, 정부의 사명을 내포시켜, 현지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형해화해 갔던 평화교섭의 동향을 판단할 특명대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부시정권은 수단문제에 대한 지원이나 관여는 외교정책상의 우선 과제는 아니라고 언명하면서도, 정권의 유력한 지지기반인 석유산업의 압력으로 인하여,

이 나라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 우파세력은 진기하게도 의회의 흑인의원연맹과 손을 잡고, 이슬람계 수단정부를 고립시켜, SPLM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계 반란세력을 지원하도록 부시정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석유산업은 이에 대항하여 다른 산업 로비와 함께 석유지대와 확대되고 있는 시장에의 접근을 확보하려고 워싱턴에 수단정부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부시정권이 인식해야 할 것은 수단에서의 영속적인 평화를 확립함으로써 비로소 이들 대립하는 국내정치상의 요청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단 평화법을 둘러싼 미국 의회에서의 논쟁을 보더라도, 워싱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수단에서의 영속적인 평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에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의회의 대립이라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단남부지파와 할렘지파의 대립이었다. 2001년 6월에 하원을 전원일치로 통과한 법안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수단정부의 폭격을 비난, 남부의 반정부 세력에 1천만달러의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것이 현실에 적용돼, 수단에 투자한 회사에대한 제재조치가 취해져, 예컨대 캐나다의 다리스만은 뉴욕주식시장에서 퇴출돼야 했었다. 그러나 8월의 상원에서의 법안심의에서는 주식회사로부터의 퇴출이라는 조항이 삭제돼, 이점에서의 균형을 취하는 형태의 법안은 지금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부시정권은 수단정책을 전향적으로 개선, 미국 국제 개발국 국장을 포함한 관민의 인도적 지원조직의 대표들도 보다 빈번히 수단을 방문하게 되었다. 수단담당의 대리대사도 임명되었다. 미국정부는 2001년 여름에 북부 수단에 4만 톤의 식량지원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미국정부가 수단의 문제를 인식하고 관여를 강화하는 징조로 보고 있다.

또 하나의 좋은 뉴스는 공화당의 전 상원의원 존 단포스가 수단평화에 관한 대통령특사에 임명된 것이리라. 이것에 의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워싱턴도 곧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코스를 선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포스는 기독교의 에피스코파리안파의 목사로서 수단에 관계해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의 특사임명은 수단보다도 워싱턴의 정치를 의식하여 행해진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수단의 남북쌍방에서는, 이 인사는 남부의 SPLM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억측이 나오고 있다.

작년 11월에 단포스가 제안한 4가지의 신뢰구축조치도 북부의 의심을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4가지의 제안 모두가 SPLM측에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고 할렘에게 일방적인 타협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 졌기 때문이다. 제안의 하나는 정부측에 민간인에대한 공폭과 포격을 중지하라고 주장하면서, SPLM측에게는 민간인지역 가까이 군사거점을 설치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요청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제안도 노예제도를 폐지하도록 정부에 요청하면서도 남북의 분쟁세력이 병사나 포로로 사용하기 위해 아이들을 유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이러한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평화적 사명은 상황을 크게 진전시키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풍부한 경험, 현지의 유력자와의 개인적인 연결, 현지의 분쟁세력 모두를 관여시킬 능력과 열의를 가진 유능한 외교관 로버트 오쿠리가 단포스의 보좌역을 맡아 현명한 조언을 하고 있다. 이미 단포스 미슨은 미국의 사절단으로서 처음으로 수단, 그리고 누바 산맥 지역에대한 방문의 이해를 할렘으로

부터 받아냈다. 이것은 바질 정권이 점차적으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의 증거이기도 하다.

단포스 미손은 인도적 지원활동의 허가지역을 확대시키는 것에 성공, 그 지역이 군사작전으로 빠져 들지 않도록 '평온한 날'을 만들 것을 인정받았다. 특히 남북쌍방에 대해서 민간인을 목표로 하는 공격을 그만두는 것이 노예무역과 병사로 만들기 위해 아이들을 유괴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설득하는 것에서도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있다. 수위즈에서의 미국주도형의 교섭에 수단정부와 SPLM의 대표가 참가한 것 자체도 남북 쌍방이 단포스 미손과 미국의 전반적 관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증거일 것이다.

성실한 중개자

이러한 나쁘지 않은 징후가 있다고는 하나, 수단의 끝나지 않은 전쟁의 교착상태를 타파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평화어프로치를 생각할 때는 먼저 어떤 태도가 가능하지 않는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먼저 NGO나 인권단체가 중심이 되어 호소하고 있는 평화가 실현 될 때까지 석유기업이 현지에서의 활동을 정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실현되면, 분쟁세력이 평화를 회구하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라. 그러나 유감스럽게, 석유 산업 측은 수단의 자원개발로부터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거의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다. 수단정부가 실질적으로 모든 주요국으로부터의 외교승인을 받아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이상, 외교적 고립책이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전망은 거의 없다.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수단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나라의 수는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당연히 수단에 적대적인 태도를 계속 견지하면 오히려 방관자로서도, 건설적인 대 수단압력의 근원으로서도 고립되는 것은 미국 쪽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모든 분쟁세력에 군사적 해결책을 포기시키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어느 것이든 분쟁세력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전투를 조장하고 진정한 평화교섭의 전도를 어렵게 할 뿐이다. 미국이 공폭을 실시하거나, 다시 순항미사일공격을 가한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반발을 일으켜,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할즘에서의 이슬람원리주의의 영향력을 부활시킬 뿐이다. 외부로부터의 군사개입에 의해 바질정권을 아프카니스탄의 다리반 정권과 같이 붕괴로 몰고 간다 하더라도, 남부에서의 내부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은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할즘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수단의 고립정책, 혹은 수단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쓸모없는 것은 틀림없으나, 분쟁세력 자신에게는 평화를 되찾을 힘이 없다. 북부측의 남부에서의 경제, 정치, 사회적 이익의 고양과, 남부 지도자 일부에서의 독립기운의 고양의 균형을 취하기 위해, 엄격한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그들이 화해로 향하도록 유인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UN의 관료, 각국의 외교관, 그리고 수단정부의 대표들마저도, 수단에서의 평화추진을 위해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수단에서의 교착상태를 타개함으로써 미국이 드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은 '성실한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할 입장에 있다. 제재를 해제하고 있지 않은 미국은 현재 수단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워싱턴이 할즘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더라도, 국내의 경제로비로부터의 압력을 받는 일은 없다.

효과적인 제1시스템으로서, 미국은 먼저 수단과의 외교관계를 부활해야 한다. 할즘에 대사를 보내고 수단으로부터 대사를 워싱턴에 불러들여도, 그것이 수단에서의 인권탄압을 추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인권탄압에 미국이 불쾌감을 가지고 있음을 전해, 분쟁종결을 향한 할즘에 압력을 가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특히 할즘과의 외교의 정상화는 SPLM에 대해서 워싱턴이 남부의 분리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할즘과의 화해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된다.

수단측이 미국과의 협조의 전망으로서, 할즘이 갈망하는 미국의 제재 해제도 시야에 넣을 필요가 있다. 할즘은 어떻게 하면 미국의 제재해제가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워싱턴은 제재해제의 현실적인 조건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한편, 하원에서 법안에 내포되어 있는 제재조치를 포함한 수단 평화법을 추진하여, 미국의 제재대상을 할즘의 인권탄압과 남부에서의 분쟁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경제압력에 대해서는 세계은행과 IMF를 통한 것으로 채널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인도적 활동에 대한 지원을 증대시킬 필요도 있다. 지원활동가의 존재 자체가 특별히 적대행위를 저지하는 측면도 있다. 인도적 활동은 비참한 사회상황이 일으키는 문제에 뛰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현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업무를 통해, 분쟁종료 후의 수단사회의 기초가 될 평화를 보장하도록 제도구축을 지원할 수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포스가 특사로 임명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제1보이나, 그는 모든 노력에 공정한 어프로치를 취하고 인내를 가지고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포스 특사는 현명하게도 새로운 평화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양성조치의 도입과 인적 접근의 확대를 제안했으나, 앞으로는 8년 전의 정부간 개발기구(IGAD)의 관리체제아래서 도입된 평화 프로세스에 분쟁세력이 복귀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모든 세력은 '남부의 민족자결과 정교의 분리'를 포함한 제 원칙에 합의하고 있으며, 교섭기반으로서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본격적인 교섭을 요구하는 외부세력이 없기도 해서, 이 평화프로세스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궁에 빠진 것도 사실이며, 각 세력은 지금까지 장애에 부딪치면 그 해결을 미루어 왔다. 단포스 특사는 모든 세력이 교섭의 테이블로 돌아와, 그들이 과거 합의한 제 원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주요한 문제에 정면으로 뛰어들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는 국제적인 압력을 동원, 이 프로세스에 스스로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하게도, 수년에 걸쳐 일어난 수단에서의 바람직한 사태의 전개가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에서의 분쟁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화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반대로 과거 수개월간에 있었던 비극은 현지에서의 평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현시점에서 수단의 내전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평화를 요구하는 국내기반이 소산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외의 관심과 기대와 더불어, 미국이 평화를 위한 연대를 주도할 기운이 성숙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봐서도 드문 기회이며, 이것을 무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출전 : 『Foreign Affairs』 2002/3-4월호〉

월드컵과 한국의 네셔널리즘

트리스탄 드 브로본(Tirstan de Bourbon) / 프랑스 저널리스트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서, 정부의 활동과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한국은 세계의 주요 국의 하나가 된 것이라고 믿게 하려하고 있다. 미디어, 그리고 나라의 교육제도가, 이러한 생각을 전달할 완벽한 메신저 역할을 해 왔다.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거기서 현실을 알게되는 지금에서는, 그 역할이 점점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늘, 우리가 나라와 세계의 주요 국의 하나라고 들어왔습니다”고, 한국인들은 곧잘 말한다. “내가 프랑스에 와서 알게 된 것은, 세계지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지적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2002년 6월 개최된 축구 월드컵 대회에서,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대회의 진행이 좋았기 때문에 스타디움이 청중들로 가득 차서도 아니었다. 축구 시합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의외적이었기 때문이다. ‘Be the Reds’라고 인쇄된 붉은 T셔츠를 입고, 한국대표팀의 선전을 소리 높여 응원한 수백 만 명의 관중은 세계의 미디어에서 크게 보도되었다.

폴란드와의 일차 전 때에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으로 시합을 지켜본 것은 80 만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한국인의 열광은 나날이 높아져, 패하고 말았던 독일과의 준결승 때는 700만 명의 열광적인 서포터가 거리에 넘쳐 났다.

이러한 애국정신의 폭발에, 그곳 미디어들이 행한 역할은 컸다. 1998년의 프랑스대회 때, 보도 태도가 국수주의적이었다고 알려진 프랑스의 미디어들 마저, 이 정도의 열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모든 한국의 미디어들은 시사문제를 뒷전으로 미뤘을 뿐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지방선거마저도 단신으로 가볍게 취급하면서, ‘축구’라는 말 밖에 입에 담지 않았다. 아이들이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왕자’라고 뽐내는 것을 보면 이 나라가 어느 정도 흥분하고 있는 가를 잘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 ‘붉은 악마들’에 의해 연속적으로 펼쳐진 보기 좋은 게임만이, 이 아름다운 1개월의 보기 좋은 평화무드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보통 때는 축구 등 스포츠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한국사람들은 자기나라가 스포츠의 ‘대국’으로 성큼 도약한 사실에 환희하고 있었다. 1990

년 말에 경제개발기구(OECD)에 가맹한 한국이, 여기에 와서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하나의 국위를 높이 선양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혀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한국 사람들은 스포츠를 단순한 오락 이상의 의미를 늘 부여해 왔기 때문이다.

‘대전(對戰)’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시험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일체감을 높여, 자국의 대외 이미지를 강력하게 제고하는데 공헌한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던 하나의 좋은 예였다. 1년 전에 한반도의 전문가 파트릭 모류씨는 다음과 같이 말 한 적이 있다. <그때의 한국은, 세계 주요국이 된 것을 내외에 증명하고 싶었고 일본을 추격,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성과를 만들어 갔다. “일본은 올림픽을 치렀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으므로, 일본 이상으로 잘 성공시켜 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사진을 가진 한국에 있어, 축구경기에서의 대 승리(한국대표팀의 활약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사랑을 점점 높여가지만 했다. 그러나 정부에 의해 대대적으로 전개된 ‘환영 작전’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은채, 외국의 저널리스트들이 한국인의 개방성과 축제기분에 경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무드가 한국외교에까지 확대된 것은 아니었다.

대선과정의 논쟁

6월29일 터키와의 3위 결정전 몇 시간 전, 동해에서는 북한 선박에 의해 일어난 총격전이 전개됐다. 이 때문에 한국 측 사망자 5명, 부상자 19명. 한국정부 발표에 의하면 북한측에는 그 배 이상의 희생자가 났을 것이라는 것이다. 미디어, 여론, 또 그것에 이은 각 당의 정치가들은,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변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야당이 돼 있는 우파세력으로서, 북한을 동요시키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새로운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전쟁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제시되기도 했다.

보수적인 한나라 당에 소속되어, 2002년12월19일 대통령선거에서 출마할 예정인 이회창후보는, 7월1일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군사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공언, “철저한 대처로 임하는 것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저지할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중대통령에 의해 결성된 새천년민주당의 당원들 마저, ‘햇볕정책’이라고 불리는 대북 긴장완화정책에 등을 돌리고 있다. 동 당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노무현 후보 자신도, 7월23일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하고 있다. “햇볕정책은 한계에 달했고, 남북 어느 쪽 민중들로부터도 지지를 잃고 있다. 이미 ‘햇볕정책’이라는 말은 사용치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나는 보다 다른 노선, 국민들의 총의에 따른 노선을 취할 것이다”

한국 외교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일본정부도 이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월드컵 공동개최로 양국은 가까워지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한국은 결승전 날이 지난 이래, 이웃나라와 충돌을 되풀이하고 있다. 8월 초순에는 일부 한국의 의원 그룹이 양국간의 영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독도(일본 명 竹島)에 상륙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관해서는 수 없이 비판이 던져지고 있다.

특히 ‘日本海’라는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주장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 측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시대에 부여된, 일본 민족 중심주의에서 발생한” 이 명칭을 거절, ‘東海’라고 불러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내셔널리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들은 미국과 전체적으로 합의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미국이 핵 병기 개발의 위협이 있기 때문이라고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우리들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은 3월의 부시대통령 방한 때 김대중대통령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으나, 이 아시아의 동맹국은 기본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정부의 강경 노선에 대한 한국의 위화감이, 공식석상에서 김대중대통령의 입에서 흘러나온 적은 없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8월26일, 중국에 정치망명을 요구하려고 중국외교부의 문 앞에서 체포된 7명의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도록 하는 요청이, 처음으로 한국외무부 대변인의 입에서 나왔다. 그때까지 한국정부는 정치적 위협의 높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 강력한 이웃나라인 중국이, 이들 ‘탈북자’를 ‘불법이민’으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이 두 번째의 무역상대국인 것을 잊은 것은 아니다. 중국에 대한 비판이 습관이 되어있고 정도도 제한되어 있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달라이라마 14세가 인도에서 한국을 거쳐 몽골로 향하는 두 개 편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명했다.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의 미움을 사지 않도록, 이 티베트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과거에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9월 중순, 어떤 건축상 수여식을 서울시가 직전에 취소하기도 했는데, 이는 수상자가 1989년의 천안문 학생운동에 참가했던 것이 이유였다.

경제적 야심 회복

내셔널리즘의 고양은 경제분야에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도 정부와 같이, 나라의 규모나 능력에 비춰 보면 과대하다고 생각될 수 있게 목표를 잡고 있다. 월드컵에서 얻은 순위를 의식해서 인지, 정부는 1997년부터 98년의 금융 위기 이전에는 세계무역에서 제13위에 랭크되어 있던 이 나라를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제4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을 표방하고 나섰다.

경제여건의 악화 때문에 한번 브레이크에 걸렸던 한국의 야심이, 회복할 때를 맞이한 것이다. 그것도, 이 나라는 경제적인 곤경에서 곧바로 회복하고 다시 국제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기업의 기본적인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월드컵 효과는 아직 완전히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고 컨설턴트기업 하이트릭 엔드 스트라글스의 서울지사장 필립 테로씨는 말한다. 그리고 ‘삼성’의 21세기 전략은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정상에서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확실히 7월 중순, 삼성 그룹 간부인 이윤우씨가 “2005년까지 제3세대의 전화, 디지털텔레비전, 컴퓨터부품 등의 각 분야를 제패한다. 그리고 ‘세계

를 리드할' 제품을 10종류 준비, 800억 달러의 매상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현재의 매상고는 250억 달러다.

외국시장 정복이, 한국재벌의 중심테마가 되고 있다. 정부가 내건 지출과 투자의 조정정책에 따르고 있는 기업은 이미 없다. 삼성은 매년 선전비로 4억 유로, 마케팅과 연구개발에 각각 20억 유로 상당을 사용하고 있다. 기본사업을 축으로 한 재편 등은 이미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그룹은 현재도 64개의 관련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재벌기업은 대단히 높은 목표를, 대단히 짧은 시간에 달성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겨우 5년도 되지 않아, 그들이 맞이했던 경제적 위기를 가져온 지난 날의 과오는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걱정을 할 만한 요인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내일에는 검은 구름이 떠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위기를 예측하고 있다. 이번에 위협시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이다.

국민경제는 완전히 신뢰 할 만한 상태에 있으며, 국민들은 그것을 한껏 누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사람들은 금융기관에서 지금까지와는 단위가 다른 금액을 빌려 무조건적인 소비를 하게 되었다. 9월25일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각 가정의 차입금 평균액은 평균 연간 수입에 가깝다'는 것이다.

월드컵은 한국 내셔널리즘에 박차를 가했으나, 그것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두 개의 대국에 둘러싸인 이 나라의 역사와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 13세기 몽골에 의한 최초의 침략을 받은 이래, 한반도는 늘 이들 이웃나라들의 통치 내지는 지배아래 있어왔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된 1905년은 국민의식을 탄생시킨 중요한 계기가 됐다. 특히 1945년,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해방과 남북 분단이, '코리아'라고 하는 같은 나라에의 귀속의식을 강력히 만들었다.

그때부터, 통일은 남북쌍방의 목표가 되었다. "냉전 때, 두 진영은 각각 자기들 측이 정통적인 정부라고 상대를 중상해 왔다"고 한국의 학자들은 말하곤 한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은 한국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정부의 내셔널리즘이 북한의 그것에 뒤쳐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사정은 일본과의 관계에도 반영됐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우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내셔널리즘을 고양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서, 정부의 활동과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한국은 세계의 주요 국의 하나가 된 것이라고 믿게 하려하고 있다.

미디어, 그리고 나라의 교육제도가, 이러한 생각을 전달할 완벽한 매신저 역할을 해 왔다.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거기서 현실을 알게되는 지금에서는, 그 역할이 점점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늘, 우리가 나라가 세계의 주요 국의 하나라고 들어왔습니다"라고, 한국인들은 곧잘 말한다. "내가 프랑스에 와서 알게된 것은, 세계지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지적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출전 : 『Le Monde diplomatique, (2002.12월 호)〉

다. 다른 이슬람주의 조직도, 거기까지 분명하게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든, 모든 폭력'을 비난했다.

이슬람주의자로부터도 종교지도자로부터도 비난되고, 어두운 이단이라고 취급된 빈 라덴은 무슬림 사회의 내의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동정과 공감을 끌어들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로발리제이션

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의가 행해져, 사회로부터 지지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자기들이 미국 정권의 오만한 패권에 학대되고 있다고 생각해온 사람들은 알 카이다가 사용하고 있는 종교 용어나 언어나, 그들의 정치적 주장에 고무되고 있는 것이다.

<출전 : 『Le Monde diplomatique』 2001/11월호>

FOCUS

Melting Pot 미국?

미국 내에서 흑인 및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 문제는 'Melting Pot'으로 불리는 미국 사회의 민감한 '아킬레스건'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 문제가 근래의 '미시간 논쟁'을 통해 다시 여론과 언론의 초점이 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미시간 논쟁'은 명문 미시간 대에 지원했다가 낙방한 백인 학생 3명이 '소수 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인해 탈락했다며 제기한 위헌 소송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다.

'소수 계 우대정책'은 1964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에 의해 통과된 민권법과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조치로써 기계적 평등을 시정하고 기회의 박탈로 일어나는 현실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현재 미국 내 대부분의 국공립 대에서 시행중인 제도이며 이번에 사건의 발단이 된 미시간 대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소수인종이 지원할 경우 20점의 가산 점을 주어왔다. 그런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3년 1월 15일 법원에 행정부 의견서 제출 마감시한을 하루 앞두고 생중계 된 연설을 통해서 "헌법에는 명백히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게 대접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이어서 "미시간 대의 방식은 분열적이고 불공정한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논란이 촉발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할 것 같은 부시 대통령의 '법 앞의 평등'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발언은 좀 더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사르토리는 그의 저서 『Democracy Revisited』에서 평등의 유형에 관해 다섯 가지 단계로 구분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법적·정치적 평등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법적·정치적 권력을 주는 것으로 보통선거권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사회적 평등으로서 이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사회적인 중요성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남녀,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에 저항할 권리를 말한다. 세 번째는 '평등한 접근'으로서 '기회의 평등'이다. 이것은 동등한 장점에 대한 동등한 인정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평등한 출발'로써 '교육받은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달리 말하면 사회민주주의의 복지의 확대를 일컫는다. 마지막은 경제적 평등으로써 결과적 평등이다. 이는 현존 사회주의 권 붕괴로 인해 그 비현실성이 입증되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평등은 역사적 순서로 획득되어져 왔고 평등의 확대이자 자유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즉 '평등한 접근'으로서 '기회의 평등'은 네 번째, '평등한 출발'로써 '기회의 평등'을 전제로 하지만 역사적으로 '평등한 접근'으로서의 평등이 선행했다. 그것은 '평등한 출발'로서의 평등이 현재에도 확대하는 과정에 있으며 완전한 실현은 완전한 복지국가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평등한 기회'의 평등도 완전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부시 대통령이 주장하는 '법 앞의 평등'은 단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정치적, 사회적 평등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 소수민족 또는 소수인종으로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을 받으며 '평등한 출발'로서의 기회를 제약 당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 단지 법 앞의 기계적·형식적 평등은 현실의 문제에서 죽은 평등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 미국의 통합을 책임져야할 통수권자의 그 같은 발언은 'Melting Pot'을 넘어서 보다 이상적인 'Melted Pot'으로서의 미국을 지향하는 좀 더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불행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이 논란을 일으킨 1월 15일은 아이러니 하게도 전설적인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태어난 날이다. 평등과 화해를 열망하며 '나에겐 꿈이 있다'고 연설하던 그의 모습이 더욱 그리워지는 순간이다.

<이재정 / 본원 연구원>

미국 소수인종 지도 변화의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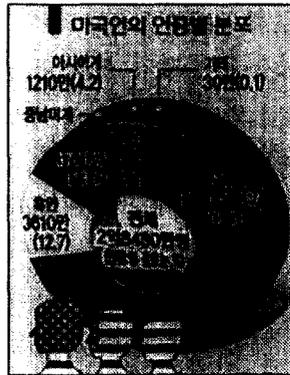
아이오와 주에 속한 작은 도시인 페리에 살고 있는 Higgins 신부는 300명을 상회하는 히스패닉계의 신자들을 위해 그의 설교를 스페인어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미 중서부의 작은 도시인 페리의 이 같은 변화는 미국의 전국적인 인종지도의 변화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아이오와 주의 경우, 2000년 센서스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라틴계 인구의 증가율은 1.49%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 수치는 불법 이민자들을 제외한 것이므로 실제적인 증가율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1월 21일 미 인구 조사국 발표에 따르면 2001년 7월 현재 히스패닉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 2억 8천 4백 80만 명 가운데 13%를 차지, 12.7%를 차지한 흑인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그보다 한 해 전인 2000년 4월의 조사에서는 히스패닉 비율이 12.5%로, 12.6%를 차지한 흑인보다 근소하게 낮았다. 이는 히스패닉 인구는 2000년 4월 당시보다 4.7% 증가한 반면 흑인은 동기간 1.5% 증가하는 데 그쳤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히스패닉계와 흑인을 포함한 다른 인종의 불균등 증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앞으로 히스패닉과 여타 소수인종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남미쪽에서의 끊임없는 합법·불법 이민이 늘고 있는 미국내 사정은 이러한 예측에 더욱 강한 설득력을 제공한다.

히스패닉의 증가는 기업들이 이들을 겨냥한 마케팅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교회에서의 스페인어가 가능한 신부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히스패닉의 증가는 경제나 문화영역에서 미국의 풍경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미국의 인종정책인 '흑백 이원성(black-and-white duality)'에 강력한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불거진 국공립학교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논쟁과 전개양상은 인종 구성의 변화가 정치적 아젠다로서 급부상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는 수의 증가가 곧 정치권력의 획득으로 이어지는 것을 가정하는 '자동적 정치화(automatic politicization)'를 상정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현재 연방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히스패닉 우대의 제스처는 래토릭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자면 재선을 위해 투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특정 인종을 구성하는 투표자 수의 증가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해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히스패닉의 급속한 팽창은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동생 잭 부시의 아내가 히스패닉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던 것도 수의증가가 정치세력화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관건은 히스패닉이 자신들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들지만 확실한 것은 미국의 흑백 이원성을 중심으로 한 인종정책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변화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히스패닉은 미국 사회에서 노골적이면서도 은밀한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인종이라는 측면에서는 흑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처지이지만 그 기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히스패닉은 스스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이를 조직하는데 있어 흑인이 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확보된' 언어적·인종적 동질성이 적극적인 정치적 기폭으로 조직화되고 표출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 자료출처: 한겨레신문(2003. 1. 22.)

< 이 용 승 / 본원 연구원 >

하우와 지식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려 한 정책의 결과 상당히 많은 재외 한인들이 실제로 모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다른 한 예로는 중국의 연변에 거주하는 한인사회가 정보산업단계로 들어선 모국의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이 종종 사회문제화 되는 이민 집단의 이질성이 보다 전면적으로 대두되지 않고 있는 이유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이민자의 문제는 위에서 보여지듯 다른 산업사회와 다른 몇 가지 특징들로 인해, 언어나 문화가 급격히 섞이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 않다. 해외교포들의 모국에 대한 경제적 기여 역시 송금이나 정치적 영향력의 강화보다는 물리적으로 모국에 귀향하는 경향을 띠어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민들

의 정치경제학과는 일면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가 우리의 이민에 대한 인식이나 한국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적지 않은 해외노동자들의 문제에 좀 더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The Economist 2002. Research Surveys on Immigration, Oct 31.
- The Economist 2003. A World of Exiles, January 4th.
- Bruce Scott 2001. "The Great Divide in the Global Village", The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 Martin Wolf 2001. "Will the Nation-State Survive Globalization?". The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 Bergsten, Fred and Inbom Choi eds 2002. Korean Diaspora in the World Economy.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FOCUS

독일 - 프랑스, 이중국적 허용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유럽은 민족국가(nation state) 단위로 구획되었으며, 민족국가적 체제형식은 대내적 단일성과 대외적 배타성을 그 중심적인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근대국가의 성립 이래 가장 보편적인 체제모형으로 자리잡았던, 거대한 패러다임으로서 근대 인간의 삶을 체계적으로 규정해왔던 민족국가의 틀은 냉전체제 해체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화 내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크게 동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 세계적 변화의 맥락 속에서 견고해 보이기만 하던 민족국가의 장벽에 치명적인 균열을 발생시키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독일과 프랑스는 독일·프랑스 화해협력조약(엘리제 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아 1월 22일 공동선언을 발표했으며,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은 서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독일에 사는 프랑스인이나, 프랑스에 사는 독일인은 본인이 희망하면 원래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국적까지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국적 취득자들은 양국의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며, 이중국적 취득자와 내국인간의 차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구성원의 융합현상에 따라 양국 정부의 고유한 기능 역시 연계와 공조의 고리로 연결된다. 모든 정책은 사전에 상호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외교·군사문제에 관한 정책결정은 사전조율이 의무화된다. 또한 6개월에 한번씩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과 때를 같이하여 양국 각료 전원이 참석하는 공동 각의가 개최되며, 각료의 인적 교환 역시 이루어진다. 장피에르 라파랭 프랑스 총리는 독일 각료 한 명을 프랑스 내각에 입각시키겠다고 선언했고, 독일도 호혜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은 주정부간 교류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 16개 주지사들을 프랑스로 초청할 계획이며,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도 같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유럽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이번 선언으로 유럽통합의 길은 다시 한번 질적 전환의 계기를 맞아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국가 경계의 해체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은 가시적 현실로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프랑스인' 또는 '독일인'이 아닌, 민족국가의 범위를 초월하는 정체성을 지닌 '유럽인'의 출현을 보게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박찬규 / 본원 연구원)

2002. 8. 1

히브루 대학교 폭탄테러

이스라엘 히브루대 폭탄테러 사건에서는 한국인 3명 등 외국인 다수 부상.

2002. 8. 2

부룬디 정부군-반군 충돌로 민간인 41명 사망

부룬디 수도 부줌부라에서 정부군과 후투족 반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 최소 민간인 41명이 사망.

2002. 8. 3

앙골라 27년 내전 공식 종지부

앙골라 반군인 '앙골라완전독립민족동맹'(UNITA) 군대 해산 및 무장해제. 2002년 4월 조인된 역사적인 평화협정에 따라 이날 아프리카 대륙의 최장분쟁에 종지부를 찍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

아프간서 종족 분쟁 격화-70명 사망

아프가니스탄 남서부 헤라트주에서 타지크족이 파슈툰족을 공격, 70명 사망자 발생.

카슈미르 충돌 재발, 20여명 사망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에서 7월 31일부터 유혈충돌이 잇따라 분리주의 반군과 인도 경찰 등 20여명 사망.

2002. 8. 7

인도네시아 노동자 40만명, 말레이시아 탈출

말레이시아 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 시행으로 인도네시아 노동자 40만명이 단속을 우려해 본국으로 탈출.

2002. 8. 10

아파트헤이트 손해배상 청구소송

미국 뉴욕 연방법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정권시절 인종차별정책(아파트헤이트)에 따른 희생자들이 다국적 대기업과 은행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달러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예비심리를 개시.

2002. 8. 11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종족간 유혈충돌로 70명 사망

콩고민주공화국(DRC) 동부 부니아시(市)에서 종족간 무력충돌이 발생, 최소 70명이 피살.

2002. 8. 12

호주, 44개 고위험국 관광비자 요건 강화

호주 이민국이 마련한 이 계획은 44개 고위험국가'의 일부 방문객들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시 은행 및 고용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가 보도.

2002. 8. 16

호주에 한국계 주축 새 정당 탄생

호주에 한국계를 주축으로 하는 새 정당 창설.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창당된 신당은 '지역민의당' (Local Voice Party). 초대 총재는 오철성(48. 웨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졸업반)씨이고, 고문에는 남기성현 유니티당 의원이 추대.

2002. 8. 18

카슈미르 폭력사태-15명 사망

인도군이 카슈미르의 파키스탄 국경 인근에서 인도 영토로 침투하려던 파키스탄 이슬람 민병대원 7명 사살 및 하루동안 양측의 충돌로 파키스탄인 15명이 사망.

2002. 8. 20

러시아 헬기 피격, 사망자 최소 105명

체첸수도 그로즈니 인근에서 체첸반군의 공격으로 러시아 수송헬기 Mi-26 추락, 사망자 수 최소 105명.

2002. 8. 23

미국 흑인농부들, 농무부앞에서 인종차별 시위

수십명의 흑인 농부들이 워싱턴에서 인종차별 항의시위. 이들은 가축과 트럭을 앞세우고 농무부 청사 앞으로 몰려가 자금대출시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

2002. 8. 24

영국서 노예교역 대가 아프리카 부채 탕감 소송

영국의 노예보상운동가들은 영국 정부에 대해 과거 대서양을 횡단해 이뤄졌던 노예교역에 대한 사과로 아프리카의 채무를 탕감해주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

2002. 8. 26

부룬디 정부군-반군 교전으로 200여명 사망

부룬디의 수도 부줌부라 교외에서 정부군이 민족해방군 (FNL) 반군의 공격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후투족 반군 24명과 정부군 3명 사망.

그루지야, 자국내 체첸반군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

그루지야정부는 러시아측이 그루지야의 용인하에 체첸 반군이 은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판키시 계곡으로 병력을 투입. 판키시 지역에는 약 5천명의 체첸난민과 7천명의 원주민이 살고있으며 원주민중 5천명은 체첸출신 소수민족인 킨스틴족.

2002. 8. 30

독불장군 무가베 반체제 활동 다시 탄압

짐바브웨 민간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가 폭탄투척으로 파괴되고 민주화단체 관련 인사가 체포되는 등 짐바브웨에서 다시 반체제 활동 탄압 시작.

이스라엘군-헤즈볼라 포격전

레바논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유혈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세바 농장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 초소에 공격을 가해 3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부상.

2002. 8. 31

마케도니아 반군, 인질 5명 유괴

마케도니아의 서부 지역에서 수 백명의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주요 도로들을 봉쇄하고 있는 가운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무장괴한에 의한 납치사건 발생.

2002. 9. 5

스리랑카, 타밀 반군 제재 해제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4년 간 타밀 반군 게릴라 단체인 타밀 엘람 해방호랑이(LTTE)에 취해 온 제재를 해제했다고 킬락 마라포네 국방장관이 밝힘.

2002. 9. 6

이스라엘, 탱크 파괴 등 2명 사망, 헬기 동원 보복공격

이스라엘은 탱크 1대가 매설된 폭탄에 파괴되는 등, 기습공격을 당해 군인 2명이 숨지자, 무장 헬기를 동원해 팔레스타인 경찰본부를 공습.

2002. 9. 11

미국, 9.11테러 1주년 추모행사 거행

2002. 9. 16

스리랑카 정부-반군, 역사적인 평화협상 돌입

스리랑카 정부와 반군 단체인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LTTE)가 노르웨이의 중재로 30여년 간의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사흘 일정의 역사적인 평화회담 돌입.

2002. 9. 17

르완다군 1진, 콩고민주공화국서 철군

르완다가 역사상 아프리카 최대 규모인 DRC(콩고민주공화국)분쟁에 개입한지 4년만에 대규모 병력중 1진의 철수를 개시했다고 르완다 정부가 발표.

2002. 9. 18

프랑스 법원, 2차대전 전범 파퐁 석방

프랑스에서 2차대전 전범으로 기소된 자 중 유일한 생존자이자 최고위직인 모리스 파퐁(92)이 형집행 도중 석방.

2002. 9. 19

코트디부아르 군사반란 발생-내무장관 등 사망

아프리카 서부 코트디부아르 경제수도 아비장파 부아케 등 주요 도시에서 군사 반란이 발생해 사상

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와중에 전(前)군 지도자인 로베르 게이 장군과 핵심 각료 1명이 사망.

2002. 9. 24

이스라엘군 가자 지구 공격, 팔레스타인 9명 사망

이스라엘군이 탱크와 헬리콥터의 엄호 아래 가자시를 침공,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충돌해 팔레스타인인 9명 사망, 24명 부상.

2002. 9. 25

아이티 흑인노예 후손들 프랑스에 보상요구

아프리카 흑인들과 아프리카 흑인의 후손들로 구성된 한 국제회의가 프랑스 정부에 카리브해 연안의 빈국 아이티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대가로 지불해야 했던 수천만달러의 반환을 요구.

인도 사원에 무장괴한 진입, 최소한 30명 사망

인도 구자라트주(州)의 한 유명 힌두교 사원에 무장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하며 진입, 최소한 30명 사망, 60명 부상.

2002. 9. 26

인도서 유혈 종교충돌

인도 구자라트주의 한 힌두교 사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31명이 사망한데 이어 이에 분노해 시위 행진을 벌이던 힌두교 시위대가 2명의 이슬람 교도를 칼로 찔러 유혈 종교 분쟁 우려 야기.

2002. 9. 28

인티파다 2주년 맞아 반이스라엘 시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티파다(반이스라엘 봉기) 2주년을 맞아 팔레스타인 자치지역과 아랍 각국 도시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치지역 점령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지지하는 시위와 각종 집회 개최.

카슈미르 선거폭력으로 10명 숨져

폭력사태속에 인도령 카슈미르 주의회 선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 분리주의 게릴라들의 소행으로 보이는 4건의 암살기도 사건이 발생, 10명 사망.

2002. 10. 2

카슈미르 선거 폭력사태 일촉-21명 사망

카슈미르주 의회선거 3차 투표가 시작된 1일 무장괴한들이 버스를 공격해 9명이 사망하는 등 선거를 둘러싼 폭력사태로 이날 하루 동안 군인과 민간인 등 21명이 사망. 또 무장괴한이 수류탄 등으로 투표소 10여곳을 공격하여 19명 부상.

2002. 10. 3

미국, 영국, 이라크군 시설 공습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은 이라크 항공기가 비행 금지구역을 침범함에 따라 공습 감행.

2002. 10. 5

르완다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철수 완료

르완다는 콩고민주공화국(DRC) 분쟁에 개입한지 4년만에 모든 병력을 콩고에서 철수.

일본-러시아, 북방 4개 도서 분쟁 해결 합의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열도의 4개 도서 분쟁 해결 기본 정책을 명문화하기로 합의.

2002. 10. 11

파키스탄 총선 투표마감-7명 이상 사망

파키스탄 총선이 1999년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실시됐으나 곳곳에서 유혈충돌로 인해 최소한 7명이 사망하는 등 극도의 혼란 속에서 마감.

인권운동가 알마다 등 '대체 노벨상' 수상

파라과이의 인권과 민주주의 향상을 위해 투쟁해온 인권운동가 마틴 알마다와 브룬디, 스웨덴의 인권단체가 대체 노벨상으로 알려 진 스웨덴의 '바른 생활상' 수상자로 결정.

2002. 10. 12

발리 폭발 사건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폭탄테러 발생. 182명 이상 사망.

2002. 10. 13

우크라이나 시민들, 대통령 사임 촉구 시위

레오니드 쿠츠마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사임과 조기총선을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시위가 수도 키예프에서 발생. 공산당과 민족주의자를 포함하는 거의 모든 정당 소속 시위대 약 9천명이 키예프 도심에 모여 독재자 쿠츠마는 하야해야 한다며 시위.

2002. 10. 14

인도네시아 과격단체 발리 테러 직후 조직해체

인도네시아 최대 과격 이슬람단체로 꼽혀온 '라스카르 지하드'의 자파르 우마르 탈립 라스카르 사령관은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 간 유혈 종교분쟁이 3여년 동안 지속된 말루쿠 주도 암본의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라스카르 지하드의 자진 해산을 공식 발표.

2002. 10. 22

이스라엘 북부서 자폭테러-14명사망 48명 부상

이스라엘 북부지역에서 퇴근길 러시아워에 강력한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 최소한 14명 사망, 48명 부상.

2002. 10. 23

체첸 반군, 러시아국립극장에서 인질극

체첸 반군, 러시아군의 체첸 철수를 요구하며 모스크바 시내 돔 팔뜨르이 극장에서 700명 이상의

관객 억류.

2002. 10. 27

인도네시아 분리주의 반군, 주민 22명 살해

인도의 한 분리주의 게릴라들이 북동부 아삼주(州)의 한 외딴 마을을 공격해 최소 22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경찰 4명 등 16명이 부상.

2002. 10. 28

러시아군, 체첸 특별 작전 재개

러시아군은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 무력 진압 이틀째인 10월 28일 체첸에서 특별 군사 작전을 재개했다고 체첸 주둔 러시아군 사령부가 발표.

2002. 10. 30

소말리아서 종족간 유혈충돌-40여명 사상

소말리아 남부 루크에서 29일 소말리아민족전선(SNF) 분파간 유혈충돌이 빚어져 최소 15명 사망, 25명 부상.

2002. 11. 2

스리랑카 평화협상 큰 진전

스리랑카 정부와 반군 타밀 엘람 해방호랑이(LTTE)는 지난 19년간 6만4천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혈충돌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상에서 주요 부문에 합의.

2002. 11. 3

브룬디 반군-군 충돌로 최소 51명 사망

브룬디 수도 부줌부라 인근에서 반군과 군이 충돌해 반군 최소 51명이 사망. 브룬디에서는 지난 93년 소수 투치족이 최초의 민주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투족 출신 대통령을 암살하며 내전이 발발, 현재 종전을 위한 예비 회담을 진행중.

2002. 11. 4

이-팔 분쟁 격화, 40여명 사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계속되는 피의 보복으로 인해 4일 하루동안 팔레스타인인 8명과 이스라엘인 2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

2002. 11. 7

美, 테러지원국 출신 지문채취 시행

미국은 전국적인 새로운 보안조치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한 5개 이슬람국가로부터의 방문객에 대해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고 미 법무장관이 발표.

2002. 11. 12

천수이벤 釣魚台는 대만 영토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총통이 최근 다오위타이(釣魚台) 군도(센카쿠 열도)를 일본 영토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천수이벤(陳水扁) 총통이 이를 '대만 영토'라고 반박.

2002. 11. 13

이스라엘군 나블루스 다시 점령

이스라엘군이 150여대의 장갑차를 동원, 요르단강 서안 마을 나블루스를 다시 장악. 앞서 지난 12일 이스라엘군은 톨카렘의 난민 캠프를 급습, 키부츠 총격사건 범인 색출작전을 전개.

펜실베이니아 인종폭동 피고인 6명에 실형 선고

1969년 인종 폭동 당시 발생한 한 흑인 여성 저격살인사건과 관련, 백인 6명에게 최고 3년 징역형이 선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아이켄에 살던 당시 27세의 알렌은 요크시에서 열흘간 계속된 흑인과 백인간의 인종폭동 중 살해.

2002. 11. 15

파키스탄서 버스 폭발, 10여명 사상

파키스탄 남부 하이데라바드시에서 버스 좌석 밑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폭탄이 터져 최소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 하이데라바드는 소수민족단체인 무타히다 카미 운동과 힌드 민족주의자들간의 폭력사태가 빈번.

2002. 11. 22

中央阿서 쿠데타 피난민 58명 익사

최근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에서 실패한 쿠데타 동조세력의 약탈을 피해 달아나던 최소 58명의 난민이 선박 침몰로 집단 익사했다고 현지 국영방송이 보도.

2002. 11. 23

가자 연안서 해상 자살폭탄 공격

가자 북부 연안에서 팔레스타인 이슬람 급진 단체원 2명이 이스라엘 초계정을 대상으로 어선을 이용한 자살폭탄 공격을 감행, 팔레스타인인 2명이 숨지고 이스라엘 수병 4명이 부상.

2002. 11. 24

스리랑카 총리-반군 최고위지도자 오슬로서 평화회담

아시아 최장기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가 진행중인 가운데 스리랑카 총리와 반군 타밀 엘람 해방호랑이(LTTE)의 최고위 지도자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첫 회담.

2002. 11. 25

중동계 상대 범죄 급증

9.11 테러의 영향으로 반(反) 이슬람 증오 범죄가 미국에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7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발표.

2002. 11. 28

EU, 역내 아프간 난민 대거 본국 송환키로

유럽연합(EU)은 아프가니스탄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감에 따라 유럽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아프간 난민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프간인들이 모두 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2002. 11. 30

터키, 쿠르드족 15년 비상통치 종식

유럽연합(EU)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펴고 있는 터키 당국이 30일을 기해 남부 쿠르드족 거주 지역에 15년동안 내려졌던 비상사태를 완전 해제.

2002. 12. 2

교황,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주의 기승 비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해 9.11테러이후 각국 정부의 엄격한 규제조치로 인해 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주의를 강력 비난.

최대법원, 대학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여부 심리키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25년간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돼 온 대학 입학시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키로 하는데 합의. 연방대법관들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다른 인종과 섞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미시간 대학의 주장이 백인 지원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지를 판결할 예정.

2002. 12. 3

부룬디, 역사적 휴전협정 체결

부룬디 정부와 최대 반군조직이 거의 10년간 계속된 내전을 종식시키는 역사적인 휴전 협정에 서명.

2002. 12. 5

인도네시아 맥도널드 매장서 폭탄 테러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주 주도 마카사르의 맥도널드 매장에서 폭탄이 터져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지난 99년이래 이 섬에서는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간의 종교분쟁으로 2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의 난민이 발생.

2002. 12. 6

이군, 팔 난민 캠프 공격 5명 사망

이스라엘군이 탱크와 헬기를 동원, 가자 지구 부레이즈 난민캠프를 침공, 팔레스타인 5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

2002. 12. 7

코트디부아르 정부군, 민간인 120여명 사살

코트디부아르 정부군이 중부의 한 마을을 급습, 민간인 120여명을 사살했다고 희생자들을 매장했던 목격자들과 선교사들이 7일 폭로. 정부군은 모노코-조히의 상인과 커피와 코코아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반군과 내통하고 있다며 이들을 비난해 왔음.

2002. 12. 9

멕시코, 한국교민 33명 무더기 구속

멕시코 사법당국은 밀수와 상표 위·변조 등 혐의로 지난 주말 체포된 한국교민 34명중 부녀자 1명을 제외한 33명 전원을 상표법과 지적재산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인종차별과 표적수사 등의 문제로 양국간 외교마찰까지도 우려.

2002. 12. 10

佛, 인종주의 처벌강화 추진

프랑스 하원은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등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인종주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부추기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발표.

2002. 12. 14

짐바브웨 대통령, 외국계 주유소 국유화 위협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 심각한 연료 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소유의 주유소에 대해 국유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

2002. 12. 16

미-중 인권회담 시작, 소수민족 처우 등 현안논의

미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처우문제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인권회담에 돌입. 미 대표단은 이와관련, 18일 중국의 최서단에 위치한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를 방문할 예정.

2002. 12. 18

아랍권 최대 反戰회의 카이로서 개최

미국의 중동정책과 대(對) 이라크 군사공격 위협에 반대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아랍 역내 최대 규모의 반전(反戰) 회의가 이틀 간 카이로에서 개최. "미국과 세계화, 이라크 전쟁에 함께 반대하며"라는 주제로 이라크 위기와 관련, 아랍권의 우려를 표출하고 반미 연대방안을 모색.

ICTY 검찰, 플라브시치에 25년형 구형

헤이그 유엔 구 유고전범법정(ICTY)의 검찰측은 지난 1992~95년의 보스니아전쟁중 인종청소를 주도한데 대해 유죄를 인정한 빌라냐플라브시치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전 대통령에 대해 15~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법정에 요구.

2002. 12. 20

로트 미국 상원 공화당 대표 사임

인종격리주의자 찬양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트렌트 로트(61. 공화, 미시시피) 상원의원이 상원 공화당 대표직을 사임한다고 발표.

2002. 12. 21

美 중동계 구금에 이슬람권 반발

미국이 최근 반(反)테러법률에 따라 당국에 자진출두한 이란인 등 중동계 450명을 구금한 데 대해 미국내 이슬람 단체는 물론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 등 이슬람 세계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서는 등 파문.

2002. 12. 24

필리핀 테러추경 폭발로 13명 사망, 12명 부상

필리핀 남부 도시 마긴다나오주(州)의 다투 피앙시(市)에서 이슬람 무장세력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폭발사고가 일어나 적어도 13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 폭발로 인해 암파투안 시장사망.

2002. 12. 26

比 분리주의 반군 공격으로 12명 사망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이슬람 분리주의 무장 단체의 소행으로 보이는 매복 공격으로 12명이 숨지고 최소 9명이 부상. 삼보앙가 델 노르테주(州)의 한 마을에서 보안군과 광산회사 직원들을 태운 트럭을 무장 괴한들이 매복 공격.

2002. 12. 29

사론 총리, 새 중동평화안 승인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사회가 마련한 새로운 중동평화안을 승인. 미국과 유엔, 유럽연합(EU), 러시아가 참석하는 4자회담에서 마련된 이 평화안은 지난 26개월간에 걸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분쟁을 종식하고 단계별 조치를 통해 오는 2005년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

2002. 1. 8

英, 강력한 새 이민법 발효

인권단체들과 야당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영국에서 강력한 새 이민법이 발효. 이날 발효된 '국적, 이민, 망명법'에 따라 망명 신청자들은 최고 6개월간 특별보호시설에 억류될 수 있으며, 망명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곤란.

2002. 1. 15

탈북자 1명, 주중 독일 대사관 진입

북한 출신 난민 1명이 15일 베이징 주재 독일 대사관에 들어가 망명을 요청, 작년 12월 이래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4명의 탈북자와 합류.

2003. 1. 16

필리핀 반군 28명 사망

필리핀 남부에서 지난 8일 이후 벌어진 정부군과 이슬람 분리주의자들간의 충돌로 최소한 반군 28명이 사망했다고 앙헬로 레예스 필리핀 국방장관 발표.

2003. 1. 19

美공립학교 인종격리 현상 더욱 심화

CNN방송 인터넷판은 하버드대가 추진중인 민권계획 연구보고서를 인용, 소수인종 인구가 가장 많은 남부와 서부 지역의 경우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소수계 학생들이 다니는 통합 공립학교들에서의 '재분리' (resegregation) 현상이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2003. 1. 21

히스패닉, 흑인 제치고 美 최대 소수인종

히스패닉이 흑인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소수 인종으로 올라섰다고 미국 연방 인구통계국이 발표. 히스패닉과 흑인은 미국 총인구의 각각 13%와 12.7%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계는 4%를 기록.

2003. 1. 26

콜롬비아 차량폭탄 폭발 군인등 15명 사망

콜롬비아 동북부 도시 타메에서 차량폭탄이 폭발, 최소한 5명의 군인과 1명의 민간인이 사망. 아라우카주는 좌익 반군 단체인 콜롬비아민족해방군의 활동 중심지.

2003. 1. 27

한국체류 中반체제인사 대만에 망명요청

한국에 체류해오던 중국 반체제인사 쉬보(徐波)씨가 타이베이 교외 장제스(蔣介石) 국제공항에서 "추방하면 자살하겠다"며 대만 당국에 정치적 망명 허용을 요구.

比 정부군-반군 충돌, 반군 17명 사망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필리핀 정부군과 이슬람 분리주의 단체인 모로 이슬람 민족해방전선(MILF)간에 총격전이 벌어져 반군 17명이 숨지고 7명이 생포됐다고 필리핀군이 발표.

2003. 1. 30

캄, 피해 보상 약속, 태-캄외교파국 해결 가닥

태국 여배우의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 관련 소문으로 촉발된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 관계 파국이 캄보디아가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을 제의함으로써 해결 조짐.